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305-10
연 구 보 고	2016-93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6. 12.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연구보고 2016-93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6.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기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 진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됨.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필요성을 가짐.

○ 첫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수단이 됨.

○ 둘째, 지역별·영역별·분야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 가능하게 하여 지역 성평등을 촉진하게 함.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킴.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연계하고, 지역특성과 통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구성됨. 이에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는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함.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정책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산정됨.

□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산정됨.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기반으로 측정된 지수임.
-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를 기반으로 측정한 지수임.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 달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지수임.

3.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과 정책방향

□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2015년 지역성평등지수는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Level-1)은 대전광역시, 강원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남. 상위지역 중 강원도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상위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과

2012년에 상위지역으로 유지되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중상위권으로 하락한 후 2015년에 상위지역으로 재진입함.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 이래 줄곧 상위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상위순위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중상위 지역(Level-2)은 5위에서 8위까지의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가 해당됨. 광주광역시는 2011년 성평등 중상위권 지역으로 구분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광역시는 2011년과 2012년 중상위를 유지하다가 2013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다 2014년 상위지역으로 진입, 2015년 한단계 하락해 중상위권 수준을 나타남. 전라북도는 2011년 중하위권에서 2012년과 2013년 중상위권으로 순위 상승을 보였으나, 2014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다 2015년 중상위권 순위로 재진입함. 충청북도는 2011년과 2012년 중하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상승해 유지하고 있음.

○ 중하위 지역(Level-3)은 9위에서 12위까지의 지역으로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가 해당됨.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2014년 중상위권으로 떨어졌고, 2015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경상남도는 2011년과 2012년 하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진입하여 유지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2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 인천광역시는 2011년 중상위권에서 2012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며 이를 유지하고 있음.

○ 성평등 하위지역(Level-4)은 13위에서 16위를 보인 지역으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해당됨. 경상북도는 2011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울산광역시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2년 중하위권으로 순위상승을 보였으나, 2013년부터 하위권으로 하락하면서 성평등 순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2011년 중하위권에서 2012년 하위권으로 떨어진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역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5년 전국 평균은 70.5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75.6로 16개 시·도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등이 다음 순위로 높음.

-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전국 평균 27.4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줌.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17.9)로 전국 평균(27.4) 수준보다 9.5p 낮았고 충청남도(18.5), 전라남도(20.0), 경상남도(21.2), 울산광역시(22.9), 전라북도(24.4), 강원도(27.0), 충청북도(27.2)에서 성평등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 따라서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결정됨. 이 분야의 전국 평균은 94.5이며, 경기도(96.1), 서울특별시(96.0), 울산광역시(95.6), 부산광역시(95.2)의 순서로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음.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88.9)이고, 경상북도(91.0), 전라북도(91.6) 등에서 하위순위를 보였지만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 대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 중 하나임. 2015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이 90.7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89.6), 대전광역시(88.8), 서울특별시(88.4), 부산광역시(86.2) 등에서 높게 나타남. 한편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78.5)이며 울산광역시(79.7)가 그 뒤를 이음.
- 보건 분야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95.0이상의 높은 수준의 성평등지수 값을 보여줌. 2015년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며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다음 순으로 높음.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93.8으로 울산광역시이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에서 크게 나타나는 분야임. 2015년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78.4)임. 그 다음은 전라북도(77.8), 경상남도(74.7), 부산광역시(74.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 성평등 의식·문화

-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77.0)가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75.0), 경상북도(73.7), 전라남도(7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0.8)이고, 대전광역시(90.3), 부산광역시(90.1), 경기도(89.3) 등이 뒤를 이어 높음.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서울특별시는 종합점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로 보면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은 성평등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화·정보 분야는 중상위권, 가족은 중하위권, 안전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특히 안전 분야는 2012년 이후 강력범죄피해자의 성별격차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안전의식의 성비 또한 악화되면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순위로 하락함. 가족 분야의 경우 성비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정도로 인해 순위 개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특별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의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 유지 -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안정적이고 높은 편임. - 의사결정 분야의 수준 개선은 비교적 빠른 편이나, 2015년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낮아짐 - 단, 구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특히 지표 중 관리직 비율 성비는 매년 높은 개선을 보이나 여전히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와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 악화로 하위권에 위치 -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흉악범)의 여성 피해자 증가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으로 인해 큰 폭으로 수준이 하락함.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현행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 단, 공적연금가입자 지표 개선이 정책되어 있음. -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행 정책의 꾸준한 집행과 점검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문화·정보는 중상위권이고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 가족분야는 최근 성평등 개선 정도가 높으나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개선되지 않아 2015년 중하위권에 위치. 가사노동시간과 가족관계만족도 개선 등 전반적 가족정책의 점검과 관련 정책의 홍보가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현행정책의 꾸준한 집행과 점검 유지. 단, 여가 만족도 성비가 2013년 이래 하락 추이를 보임. 여가만족도의 성비 하락 원인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부산광역시는 전년대비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향상으로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됨. 영역별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개선 정도가 낮지만 2014년 이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어 2011년 중상위권에서 2012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2012년 10위에서 2015년 9위로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분야는 점차 상승하여 2015년 중상위권에 진입 함.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비교적 높은 개선으로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함.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까지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 중상위권에 위치함. - 경제활동분야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정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성 격차 개선을 위해 기존 경제정책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점진적 개선으로 인해 2014년 이래 중상위권에 위치함. 하지만 관련 지표 중 세 지표의 성비가 30미만으로 낮으며,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1년 이래 정체 현상을 보임. 의사결정 분야는 정치, 행정, 민간 분야의 전반적 검토와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여성수준을 높여야 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상위권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기존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모니터링 실시
여성의 인권·복지	- 비교적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래 상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개선이 필요. 여성빈곤 제고 정책 추진과 확대 필요 - 보건 분야는 2015년 중상위권에 진입했고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으로 현재의 보건 정책과 여성건강정책을 추진 및 점검. - 안전 분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상승으로 2014년 이래 상위권 위치. 하지만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비의 경우 전년 대비 순위는 상승했으나 성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사회안전인식 성비 또한 점수 하락과 더불어 순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강력범죄피해자 중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의 증가 때문이며, 성폭력(강간+성추행) 피해 감소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는 중하위권 유지. - 가족 분야는 2012년 이래 수준은 향상되나 순위는 하위권 유지. 가족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하는 이유는 매우 낮은 육아휴직자 성비 때문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최하위수준으로 하락함.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가족과 일·가정양립 정책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함.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관련 지표의 수준과 순위 모두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이래 상위권에 진입. 하지만 여가시간 성비는 중하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문화 및 여가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함.

○ 2015년 대구광역시의 종합적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영역별로 보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의 상승을 보이나, 영역별 순위는 약간 차이가 있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진입하나,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높은 성평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4년이래 중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9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개선을 견인함.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낮아져 순위가 크게 낮아지며 성별 임금격차는 수준개선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경제활동 분야는 일가족양립 정책과 여성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정책 추진과 진단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은 낮지만 순위는 중상위권에 위치. 관련 지표 중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관리직 비율 성비는 변동이 심한 지표로 경기흐름과 여성 고용 변화에 대한 점검 필요. 또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관련 지표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부터 중하위권 위치 - 복지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매년 개선되지만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격차 개선을 위한 여성빈곤 개선 정책의 확대 추진 필요 -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수준 하락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 위치.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점검 체계 유지 -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소폭 수준 하락을 보였으나 순위는 중상위권으로 진입. 수준 하락 원인은 강력범죄(흉악범) 여성 피해자 증가 때문임.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의 주원인은 성폭력 범죄의 증가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 정책 제고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5년 하위권으로 하락 - 가족 분야는 성평등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서 하위권 하락 육아휴직자 성비의 경우 수준은 개선되나 순위는 하위권이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하락이 큼. 일·가족양립 정책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역차원의 정책지원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은 상승하나 중상위권 유지 여가만족도 성비가 2013년 이후 하락 추이를 보임. 성별 여가패턴 분석과 요구도 분석 필요. 문화 혹은 여가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관련 연구와 특성 분석 필요

○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이지만,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이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함.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순위를 살펴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 복지,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

경제활동,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분됨. 지표별로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하여 관리직 비율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성비는 상위 순위를 보인 반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하위 순위를 보이고 있음.

<인천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16개 시·도 중 중상위권 - 경제활동은 하위권으로 수준개선이 적고 순위는 변화 또한 거의 없음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높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임금성비는 개선 속도가 낮아 순위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년대비 성비 악화로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이에 경제활동 분야는 여성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추진 정책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수준 개선이 낮음.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는 2014년 선거 결과 성평등 수준이 하락했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또한 전년대비 성비가 하락함. 반면 관리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소폭 개선됨. 여성의 정치참여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과 위원회 위원 등에 여성참여 기획 확대 필요 - 교육·직업훈련은 성평등 수준이 높고 순위 또한 5위로 현재 정책의 추진과 점검이 지속될 필요 있음.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16개 시·도 중 하위권 위치 - 복지 분야의 경우 점진적 개선은 보이나 중하위권에 위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제고로 큰 폭의 개선이 있었으나 순위는 중하위권 유지하고 높은수준을 유지했던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또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향후 공적연금 여성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실시. 또한 기초생활보장자 규모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여성가구 정책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순위는 중상위이나,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임. 현행 정책 유지 -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 전년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개선이 있었으나, 두 지표 모두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지속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 위치 -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이래 높은 개선에도 하위권이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수준 개선이 정체되어 중하위권에 위치. 하지만 가족관계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성비는 수준개선과 더불어 상위권에 위치. 남성 육아휴직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이지만 구성 지표의 성비 개선은 정체 현상을 보임.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 필요.

○ 광주광역시는 2015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인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최하위권임. 분야별로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안전,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가족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됨. 향후 광주광역시는 가족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점검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2013년 상위권이었으나, 최근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악화로 중상위권으로 하락. 수준개선을 위한 전반적 고용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 등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 전반적으로 지표 성비가 양호함. 하지만 관리자 비율 성비 변화에 대한 점검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점검.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에서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 - 복지 분야의 경우 수준은 상승했으나 개선이 미미하여 순위는 정체. 기초생활 수급자 성비는 여성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악화. 빈곤규모를 파악하고 여성 빈곤정책의 점검과 투입 필요 -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하락하나 성평등 수준 높은 편. 기존 정책의 추진과 점검 -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진입. 순위 상승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상승 때문임.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의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안전 정책에 대한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 - 가족 분야는 2013년 이래 하위권으로 추락. 육아휴직자 성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정책 점검과 사업체와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임. 지표 중 여가시간 성비는 높으나 여가 만족도 성비가 낮음. 문화와 여가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정책 점검 필요

○ 대전광역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의식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상승하지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하락함.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으로 구분되며,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구분됨. 단,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남. 구성 지표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대전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이래 상위권 유지 - 경제활동 분야는 중상위권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간의 수준 상승.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나 임금격차 성비는 소폭 하락. 2013년 이래 지표의 개선 수준이 낮고 등락을 반복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여성경력단절 방지 정책 등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지표 성비의 개선으로 상위권에 위치.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표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 향후에도 형편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개선 방안 추진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중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 분야 점수하락으로 중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 순위 유지.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인해 소폭 하락.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여성정책의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하며 수준 또한 높음. 현재 정책 유지 -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인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가 크게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또한 하락함. 사회안전망 점검과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2년 이래 1위에 위치 - 가족 분야는 상위권에서 육아휴직자 성비 악화로 인해 중상위권으로 후퇴.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승추이에 있으나, 육아휴직자 성비 크게 하락. 또한 가사노동시간 성비와 육아휴직자 성비는 높은 순위를 보이지만 수준은 낮은편으로 일가족양립정책과 육아휴직 남성 활용 촉진 정책 마련 및 홍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으로, 수준과 순위 모두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제고 노력 실시

○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보면,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구분됨.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또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전년대비 수준 개선 정도가 낮아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은 상위권으로 구분되지만, 경제활동과 보건 분야는 최하위 수준을 보임.

<울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부터 하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이래 하위권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모두가 최하위 순위를 보임. 여성경제정책 전반의 검토와 일가족양립 정책 등 경력단절예방 및 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구성지표가 2013년 이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이후 개선이 미미함.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며, 정치권의 여성할당제와 공천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순위는 상위권이고 성평등 수준도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중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 - 복지와 보건 분야의 경우 성평등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나, 개선 정도가 미미하여 순위 개선이 되지 않음. 또한 안전 영역은 사회 안전의식 성비와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비가 동시에 하락함에 따라 이 영역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됨. -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 및 연금 가입 홍보 방안 마련 - 보건 분야는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개선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촉진시킬 정책 필요 - 안전 분야는 성폭력 예방정책과 교육 실시. 성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관련 기관과의 예방 정책 추진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은 2014년 상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함. 분야별로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분류. 지표 중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소폭 하락. 가족 내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점검 및 추진 - 문화·정보 분야는 관련 지표의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음. 기존 정책 추진에 지속적 점검과 관심 필요

○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성평등 수준의 정체로 인해 7~9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5년은 안전 분야 수준 하락으로 인해 12위로 내려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가족분야 순위는 2015년 전년대비 4단계 하락했으나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으로 수준은 소폭 상승함.

<경기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성평등 개선의 정체와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하락 -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 정도가 낮은 편이며, 지속적 상승추이를 보이던 상용근로자 성비 또한 2015년 소폭 하락.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정책 점검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의 일·가족 양립 정책의 점검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 위치. 관리직 비율 성비의 하락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필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정체 상태로 개선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검토.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방안 추진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으로 기존 정책 유지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2년 이래 수준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이나 개선 수준이 낮은 분야.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 추진 -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여성 노인인구 증가 때문으로 노인 건강 정책의 점검이 필요 -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이며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악화로 순위 하락. 특히 강력범죄피해자 성비 하락은 성폭력 여성 피해자 증가 때문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사회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노력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꾸준한 수준 상승으로 상위권 유지 -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이나 전년대비 4단계 순위 하락.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가족관계만족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악화됨. 가족내 양성평등교육 실시와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정책의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개선으로 상위권에 진입. 기존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점검 실시

○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개선이 빠른 지역으로 현재 상위권에 위치함. 하지만 여성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여성의 인권·분지 분야는 2013년 이래 상위권으로 분류됨. 하지만 보건과 안전 분야의 하락으로 성평등 수준은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로 인해 상위권을 유지함. 성별 임금격차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개선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여성경력단절 예방과 정책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선거 이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또한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점차 개선되나 중하위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관심 제고 방안과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으로 점차 순위 상승 추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는 개선이 지체되면서 낮은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함. 향후 빈곤여성가구 지원 정책 점검과 개선노력 필요 - 보건 분야의 경우 순위는 낮으나 수준은 높은 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 성비 향상을 위해 여성 노인의 건강 정책 점검 - 안전 분야는 성평등 수준 악화로 중상위권으로 하락. 순위하락 이유가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향후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더불어 여성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책 개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에서 2015년 상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상위권 유지. 단, 가사노동시간 성비의 개선이 미미함. 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책 홍보와 교육 추진 - 문화·정보 분야는 낮은 여가 만족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로 하위권에 위치.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순위 제고를 위해 문화와 정보 관련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분석 필요

○ 충청북도는 2015년 종합순위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함.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성평등 개선으로 소폭 순위 상승이 있었고 여성의 인권·복지와 성평등 의식·문화는 성평등 수준과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분야와 의사결정 분야에서 순위 상승이 있었고 이외 분야는 순위 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지표별로는 육아휴직자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에서 크게 상승한 반면,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등 주관적 지표에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충청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성비 개선으로 2014년 이래 상위권 유지. 모든 구성 지표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일가족양립 정책 사업 추진 확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정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중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 유지. 기존 정책의 보다 적극적 시행과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음. 기존 정책의 적극적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관련 지표 악화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와 안정의식 하락으로 성비가 악화됨.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및 여성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추락 - 가족 분야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하락으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추락. 육아휴직자 성비는 크게 개선되나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사업체에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정책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와 지원 검토. - 문화·정보 분야는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 하락의 주된 이유는 여가만족도 성비의 하락으로 여가만족도 하락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점검할 필요 있음.

○ 충청남도는 종합점수에서 2012년 이래 하위권으로 구분됨. 세 정책 영역에서 성평등 개선이 정체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표들의 성평등 개선 속도가 느림.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가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이외 분야는 중하위권 혹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지표별로 보면 고등교육진학률 성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여가시간 성비 등에서 중상위 이상의 순위를 보이며, 이외 지표는 중하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충청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 진입 - 경제활동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수준개선은 있으나 개선 속도가 낮음. 구성 지표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 여성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 방안 수립 - 의사결정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성 지표 모두 낮은 수준과 순위를 보임. 관리직 비율 성비 하락 원인 분석과 의사결정 분야 수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단기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하위권으로 분류.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 노력 필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연금미가입자 분석과 홍보 필요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관련 지표의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하위권 유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의 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중상위권 유지. 단,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성평등 교육 제고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임. 기존 정책의 점검과 성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전라북도는 종합순위에서 변동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2015년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영역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는 상위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으로 구분됨. 분야별로 보면 가족과 교육·직업 분야에서 하위권이었고, 보건과 안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음. 지표별로 보면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가시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등은 하위권으로 성비의 개선과 원인분석 등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분류 - 경제활동 분야는 2013년 상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 이 분야의 하락 원인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하락과 성별 임금격차 악화에 기인.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원인 분석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진입. 구성 지표가 대부분 중하위 수준으로 성평등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단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개선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의식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으로 재진입. - 복지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지표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개선 필요. 빈곤가구 감소 정책과 빈곤의 성별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성평등 수준 또한 높음. 기존 정책의 지속적 점검과 유지 -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개선으로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급상승.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낮은 성평등 개선으로 인해 하위권으로 추락 - 가족 분야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가 중하위권으로 분류. 전반적인 가족정책 점검과 가족관계 만족도 하락 원인 분석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구성지표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이 분야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개선방안 연구 필요

○ 전라남도는 16개 시·도 중 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됨.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상위권이나,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분야별로 보면 안전과 가족 분야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세 분야 모두 낮은 순위를 보임. 지표별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관리직 비율 성비 등에서 수준 개선이 시급하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 성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

<전라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하위권 유지 - 경제활동 분야는 하위권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개선이 시급함.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여성 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수립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성 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고 개선이 시급함. 정치, 경제, 행정 분야 담당자의 협력체계와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하위권 유지. 교육 분야에 대한 장기적 개선 계획 수립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중하위권 유지. 두 지표의 성비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나, 빈곤가구 지원 정책과 공적연금가입확대를 위한 정책 제고 및 홍보 필요 등이 필요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점검 - 안전 분야는 상위권이나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수준은 하락함.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 - 가족 분야는 2011년 이래 상위권이나,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이 주춤하고 있음. 일가족양립 정책을 비롯하여 사업체와 협력하여 남성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 유지. 여가만족도 성비가 크게 상승했으나, 구성 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문화·정보 분야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제고 정책 개발 필요

○ 경상북도는 성평등 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됨. 영역별로 보면 2011년과 비교하여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으로 개선되었으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 모두에서 낮은 성평등 수준과 순위를 보이고 있어, 기존 정책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복지 분야는 구성 지표의 성평등 개선에도 순위가 정체 상태로, 보다 적극적 개선이 요구됨. 보건 분야의 경우 순위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상위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 분야는 최근 개선 정도가 높아 순위 상승을 보이지만 가족 관계 만족도 성비의 개선이 필요함.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

<경상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반적 정책 점검 필요 -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했으나,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높은 성격차를 보이고 있음. 고용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조치 등의 적극적 추진 노력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구성 지표 모두에서 낮은 수준과 순위를 보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구분 - 복지 분야는 수준 개선이 낮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함. 국민연금여성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이 필요하며, 빈곤여성가구주 지원 정책 수립과 추진필요 -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2012년 이래 하락 추이를 보이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하락원 파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안정망을 구축하고 관리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으로 분류 -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으로 상위권에 진입. 구성 지표 중 가족 관계 만족도 성비를 제외하고 성평등 수준 상승.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과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개선을 위한 가족내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점검 -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하나, 여가만족도 성비의 하락으로 성평등 수준은 낮아짐. 여가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과 조치 필요

○ 경상남도는 종합점수에서 성평등 중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됨. 영역별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성평등한 의식·문화는 중하위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됨.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느리고 고용과 의사결정 관련 지표들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시급함.

<경상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반적 정책 점검 필요 - 경제활동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하락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여성경력단절 현황 파악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관리직 비율 성비 악화와 낮은 수준의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로 인해 하위권에 위치.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부위원 여성위원과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확대 방안과 조치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 유지하나 성평등 수준 개선은 없음 - 복지 분야는 하위권 지역으로 분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홍보와 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활성 방안 연구 - 안전 분야는 성평등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유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여성성폭력실태와 예방 조치 마련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 상승에도 중하위권에 위치 - 가족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 개선이 크지 않음. 성평등한 가족생활 교육과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중상위권으로 기존 정책의 적극적 집행과 점검 필요. 성별 여가패턴과 시간 배분 특성 분석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높은 성평등 개선으로 2015년 상위권에 재진입함.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세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은 가장 높으나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음. 분야별로는 안전과 문화·정보 분야가 취약하며, 경제활동, 복지, 보건, 가족 등의

분야는 매우 우수한 성평등 수준을 보여 줌.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상위권. 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2013년 이래 하락 추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하락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관리직 비율 성비의 높은 상승으로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개선.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 분야의 성평등 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상위권 유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개선을 위한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과 여성빈곤가구주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으로 완전 평등 상태에 근접함.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승 원인 분석과 성폭력 피해자 예방 교육 및 방지 정책 추진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개선으로 상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으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 기존 일·가정양립 정책 점검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전년대비 성비 개선이 높음에도 하위권 유지. 여가와 정보 정책의 효과 분석 필요. 기존 정책의 문제점 점검과 제고 방안 필요

4.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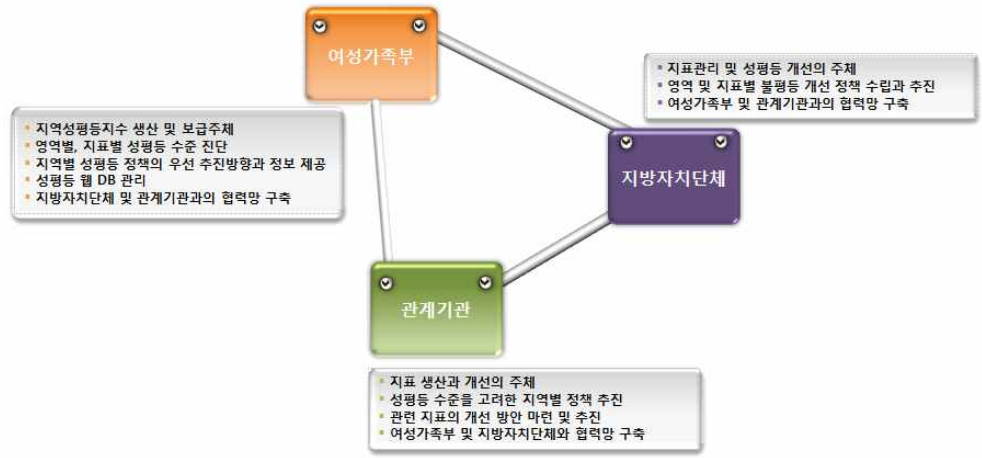
□ 지역성평등지수 관리와 활용방안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생산 및 보급주체로서, 지역성평등 수준에 대해 종합지수를 산정하고 영역별, 분야별, 지표별 수준을 진단하여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됨.

-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대상이자 지표관리와 개선의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함.
- 관계기관은 개별 지표의 생산과 개선의 주체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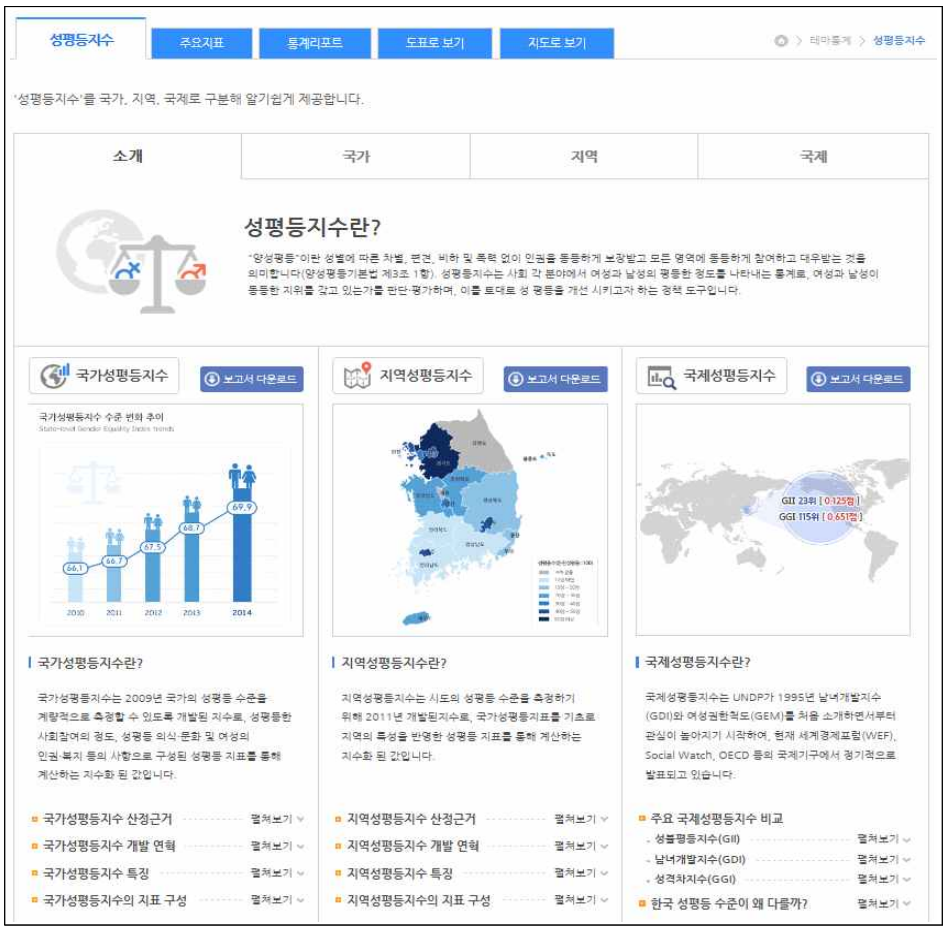
<지역성평등지수의 기관별 역할>



○ 둘째, 국민이 지역성평등지수의 비교와 지표의 변화들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웹에 결과를 게시하고 수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지역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지역 여성문제와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이에 지역성평등지수는 단순히 공표하는 방식에서 상시적 정보제공 방식(웹DB)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함.

<지역성평등지수 웹DB 구축안 화면>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지방자체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연계되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방안의 하나로 성별영향분석평가과 연계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및 지표와 관련된 사업(혹은 계획)에 대해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서와 연계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Ⅱ.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 7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구성 ····· 9
2.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 15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 25

Ⅲ.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 27

1. 지역별 성평등 수준비교와 추이 ····· 29
   가.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 29
   나. 영역별 지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특징 ····· 32
2.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 41

Ⅳ. 지역별 정책과제와 성평등지수의 관리방안 ····· 177

1. 지역별 성평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179
   가.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특징 ····· 179
   나.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 184
2. 지역성평등지수와 지역양성평등정책 연계 ····· 247
   가. 지역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 ····· 247
   나.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 ····· 253
3.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 278

■ 참고문헌 ····· 283

■ 부 록 ····· 285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 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 287
<부록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 290
<부록 3>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2016) ····· 318
<부록 4>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2016) ····· 319

■ Abstract ····· 455

표 목 차

<표 Ⅱ-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9
<표 Ⅱ-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구성 변화 ····· 11
<표 Ⅱ-3>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 13
<표 Ⅱ-4>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비교 ····· 14
<표 Ⅱ-5>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 ····· 19
<표 Ⅱ-6> 생산주기가 1년이 아닌 지표의 추정방법 ····· 20
<표 Ⅱ-7> 분야별 가중치 ····· 21
<표 Ⅱ-8> 지역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 23
<표 Ⅱ-9>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요약 ····· 26
<표 Ⅲ-1>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 30
<표 Ⅲ-2> 서울특별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2
<표 Ⅲ-3> 서울특별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3
<표 Ⅲ-4> 서울특별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4
<표 Ⅲ-5>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5
<표 Ⅲ-6> 서울특별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6
<표 Ⅲ-7> 서울특별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7
<표 Ⅲ-8> 서울특별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8
<표 Ⅲ-9> 서울특별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49
<표 Ⅲ-10> 부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0
<표 Ⅲ-11> 부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1
<표 Ⅲ-12> 부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2
<표 Ⅲ-13> 부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3
<표 Ⅲ-14> 부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4
<표 Ⅲ-15> 부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5
<표 Ⅲ-16> 부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7
<표 Ⅲ-17> 부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8

<표 Ⅲ-18> 대구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59
<표 Ⅲ-19> 대구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0
<표 Ⅲ-20> 대구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1
<표 Ⅲ-21> 대구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2
<표 Ⅲ-22> 대구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4
<표 Ⅲ-23> 대구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5
<표 Ⅲ-24> 대구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6
<표 Ⅲ-25> 대구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7
<표 Ⅲ-26>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8
<표 Ⅲ-27> 인천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69
<표 Ⅲ-28> 인천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0
<표 Ⅲ-29> 인천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1
<표 Ⅲ-30>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2
<표 Ⅲ-31> 인천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3
<표 Ⅲ-32> 인천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5
<표 Ⅲ-33> 인천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6
<표 Ⅲ-34>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7
<표 Ⅲ-35> 광주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8
<표 Ⅲ-36> 광주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79
<표 Ⅲ-37> 광주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0
<표 Ⅲ-38> 광주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1
<표 Ⅲ-39> 광주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2
<표 Ⅲ-40> 광주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3
<표 Ⅲ-41> 광주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5
<표 Ⅲ-42>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6
<표 Ⅲ-43> 대전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7
<표 Ⅲ-44> 대전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8
<표 Ⅲ-45> 대전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89
<표 Ⅲ-46> 대전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0
<표 Ⅲ-47> 대전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1

<표 Ⅲ-48> 대전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2
<표 Ⅲ-49> 대전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4
<표 Ⅲ-50> 울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5
<표 Ⅲ-51> 울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6
<표 Ⅲ-52> 울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7
<표 Ⅲ-53> 울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99
<표 Ⅲ-54> 울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0
<표 Ⅲ-55>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1
<표 Ⅲ-56> 울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2
<표 Ⅲ-57> 울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3
<표 Ⅲ-58> 경기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4
<표 Ⅲ-59> 경기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5
<표 Ⅲ-60> 경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6
<표 Ⅲ-61> 경기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7
<표 Ⅲ-62> 경기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8
<표 Ⅲ-63> 경기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09
<표 Ⅲ-64> 경기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0
<표 Ⅲ-65> 경기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1
<표 Ⅲ-66> 강원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2
<표 Ⅲ-67> 강원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3
<표 Ⅲ-68> 강원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4
<표 Ⅲ-69> 강원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5
<표 Ⅲ-70> 강원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6
<표 Ⅲ-71> 강원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7
<표 Ⅲ-72> 강원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8
<표 Ⅲ-73> 강원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19
<표 Ⅲ-74> 충청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0
<표 Ⅲ-75> 충청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1
<표 Ⅲ-76> 충청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3
<표 Ⅲ-77> 충청북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4

<표 Ⅲ-78> 충청북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5
<표 Ⅲ-79> 충청북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6
<표 Ⅲ-80> 충청북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7
<표 Ⅲ-81> 충청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8
<표 Ⅲ-82> 충청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29
<표 Ⅲ-83>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0
<표 Ⅲ-84> 충청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1
<표 Ⅲ-85> 충청남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2
<표 Ⅲ-86> 충청남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3
<표 Ⅲ-87> 충청남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4
<표 Ⅲ-88> 충청남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5
<표 Ⅲ-89> 충청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6
<표 Ⅲ-90> 전라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7
<표 Ⅲ-91> 전라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8
<표 Ⅲ-92> 전라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39
<표 Ⅲ-93> 전라북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0
<표 Ⅲ-94> 전라북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1
<표 Ⅲ-95> 전라북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2
<표 Ⅲ-96> 전라북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3
<표 Ⅲ-97> 전라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4
<표 Ⅲ-98> 전라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5
<표 Ⅲ-99> 전라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6
<표 Ⅲ-100> 전라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7
<표 Ⅲ-101> 전라남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8
<표 Ⅲ-102> 전라남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49
<표 Ⅲ-103> 전라남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0
<표 Ⅲ-104> 전라남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1
<표 Ⅲ-105> 전라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2
<표 Ⅲ-106> 경상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3
<표 Ⅲ-107> 경상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4

<표 Ⅲ-108> 경상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5
<표 Ⅲ-109> 경상북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6
<표 Ⅲ-110> 경상북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7
<표 Ⅲ-111> 경상북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8
<표 Ⅲ-112> 경상북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59
<표 Ⅲ-113> 경상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0
<표 Ⅲ-114> 경상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1
<표 Ⅲ-115> 경상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2
<표 Ⅲ-116> 경상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3
<표 Ⅲ-117> 경상남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4
<표 Ⅲ-118> 경상남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5
<표 Ⅲ-119> 경상남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6
<표 Ⅲ-120> 경상남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7
<표 Ⅲ-121> 경상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8
<표 Ⅲ-12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69
<표 Ⅲ-123> 제주특별자치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70
<표 Ⅲ-1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71
<표 Ⅲ-12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72
<표 Ⅲ-12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73
<표 Ⅲ-12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74
<표 Ⅲ-12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75
<표 Ⅲ-1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 176
<표 Ⅳ-1> 2015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시·도 순위와 점수 ····· 183
<표 Ⅳ-2> 서울특별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85
<표 Ⅳ-3> 서울특별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87
<표 Ⅳ-4> 서울특별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188
<표 Ⅳ-5> 부산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89
<표 Ⅳ-6> 부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92
<표 Ⅳ-7> 부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193
<표 Ⅳ-8> 대구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94

<표 Ⅳ-9> 대구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96
<표 Ⅳ-10> 대구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197
<표 Ⅳ-11> 인천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198
<표 Ⅳ-12> 인천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00
<표 Ⅳ-13> 인천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01
<표 Ⅳ-14> 광주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02
<표 Ⅳ-15>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04
<표 Ⅳ-16> 광주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06
<표 Ⅳ-17> 대전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07
<표 Ⅳ-18>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08
<표 Ⅳ-19> 대전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10
<표 Ⅳ-20> 울산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11
<표 Ⅳ-21> 울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12
<표 Ⅳ-22> 울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13
<표 Ⅳ-23> 경기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15
<표 Ⅳ-24> 경기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17
<표 Ⅳ-25> 경기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18
<표 Ⅳ-26> 강원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19
<표 Ⅳ-27> 강원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20
<표 Ⅳ-28> 강원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22
<표 Ⅳ-29> 충청북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23
<표 Ⅳ-30> 충청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24
<표 Ⅳ-31> 충청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25
<표 Ⅳ-32> 충청남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26
<표 Ⅳ-33> 충청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27
<표 Ⅳ-34> 충청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28
<표 Ⅳ-35> 전라북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29
<표 Ⅳ-36> 전라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31
<표 Ⅳ-37> 전라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32
<표 Ⅳ-38> 전라남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33

<표 Ⅳ-39> 전라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34
<표 Ⅳ-40> 전라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36
<표 Ⅳ-41> 경상북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37
<표 Ⅳ-42> 경상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38
<표 Ⅳ-43> 경상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40
<표 Ⅳ-44> 경상남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41
<표 Ⅳ-45> 경상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42
<표 Ⅳ-46> 경상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43
<표 Ⅳ-4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44
<표 Ⅳ-48>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245
<표 Ⅳ-49>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 246
<표 Ⅳ-50>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정책과제와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와의 연계 ····· 248
<표 Ⅳ-51> '가족'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49
<표 Ⅳ-52> '안전'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50
<표 Ⅳ-53> '복지'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50
<표 Ⅳ-54> '보건'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51
<표 Ⅳ-55> '경제활동'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51
<표 Ⅳ-56> '의사결정'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52
<표 Ⅳ-57> '교육-직업훈련'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52
<표 Ⅳ-58> '문화-정보'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 253
<표 Ⅳ-59>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에 따른 지역별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 254
<표 Ⅳ-60> 가족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 255
<표 Ⅳ-6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가족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56
<표 Ⅳ-62> 안전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 258
<표 Ⅳ-63>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안전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59
<표 Ⅳ-64> 복지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 261

<표 Ⅳ-6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복지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61
<표 Ⅳ-66> 보건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 263
<표 Ⅳ-6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보건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63
<표 Ⅳ-68> 경제활동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 265
<표 Ⅳ-69>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경제활동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66
<표 Ⅳ-70> 의사결정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 269
<표 Ⅳ-7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의사결정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70
<표 Ⅳ-72> 교육-직업훈련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 271
<표 Ⅳ-73>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교육-직업훈련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72
<표 Ⅳ-74> 문화-정보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 273
<표 Ⅳ-7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문화-정보 관련 주요 사업내용 ····· 274
<표 Ⅳ-76>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주요 특화사업내용 ····· 276
<표 Ⅳ-77>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계기관 ····· 279

그 림 목 차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내용(안) ····· 4
[그림 Ⅱ-1]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단계 ····· 17
[그림 Ⅲ-1] 2015년 기준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 31
[그림 Ⅲ-2] 성평등지수 1위 지역과 16위 지역의 격차 ····· 32
[그림 Ⅲ-3] 지역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별 점수 변화 ····· 33
[그림 Ⅲ-4]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4
[그림 Ⅲ-5]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5
[그림 Ⅲ-6]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6
[그림 Ⅲ-7]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7
[그림 Ⅲ-8]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8
[그림 Ⅲ-9]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39
[그림 Ⅲ-10]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40
[그림 Ⅲ-11]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 41
[그림 Ⅲ-12] 서울특별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2
[그림 Ⅲ-13] 서울특별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3
[그림 Ⅲ-14] 서울특별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4
[그림 Ⅲ-15]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5
[그림 Ⅲ-16] 서울특별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6
[그림 Ⅲ-17] 서울특별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7
[그림 Ⅲ-18] 서울특별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8
[그림 Ⅲ-19] 서울특별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49
[그림 Ⅲ-20] 부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1
[그림 Ⅲ-21] 부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2
[그림 Ⅲ-22] 부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3
[그림 Ⅲ-23] 부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4
[그림 Ⅲ-24] 부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5
[그림 Ⅲ-25] 부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6

[그림 Ⅲ-26] 부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7
[그림 Ⅲ-27] 부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58
[그림 Ⅲ-28] 대구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0
[그림 Ⅲ-29] 대구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1
[그림 Ⅲ-30] 대구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2
[그림 Ⅲ-31] 대구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3
[그림 Ⅲ-32] 대구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4
[그림 Ⅲ-33] 대구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5
[그림 Ⅲ-34] 대구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6
[그림 Ⅲ-35] 대구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7
[그림 Ⅲ-36]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68
[그림 Ⅲ-37] 인천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0
[그림 Ⅲ-38] 인천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1
[그림 Ⅲ-39] 인천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2
[그림 Ⅲ-40]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3
[그림 Ⅲ-41] 인천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4
[그림 Ⅲ-42] 인천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5
[그림 Ⅲ-43] 인천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6
[그림 Ⅲ-44]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8
[그림 Ⅲ-45] 광주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79
[그림 Ⅲ-46] 광주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0
[그림 Ⅲ-47] 광주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1
[그림 Ⅲ-48] 광주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2
[그림 Ⅲ-49] 광주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3
[그림 Ⅲ-50] 광주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4
[그림 Ⅲ-51] 광주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5
[그림 Ⅲ-52]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6
[그림 Ⅲ-53] 대전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8
[그림 Ⅲ-54] 대전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89
[그림 Ⅲ-55] 대전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0
[그림 Ⅲ-56] 대전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1

[그림 Ⅲ-57] 대전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2
[그림 Ⅲ-58] 대전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3
[그림 Ⅲ-59] 대전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4
[그림 Ⅲ-60] 울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6
[그림 Ⅲ-61] 울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7
[그림 Ⅲ-62] 울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8
[그림 Ⅲ-63] 울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99
[그림 Ⅲ-64] 울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0
[그림 Ⅲ-65]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1
[그림 Ⅲ-66] 울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2
[그림 Ⅲ-67] 울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3
[그림 Ⅲ-68] 경기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4
[그림 Ⅲ-69] 경기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5
[그림 Ⅲ-70] 경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6
[그림 Ⅲ-71] 경기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7
[그림 Ⅲ-72] 경기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8
[그림 Ⅲ-73] 경기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09
[그림 Ⅲ-74] 경기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0
[그림 Ⅲ-75] 경기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1
[그림 Ⅲ-76] 강원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2
[그림 Ⅲ-77] 강원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3
[그림 Ⅲ-78] 강원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4
[그림 Ⅲ-79] 강원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5
[그림 Ⅲ-80] 강원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6
[그림 Ⅲ-81] 강원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7
[그림 Ⅲ-82] 강원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19
[그림 Ⅲ-83] 강원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0
[그림 Ⅲ-84] 충청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1
[그림 Ⅲ-85] 충청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2
[그림 Ⅲ-86] 충청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3
[그림 Ⅲ-87] 충청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4

[그림 Ⅲ-88] 충청북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5
[그림 Ⅲ-89] 충청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6
[그림 Ⅲ-90] 충청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7
[그림 Ⅲ-91] 충청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8
[그림 Ⅲ-92] 충청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29
[그림 Ⅲ-93]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0
[그림 Ⅲ-94] 충청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1
[그림 Ⅲ-95] 충청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2
[그림 Ⅲ-96] 충청남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3
[그림 Ⅲ-97] 충청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4
[그림 Ⅲ-98] 충청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5
[그림 Ⅲ-99] 충청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6
[그림 Ⅲ-100] 전라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7
[그림 Ⅲ-101] 전라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8
[그림 Ⅲ-102] 전라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39
[그림 Ⅲ-103] 전라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0
[그림 Ⅲ-104] 전라북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1
[그림 Ⅲ-105] 전라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2
[그림 Ⅲ-106] 전라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3
[그림 Ⅲ-107] 전라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4
[그림 Ⅲ-108] 전라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5
[그림 Ⅲ-109] 전라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6
[그림 Ⅲ-110] 전라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7
[그림 Ⅲ-111] 전라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8
[그림 Ⅲ-112] 전라남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49
[그림 Ⅲ-113] 전라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0
[그림 Ⅲ-114] 전라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1
[그림 Ⅲ-115] 전라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2
[그림 Ⅲ-116] 경상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3
[그림 Ⅲ-117] 경상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4
[그림 Ⅲ-118] 경상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5

[그림 Ⅲ-119] 경상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6
[그림 Ⅲ-120] 경상북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7
[그림 Ⅲ-121] 경상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8
[그림 Ⅲ-122] 경상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59
[그림 Ⅲ-123] 경상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0
[그림 Ⅲ-124] 경상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1
[그림 Ⅲ-125] 경상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2
[그림 Ⅲ-126] 경상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3
[그림 Ⅲ-127] 경상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4
[그림 Ⅲ-128] 경상남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5
[그림 Ⅲ-129] 경상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6
[그림 Ⅲ-130] 경상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7
[그림 Ⅲ-131] 경상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8
[그림 Ⅲ-13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69
[그림 Ⅲ-133] 제주특별자치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70
[그림 Ⅲ-13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71
[그림 Ⅲ-13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72
[그림 Ⅲ-13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73
[그림 Ⅲ-13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74
[그림 Ⅲ-13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75
[그림 Ⅲ-13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 176
[그림 Ⅳ-1] 지역성평등지수 추이 ····· 179
[그림 Ⅳ-2] 지역별 성평등한 사회참여 수준 변화 ····· 180
[그림 Ⅳ-3] 지역별 여성의 인권·복지 수준 변화 ····· 181
[그림 Ⅳ-4] 지역별 성평등 의식·문화 수준 변화 ····· 182
[그림 Ⅳ-5] 지역성평등지수의 기관별 역할 ····· 279
[그림 Ⅳ-6] 성인지통계 정보시스템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축 화면 ····· 281

부 표 목 차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 290
<부표 1-2> 성별 임금격차 ····· 291
<부표 1-3> 상용직 근로자 ····· 292
<부표 1-4> 광역 의회의원 ····· 293
<부표 1-5> 기초 의회의원 ····· 294
<부표 1-6>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295
<부표 1-7> 관리직 근로자 ····· 296
<부표 1-8> 평균 교육년수 ····· 297
<부표 1-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298
<부표 1-10> 기초생활수급자 ····· 299
<부표 1-11>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 300
<부표 1-12> 국민연금 가입자 ····· 301
<부표 1-13> 공무원연금 가입자 ····· 302
<부표 1-14> 사학연금 가입자 ····· 303
<부표 1-15>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304
<부표 1-16> 건강검진 수검률 ····· 305
<부표 1-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306
<부표 1-18> 강력범죄 피해자 ····· 307
<부표 1-19> 취업여부별 가사시간 ····· 308
<부표 1-20> 가족관계 만족도(1) ····· 309
<부표 1-20> 가족관계 만족도(2) ····· 310
<부표 1-2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311
<부표 1-22> 육아휴직자 ····· 312
<부표 1-23> 여가시간 ····· 313
<부표 1-24> 여가활용 만족도 ····· 314
<부표 1-25> 인터넷이용률 ····· 315

<부표 1-26>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비율 ····· 316
<부표 1-27> 스트레스 인지율 ····· 317
<부표 2-1>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 318
<부표 3-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 319
<부표 3-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 328
<부표 3-3> 2016년도 대구광역시 시행계획 ····· 336
<부표 3-4> 2016년도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 346
<부표 3-5> 2016년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 355
<부표 3-6> 2016년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 365
<부표 3-7> 2016년도 울산광역시 시행계획 ····· 378
<부표 3-8>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 ····· 387
<부표 3-9> 2016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 392
<부표 3-10> 2016년도 강원도 시행계획 ····· 399
<부표 3-11> 2016년도 충청북도 시행계획 ····· 405
<부표 3-12> 2016년도 충청남도 시행계획 ····· 411
<부표 3-13> 2016년도 전라북도 시행계획 ····· 419
<부표 3-14> 2016년도 전라남도 시행계획 ····· 425
<부표 3-15> 2016년도 경상북도 시행계획 ····· 430
<부표 3-16> 2016년도 경상남도 시행계획 ····· 438
<부표 3-17>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 448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지역 정치·경제·행정·안전·가족·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개발되었다. 당시 지역성평등지수 연구추진의 근거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지역 성평등지표 및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 확대'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 연구는 지역성평등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지표와 산정방안 연구로 진행되어, 지수 산정을 위해 4개 영역 17개의 지표와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1개의 가점영역을 구성하였다.

이후 지역성평등지수는 2013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지표를 수정하여 매년 당해말 공표해 왔으며, 2014년은「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법 제19조 3항은 지역성평등지표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표구성을 국가성평등지표와 연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성평등 지표체계에 준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작성 필요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첫째,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지역자치단체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 지역별 영역과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각 지역의 취약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정책을 수립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영역 및 지표별로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시·도별로 비교분석하며, 영역별 지표와 정책을 연계하여 불평등이 심한 영역과 지표에 대한 정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또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홍보자료집을 발간하여

1) 주재선 외(2015),「2015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p3. 본문 인용 및 수정 보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인식 및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기존 지역성평등지수의 하위영역과 지표구성을 재검토하고, 지수산정방법, 개별지표의 측정방법 및 표준화 방법 등을 정리한다. 지수는 2015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종합 점수 및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의 통계표를 최신자료로 갱신하고 자료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내용(안)

둘째, 지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지역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 성평등지수와 지역 양성평등 정책의 연계표 작성·정리 및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영역별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별 양성평등 정책은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분야별로 연계하여 제시한다. 또한 성평등 수준 개선 및 악화 지역의 변화 요인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관련 지역의 모범 사례와 개선 필요 사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지역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자료집을 작성한다. 지역성평등의 영역별 수준과 특성, 지표별 수준변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를 발간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표준화 방법을 검토하고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 국내외 지역성평등지표 관련 연구
○ 지표의 표준화 및 지수 산정 방법론 연구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검토

둘째, 지역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지역성평등지표에 대한 통계 수집과 분석: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 수집
○ 지역단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셋째,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설명회 개최

○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 영역과 지표 소개
  - 분야별 구성 지표
  - 2016년 추가, 변경된 지표 설명
  - 지표별 자료원 설명

○ 2016년 지역 성평등지수 산정 방법 소개
  - 영역별 가중치
  - 지수의 특성과 2016년 변경된 지표 산정방법 소개
○ 2016년 지역 성평등지수 공표 범위 설명
○ 기타 논의 및 의견 청취

넷째, 지역성평등지수를 산정하고 영역별 점수와 순위를 분석한다.
○ 성평등지수의 지표를 각 특성에 따라 표준화하고 지역별, 정책영역별, 분야별로 성평등지수를 산정한다.
○ 지역 성평등지수는 점수에 따라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을 분석하여 연계한다.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여, 불평등한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과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제시한다.

Ⅱ

지역성평등지수의 개요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구성 9
2.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15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25

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구성

지역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지역 성평등지수 및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 확대' 사업 일환으로 2011년 기초연구가 추진되었고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3항은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조사·공표 방법 등을 제시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는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를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 의사결정 분야,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

<표 Ⅱ-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중략)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구성은 2011년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구성하였다. 2011년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영역별 지표 풀을 구성하였고 16개 시·도별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200명의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당시 지표는 4개의 정책영역에 대해 총 17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4개의 영역은 정책목표에 따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가정과 안전한 삶', '소외여성의 사회통합'으로 이름을 짓고, 각 영역별로 4~5개의 지표로 구성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점영역이 추가지표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가점영역은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한 영역이었지만, 이들 지표들이 지역성평등수준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수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2012년과 2013년까지의 지표구성은 지수 산정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역 명 정비와 일부 지표의 통합, 삭제, 추가를 고려하여 재정비하였다. 2012년은 가점영역을 삭제하고 영역 명을 변경하여 구체화하였고, 2013년은 일부 지표의 통합, 삭제, 추가를 실시하였다. 삭제된 지표는 '전문직 성비'와 '가정폭력건수'로, 각각 성평등 수준 달성과 지표의 포괄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삭제되고 '상용직 근로자 성비'와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비'로 대체되었다. 이외 대표성 제고 영역의 경우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고 '초·중·고 교장 성비'를 추가했다.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2014년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으로 재편하였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구성을 기준으로 연계하고, 둘째, 지표 중 지역단위의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관된 유사 지표로 대체한다. 단, 유사 지표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구성 지표에서 제외한다. 셋째, 지표 연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의 추가와 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에 영역과 지표 구성은 기본적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지역통계생산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통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지표 중 '비빈곤 가구주 비율'은 통계 신뢰성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대체했다. 이 지표는 전국단위의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체되었다. 국가와 지역 성평등지수 연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은 지역특성으로, 이 원칙에 의해 대체된 지표가 바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이다. 지역단위의 성평등 측정에서 국회의원 성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풀뿌리 정치와 지역 정치적 환경의 성평등 특성은 광역 및 기초 의원 비율이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원칙에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연계하기 어려운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등의 지표는 지표 구성에서 삭제하였다.

2016년 지표 구성은 기존 지표에서 두 개의 지표를 추가하고 하나의 지표를 대체하였다. 추가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이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는 행정참여의 성 격차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성평등 개선 의지를 지수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추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주관적 지표로 보건 분야 지표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한편 경제활동 분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성평등지표와 측정의 명확성을 위해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로 수정하였다.

<표 Ⅱ-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구성 변화

연도	지표체계 개편 내용
2011년	○ 지역성평등지수 표준안 개발 및 영역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전문가 200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 실시) ○ 영역별 지표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와 함께 16개 시·도별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발 워크숍(2회) ○ 4개 영역(대표성 제고, 경제참여와 기회, 가정과 안전한 삶, 복지) 17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나, 하나의 가점영역을 둠

<table>
<tr><th>연도</th><th>지표체계 개편 내용</th></tr>
<tr><td>2012년</td><td>○ 산정 영역은 기존 4개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역명을 구체화하고 가점영역은 지역 워크숍에서 전문가와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삭제함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명 변경>
<table><tr><th>2011년 영역명</th><th>2012년 이후 영역명</th></tr><tr><td>1 여성의 대표성 제고</td><td>1 대표성 제고</td></tr><tr><td>2 여성의 경제 세력화</td><td>2 경제참여와 기회</td></tr><tr><td>3 여성의 삶의 질 제고</td><td>3 가정과 안전한 삶</td></tr><tr><td>4 소외여성 사회통합</td><td>4 복지</td></tr></table>
○ 영역별 지표구성은 최소의 변경을 원칙으로 일부 수정·보완함
- 대표성 제고 영역의 경우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고 ‘초·중·고 교장 성비’를 추가
-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완전평등 상태에 도달한 ‘전문직 지표’를 제외하고 ‘상용직 근로자 성비’ 추가
-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의 경우 ‘가정폭력 건수’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로 변경</td></tr>
<tr><td>2014년</td><td>○ 2014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과 연계하여 재편함. 이에 지표체계는 2013년 4개의 영역 16개의 지표에서 3개 영역, 8개 분야 21개 지표로 구성함
- 8개 분야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분야로 국가성평등지수와 동일
- 하지만 지표구성은 통계생산여부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1개 지표로 구성</td></tr>
<tr><td>2016년</td><td>○ 영역별 지표구성의 수정·보완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개편으로 인해 2개의 지표 추가와 1개 지표의 수정
* 지표추가 :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보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의사결정)
* 지표수정 : (기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수정)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기초생활보장자 성비와 강력범죄(흉악법) 피해자의 성비에 대한 측정방법 수정
- 수준에서 성 격차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성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경우 표준화를 위한 최대값이 변경 됨
(기존) 최대값 해당 인구 10만명 당 150건 → 300건으로 변경
* 변경사유: 강력범죄의 성폭력(성추행 포함) 증가로 인해 최대값을 조정</td></tr>
</table>

출처 : 주재선 외(2015),「2015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 pp11~12. 보완

이에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표 Ⅱ-3>와 같다.

<표 Ⅱ-3>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정책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한편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을 비교해 보면 <표 Ⅱ-4>와 같다.

<표 Ⅱ-4>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비교

분야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	비고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변경 15~64세 인구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광역의원, 기초의회의원)	지역특성 반영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위원회 위원	2016년 추가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	대체 불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대체 지표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	대체 불가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2016년 추가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여가 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인터넷 이용률	대체 지표

2.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의 성평등 성과(outcomes)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성별격차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측정한다.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두 값의 차이(difference) 혹은 비(ratio)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성별격차를 이용한 성평등 측정은 산정 방법이 쉽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발전환경을 통제[2]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산정[3]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정한다.

첫째, 모든 지표는 평등기준점으로 표준화 한다. 지표 값의 범주는 완전불평등 상태인 '0'에서 완전평등상태인 '1'까지 구성된다. 비율로 보면 여성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일 때, 성비는 '1'로 완전평등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4]. 대부분의 지표는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평등 기준점 '1'을 만족한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이를 만족하지 않거나, 현재의 성별 수준을 감안할 때 완전평등 기준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경우 자연출생성비가 1.06이기 때문에 남녀 비율 50%에서 완전평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즉, 출생아동의 출생성비의 완전평등한 수준은 자연출생성비 수준의 역수인 0.944가 평등기준점(Equality benchmark)이 된다. 또한 '육아휴직자 성비'는 남성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여성 육아휴직자의 10% 수준에 도달했을 때를 완전평등상태로 두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5]과 의식 하에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50%로 높아지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우리나라 여성근로자가 분만한 수는 100,176명이고 이중 대략 40.8%인 40,913명이 육아휴직을 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을 보면 2005년 2.0%, 2010년 2.0%, 2015년 5.6%로 극히 낮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낮은 이유는 육아휴직에 대한 성별 인식

2) 즉, 지역별 혹은 국가별 발전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지표의 수준을 통제할 수 있음.
3)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I) 등을 포함해 해외 지역성평등지수 산정 시 대부분 활용되는 방법임.
4) 따라서 여성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여성수준이 남성수준보다 높을 경우 지표 값은 완전평등 상태인 '1'점을 부여함.
5) 임금, 차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가족양립 정책은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이 급격히 상승할 여지가 낮음.

차이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육아휴직은 단계적으로 완전평등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1차로 10% 지점을 완전평등으로 둔 것이다[6]. 일반적으로 모든 지표는 다음의 함수를 통해 표준화한다. 이 함수는 완전평균기준점이 '1'과 다를 경우에도 활용되며, 다음과 같다.

$$I = [(x - Min(x)]/[(Max(x) - Min(x)] \quad (1)$$

여기서 지표를 백분율로 표시할 때, 대부분의 지표는 최소값(Min(x))이 0이고 최대값(Max(x))이 100이다.

반면 성비의 값이 클수록 성평등이 악화되거나 통계 값이 클수록 부정적 의미를 갖는 지표의 경우 표준화함수는 다음과 같다.

$$I = [(Max(x) - x]/[(Max(x) - Min(x)] \quad (2)$$

여기서 지표를 백분율로 표시할 때, 지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설정하였다.

강력범죄자 지표인 경우 $Max(x)$=300, $Min(x)$=0이고 기초생활보장자 지표인 경우 $Max(x)$=100, $Min(x)$=0로 설정하였다.

지역성평등지수에서는 (2)식으로 표준화한 지표는 총 3개이다. 이들 지표의 최대·최소값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경우 1980년 이후 1993~1994년에서 가장 높았고 그 값은 각각 2.029, 2.027이었다. 즉, 여아 100명 당 남아가 203명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UN은 자연적 상태에서 출생하는 성비(Natural sex ratio)를 1.06으로 본다. 이를 고려할 때 2.0 이상은 남아선호가 매우 높은 상태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 이상일 때 불평등이 최대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지표를 백분율로 산정 시 최대값을 200, 최저값을 106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성과가 높을수록 성평등에 부정적 의미를 주는 지표로서, 성 격차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6) 즉, 유아휴직 사용 성비는 정책적 목표점을 고려하여 여성 육아휴직자의 10%로 정한 만큼, 만약 10%를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완전평등점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가 남녀 모두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어느 한 성의 증감이 성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없다할 수 있다. 즉, 두 지표는 일정 수준이상 발생하게 되면, 피해로 나타나는 불이익이 성불평등을 훨씬 초월하게 된다. 이에 두 지표의 산정은 인구대비 최대 발생건수로 표준화하여 성비 값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지역별 최대 발생건수(완전 불평등 기준점)를 감안하여 2011~2015년 동안은 인구 10만 명 당 150명으로 두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성폭력에 성추행이 추가되고 성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6년은 이를 300명으로 재조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자의 경우는 빈민 비율이 높은 여성이 시도별로 2007년~2015년 사이 1,000명 당 최소 15명에서 최대 70명 사이의 값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자의 평등기준점은 최대 기준점을 100명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Ⅱ-1]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지표를 성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성비로 전환하는 이유는 지역별 지표의 발전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역별로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전 정도가 다름을 고려해, 여성의 절대적 수준보다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서울특별시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경우 여성이 549명, 남성이 2,631명이면, 지표의 성비는 「549/2,631=0.209」로 계산된다. 성비는 대부분 남성비율을 분모로 하고 여성비율을 분자로 하여 산정한다. 이처럼 성비의 분모를 남성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직 비율 성비'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더욱이 여성은 관리직 규모가 매우 낮아, 표본조사의 경우 이를 지역별로 구분할 때 단위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관리직 규모를 천명 단위로 사용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여성 관리자가 '0'으로 집계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단위를 천단위로 제공하는 것은 자료의 신뢰성 때문이지만, 이 경우 지역별 성평등 수준 측정에 왜곡이 발생될 수 있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7]을 통해 '십명' 단위의 값으로 재계산하여 성비를 산정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각 지표는 지표의 적용 대상 남녀 인구로 가중치(weight)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기초 및 광역의원 입후보 자격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해당 지역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한다. 또 '관리직 비율 성비,'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등은 지표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의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였다.

한편 '가사노동시간 성비'의 경우 남녀의 취업률에 큰 영향을 받는 지표로, 하루의 생활시간에서 취업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은 취업률을 고려해 가사시간을 조정하여 성비를 산정하였다. 조정방법은 취업률이 동일할 경우를 가정하여 가사시간을 재계산하여 산정에 활용하였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같이 두 개의 지표를 통합한 경우 지표의 통합은 각 지표 값의 규모와 대표성을 고려해 통합하였다.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은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광역 및 기초

7) 관리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함. 하지만 이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지역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분석한 값을 사용함. 지역별고용조사는 기초단체 단위의 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되는 통계조사이며, 가중치 조정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단위의 규모를 매칭하고 있음.

자치단체 의회의원 성비를 단순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는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지표별 값의 산정에 사용된 가중치

분야	구성지표	가중치(보정 값)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임금격차	-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성비 역수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성비 역수
	관리직 비율	취업자 성비 역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전체 인구 성비 역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18세~59세 인구 성비 역수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건강검진 수검률	-
	스트레스 인지율	-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
가족	가사노동시간	동일 취업률 가정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
	육아휴직자	-
문화·정보	여가시간	동일 취업률 가정
	여가 만족도	-
	인터넷 이용률	-

네 번째로, 분야별 지수 산정은 각 분야별 지표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한다. 지표의 값은 완전불평등 '0'에서 완전평등 '1'까지 범위를 가지며, 생산여부에 따라

측정지표와 추정지표를 활용한다.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원칙은 2015년 기준 측정통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성평등지수 중 일부 지표는 생산주기가 1년 이상(2년 혹은 5년)으로 지수측정을 위해 지표 값을 추정해야만 한다. 5년 주기 지표는 '평균 교육년수',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이며, 2년 주기 지표는 '가족관계 만족도 '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비율'이다. 이들 지표가 생산되는 연도는 측정지표 값을 활용하지만, 그 외 지표는 추정치를 활용한다. 추정치는 두 값 사이의 경우 내삽법(interpolation)을 통해 추정했고 두 값 다음 연도의 경우 외삽법(extrapolation)을 통해 추정하였다.

<표 Ⅱ-6> 생산주기가 1년이 아닌 지표의 추정방법

지 표	추정 방법	주기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2009년과 2014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2012년과 2014년의 평균평화를 적용	2년
평균교육년수 성비	2005년과 2010년 평균변화를 적용	5년
여가시간의 성비	2009년과 2014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	2012년과 2014년의 평균평화를 적용	2년

단, 4년 주기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보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값은 선거이후 보궐선거가 아니면 다음 선거까지 통계변화가 거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가 생산되는 해까지 동일한 지표 값을 사용하고 있다[8].

마지막으로,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은 분야별 가중치를 이용해 계산한다. 분야별 가중치 산정은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가중치는 2009년 교수와 관련 연구자, 공무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8) 선거를 통해 얻은 통계는 선거 당해 당선자를 기준으로 지표 값을 산정함. 선거에 의한 의회의원과 단체장 당선자 통계는 매년 다양한 이유로 성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자격이 박탈될 경우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성비가 변경될 수 있고, 자치단체장 또한 재선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성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하지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은 선거관리위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가 공표될 때까지 이와 같은 방법을 유지하고자 함.

조사결과이다. 분야별 가중치를 보면, 경제활동이 0.19,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와 의사결정이 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문화·정보가 0.08이다[9].

<표 Ⅱ-7> 분야별 가중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0.19	0.13	0.14	0.13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0.10	0.12	0.11	0.08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과정을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경제활동 분야의 3개 지표값과 가중치이다.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값과 가중치>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	남녀임금 (천원)	상용직 (천명)	지표 가중치	
				임금근로자(천명)	취업자(천명)
여성	52.6	1,806	987	1,826	2,246
남성	72.7	2,889	1,537	2,181	2,852

○ 단계 1 : 각 지표의 성비(여/남)의 백분율을 구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frac{52.6}{72.7} \times 100 = 72.35$
- 남녀임금 성비 : $\frac{1,806}{2,889} \times 100 = 62.51$
- 상용직 근로자 성비 : $\frac{987}{1,537} \times 100 = 64.22$

○ 단계 2 :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재계산한다.

- 상용직 근로자 성비는 임금근로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

  : $64.22 \times \frac{2,181}{1,826} = 76.71$

9) 전문가 조사 결과, 부문별 가중치의 일관성 비율(CR)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단계 3 : 표준화된 지표 값을 산술평균하여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한다.

- 경제활동 영역 $= \frac{72.35 + 62.51 + 76.71}{3} = 70.52$

○ 단계 4 : 다른 분야의 지수도 단계 1에서 단계 3을 통해 동일하게 계산되며, 지역성평등지수는 각 분야의 가중치(<표 Ⅱ-6>)를 이용하여 최종 산정하게 된다.

(예) 가족 분야 : 59.56, 복지 분야 : 79.54, 보건 분야 : 87.84, 의사결정 분야 : 28.97, 교육·직업훈련 분야 : 95.92, 문화·정보 분야 : 84.71, 안전 분야 : 53.90

- 지역성평등지수

$= 59.56 \times 0.11 + 79.54 \times 0.13 + 87.84 \times 0.10 + 70.52 \times 0.19$
$+ 28.97 \times 0.13 + 95.92 \times 0.14 + 84.71 \times 0.08 + 53.90 \times 0.12 = 69.51$

<표 Ⅱ-8> 지역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F / M]
성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 비율	대상 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 [F / M]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광역의원 성비와 기초의원 성비 평균	X = W_m/f × [F_광역 / M_광역+F_기초 / M_기초] / 2
5급이상 공무원비율	대상 남녀공무원 인원비율로 조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 [F / M]
관리직 비율	대상 남녀취업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 [F / M]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성비	X = W_m/f × [F / M]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의 성비	X = [F / M]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F / M]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명 당 100명을 최대치로 표준화함	X = [S_f / S_m]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x]}{[Max(x)-Min(x)]} = \frac{100-x}{100}$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 [F / M]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F / M]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 성비	X = [F / M]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대상 인구비율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집단 성비	X = W_m/f × [F / M]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명 당 300명을 최대치로 표준화함	X = [S_f / S_m]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x]}{[Max(x)-Min(x)]} = \frac{300-x}{300}$
가족		
가사노동시간	남녀취업구조를 통제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X = 1 / [(T_Ef + T_Nf) / (T_Em + T_Nm)]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F / M]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F / M]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단, 완전평등 기준점을 남성 육아휴직자를 여성 10%로 봄	X = W_f/m ×[M / F] ×10
문화·정보		
여가시간	남녀취업구조를 통제한 여가시간 성비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F / M]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활용능력에 대한 성비	X = [F / M]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3)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을 나타냄.
4) T_Em, T_Nm, T_Ef, 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5) LT_Em, LT_Nm, LT_Ef, L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3.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격차(gap)는 빈곤, 임금, 기술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차이(difference)와 비(ratio)를 활용해 측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표의 성별격차를 남성 대비 여성 비로 활용하고 있다. 수준(level)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방법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접근 정도(평등 정도)를 알 수 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개발 수준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갖는다. 즉, 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을 측정할 경우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성평등 수준에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격차는 지역의 발전 상태와 관계없이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격차는 성별의 절대적 성취정도가 평등에 반영되지 못해서 직감적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지표구성은 산정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해 활용한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제성평등지수는 결과적 평등상태, 즉 남녀의 성과수준을 기반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의 경우 가점영역에서 성평등 정책 활성화 차원으로 5개의 투입지표를 구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가점영역의 투입지표는 2012년부터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역성평등 수준이 가점영역의 투입지표로 인해 순위 변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로 국제기구에서 알 수 있듯 제도와 정책 수단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성과지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0].

셋째, 지역성평등지수 목적은 성평등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평등지수 산정은 보통 '여성의 수준 상승' 혹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을 갖게 된다. 성평등

10) WEF(2013), The Gender Gap Index 2013을 참고함.

지수 개발 시 '여성의 수준 상승'과 '성평등' 달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책적 목적 혹은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성평등에 더 큰 지향점을 갖는다면, 지수는 성별 수준의 차이와 방향을 중요시 하게 된다. 즉, 한쪽 성의 절대적 평등점인 50%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가 중요하며, 차이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성평등 달성을 지향점으로 할 경우 지수는 개별 지표의 수준 상승보다 지표가 남성의 동일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 반면 여성수준 상승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지수는 남성 수준과 관계없이 여성수준이 낮은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정책의 방향이 남성과의 격차보다 여성의 수준향상에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하게 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성별격차의 해소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표 Ⅱ-9>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요약

1. 지역성평등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기반으로 측정된 지수이다.
2.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를 기반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3.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 달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지수이다.

III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1. 지역별 성평등 수준비교와 추이 29
2.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41

1. 지역별 성평등 수준비교와 추이[11]

가.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지역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16개[12] 시·도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지표들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 '0.0'부터 완전평등을 의미하는 '100.0'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수 값의 순위에 따라 상위지역, 중상위지역, 중하위지역, 하위지역으로 구분한다. 즉,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류방식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등급 내 시·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이다.

2015년 지역성평등지수는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Level-1)은 강원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상위지역 중 강원도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상위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과 2012년에 상위지역으로 유지되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중상위권으로 하락한 후 2015년에 상위지역으로 재진입하였다.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 이래 줄곧 상위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상위순위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중상위 지역(Level-2)으로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가 해당된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성평등 중상위권 지역으로 구분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2013년 중하위권에서 2014년 상위지역으로 진입하지만, 2015년 한단계 하락해 중상위권 수준을 나타낸다. 전라북도는 2014년 중하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 순위로 진입하며, 충청북도는 2011년과 2012년 중하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상승해 유지하고 있다.

---

11)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혹은 추정)년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12) 세종특별자치시는 통계생산의 문제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구성 지표의 모든 통계가 생산될 경우 비교집단에 포함시킬 예정임.

중하위 지역(Level-3)으로는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2014년 중상위권으로, 2015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경상남도는 2011년과 2012년 하위권이나. 2013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2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 인천광역시는 2011년 중상위권이나 2012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하위지역(Level-4)으로는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해당된다. 경상북도는 2011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2년 중하위권으로 순위상승을 보였으나, 2013년부터 하위권으로 하락하면서 성평등 순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2011년 중하위권에서 2012년 하위권으로 떨어진 후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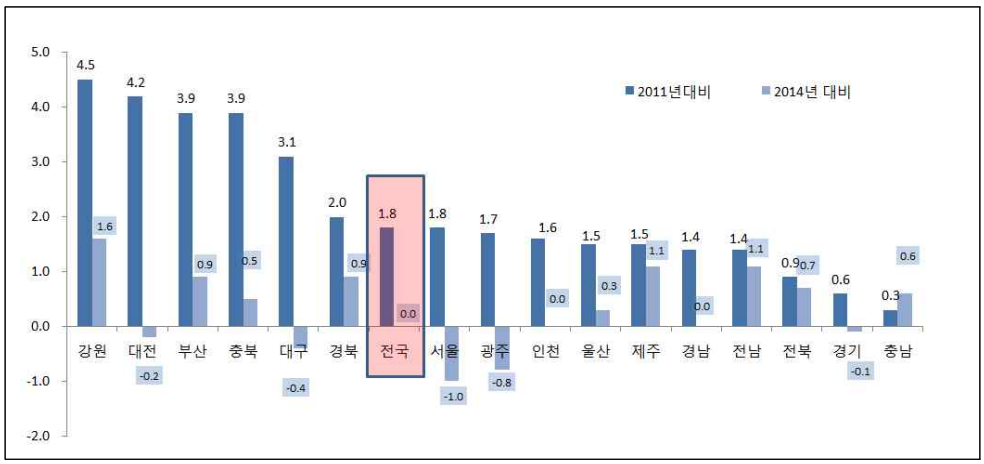
<표 Ⅲ-1>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등급	2011	2012	2013	2014	2015
성평등 상위지역 (Level-1)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대전	대전	경기	대전	대전
	서울	서울	대전	부산	서울
	제주	제주	서울	서울	제주
성평등 중상위 지역 (Level-2)	강원	강원	광주	경기	광주
	광주	광주	전북	광주	부산
	부산	부산	제주	제주	전북
	인천	전북	충북	충북	충북
성평등 중하위 지역 (Level-3)	전남	대구	경남	경남	경기
	전북	울산	대구	대구	경남
	충남	인천	부산	인천	대구
	충북	충북	인천	전북	인천
성평등 하위지역 (Level-4)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울산	울산	울산
	대구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울산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주: 각 등급안의 시·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임.

2015년 지역성평등지수를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강원도로 지난 5년 간 총 4.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8p 보다 매우 높은 상승 수준이다. 다음으로 높은 상승을 보이는 지역은 대전광역시이다. 대전광역시는 2011년 대비 4.2p 상승했다. 이외 부산(3.9p), 충청북도(3.9p), 대구광역시(3.1p), 경상북도(2.0p)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평등 개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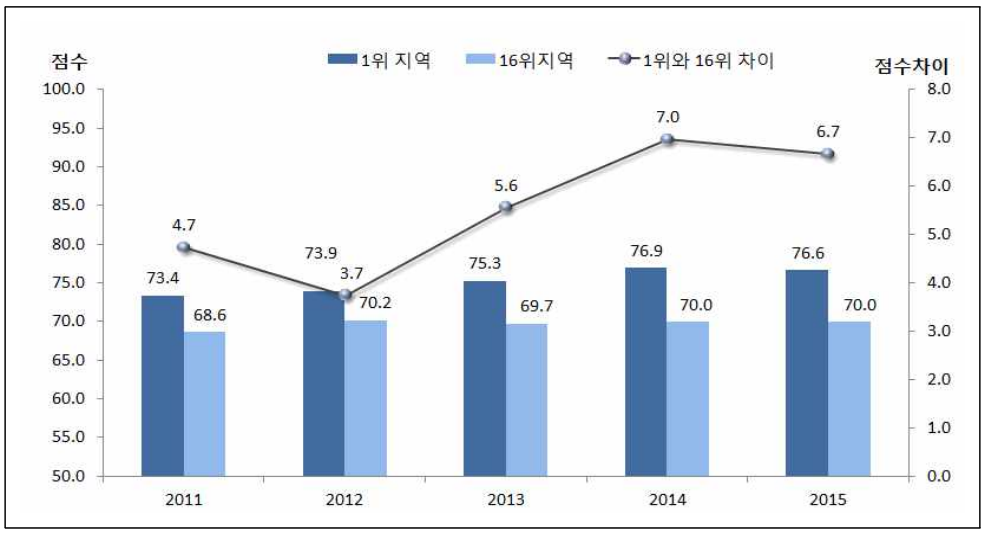
한편 2014년과의 비교에서 2015년 성평등 수준이 많이 개선된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도(1.6p), 제주특별자치도(1.1p), 전라남도(1.1p), 부산광역시(0.9p), 경상북도(0.9p), 전라북도(0.7), 충청남도(0.6p)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높은 상승에 힘입어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위권을 유지했고, 전라북도는 중상위지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전년대비 1.0p 떨어졌고,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각각 0.8p, 0.4p, 0.2p,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2014년 중상위권에서 2015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그림 Ⅲ-1] 2015년 기준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

시·도 간 성평등 수준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평등지수 순위 1위인 지역의 점수는 2011년 73.4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 2012년 73.9, 2013년 75.3, 2014년 76.9로 높아졌다가 2015년 76.6로 다소 하락했다. 반면 시·도 중

16위인 지역의 성평등지수 점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하여 2011년 68.6에서 2012년 70.2까지 상승하고 2013년은 69.7로 전년대비 약간 하락하다 2014년과 2015년 70.0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지수 1위와 16위 격차는 2011년 4.7p에서 2012년 3.7p로 하락하지만,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5년은 6.7p로 비교적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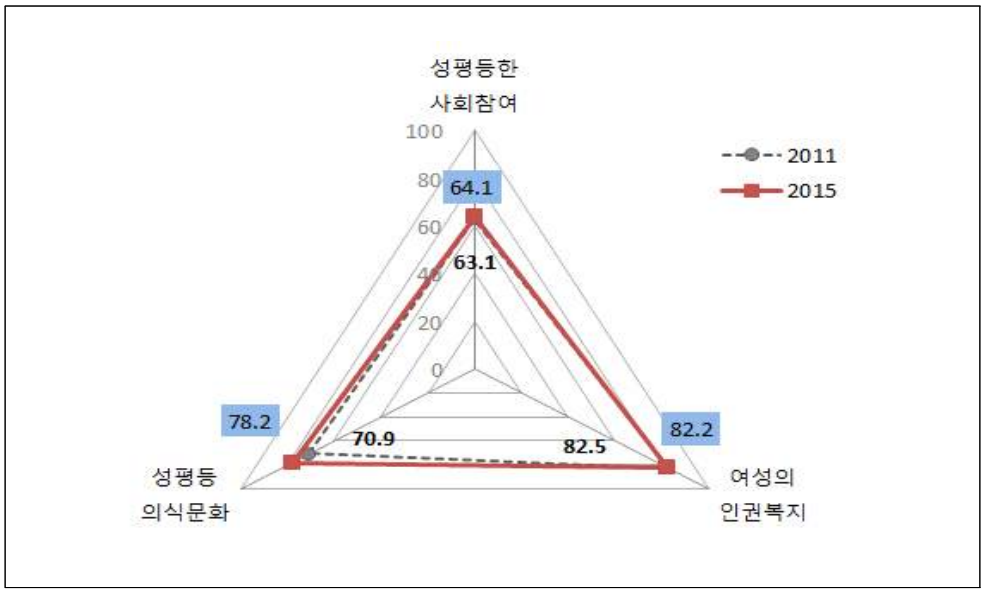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 성평등지수 1위 지역과 16위 지역의 격차

나. 영역별 지역의 성평등 수준 현황과 특징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의 정책영역과 8개의 분야, 23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3개 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영역으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로 구분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64.1로 2011년과 비교하여 1.0p 상승하지만 다른 두 정책영역에 비교하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 82.2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 영역은 2011년 70.9에서 2015년 78.2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 상승을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 지역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별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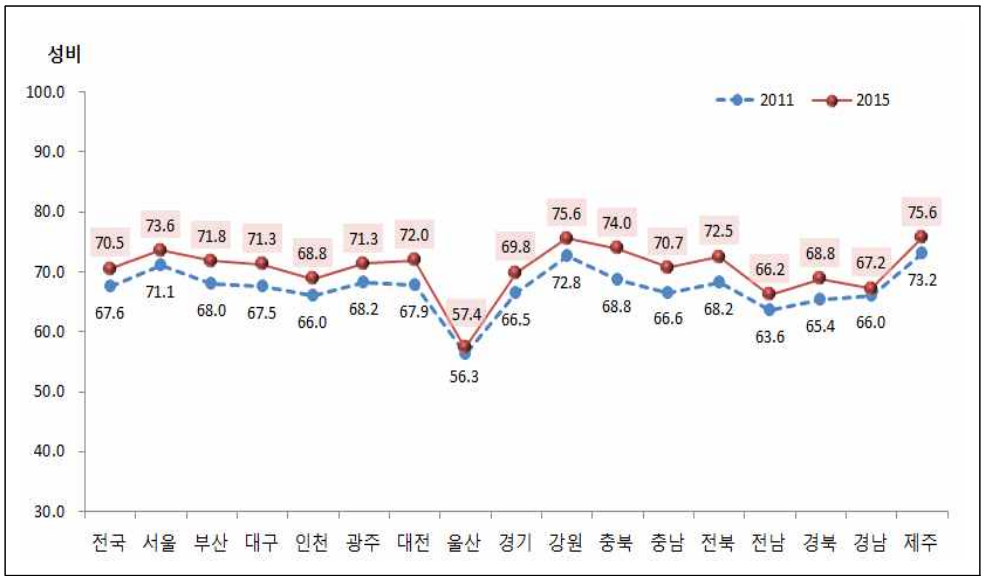
정책영역을 8개의 분야별로 나누어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종합점수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분야별로 수준과 순위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5년 전국 평균은 70.5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75.6로 16개 시·도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등이 다음 순위로 높다.

2011년과 비교해서 경제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충청북도가 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북도(4.3p), 충청남도(4.1p), 대전광역시(4.1p), 부산광역시(3.8p), 대구광역시(3.8p) 등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을 보였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2011년과 비교하여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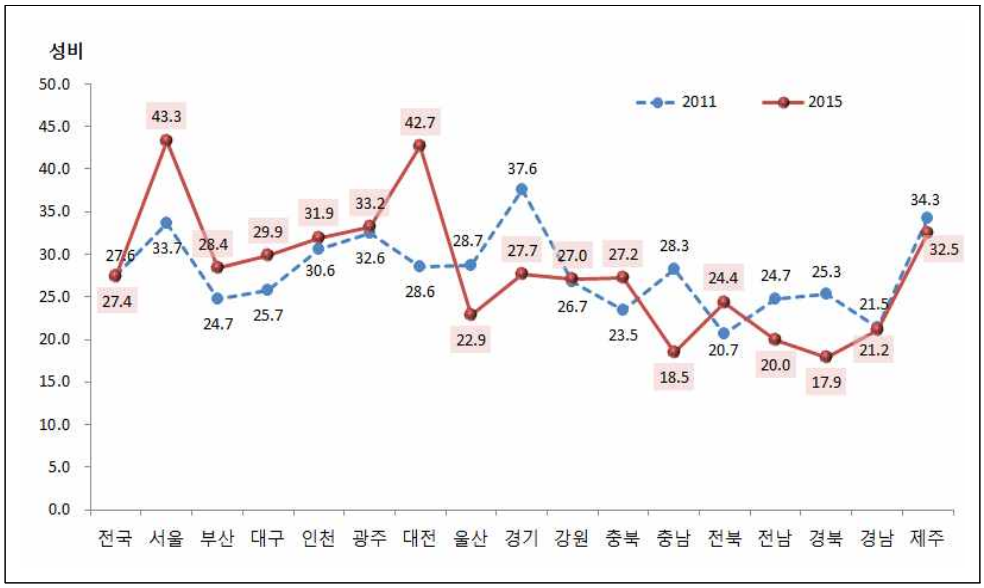
[그림 Ⅲ-4]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전국 평균 27.4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17.9)로 전국 평균(27.4) 수준보다 9.5p 낮았고 충청남도(18.5), 전라남도(20.0), 경상남도(21.2), 울산광역시(22.9), 전라북도(24.4), 강원도(27.0), 충청북도(27.2)에서 성평등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사결정 분야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특별·광역시가 상위권에 위치했고 도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광역시(14.1p)로 나타났고, 서울특별시(9.6p), 대구광역시(4.2p), 부산광역시(3.7p), 충청북도(3.7p)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16개 시·도 중 7개의 지역은 성평등 수준이 2011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의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도(-9.9p)이고, 충청남도(-9.8p), 경상북도(-7.4p),

울산광역시(-5.8p), 전라남도(-4.7p), 제주특별자치도(-1.8p), 경상남도(-0.3p)가 그 뒤를 이어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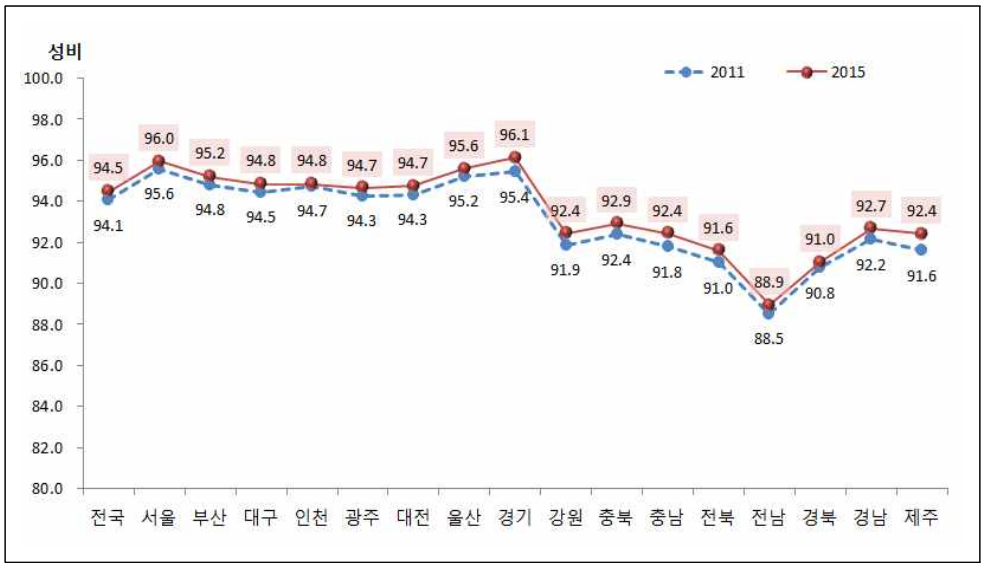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미세한 차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이 분야의 전국 평균은 94.5이며, 경기도(96.1), 서울특별시(96.0), 울산광역시(95.6), 부산광역시(95.2)의 순서로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다.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88.9)이고, 경상북도(91.0), 전라북도(91.6) 등에서 하위순위를 보였지만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다.

2011년과 비교하여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역은 한 곳도 없으나,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아 상승폭이 크지 않다. 2011년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지역은 경기도(0.7p)로 나타나며, 충청남도(0.6p), 전라북도(0.6p), 강원도(0.5p), 충청북도(0.5p), 경상남도(0.5p), 제주특별자치도(0.8P)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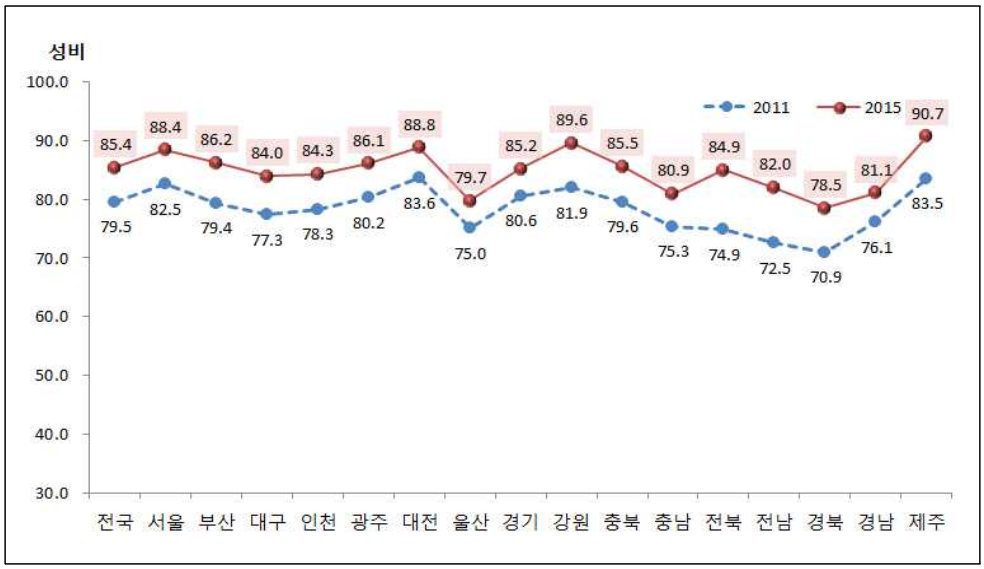
[그림 Ⅲ-6]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2) 여성의 인권·복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점수는 전라북도가 가장 높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1년 대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 중 하나이다. 2015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이 90.7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89.6), 대전광역시(88.8), 서울특별시(88.4), 부산광역시(86.2)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78.5)이며 울산광역시(79.7)가 그 뒤를 잇는다.

2011~2015년 동안 복지 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를 보면, 전라북도가 2011년 대비 10.0p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9.5p), 강원도(7.7p), 경상북도(7.6p), 제주특별자치도(7.2p) 등에서 7.0p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인다. 한편 상대적으로 동기간 낮은 상승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4.6p)이며, 울산광역시(4.7p), 경상남도(5.0p), 대전광역시(5.2p), 충청남도(5.6p)가 뒤이어 전국(5.9p)의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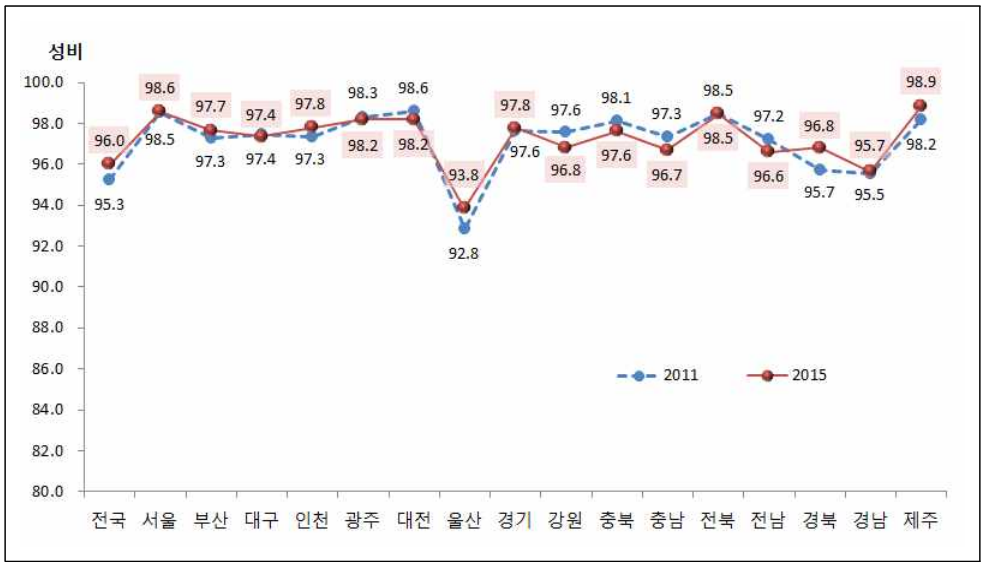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보건 분야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95.0이상의 높은 수준의 성평등지수 값을 보여준다. 2015년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며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다음 순으로 높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93.8으로 울산광역시이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높아서 개선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2011년 대비 평균 0.7p 상승하며, 지역별로 경상북도(1.1p), 울산광역시(1.0p)에서 높은 상승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강원도(-0.8p), 전라남도(-0.6p), 충청남도(-0.6p) 등은 성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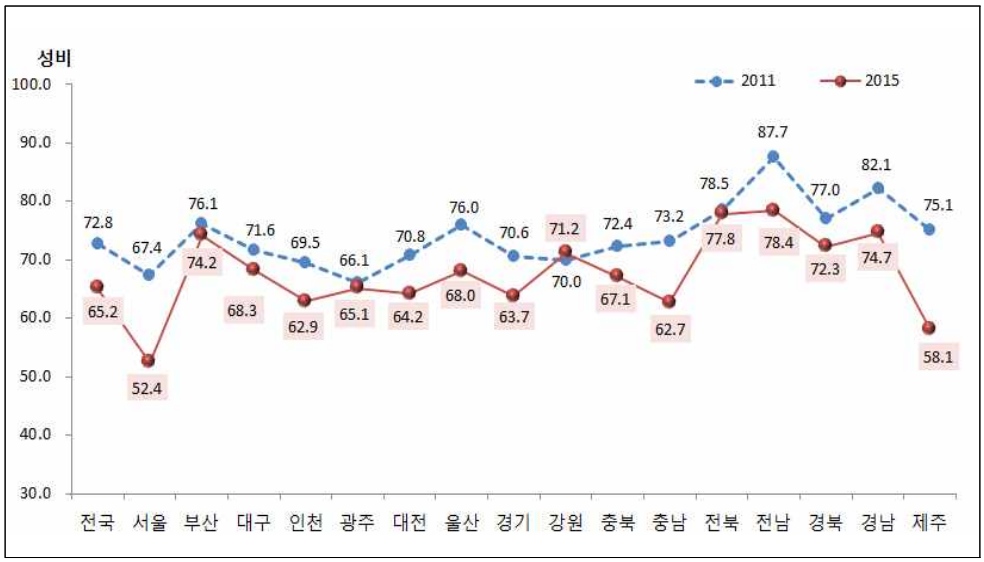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에서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2015년 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78.4)이다. 그 다음은 전라북도(77.8), 경상남도(74.7), 부산광역시(74.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안전 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를 보면, 지역별로 개선 정도가 매우 다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시·도 중 성평등 수준이 유일하게 개선된 지역은 강원도(1.2p)이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특별자치도(-17.0p), 서울특별시(-15.0p), 충청남도(-10.5p), 전라남도(-9.3p) 등 나머지 15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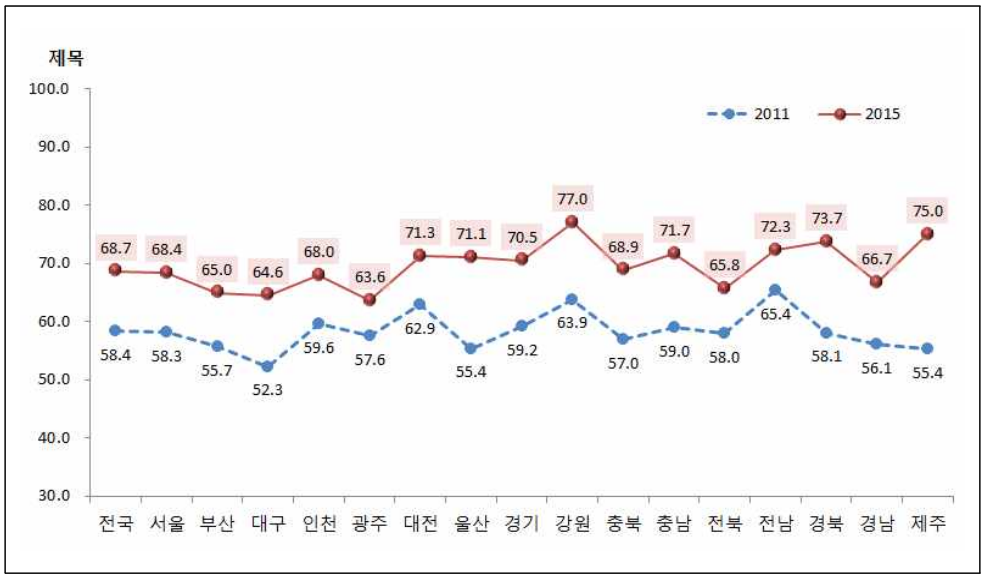
[그림 Ⅲ-9]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3) 성평등 의식·문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와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역의 성평등 종합점수는 대전광역시가 가장 앞서 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77.0)가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75.0), 경상북도(73.7), 전라남도(72.3)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가족 분야 점수가 63.6으로 가장 낮고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의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개선 정도를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9.6p 상승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울산광역시(15.7p), 경상북도(15.6p), 강원도(13.1p)가 그 뒤를 이어 높은 상승을 보인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개선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지역은 광주광역시(6.0p), 전라남도(6.9p), 전라북도(7.8p)로 나타난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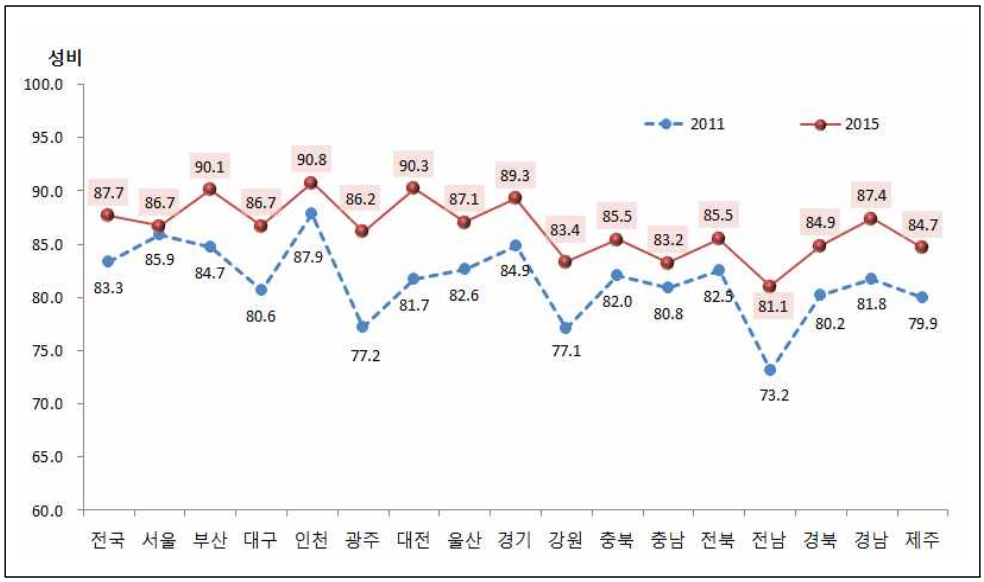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0.8)이고, 대전광역시(90.3), 부산광역시(90.1), 경기도(89.3) 등이 뒤를 이어 높다. 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81.1)로 나타나며 충청남도(83.2), 강원도(83.4), 제주특별자치도(84.7)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9.7p로 비교적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여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16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9.0p), 대전광역시(8.6p), 전라남도(7.9p), 강원도(6.3p), 대구광역시(6.1p)가 6.0p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이며, 개선 정도가 낮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특별시(0.8p), 충청남도(2.4p), 인천광역시(2.9p), 전라북도(3.0p), 충청북도(3.5p)로 나타난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변화 추이

2.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1) 서울특별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73.6으로 전국 평균보다 3.1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보다는 2.0p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1위 지역과의 격차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9p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1.8p 낮으며,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5.0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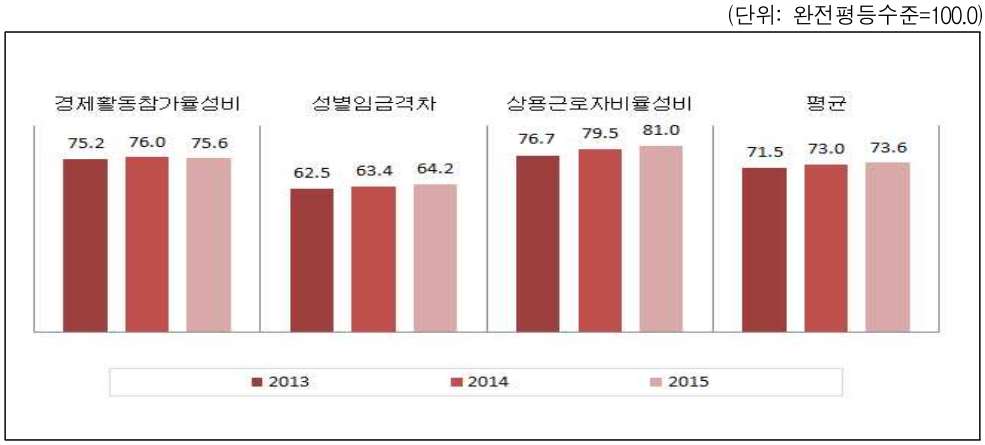
<표 Ⅲ-2> 서울특별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75.6	64.2	81.0	73.6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대비 2014년 상승하였으나 2015년 소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3.6을 기록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 서울특별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43.3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15.9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에 해당한다. 세부지표별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45.3으로 전국 평균 보다 19.4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이 외에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관리직 비율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각각 10.8p, 11.9p 높게 나타났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21.8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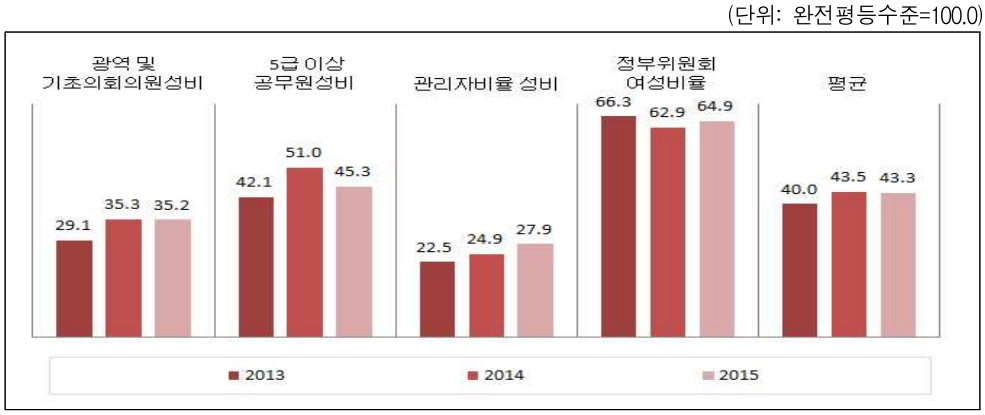
<표 Ⅲ-3> 서울특별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35.2	45.3	27.9	64.9	43.3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 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만 유일하게 2013~2015년 동안 매년 상승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대비 2014년 8.9p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5.7p 하락하였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5년 소폭 하락하였으며,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5년도에 2014년 대비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40.0에서 2014년 43.5, 2015년 43.3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 서울특별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96.0로 완전평등수준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5p 높지만 1위 지역에 비해서는 0.1p 근소한 차이로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2.9p 높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모든 지역이 100.0으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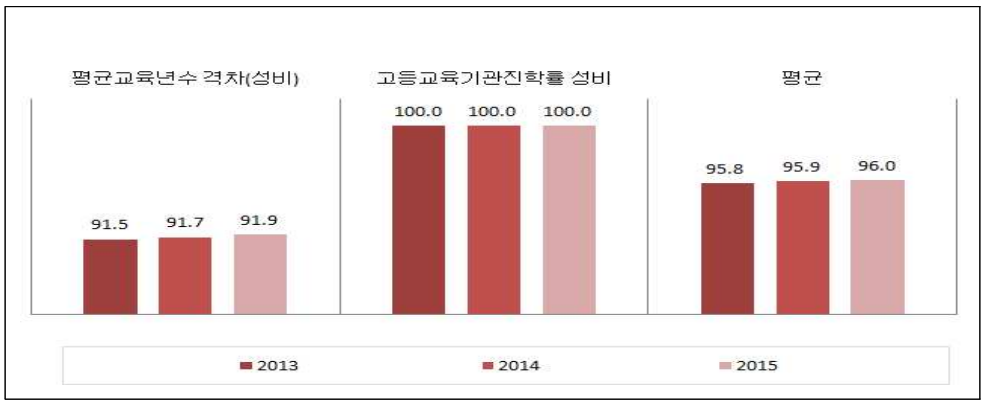
<표 Ⅲ-4> 서울특별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91.9	100.0	96.0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91.5, 2014년 91.7, 2015년 91.9로 매년 전년 대비 0.2p 꾸준히 향상되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부터 2015년까지 100.0으로 완전 평등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도 2014년, 2015년 매년 전년 대비 0.1p 상승하여 2015년은 96.0을 기록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4] 서울특별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복지 분야는 2015년 88.4로 전국 평균(85.4)보다 3.0p 높은 반면, 해당 분야 1위 지역(90.7)에 비해서는 2.3p 낮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 모두 전국 평균보다 각각 2.5p, 3.5p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11.3p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는 0.2p 낮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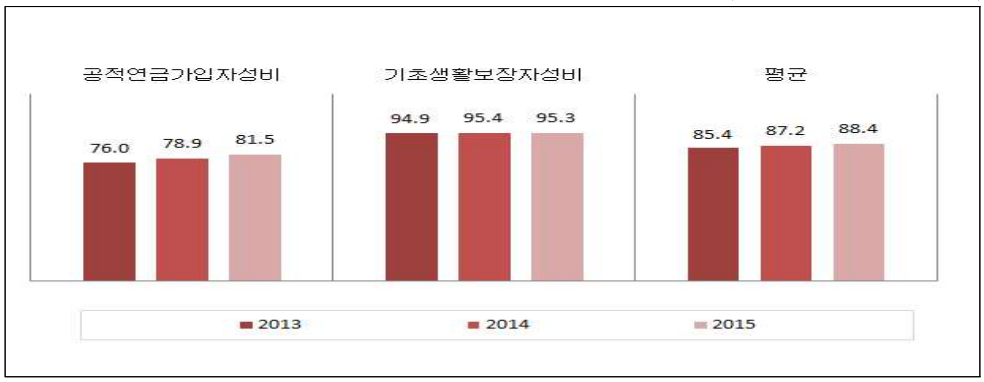
<표 Ⅲ-5>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81.5	95.3	88.4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2013년에서 2015년의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의 추이를 보면, 2013년 85.4, 2014년 87.2, 2015년 88.4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지표는 2013년 76.0, 2014년 78.9, 2015년 81.5로 2년간 5.5p 상승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는 2014년도 2013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2015년 소폭 하락하여, 2013년 94.9, 2014년 95.4, 2015년 95.3로 2년간 0.4p 상승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5]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보건 분야 2015년 성평등지수 값은 98.6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2.6p 높은 수준을 보이나, 보건 분야 1위 지역보다는 0.3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96.9로 전국 평균보다 0.1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0.4p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9.0로 전국 평균보다 2.7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1.0p 낮았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99.9로 전국 평균보다 4.9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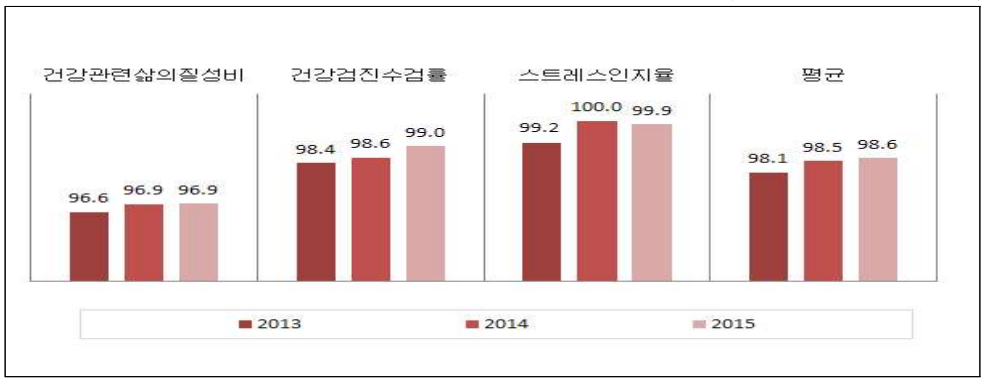
<표 Ⅲ-6> 서울특별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96.9	99.0	99.9	98.6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서울특별시의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2013년 98.1, 2014년 98.5, 2015년 98.6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6.6, 2014년 96.9, 2015년 96.9로 유지되고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98.4, 2014년 98.6, 2015년 99.0로 상승 추세이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99.2, 2014년 100.0, 2015년 99.9로 완전평등수준에 가깝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6] 서울특별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안전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 값은 52.4로 전국 평균 보다 12.8p 낮고,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에 비해서는 26.0p 낮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58.8으로 전국 평균 수준과 해당 지표 1위 지역 수준 보다 각각 6.4p, 23.6p 낮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46.1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각각 19.0p, 31.9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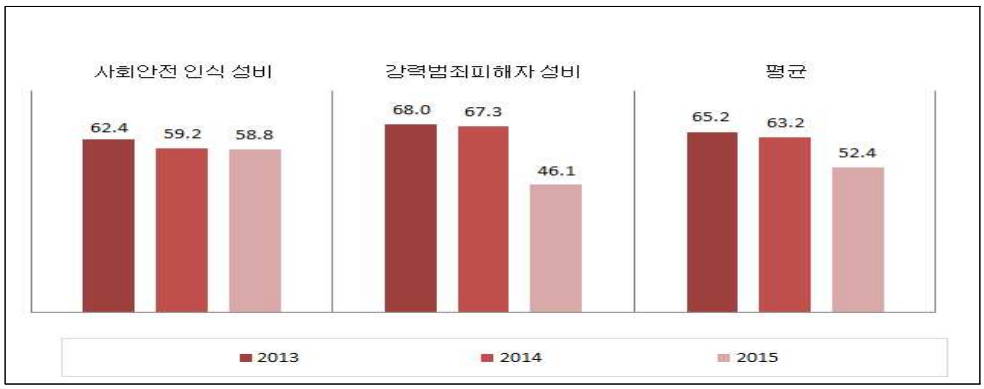
<표 Ⅲ-7> 서울특별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58.8	46.1	52.4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2013년 62.4에서 2014년 59.2, 2015년 58.8으로 2년 연속 하락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60.0 미만으로 낮아져 하락폭이 컸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68.0, 2014년 67.3에서 2015년 46.1로 전년대비 21.2p 크게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5.2에서 2014년 63.2로 하락하였고 2015년에는 52.4로 전년대비 10.8p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7] 서울특별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가족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 값은 전국평균(68.7p)보다 0.3p 낮은 68.4이다.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에 비해서는 8.6p 낮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지표별 1위 지역보다 모두 낮은데, 그 차이는 '가사노동시간 성비' 7.0p,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4.1p,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4.0p, '육아휴직자 성비' 28.2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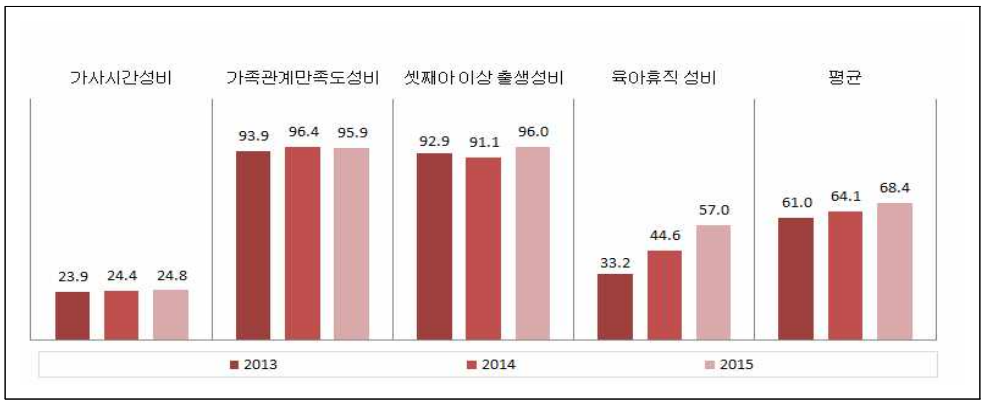
<표 Ⅲ-8> 서울특별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24.8	95.9	96.0	57.0	68.4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지표는 '육아휴직자 성비'이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2013년 33.2, 2014년 44.6, 2015년 57.0으로 상승세이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23.9, 2014년 24.4, 2015년 24.8로 상승하고 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4년 전년대비 1.8p 하락하였으나 2015년 전년대비 4.9p 상승하였다.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4년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2015년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1.0, 2014년 64.1, 2015년 68.4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8] 서울특별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86.7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1.0p 높고 1위 지역 보다는 4.1p 낮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 성비'(78.8), '인터넷 이용률 성비'(92.8) 지표는 전국 평균 보다 높으나 '여가 만족도 성비'(88.6)는

3.3p 낮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와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이용률 성비' 지표 모두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각각 6.4p, 11.4p, 5.9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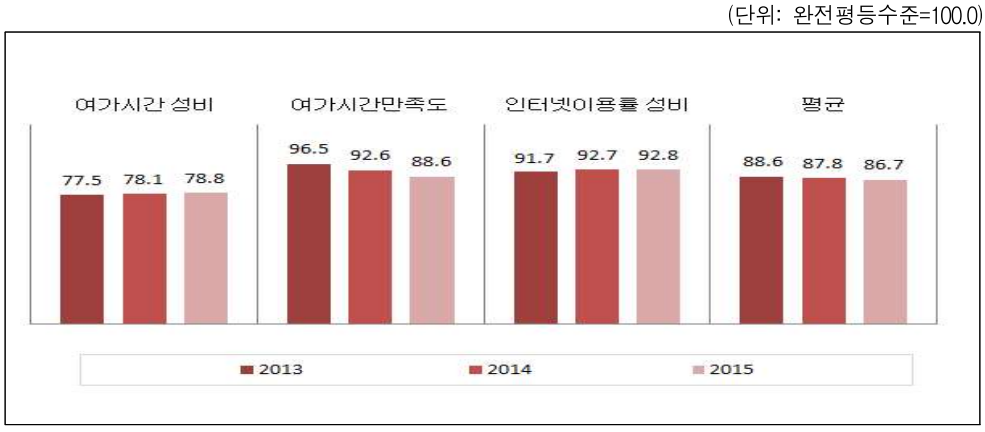
<표 Ⅲ-9> 서울특별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서울특별시	78.8	88.6	92.8	86.7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세부지표별로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7.5에서 2014년 78.1, 2015년 78.8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도 2013년 96.5에서 2014년 92.6, 2015년 88.6까지 연속 하락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3년 91.7에서 2014년 92.7, 2015년 92.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가 2013년 대비 2015년 7.9p 하락한 결과로 문화·정보 분야의 서울특별시 전체 성평등 수준도 하락세로 2013년 88.6, 2014년 87.8, 2015년에는 86.7을 기록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9] 서울특별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 부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에서 부산광역시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은 71.8로 전국 평균보다 1.3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보다는 3.8p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76.5로 전국 평균보다 2.4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7.0p 낮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61.3로 전국 평균에 비해 1.7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에 비해 4.7p 낮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77.6으로 경제활동 분야 세부 지표 중 성평등 수준이 비교적 높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0.3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8.4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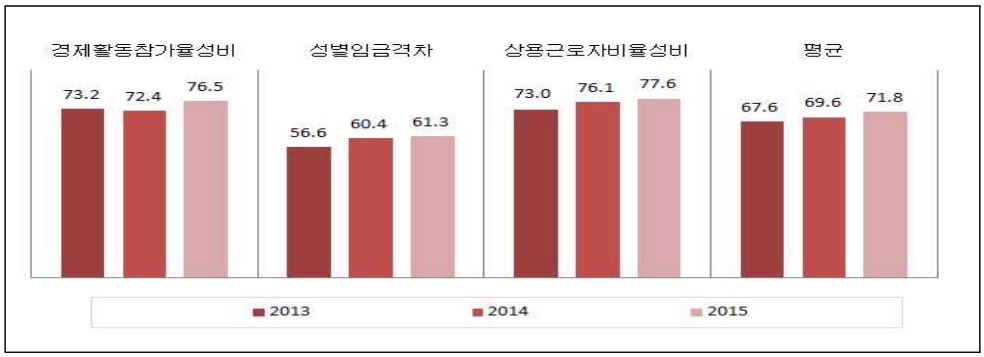
<표 Ⅲ-10> 부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76.5	61.3	77.6	71.8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경제활동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3.2에서 2014년 72.4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76.5로 상승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013년 56.6에서 2014년 60.4로 상승하여 2015년 역시 61.3으로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3.0, 2014년 76.1, 2015년 77.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부 지표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결과 부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2013년 67.6, 2014년 69.6, 2015년 71.8으로 2015년 전년 대비 2.2p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0] 부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의사결정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28.4으로 전국 평균보다 1.0p 낮고,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보다는 14.9p 낮다. 세부지표별로 '관리직 비율 성비'(11.9) 지표는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모두 낮다. 반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25.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26.9),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49.5)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낮다.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세부 지표별로 6.0p 내외를 보이는 반면, 지표별 1위 지역과의 격차에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16.4p, '관리직 비율 성비'는 25.0p로 15.0p 이상 낮아 격차가 컸다.

<표 Ⅲ-11> 부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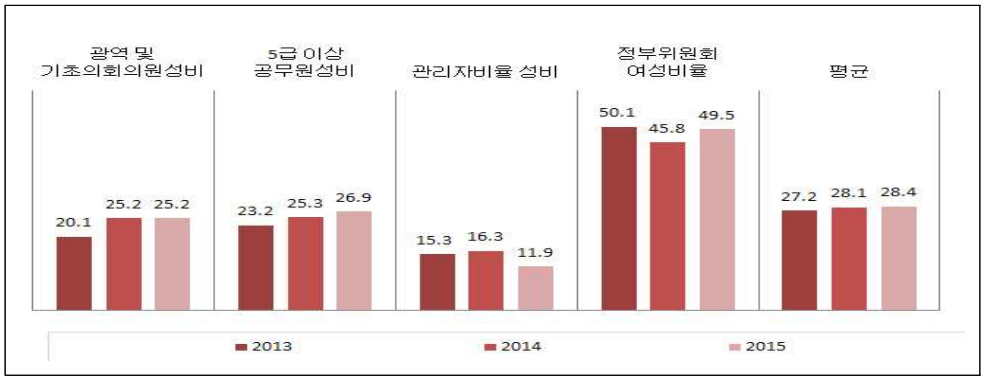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25.2	26.9	11.9	49.5	28.4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0.1에서 2014년 25.2로 전년 대비 5.1p 상승한 후 2015년도 동일하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3.2, 2014년 25.3, 2015년 26.9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5.3에서 2014년 16.3으로

상승했으나 2015년에는 11.9으로 전년 대비 4.4p 하락하였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50.1에서 2014년 45.8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49.5로 전년 대비 3.7p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부산광역시의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27.2, 2014년 28.1, 2015년 28.4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1] 부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95.2로 전국 평균보다 0.7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보다는 0.9p 낮다. 전반적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지표 자체가 완전 성평등 수준에 가까운데 부산광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 수준은 90.4로 전국 평균보다 1.4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8p 낮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완전 평등한 수준으로 모든 지역이 10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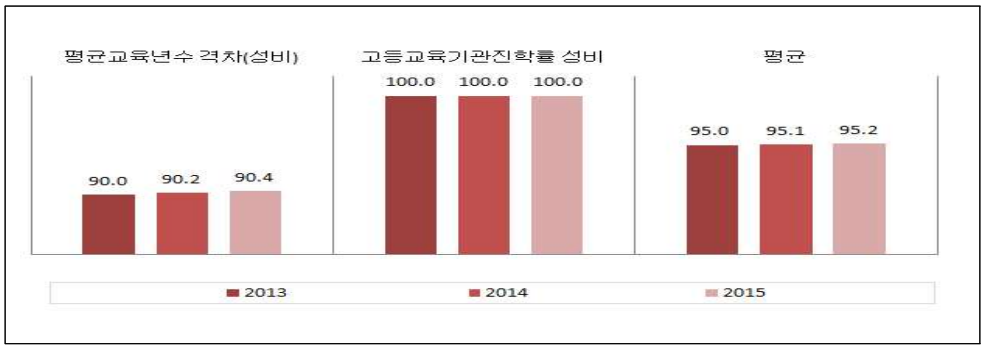
<표 Ⅲ-12> 부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90.4	100.0	95.2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교육·직업훈련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완전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2013년 90.0, 2014년 90.2, 2015년 90.4로 2013년 이후 90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13년 95.0에서 2014년 95.1, 2015년 95.2로 2013년 이후 전년 대비 0.1p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2] 부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복지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 값은 86.2로 전국 평균(85.4)보다 0.8p 높고, 복지 분야에서 최고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역(90.7)보다 4.5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84.5로 전국 평균(79.0)보다는 5.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92.8)보다는 8.3p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지표는 87.9로 전국 평균(91.8) 보다 3.9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95.5) 보다는 7.6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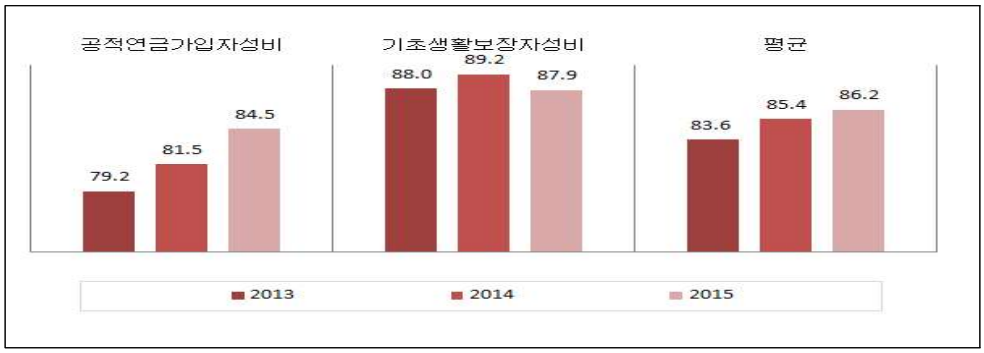
<표 Ⅲ-13> 부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84.5	87.9	86.2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기조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상승세에서 2015년 소폭 하락하였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9.2에서 2015년 84.5로 2년간 5.3p 향상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8.0에서 2015년 87.9로 2년간 0.1p 하락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83.6, 2014년 85.4, 2015년 86.2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3] 부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97.7로 전국 평균(96.0)보다 1.7p 높고 1위 지역(98.9)보다 1.2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7.2로 전국평균보다는 0.4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0.1p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0.5p 낮고 분야 1위 지역의 완전 성평등한 수준 100에 비해서는 4.2p 낮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완전 성평등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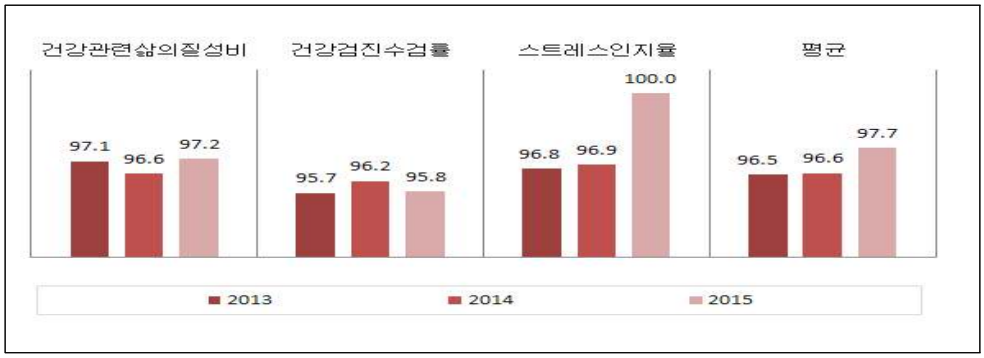
<표 Ⅲ-14> 부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97.2	95.8	100.0	97.7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2013~2015년의 보건 분야 성평등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 97.1, 2014년 96.6, 2015년 97.2로 하락하였다 반등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95.7, 2014년 96.2, 2015년 95.8으로 상승하다 하락했다. '스트레스인지율'은 2013년 96.8, 2014년 96.9에서 2015년 완전평등수준인 100.0에 도달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보건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13년 96.5, 2014년 96.6, 2015년 97.7로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4] 부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74.2로 전국 평균(65.2)보다 9.0p 높고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이 1위 지역(78.4)보다는 4.2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80.8로 전국 평균보다 15.6p 높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67.5로 전국 평균보다 2.4p 높다. 반면,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1.6p,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10.5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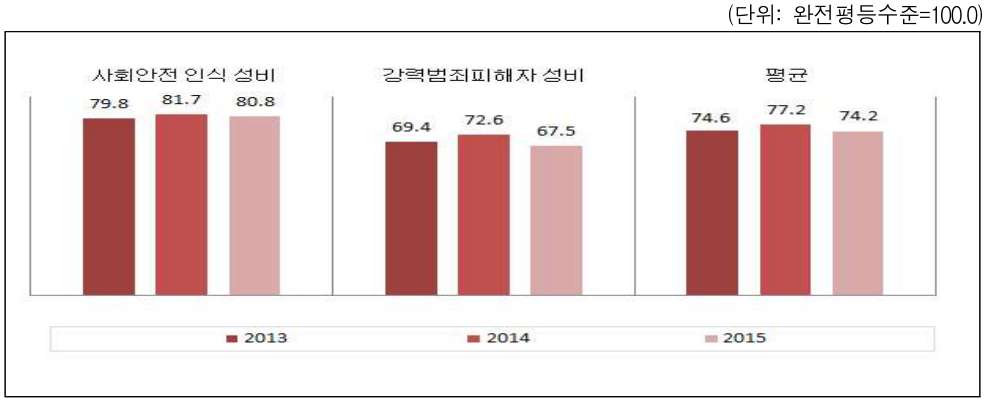
<표 Ⅲ-15> 부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80.8	67.5	74.2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안전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79.8, 2014년 81.7, 2015년 80.8로 상승 후 소폭 하락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 역시 2013년 69.4에서 2014년 72.6, 2015년에는 67.5로 상승 후 하락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74.6에서 2014년 77.2로 상승하였다 2015년 74.2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5] 부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국 평균(68.7) 대비 3.7p 낮은 65.0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보다 12.0p 낮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분야 '육아휴직자 성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 보다는 높고 지표별 1위 지역보다는 낮았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9.6으로 전국 평균보다 3.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2p 낮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5.9로 전국 평균보다 1.4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4.1p 낮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97.2으로 전국 평균보다 2.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8p 낮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37.2로 전국 평균보다 21.9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48.0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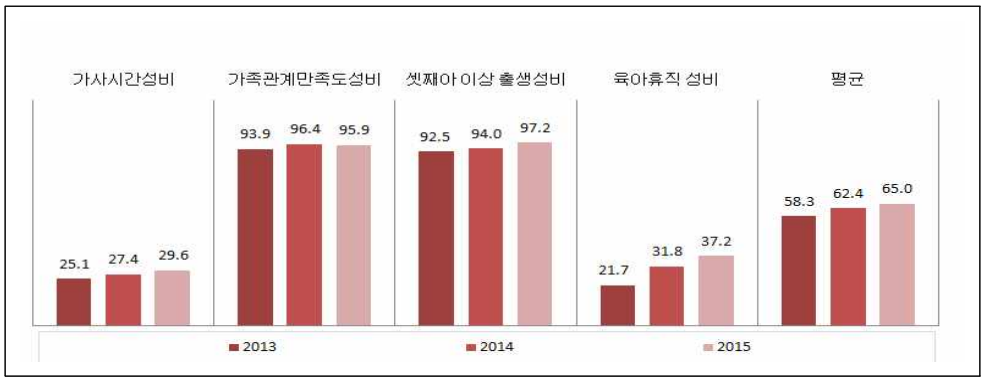
<표 Ⅲ-16> 부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29.6	95.9	97.2	37.2	65.0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를 제외하고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모두 지표 수준이 개선되었다.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2년간 4.5p, 4.7p 15.5p 상승하였고 그 결과 부산광역시의 가족 분야 성평등 수준은 평균적으로 2013년 58.3, 2014년 62.4, 2015년 65.0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6] 부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0.1으로 전국 평균보다 2.4p 높고, 분야 1위 지역 보다 0.7p 낮다. 세부지표별로는 '여가시간 성비'는 76.6으로 전국 평균보다 2.0p,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8.6p 낮다. '여가 만족도 성비'는 100.0으로 완전 평등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는 8.1p 높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3.8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1.2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4.9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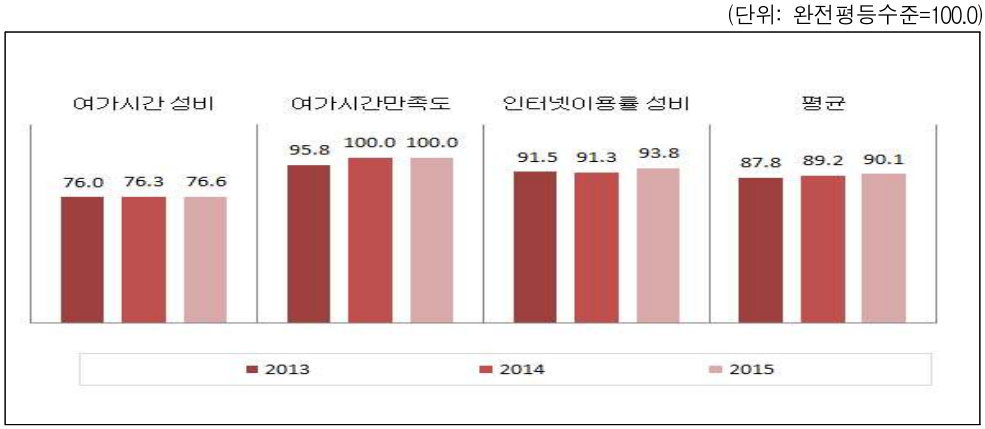
<표 Ⅲ-17> 부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부산광역시	76.6	100.0	93.8	90.1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76.0, 2014년 76.3, 2015년 76.6으로 상승 추세이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2013년 95.8에서 2014년 100.0에 도달한 후 2015년도 동일하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1.5에서 2014년 91.3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93.8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산광역시의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7.8에서 2014년에는 89.2, 2015년은 90.1까지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7] 부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3) 대구광역시

2015년 대구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1.3으로 전국 평균보다 0.8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4.3p 낮다. 세부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3.2로 전국 평균보다 0.9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0.3p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는 61.2로 전국 평균 보다는 1.6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4.8p 낮았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79.6으로 전국 평균보다 1.7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6.4p 낮았다. 대구광역시의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를 제외하고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에서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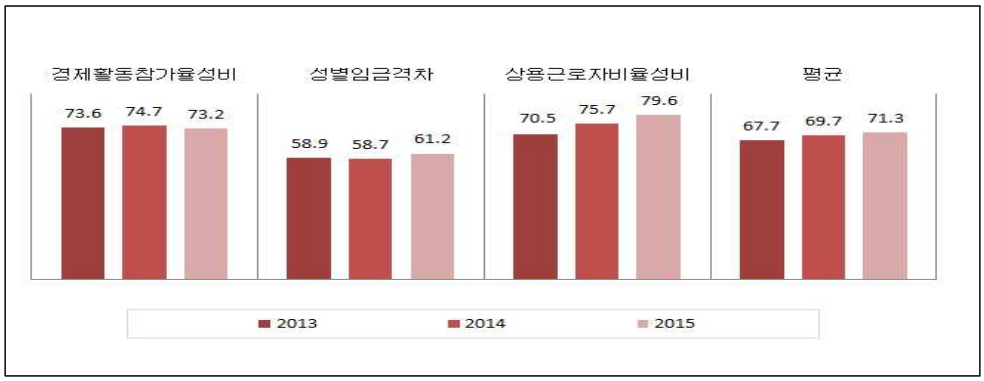
<표 Ⅲ-18> 대구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73.2	61.2	79.6	71.3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경제활동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3.6, 2014년 74.7, 2015년 73.2로 상승 후 하락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성평등 수준은 2013년 58.9, 2014년 58.7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는 61.2로 전년 대비 2.5p 상승했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3년 70.5에서 2014년 75.7, 2015년 79.6으로 2년간 9.1p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대구광역시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7.7, 2014년 69.7, 2015년 71.3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8] 대구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은 29.9로 전국 평균보다 2.5p 높지만 전국 1위 지역 보다는 13.4p 낮다. 세부지표별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30.3으로 전국 평균 보다 5.9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1.3p 낮았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30.9로 전국 평균 보다 5.0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4.4p 낮았다. '관리직 비율 성비'는 17.3으로 전국 평균 보다 1.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9.6p 낮았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41.1로 전국 평균 보다 2.0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23.8p 낮아 20.0p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표 Ⅲ-19> 대구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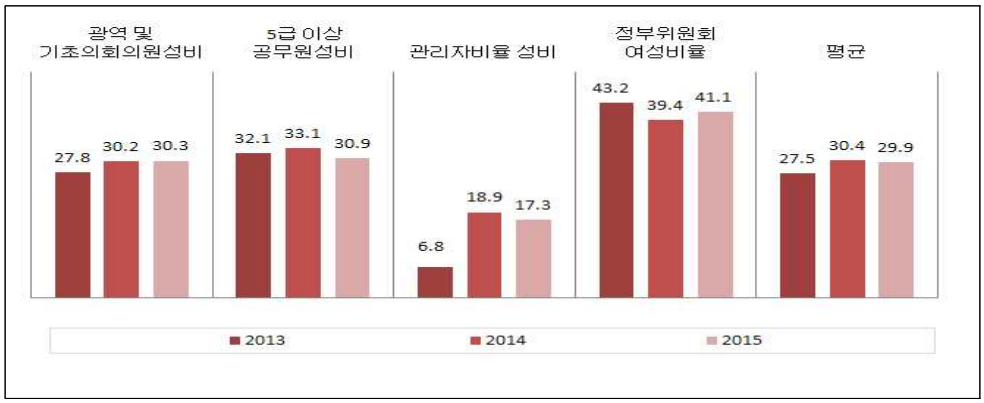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30.3	30.9	17.3	41.1	29.9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27.8, 2014년 30.2, 2015년 30.3로 상승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32.1, 2014년 33.1로 상승하다 2015년에는 30.9로 전년대비 2.2p 하락했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6.8에서 2014년 18.9로 전년대비 12.1p나

상승했으나 2015년 17.3으로 전년대비 1.6p 하락하였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43.2, 2014년 39.4, 2015년 41.1로 2년간 2.1p 하락하였다. 전체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7.5에서 2014년 30.4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은 29.9로 소폭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29] 대구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4.8으로 전국 평균보다 0.3p 높고,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보다 1.3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89.7로 전국 평균보다 0.7p 높고 전국 1위 지역보다는 2.5p 낮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모든 지역에서 완전 성평등한 수준인 100.0으로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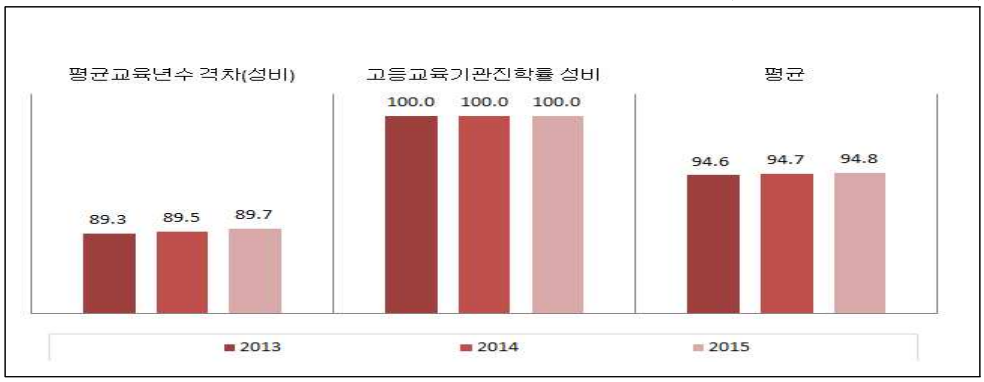
<표 Ⅲ-20> 대구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89.7	100.0	94.8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9.3, 2014년 89.5, 2015년 89.7로 최근 2년간 0.4p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완전 성평등한 수준인 100.0을 유지했다. 이러한 변화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4.6, 2014년 94.7, 2014년에는 94.8로 매년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0] 대구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는 84.0로 전국 평균(85.4)보다 1.4p, 복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90.7)보다 6.7p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83.6으로 전국 평균보다 4.6p 높은 반면, 해당 지표 1위를 한 지역보다는 9.2p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84.3으로 전국 평균보다 7.5p,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11.2p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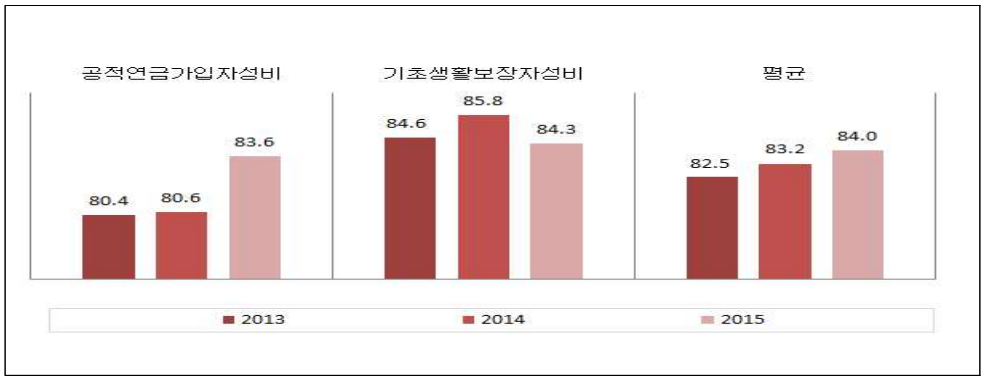
<표 Ⅲ-21> 대구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83.6	84.3	84.0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복지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201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대비 2014년 상승하였다 2015년 다시 하락하였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0.4, 2014년 80.6, 2015년 83.6으로 2년 간 3.2p 상승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4.6, 2014년 85.8, 2015년 84.3으로 2년간 0.3p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로 대구광역시의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2.5, 2014년 83.2, 2015년 84.0으로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1] 대구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97.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평균(96.0)보다는 1.4p 높고, 1위 지역(98.9)보다는 1.5p 낮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97.3로 전국 평균보다 0.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97.4로 전국 평균보다 1.1p 높고, 완전 성평등한 수준인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6p 낮은 수준이었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97.4로 전국 평균보다는 2.4p 높으나 완전 성평등 수준인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2.6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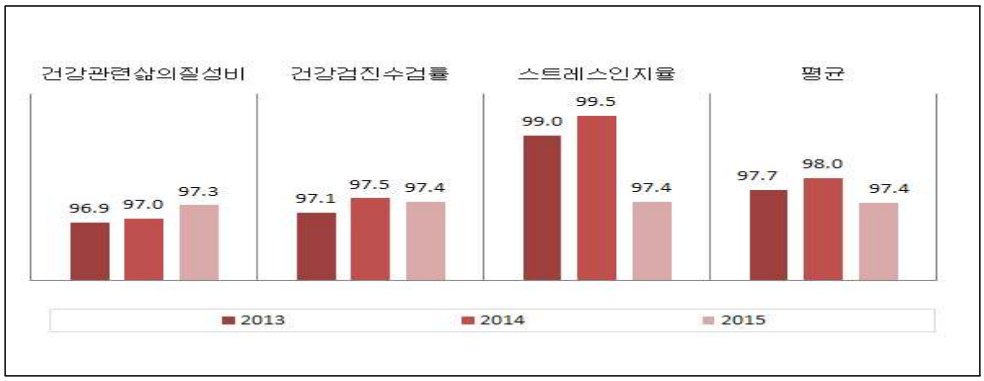
<표 Ⅲ-22> 대구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97.3	97.4	97.4	97.4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2013~2015년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변화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꾸준히 상승,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상승 후 하락을 보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6.9, 2014년 97.0, 2015년 97.3을 기록하였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7.1, 2014년 97.5, 2015년 97.4를 기록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99.0, 2014년 99.5에서 2015년 97.4로 하락했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7.7, 2014년 98.0, 2015년 97.4로 변화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2] 대구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대구광역시의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는 68.3로 전국 평균(65.2)보다 3.1p 높고 안전 분야의 1위 지역(78.4)보다 10.1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69.7로 전국 평균보다 4.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2.7p 낮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은 67.0으로 전국

평균보다 1.9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1.0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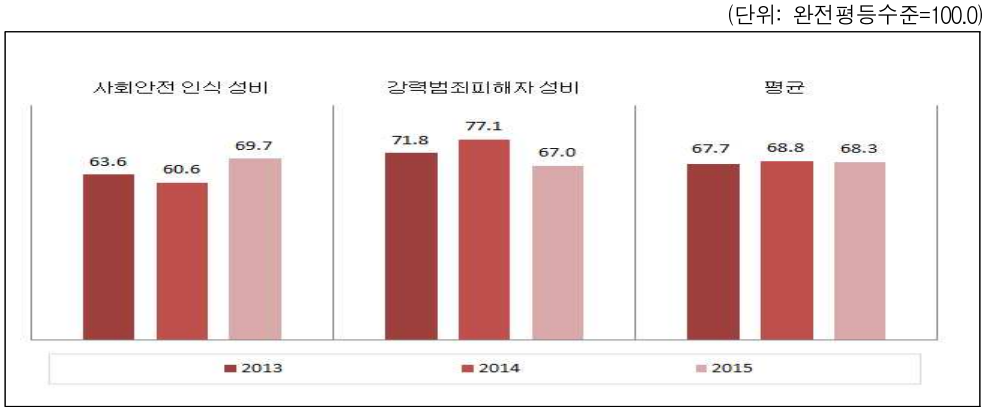
<표 Ⅲ-23> 대구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69.7	67.0	68.3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안전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2013년 63.6, 2014년 60.6으로 하락 후 2015년 69.7로 전년 대비 9.1p 나 상승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71.8, 2014년 77.1, 2015년에는 67.0으로 전년대비 10.1p 하락하였다.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이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안전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7.7, 2014년 68.8, 2015년 68.3으로 변화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3] 대구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는 64.6로 전국 평균보다 4.1p 낮고, 가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1위 지역보다는 12.4p 낮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30.0으로 전국 평균보다 3.7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8p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92.7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각각 1.8p, 7.3p 낮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94.2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각각 0.5p, 5.8p 낮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41.4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17.7p,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43.8p 낮았고 지표 1위 지역과의 격차가 전국 평균 격차의 2배 이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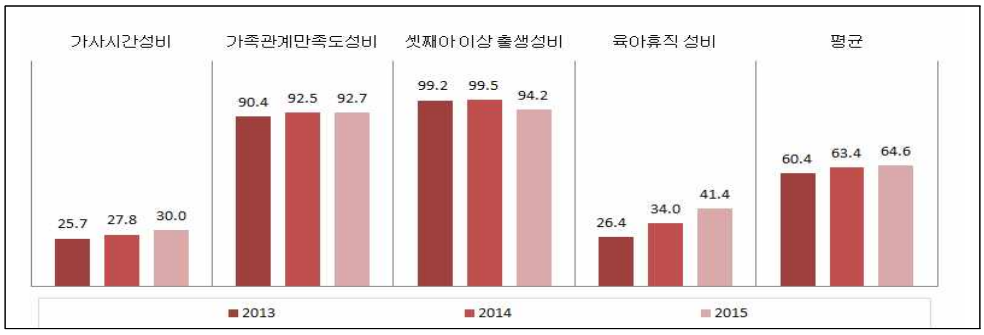
<표 Ⅲ-24> 대구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30.0	92.7	94.2	41.4	64.6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대구광역시의 가족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25.7, 2014년 27.8, 2015년 30.0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2013년 90.4, 2014년 92.5, 2015년 92.7까지 상승하였다. ‘육아휴직 성비’는 2013년 26.4, 2014년 34.0, 2015년 41.4으로 2년 동안 15.0p 상승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99.2, 2014년 99.5에서 2015년 94.2로 전년 대비 5.3p 하락하였다. 이러한 세부지표의 변화에 기인하여 대구광역시의 가족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60.4, 2014년 63.4, 2015년 64.6으로 2년 동안 4.2p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4] 대구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86.7으로 전국 평균(87.7) 보다 1.0p 낮고 해당 분야 1위 지역(90.8) 보다는 4.1p 낮았다. '여가시간 성비'는 78.1로 전국 평균보다 0.5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7.1p 더 낮았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 성평등 수준은 86.1으로 전국 평균보다 5.8p 낮고 완전 성평등 수준인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3.9p 낮았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95.9로 전국 평균보다는 3.3p 높으나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2.8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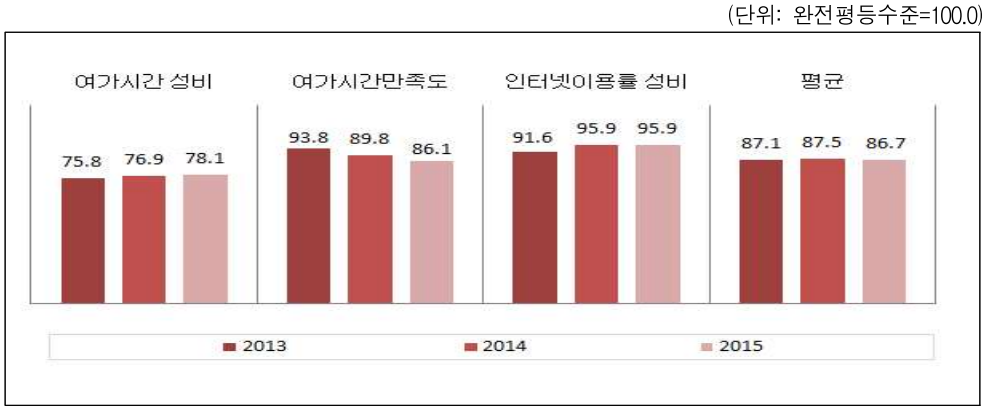
<표 Ⅲ-25> 대구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대구광역시	78.1	86.1	95.9	86.7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에서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75.8, 2014년 76.9, 2015년 78.1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2013년 93.8, 2014년 89.8, 2015년 86.1으로 하락세이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1.6에서 2014년 95.9로 상승 후 2015년도 동일하였다. 그 결과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7.1, 2014년 87.5, 2015년 86.7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5] 대구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4) 인천광역시

2016년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68.8으로 전국 평균보다 1.7p 낮고 해당 분야 전국 1위 지역 보다는 6.8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는 73.3으로 전국 평균보다 0.8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0.2p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는 60.4로 전국 평균 보다는 0.8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5.6p 낮았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72.7로 전국 평균보다 5.2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3.3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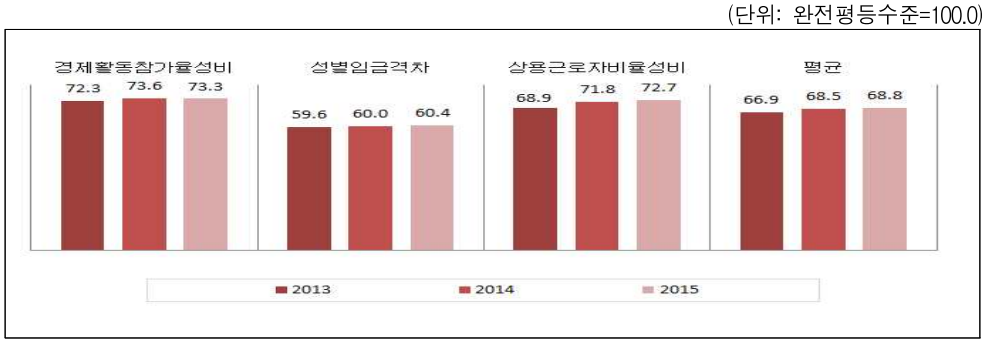
<표 Ⅲ-26>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73.3	60.4	72.7	68.8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72.3, 2014년 73.6, 2015년 73.3으로 상승 기조에서 2015년 소폭 하락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013년, 59.6, 2014년 60.0, 2015년 60.4로 매년 0.4p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68.9, 2014년 71.8, 2015년 72.7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6.9, 2014년 68.5, 2015년 68.8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6]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31.9로 전국 평균보다 4.5p 높은 반면 해당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11.4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1.8로 전국 평균보다 2.6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9.8p 낮았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7.7로 전국 평균보다 1.8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7.6p 낮았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32.0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16.0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4.9p 낮았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45.9로 전국 평균보다는 2.8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9.0p 낮았다. 인천광역시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직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으나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낮았고,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모두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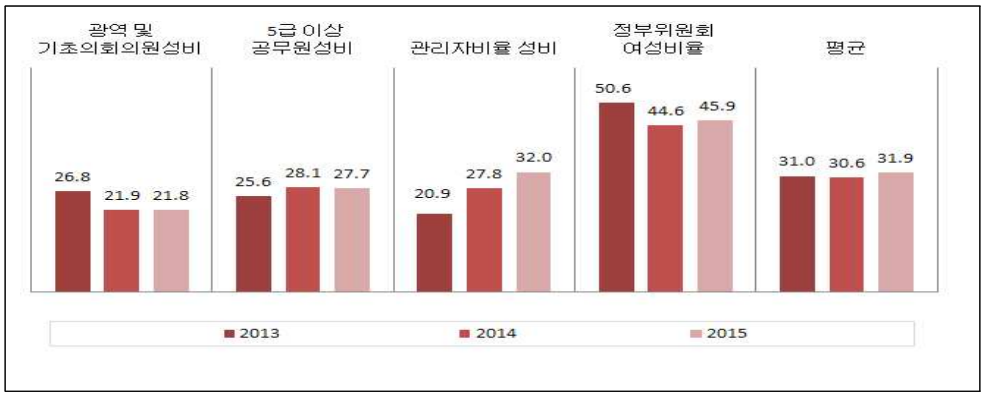
<표 Ⅲ-27> 인천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21.8	27.7	32.0	45.9	31.9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의사결정 분야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의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6.8에서 2014년 21.9, 2015년은 21.8로 하락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5.6, 2014년 28.1, 2015년 27.7로 상승 후 소폭 하락하였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0.9, 2014년 27.8, 2015년 32.0으로 2년간 11.1p 상승하였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50.6, 2014년 44.6, 2015년 45.9로 2년간 4.7p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31.0, 2014년 30.6, 2015년 31.9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7] 인천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4.8로 전국 평균보다 0.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3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89.7으로 전국 평균보다 0.7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5p 낮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모든 지역이 완전평등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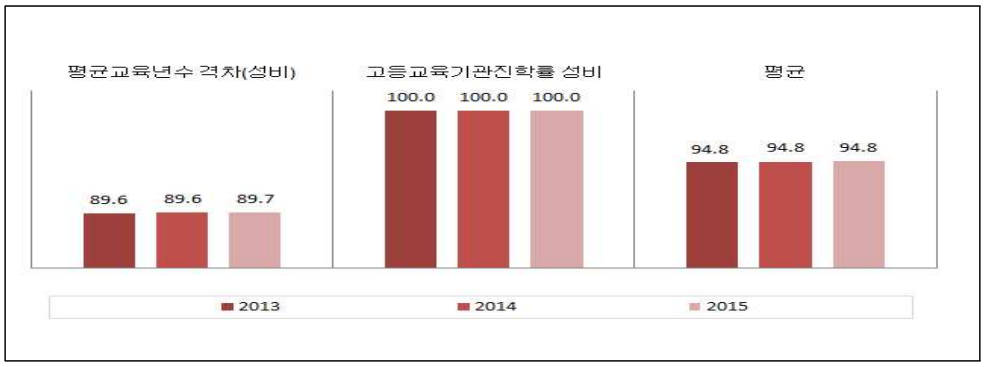
<표 Ⅲ-28> 인천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89.7	100.0	94.8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교육·직업훈련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2013년 89.6, 2014년 89.6, 2015년 89.7으로 0.1p 상승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완전 성평등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94.8로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8] 인천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복지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84.3로 전국 평균(85.4)보다 1.1p 낮고, 복지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90.7)에 비해서는 6.4p 낮다. 세부지표별로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 값은 각각 78.1와 90.4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0.9p 낮고, 해당 지표 1위를 한 지역보다는 14.7p 낮아 전국 평균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격차를 보였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1.4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5.1p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표 Ⅲ-29> 인천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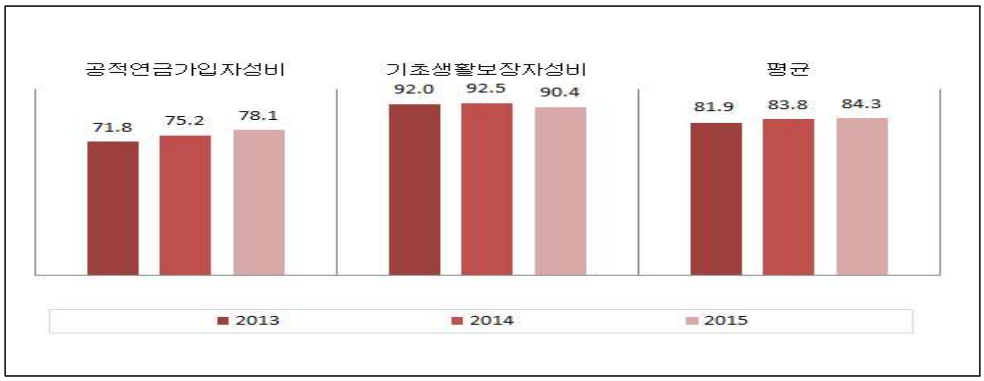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78.1	90.4	84.3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2013년 71.8, 2014년 75.2, 2015년 78.1로 계속 상승세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92.0, 2014년 92.5, 2015년 90.4으로 상승 후 하락하였다. 이러한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의 꾸준한 개선으로 인천광역시의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1.9, 2014년 83.8, 2015년 84.3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39] 인천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97.8으로 전국 평균보다 1.8p 높다. 이에 비해 보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평등 지역보다는 1.1p 낮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97.1로 전국 평균보다 0.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0.2p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96.3으로 전국 평균과 동일하고, 완전 평등수준인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3.7p 낮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완전 성평등한 수준인 100.0이다.

<표 Ⅲ-30>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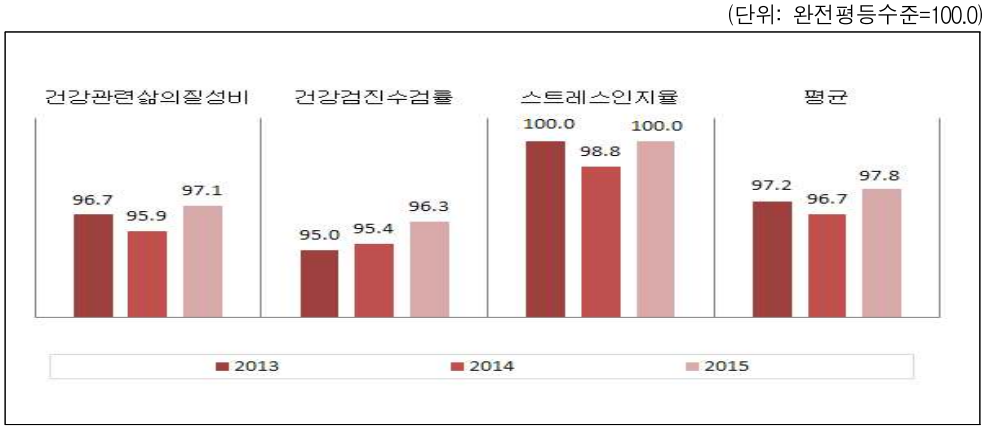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97.1	96.3	100.0	97.8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지표별 성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6.7, 2014년 95.9, 2015년 97.1로 하락 후 상승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5.0, 2014년 95.4, 2015년 96.3으로 3년간 꾸준히 상승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100.0에서 2014년 98.8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 100.0으로 회복하였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의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7.2, 2014년 96.7, 2015년 97.8으로 전년 대비 하락 후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0]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2.9로 전국 평균(65.2)과 해당 분야 1위 지역(78.4) 보다 각각 2.3p, 15.5p 낮았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와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각각 64.9, 61.0이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는 0.3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7.5p나 낮았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4.1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7.0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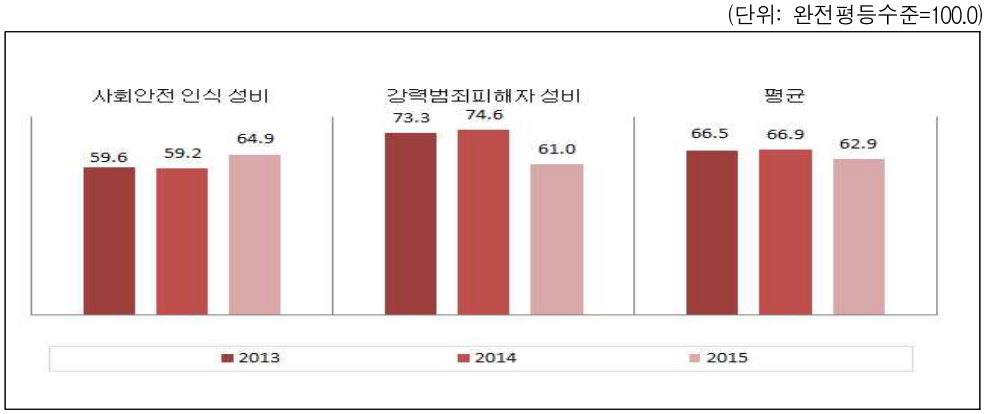
<표 Ⅲ-31> 인천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64.9	61.0	62.9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안전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2013년 59.6, 2014년 59.2에서 2015년 64.9으로 상승하며 2년간 5.3p 상승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73.3에서 2014년 74.6으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61.0으로 전년대비 13.6p 하락하였다. 그 결과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6.5에서 2014년 66.9로 상승했다가 2015년 62.9로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1] 인천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8.0으로 전국 평균(68.7) 보다 0.7p 낮고 가족 분야 1위 지역(77.0) 보다는 9.0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5.4로 전국 평균보다 0.9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6.4p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96.9로 전국 평균보다는 2.4p 보다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3.1p 낮았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는 100.0으로 완전 성평등한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5.3p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49.7으로 전국 평균보다 9.4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전국 평균 격차의 3배 이상으로 35.5p나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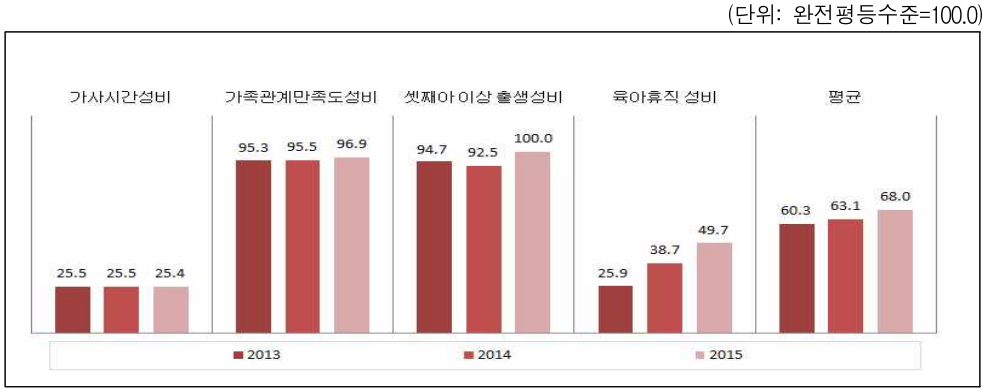
<표 Ⅲ-32> 인천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25.4	96.9	100.0	49.7	68.0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2014년 동안 25.5로 동일하다 2015년 25.4로 0.1p 하락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2013년 95.3, 2014년 95.5, 2015년 96.9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를 살펴보면, 2013년 94.7에서 2014년 92.5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전년 대비 7.5p 상승하여 100.0에 도달하였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의 추이는 2013년 25.9, 2014년 38.7, 2015년 49.7로 매년 10p 이상 크게 상승하였다. 세부지표 변화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0.3, 2014년 63.1, 2015년 68.0으로 지난 2년간 7.7p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2] 인천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0.8으로 전국 평균(87.7)보다 3.1p 높고, 전국 1위 지역에 해당한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79.8으로 전국 평균보다 1.2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5.4p 낮다. '여가 만족도

성비'는 100.0으로 완전 성평등한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8.1p 높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의 성평등 수준은 92.5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각각 0.1p, 6.2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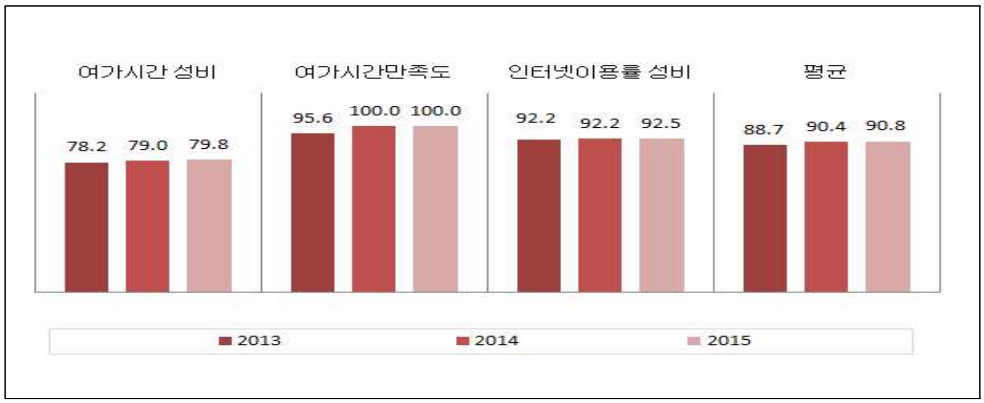
<표 Ⅲ-33> 인천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인천광역시	79.8	100.0	92.5	90.8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8.2, 2014년 79.0, 2015년 79.8으로 상승 기조이다. '여가 만족도 성비' 성평등 수준은 2013년 95.6에서 2014년 100.0에 도달한 후 2015년도 동일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2013년과 2014년은 92.2로 동일하였고, 2015년 92.5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였다. 이러한 세부지표의 변화로 인천광역시의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지수 값은 2013년 88.7, 2014년 90.4, 2015년 90.8까지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3] 인천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5) 광주광역시

2015년 광주광역시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지수는 71.3으로 전국 평균보다 0.8p높고 해당 분야 전국 1위 지역 보다는 4.3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74.8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0.7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8.7p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61.5로 전국 평균 보다는 1.9p 높지만 해당 지표 전국 1위 지역 보다는 4.5p 낮았다. 마지막으로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77.7로 전국 평균 보다 0.2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8.3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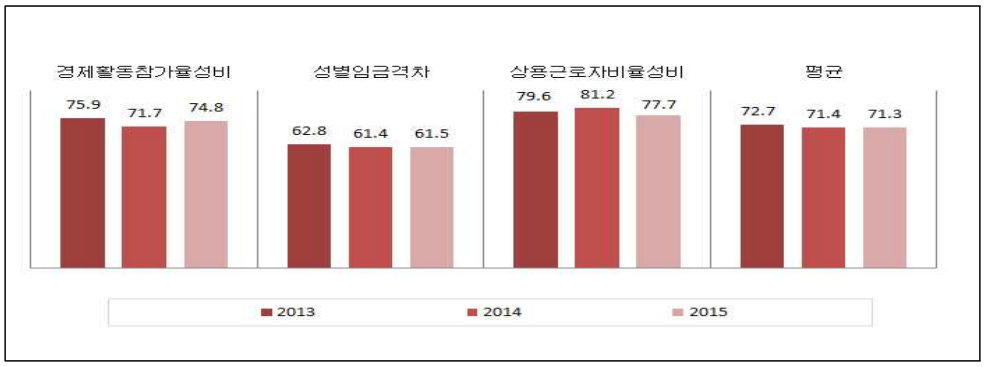
<표 Ⅲ-34>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74.8	61.5	77.7	71.3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경제활동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5.9에서 2013년 71.7로 하락하였다 2015년 74.8로 전년 대비 3.1p 상승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013년 62.8, 2014년 61.4, 2015년 61.5로 최근 2년간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9.6, 2014년 81.2, 2015년 77.7로 2년간 1.9p 하락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경제활동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2.7, 2014년 71.4, 2015년 71.3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4]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33.2로 전국 평균 보다는 5.8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보다 10.1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41.6으로 전국 평균보다 17.2p 높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8.0으로 전국 평균 보다 2.1p 높았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16.8로 전국 평균보다 0.8p 높고,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46.4로 전국 평균보다 3.3p 높아 광주광역시 의사결정 분야 지표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Ⅲ-35> 광주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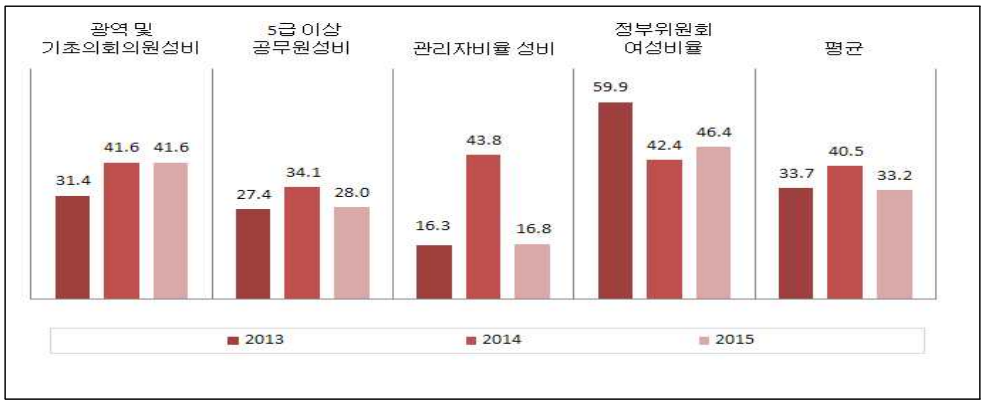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41.6	28.0	16.8	46.4	33.2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의사결정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31.4에서 2014년 41.6으로 10.2p 상승 후 2015년도 동일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7.4에서 2014년 34.1로 상승하였다 2015년 28.0으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6.3에서 2014년 43.8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16.8로 다시 전년 대비 27.0p 하락하였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59.9, 2014년 42.4, 2015년 46.4로 2년간 13.5p 하락하였다. 광주광역시 의사결정 분야 전체 성평등지수 값은 세부지표들의 등락으로 2013년 33.7, 2014년 40.5, 2015년 33.2로 변화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5] 광주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94.7으로 전국 평균보다 0.2p 높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1.4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89.3로 전국 평균 보다는 0.3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2.9p 낮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모든 지역이 완전 평등한 수준이다.

<표 Ⅲ-36> 광주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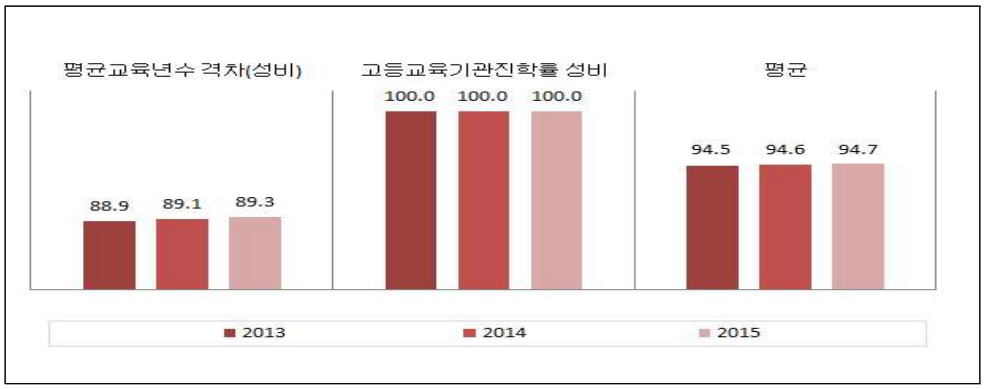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89.3	100.0	94.7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교육·직업훈련 분야 세부지표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8.9, 2014년 89.1, 2015년 89.3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100으로 완전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4.5, 2014년 94.6, 2015년 94.7으로 매년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6] 광주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는 86.1으로 전국평균(85.4)에 비해 0.7p 높고 복지 분야 1위 지역(90.7) 보다는 4.6p 낮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88.2, 84.0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9.2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4.6p 낮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각각 7.8p, 11.5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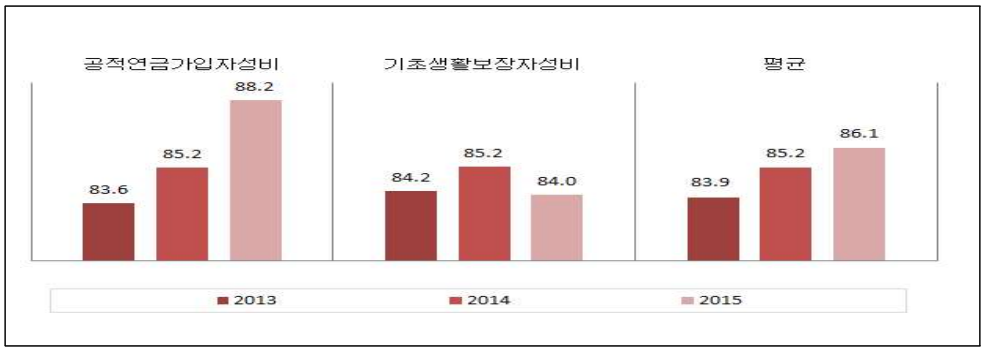
<표 Ⅲ-37> 광주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88.2	84.0	86.1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지표별로 지표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상승 후 하락하는 모습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는 2013년 83.6, 2014년 85.2, 2015년 88.2까지 상승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4.2, 2013년 85.2, 2015년 84.0으로 소폭 등락을 보인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3.9, 2014년 85.2, 2015년 86.1으로 전년 대비 1.0p 내외로 상승하며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7] 광주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98.2로 전국평균에 비해 2.2p 높고 보건 분야 1위 지역보다는 0.7p 낮다.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 수준은 96.4로 전국 평균보다는 0.4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0.9p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수준은 98.2로 전국 평균보다 1.9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8p 낮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100.0으로 완전 성평등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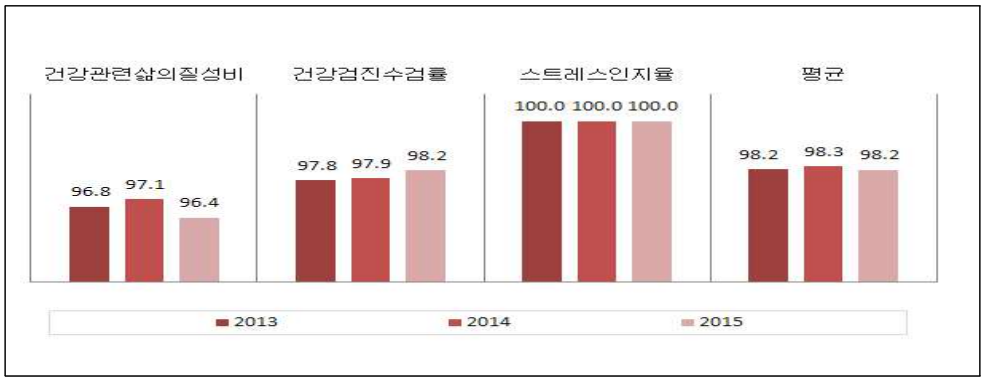
<표 Ⅲ-38> 광주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96.4	98.2	100.0	98.2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지표별로 지표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건광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6.8, 2014년 97.1, 2015년 96.4로 상승 후 하락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7.8, 2014년 97.9, 2015년 98.2로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와는 달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100.0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8.2, 2014년 98.3, 2015년 98.2로 유지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8] 광주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5.1으로 전국평균(65.2) 보다 0.1p 낮고 분야 1위 지역(78.4) 보다 13.3p 크게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66.7이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63.6이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국 보다 1.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5.7p 낮았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전국평균 보다 1.5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4.4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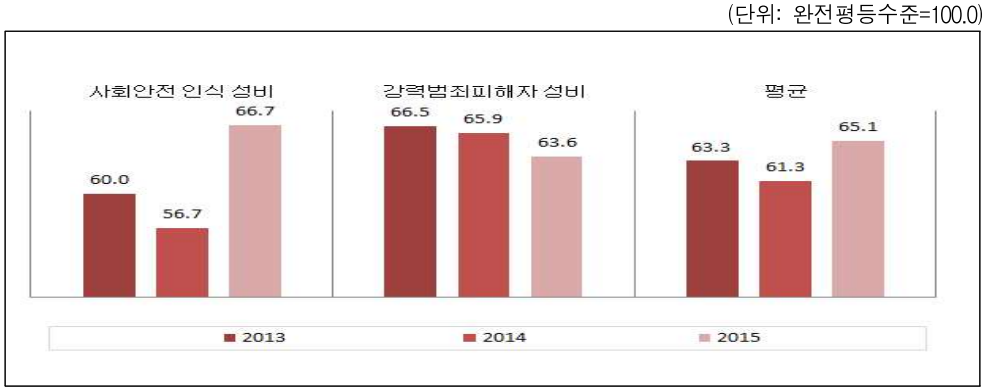
<표 Ⅲ-39> 광주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66.7	63.6	65.1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안전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2013년 60.0, 2014년 56.7, 2015년 66.7으로 하락 후 2015년에 반등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66.5에서 2014년 65.9, 2015년 63.6으로 하락 추이를 보인다. 이에 광주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3.3, 2014년 61.3, 2015년은 65.1으로 하락 후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9] 광주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광주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3.6으로 전국 평균보다 5.1p 낮고 가족 분야 1위 지역보다는 13.4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9.0로 전국 평균보다 2.7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8p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95.5로 전국 평균보다 1.0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4.5p 낮았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는 92.8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각각 1.9p, 7.2p 낮았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37.2로 전국 평균보다 21.9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48.0p나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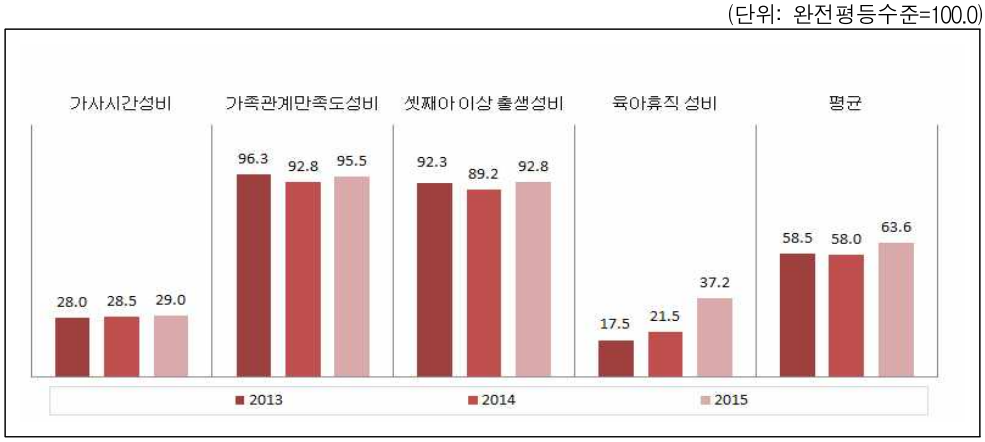
<표 Ⅲ-40> 광주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29.0	95.5	92.8	37.2	63.6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28.0, 2014년 28.5, 2015년 29.0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6.3, 2014년 92.8, 2015년 95.5로 하락 후 상승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성평등 수준도 2013년 92.3, 2014년 89.2, 2015년 92.8로 하락 후 상승하는 양상이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13년 17.5, 2014년 21.5, 2015년 37.2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의 연도별 변화는 2013년 58.5, 2014년 58.0, 2015년 63.6으로 소폭 하락 후 상승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0] 광주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86.2로 전국 평균보다 1.5p 낮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4.6p 낮다. 세부지표별로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80.8로 전국 평균 보다 2.2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4.4p 낮았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83.2로 전국 평균 보다 8.7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6.8p 낮았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94.6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2.0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4.1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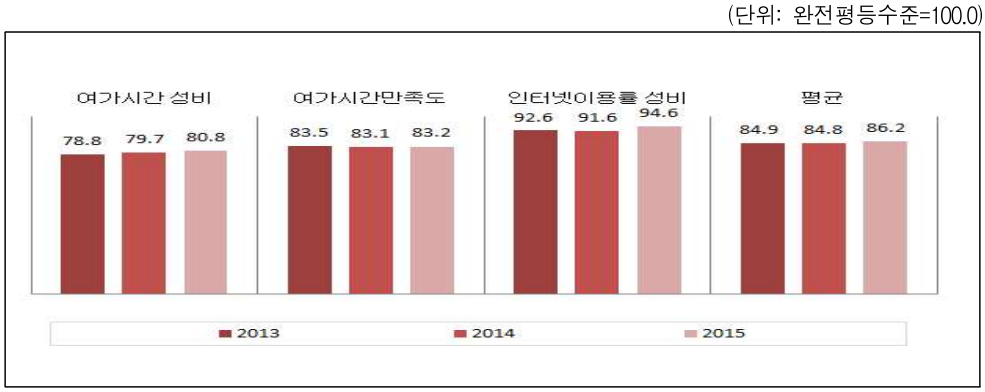
<표 Ⅲ-41> 광주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광주광역시	80.8	83.2	94.6	86.2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78.8, 2014년 79.7, 2015년 80.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83.5, 2014년 83.1, 2015년 83.2로 하락 후 소폭 상승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2.6, 2014년 91.6, 2015년 94.6으로 하락 후 상승하였다. 종합하여 광주광역시의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4.9, 2014년 84.8, 2015년 86.2로 나타난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1] 광주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6) 대전광역시

2015년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72.0으로 전국 평균 보다 1.5p 높고 해당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3.6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73.2으로 전국 평균 보다 0.9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0.3p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61.0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1.4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5.0p 낮았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81.6으로 전국 평균 보다 3.7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4.4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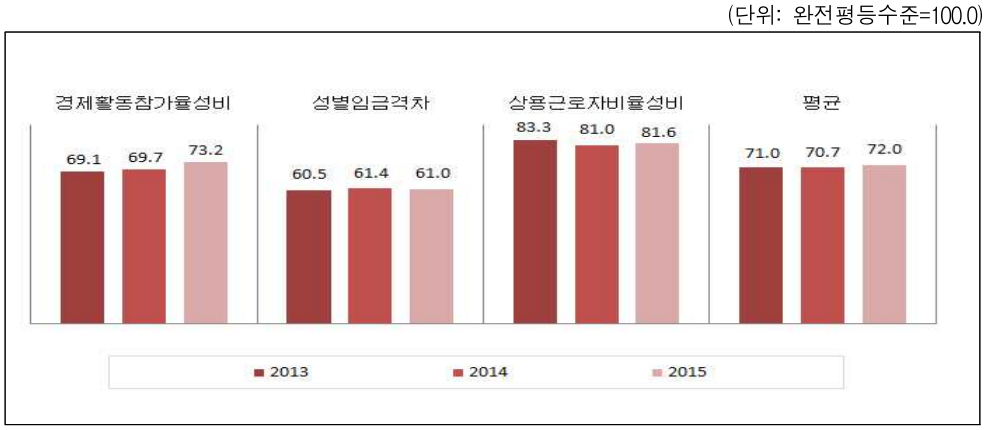
<표 Ⅲ-42>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73.2	61.0	81.6	72.0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경제활동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2013년 69.1, 2014년 69.7, 2015년 73.2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013년 60.5, 2014년 61.4, 2015년 61.0으로 상승 후 소폭 하락하는 양상이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3.3에서 2014년 81.0으로 전년대비 2.3p 하락 후 2015년 81.6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1.0, 2014년 70.7, 2015년엔 72.0로 소폭 하락 후 상승하는 양상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2]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42.7로 전국 평균 보다 15.3p나 높지만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0.6p 소폭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40.5로 전국 평균 보다 16.1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1p 낮았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33.5로 전국 평균 보다 7.6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1.8p 낮았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36.9로 전국 평균 보다 20.9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60.0으로 전국 평균보다 16.9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4.9p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 의사결정 분야 세부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 평균 보다는 7.0~20.0p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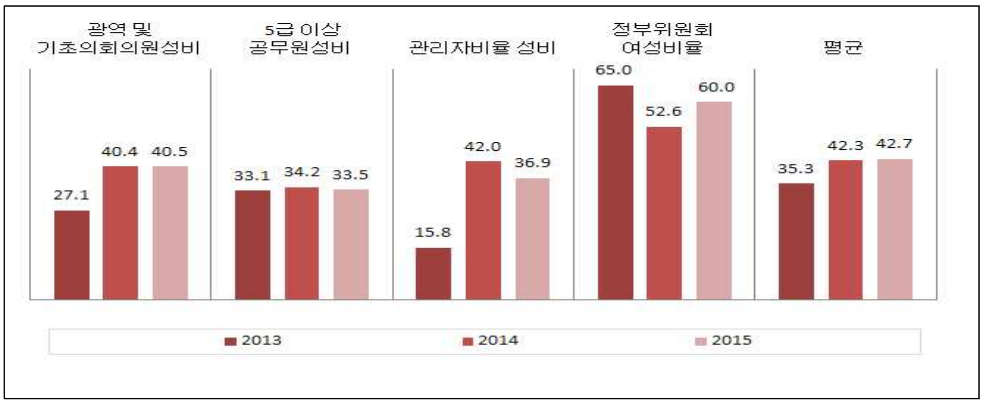
<표 Ⅲ-43> 대전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40.5	33.5	36.9	60.0	42.7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의사결정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7.1에서 2014년 40.4, 2014년 40.5로 상승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33.1, 2014년 34.2, 2015년 33.5로 상승하였다 하락하는 양상이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5.8에서 2014년 42.0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5년 36.9로 하락하였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3년 65.0, 2014년 52.6, 2015년 60.0으로 2년간 5.0p 하락하였다. 종합하여 대전광역시의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13년 35.3, 2014년 42.3, 2015년 42.7로 상승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3] 대전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4.7로 전국 평균보다는 0.2p 높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1.4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별로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89.5로 전국평균보다 0.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2.7p 낮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모든 지역이 완전 평등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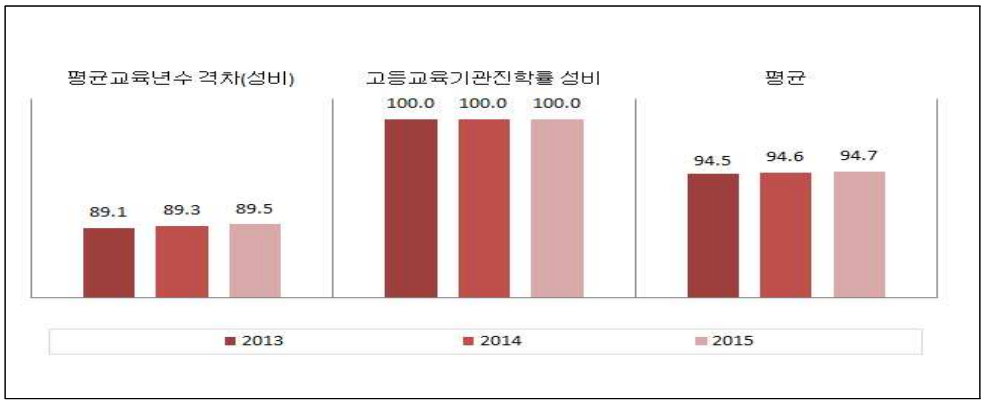
<표 Ⅲ-44> 대전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89.5	100.0	94.7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교육·직업훈련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9.1, 2014년 89.3, 20155년 89.5로 상승기조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100으로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4.5, 2014년 94.6, 2015년 94.7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4] 대전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는 88.8으로 전국평균(85.4)보다 3.4p 높은 수준으로 분야 1위 지역(90.7) 보다는 1.9p 낮다. 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87.4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90.2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8.4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5.4p 낮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 보다는 1.6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 5.3p 낮다.

<표 Ⅲ-45> 대전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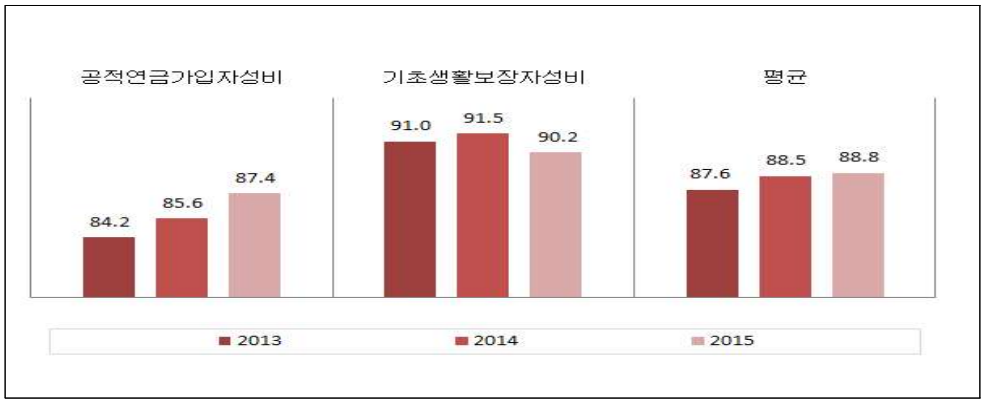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87.4	90.2	88.8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 지표별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 지표는 상승 후 하락하였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4.2, 2014년 85.6, 2015년 87.4으로 개선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91.0, 2014년 91.5, 2015년 90.2로 상승 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전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7.6, 2014년 88.5, 2015년 88.8으로 상승 추이를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5] 대전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대전광역시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98.2로 전국평균보다 2.2p 높고 분야 1위 지역에 비해 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모두 97.3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0.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1.0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과 비교하면 2.7p 낮은 수준이다.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는 완전 성평등 수준인 10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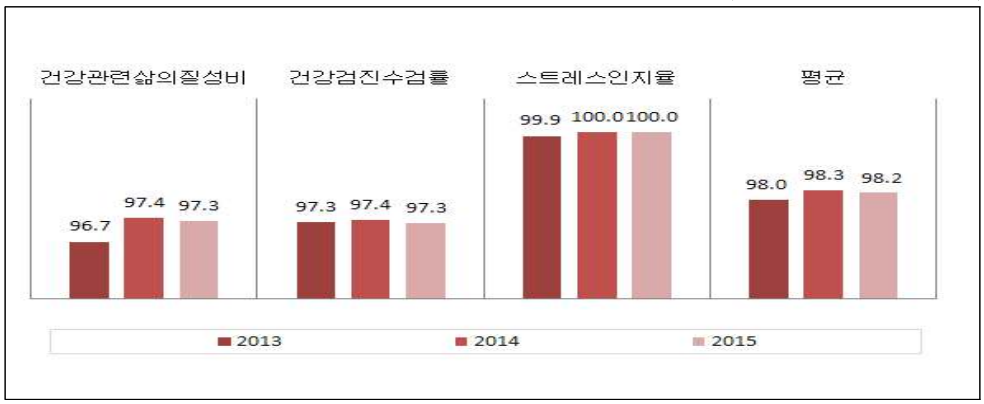
<표 Ⅲ-46> 대전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97.3	97.3	100.0	98.2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지표별 변화를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 96.7, 2014년 97.4, 2015년 97.3이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97.3, 2014년 97.4, 2015년 97.3으로 두 지표 모두 소폭의 등락을 보인다. 한편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10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8.0에서 2014년 98.3으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98.2로 변화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6] 대전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4.2로 전국평균(65.2) 보다는 1.0p 낮고 분야 1위 지역(78.4) 보다는 14.2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62.8으로 전국평균 보다는 2.4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9.6p 낮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65.5로 전국평균 보다는 0.4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2.5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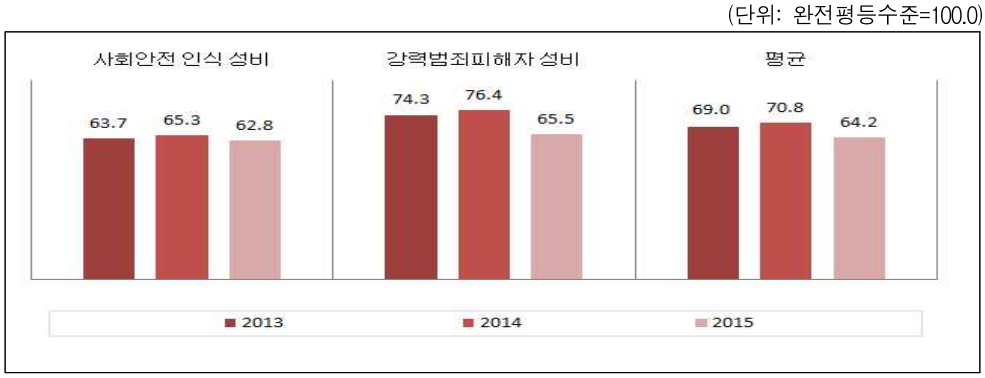
<표 Ⅲ-47> 대전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62.8	65.5	64.2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안전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2013년 63.7, 2014년 65.3, 2015년 62.8으로 상승 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74.3에서 2014년 76.4, 2015년 65.5으로 역시 상승 후 하락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69.0, 2013년 70.8, 2014년 64.2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7] 대전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1.3으로 전국 평균 보다 2.6p 높고 가족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5.7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30.5으로 전국 평균보다 4.2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3p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93.5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각각 1.0p, 6.5p 낮았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는 95.0으로 전국 평균보다 0.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5.0p 낮았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66.2로 전국 평균보다 7.1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9.0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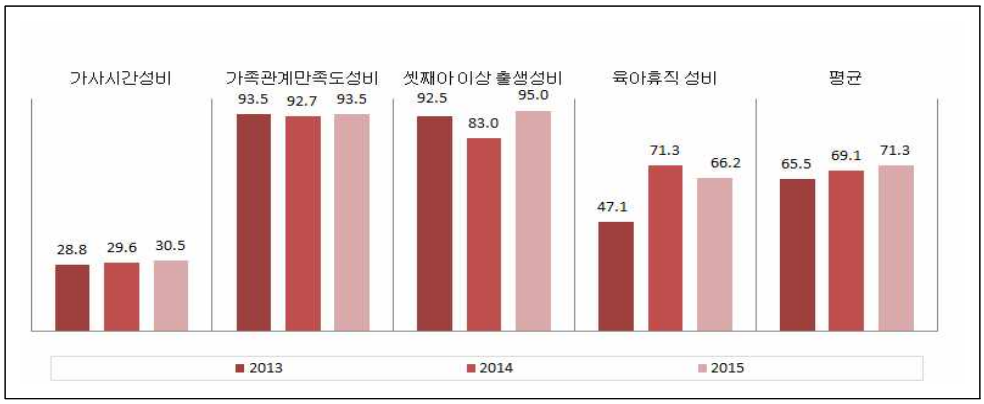
<표 Ⅲ-48> 대전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30.5	93.5	95.0	66.2	71.3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지표별 변화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28.8, 2014년 29.6, 2015년 30.5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 성평등 수준은 2013년 93.5에서 2014년 92.7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93.5로 2013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 성평등 수준도 2013년 92.5에서 2014년 83.0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95.0으로 상승하여 2013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육아휴직 성비’ 지표는 2013년 47.1에서 2014년 71.3으로 전년 대비 24.2p나 상승하였으나 2015년 66.2로 감소한 모습이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65.5, 2014년 69.1, 2015년 71.3으로 꾸준히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8] 대전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90.3으로 전국평균(87.7)보다 2.6p 높으나, 해당 분야 1위 지역(90.8)보다는 0.5p 소폭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별로는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83.8으로 전국평균 보다 5.2p 높았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93.3으로 전국평균 보다는 1.4p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93.8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1.2p 높다. 대전광역시의 문화·정보 분야 지표들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지표별 1위 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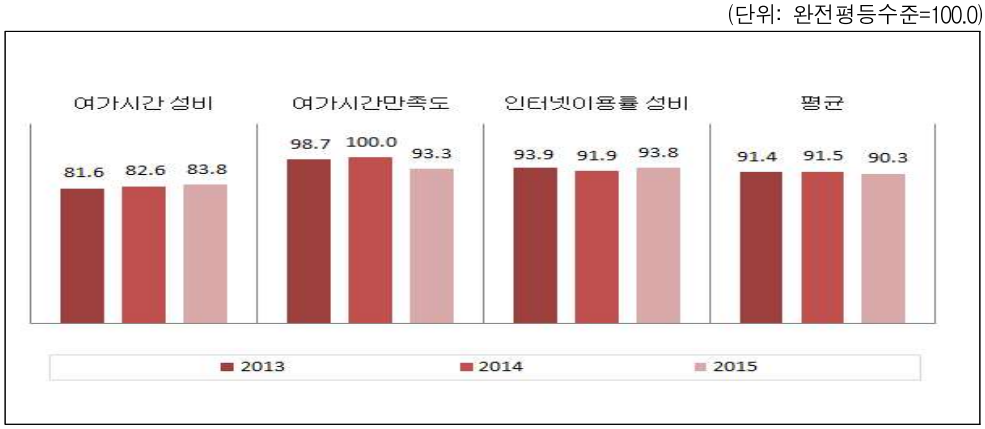
<표 Ⅲ-49> 대전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대전광역시	83.8	93.3	93.8	90.3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81.6, 2014년 82.6, 2015년 83.8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2013년 98.7에서 2014년 100.0으로 완전평등수준에 도달하였으나 2015년 93.3으로 하락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3.9, 2014년 91.9, 2015년 93.8로 하락 후 상승하는 양상이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의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1.4, 2014년 91.5, 2015년 90.3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59] 대전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7) 울산광역시

2015년 울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57.4로 전국평균보다 13.1p 낮고 분야 1위보다는 18.2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 성평등 수준은 58.6로 전국평균보다 15.5p,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4.9p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43.6으로 전국평균보다 16.0p,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2.4p 낮았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70.1로 전국평균보다 7.8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5.9p 낮았다. 울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 세부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해당 지표 1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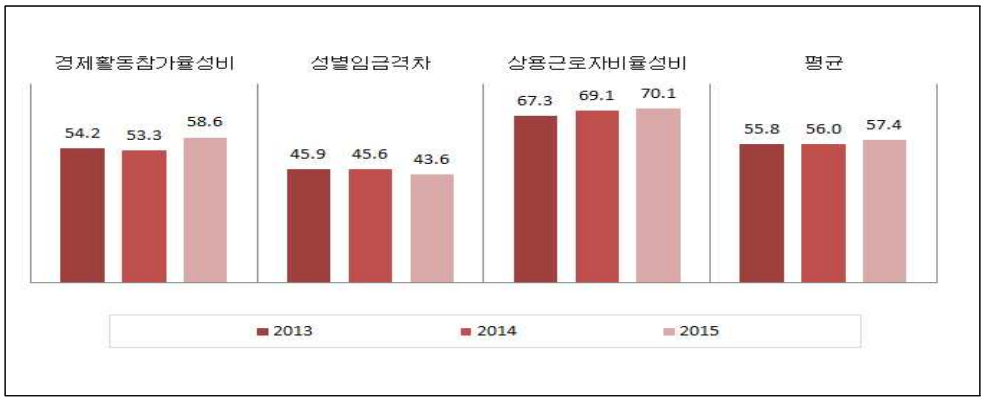
<표 Ⅲ-50> 울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58.6	43.6	70.1	57.4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경제활동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의 경우 2013년 54.2, 2014년 53.3, 2015년 58.6으로 2년간 4.4p 상승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013년 45.9, 2014년 45.6, 2015년 43.6으로 2년간 2.3p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67.3, 2014년 69.1, 2015년 70.1로 유일하게 꾸준히 개선되었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상승 추세로 울산광역시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13년 55.8, 2014년 56.0, 2015년에는 57.4로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0] 울산광역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2.9로 전국평균 보다 4.5p 낮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20.4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 성평등 수준은 29.3으로 전국평균 보다 4.9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보다는 12.3p 낮았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18.4로 전국평균 보다 7.5p 낮고 해당 지표 1위 보다는 26.9p 낮았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3.7로 전국평균 보다 12.3p 낮고 해당 지표 1위 보다는 33.2p 낮았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40.1로 전국평균 보다 3.0p 낮고, 해당 지표 1위 보다는 24.8p 낮았다.

<표 Ⅲ-51> 울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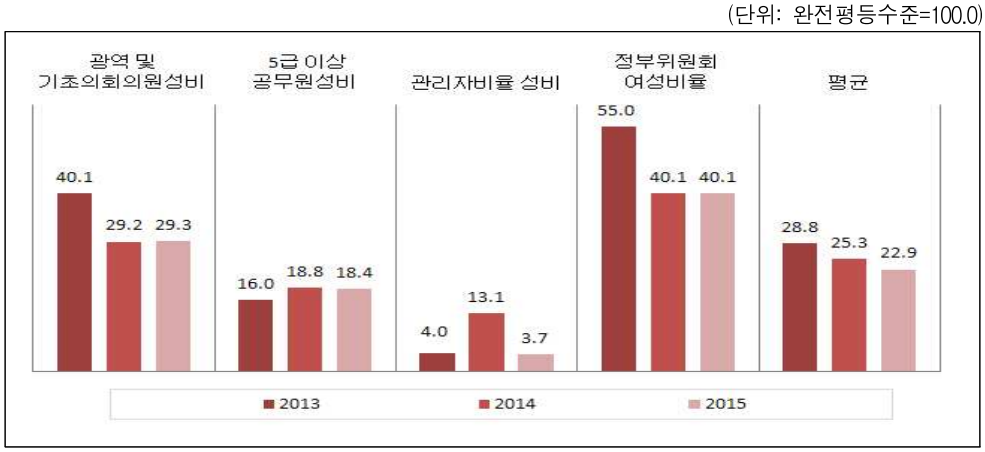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29.3	18.4	3.7	40.1	22.9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울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별 성평등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40.1에서 2014년 29.2, 2015년 29.3으로 10.8p 하락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6.0, 2014년 18.8, 2015년 18.4로 유일

하게 개선 추이를 보였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4.0에서 2014년 13.1로 전년 대비 9.1p 상승하였지만 2015년 3.7로 하락하여 2013년 수준을 하회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55.0에서 2014년 40.1로 14.9p 하락한 뒤 2015년에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울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28.8, 2014년 25.3, 2015년 22.9로 계속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1] 울산광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5.6으로 전국평균보다 1.1p 높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0.5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91.2로 전국평균 보다는 2.2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0p 낮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완전 평등한 수준으로 모든 지역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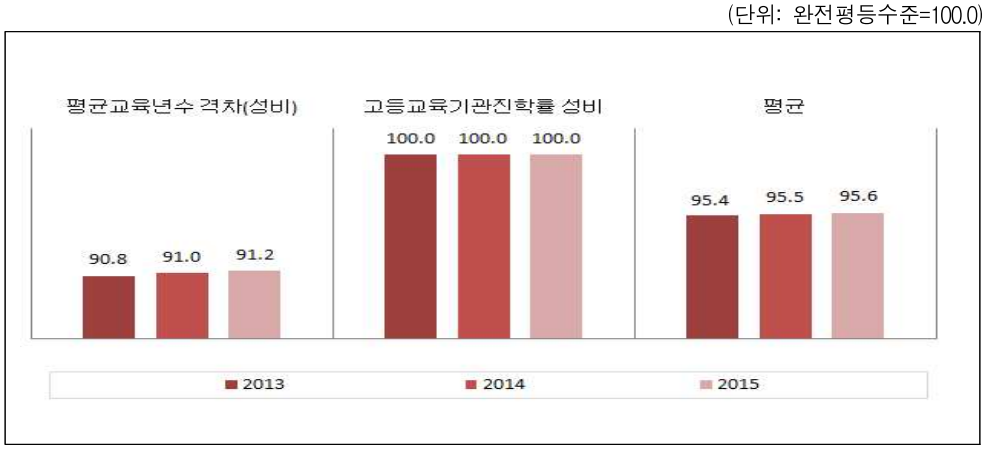
<표 Ⅲ-52> 울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91.2	100.0	95.6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별 변화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90.8, 2014년 91.0, 2015년 91.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100으로 완전 평등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울산광역시의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5.4, 2014년 95.5, 2015년 95.6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2] 울산광역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울산광역시의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는 79.7으로 전국평균보다 5.7p 낮고 1위 지역 보다는 11.0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63.9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95.5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 보다 15.1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28.9p나 낮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3.7p 높아 해당 지표 1위 지역으로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우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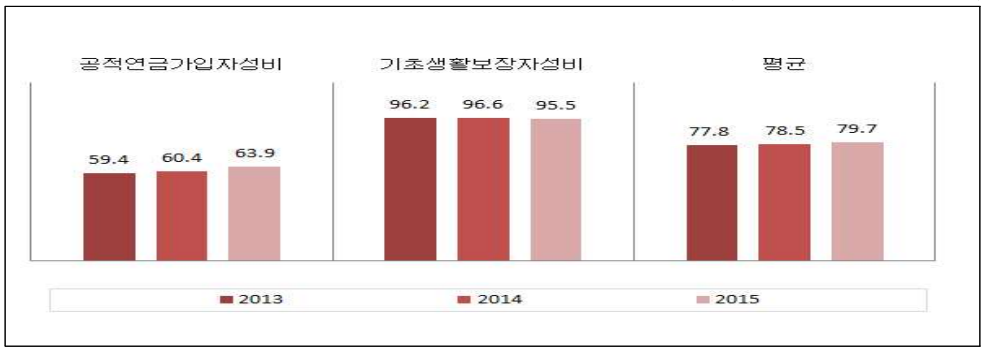
<표 Ⅲ-53> 울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63.9	95.5	79.7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상승 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59.4, 2014년 60.4, 2015년 63.9로 개선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96.2에서 2014년 96.6으로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 95.5로 전년 대비 1.1p 하락하였다. 울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7.8, 2014년 78.5, 2015년 79.7으로 상승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3] 울산광역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93.8으로 전국평균 보다 2.2p 낮고 보건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5.1p 낮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96.7로 전국 평균보다 0.1p 낮고 해당 지표 1위 보다 0.6p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86.9로 전국 평균보다 9.4p 낮고 해당 지표 1위 보다는 13.1p 낮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97.9로 전국 평균보다는 2.9p 높으나

해당 지표 1위보다는 2.1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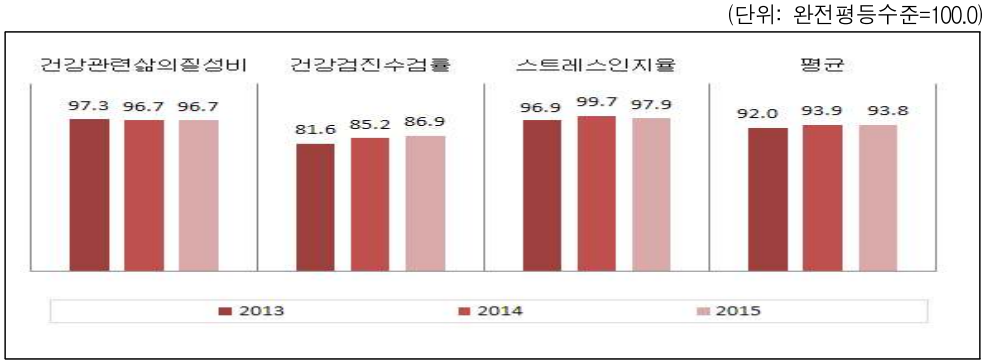
<표 Ⅲ-54> 울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96.7	86.9	97.9	93.8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 지표별로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7.3, 2014년 96.7, 2015년 96.7로 2년간 소폭 하락이 있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81.6, 2014년 85.2, 2015년 86.9로 상승 추세이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96.9, 2014년 99.7, 2015년 97.9로 상승 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그 결과 울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2.0, 2014년 93.9, 2015년 93.8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4] 울산광역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8.0으로 전국평균 보다 2.8p 높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10.4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65.5로 전국평균 보다 0.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6.9p 낮았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70.6으로 전국평균 보다

5.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7.4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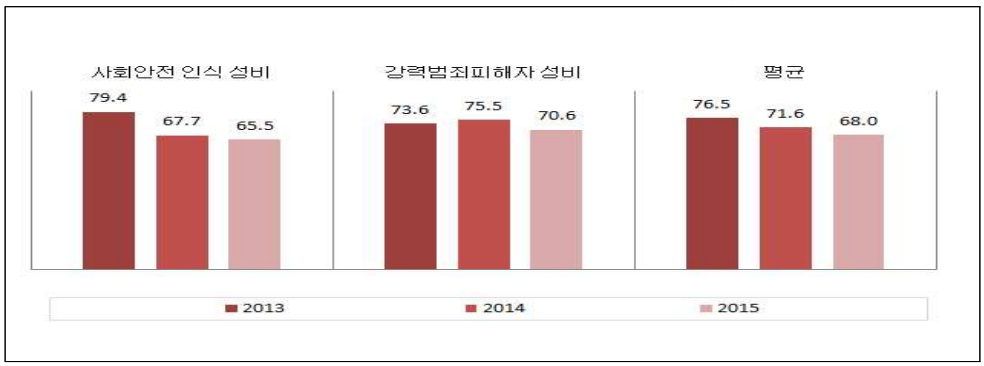
<표 Ⅲ-55>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65.5	70.6	68.0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별 변화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79.4, 2014년 67.7, 2015년 65.5로 2년간 13.9p 하락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73.6, 2014년 75.5, 2015년 70.6으로 2014년에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6.5, 2014년 71.6, 2015년 68.0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5]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1.1으로 전국 평균(68.7) 보다 2.4p 높고 가족 분야 성평등 1위 지역(77.0) 보다는 5.9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9.1로 전국 평균보다 2.8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7p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92.1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각각 2.4p, 7.9p 낮았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는 100.0으로 전국 평균 보다 5.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63.0으로 전국 평균보다 3.9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2.2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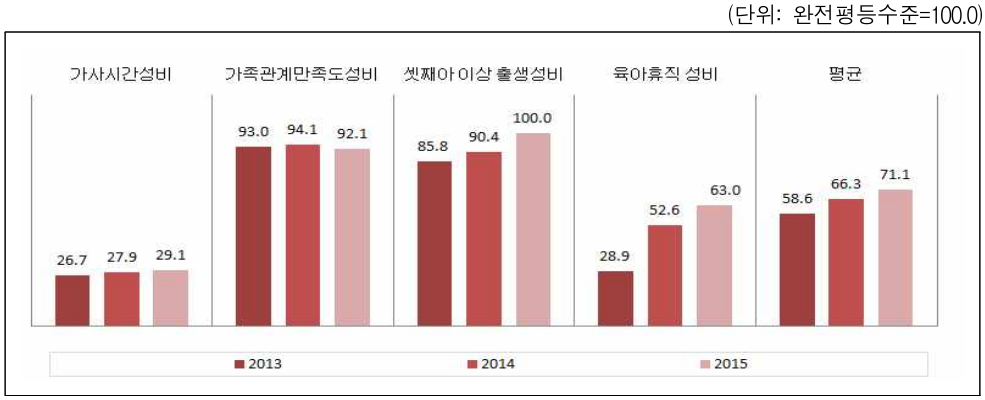
<표 Ⅲ-56> 울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29.1	92.1	100.0	63.0	71.1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가족 분야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26.7, 2014년 27.9, 2015년 29.1로 개선되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85.8에서, 2014년 90.4, 2015년 100.0까지 도달하였다. ‘육아휴직자 성비’ 또한 2013년 28.9, 2014년 52.6, 2015년 63.0으로 2년간 34.1p 상승하여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3.0, 2014년 94.1, 2015년 92.1로 전년 대비 등락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울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은 2013년 58.6, 2014년 66.3, 2015년 71.1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6] 울산광역시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87.1로 전국평균(87.7) 보다 0.6p 낮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3.7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77.9로 전국평균 보다 0.7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7.3p 낮았다.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은 84.6으로 전국평균 보다는 7.3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5.4p 낮았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 성평등 수준은 98.7로 전국평균보다 6.1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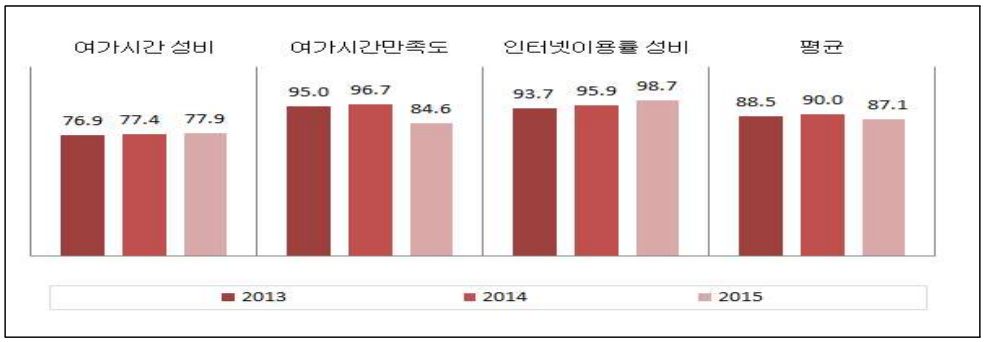
<표 Ⅲ-57> 울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울산광역시	77.9	84.6	98.7	87.1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6.9, 2014년 77.4, 2015년 77.9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5.0, 2014년 96.7로 상승하다 2015년 84.6으로 전년대비 12.1p 하락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3.7, 2014년 95.9, 2015년 98.7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지표의 변화 결과 울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 전체 성평등 수준은 2013년 88.5, 2014년 90.0, 2015년 87.1로 등락을 보이는 양상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7] 울산광역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8) 경기도

2015년 경기도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69.8로 전국평균 보다 0.7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는 5.8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72.0으로 전국평균보다 2.1p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58.6으로 1.0p 낮은 반면에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78.9로 1.0p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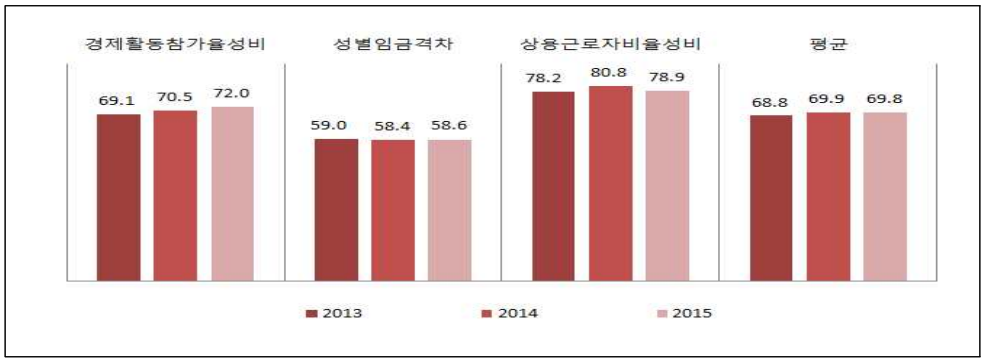
<표 Ⅲ-58> 경기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경기도	72.0	58.6	78.9	69.8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지표 값의 변화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69.1, 2014년 70.5, 2015년 72.0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59.0에서 2014년 58.4, 2015년 58.6으로 2년간 소폭 하락했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8.2, 2014년 80.8, 2015년 78.9로 상승 후 하락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8.8, 2014년 69.9, 2015년 69.8로 변화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8] 경기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7.7로 전국 평균보다 0.3p 높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15.6p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7.3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4.3p 높지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2p, '관리직 비율 성비'는 8.0p 낮다. 해당 지표 1위 지역과 비교하면 모두 낮은 수준이고 특히,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8.9p의 큰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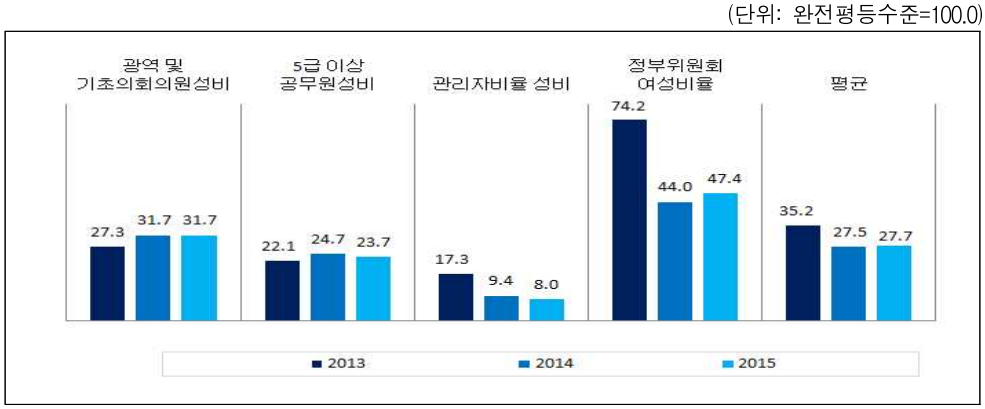
<표 Ⅲ-59> 경기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경기도	31.7	23.7	8.0	47.4	27.7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지표의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7.3에서 2014년 31.7로 개선되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22.1, 2014년 24.7, 2015년 23.7로 2년간 1.6p 상승하였다. 반면,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7.3, 2014년 9.4, 2015년 8.0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역시 2013년 74.2, 2014년 44.0, 2015년 47.4로 2년간 26.8p 하락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35.2, 2014년 27.5, 2015년 27.7로 하락하는 추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69] 경기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6.1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지표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3.2p 높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완전 평등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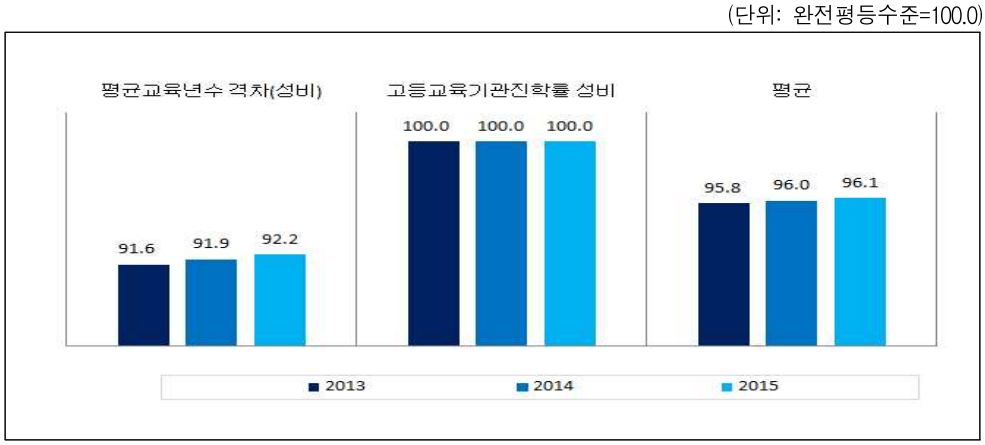
<표 Ⅲ-60> 경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경기도	92.2	100.0	96.1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 지표별로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91.6, 2014년 91.9, 2015년 92.2로 상승 추세이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2013년 이후 완전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5.8, 2014년 96.0, 2015년 96.1으로 개선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0] 경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는 85.2으로 전국평균 보다 0.2p 낮고 1위 지역보다는 5.5p 낮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75.3으로 전국 평균보다 3.7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17.5p 낮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95.1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3.3p 높으나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0.4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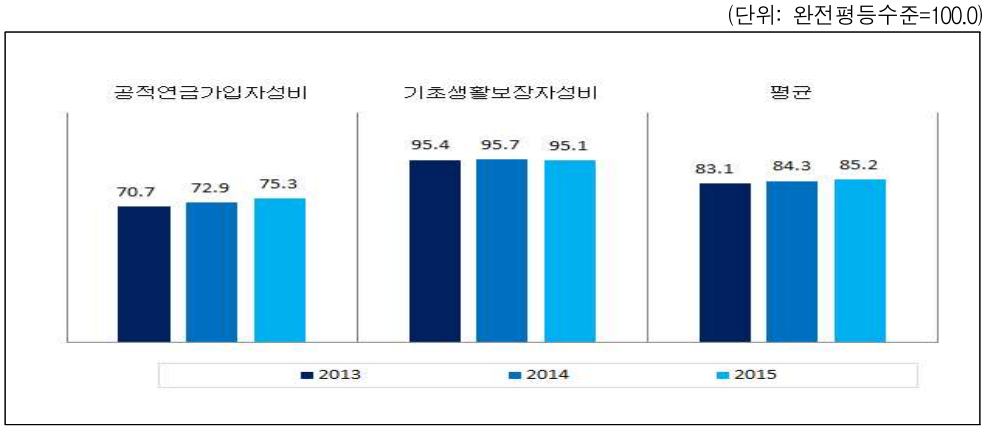
<표 Ⅲ-61> 경기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경기도	75.3	95.1	85.2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2013~2015년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0.7, 2014년 72.9, 2015년 75.3까지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95.4, 2014년 95.7, 2015년 95.1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이러한 세부지표의 변화로 경기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3.1, 2014년 84.3, 2015년 85.2으로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1] 경기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97.8로 전국평균 보다 1.8p 높고 분야 1위 지역보다는 1.1p 낮았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0.3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0.2p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0.1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3.8p 낮다. 한편,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완전 성평등 수준인 10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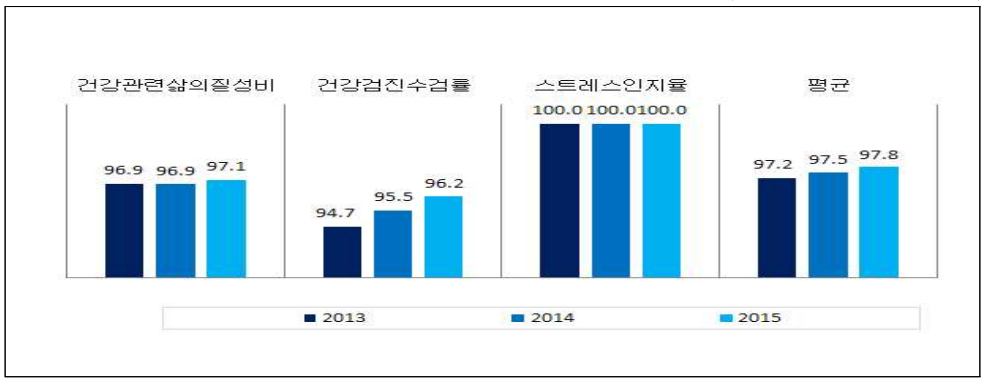
<표 Ⅲ-62> 경기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경기도	97.1	96.2	100.0	97.8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 지표별 변화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 성평등 수준은 2013년 96.9에서 2015년 97.1으로 2년간 소폭 상승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4.7, 2014년 95.5, 2015년 96.2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100.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7.2, 2014년 97.5, 2015년 97.8으로 꾸준히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2] 경기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3.7로 전국 평균(65.2) 보다 1.5p 낮고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14.7p 낮았다. 세부지표별로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59.5로 전국평균 보다 5.7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22.9p 낮았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68.0으로 전국평균 보다 2.9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10.0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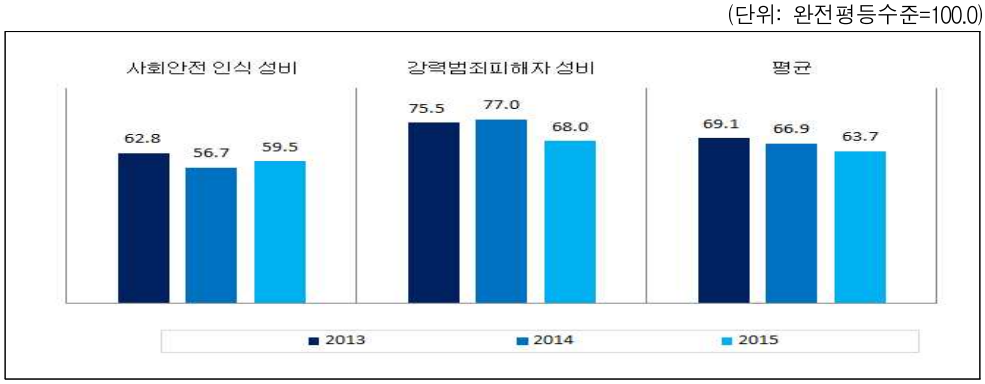
<표 Ⅲ-63> 경기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경기도	59.5	68.0	63.7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로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성평등 수준은 2013년 62.8, 2014년 56.7, 2015년 59.5로 2년간 3.3p 하락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성평등 수준은 2013년 75.5, 2014년 77.0, 2015년 68.0으로 2년간 7.5p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이로 인해 경기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9.1에서 2014년 66.9, 2015년 63.7로 2년 연속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3] 경기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0.5로 전국 평균(68.7) 보다 1.8p 높고 가족 분야 1위 지역(77.0) 보다는 6.5p 낮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5.2로 전국 평균보다 1.1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6.6p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93.8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각각 0.7p, 6.2p 낮았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는 93.5로 전국 평균과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각각 1.2p, 6.5p 낮았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69.6으로 전국 평균보다 10.5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5.6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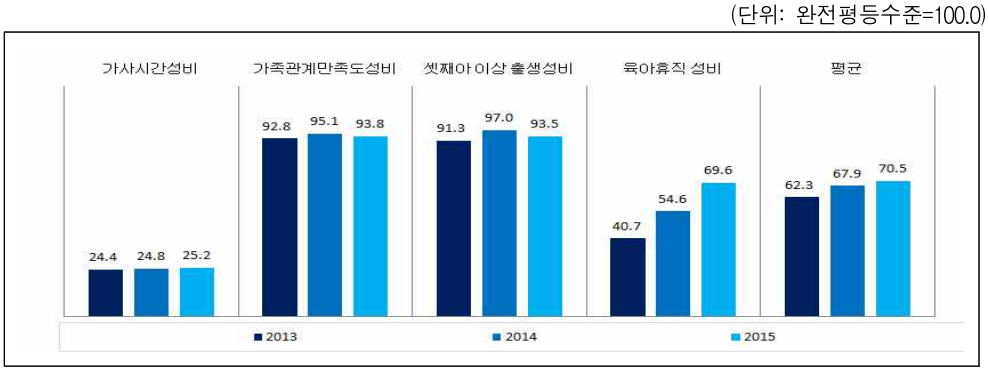
<표 Ⅲ-64> 경기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경기도	25.2	93.8	93.5	69.6	70.5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지표별 변화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24.4, 2014년 24.8, 2015년 25.2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40.7, 2014년 54.6, 2015년 69.6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2.8, 2014년 95.1, 2015년 93.8로 등락을 보였으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역시 2013년 91.3, 2014년 97.0, 2015년 93.5로 상승 후 하락하였다. 경기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2.3, 2014년 67.9, 2015년 70.5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4] 경기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89.3으로 전국 평균보다 1.6p 높고 분야 1위 지역보다 1.5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는 1.3p, '여가 만족도 성비'는 3.1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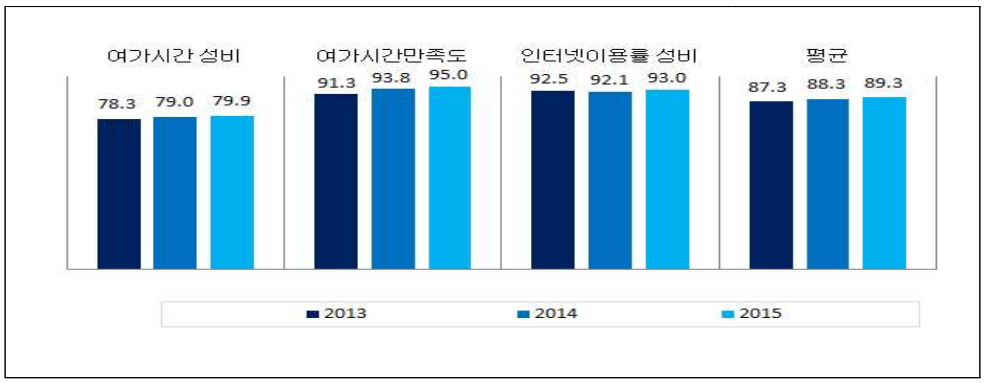
<표 Ⅲ-65> 경기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경기도	79.9	95.0	93.0	89.3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모든 지표에서 201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3년에 비해 2015년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1.6p,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3.7p,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는 0.5p 상승했다. 세부지표의 변화가 반영되어 경기도의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7.3, 2014년 88.3, 2015년 89.3으로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5] 경기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9) 강원도

강원도의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75.6으로 전국평균보다 5.1p 높고 분야 1위 지역에 해당한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8.1p 높고 해당 지표 1위 수준으로 강원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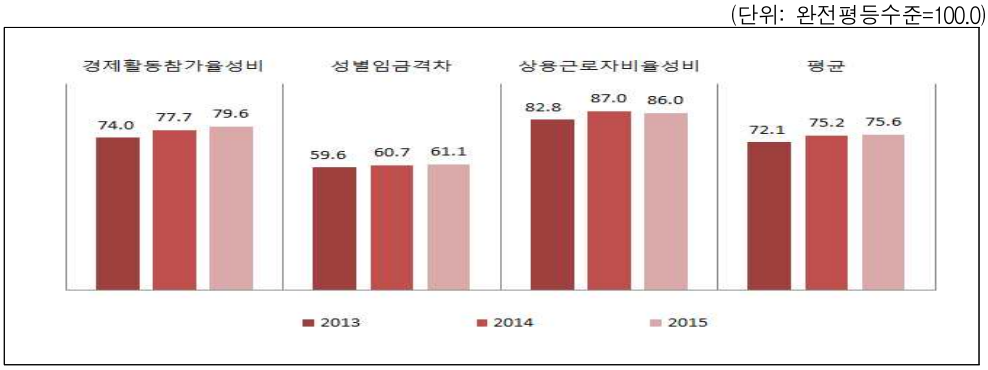
<표 Ⅲ-66> 강원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강원도	79.6	61.1	86.0	75.6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4.0, 2014년 77.7, 2015년 79.6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성별 임금격차' 지표 역시 2013년 59.6, 2014년 60.7, 2015년 61.1로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2.8에서 2014년 87.0으로 상승 후 2015년 소폭 하락하여 86.0이다. 이 같은 추이로 인해 강원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2.1에서 2014년 75.2, 2015년 75.6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6] 강원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7.0으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6.7p 낮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4.8p 낮은 반면, '관리직 비율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15.8p 높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5.6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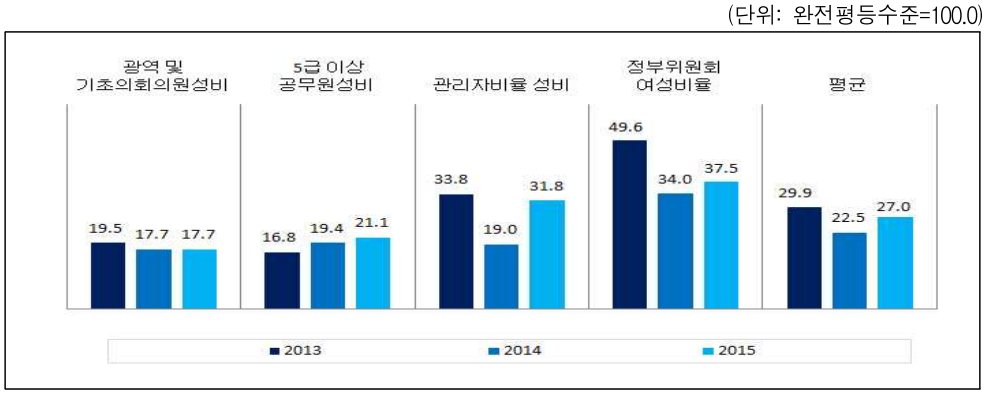
<표 Ⅲ-67> 강원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강원도	17.7	21.1	31.8	37.5	27.0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9.5에서 2014년 17.7로 다소 하락하여 2015년도 동일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6.8, 2014년 19.4, 2015년 21.1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33.8에서 2014년 19.0으로 크게 하락하였지만 2015년 다시 상승하여 31.8이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49.6, 2014년 34.0, 2015년 37.5로 2년간 12.1p 하락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9.9에서 2014년 22.5로 하락, 2015년 27.0으로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7] 강원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2.4로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2.1p 낮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4.1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7.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100.0으로 전국 평균과 같은 완전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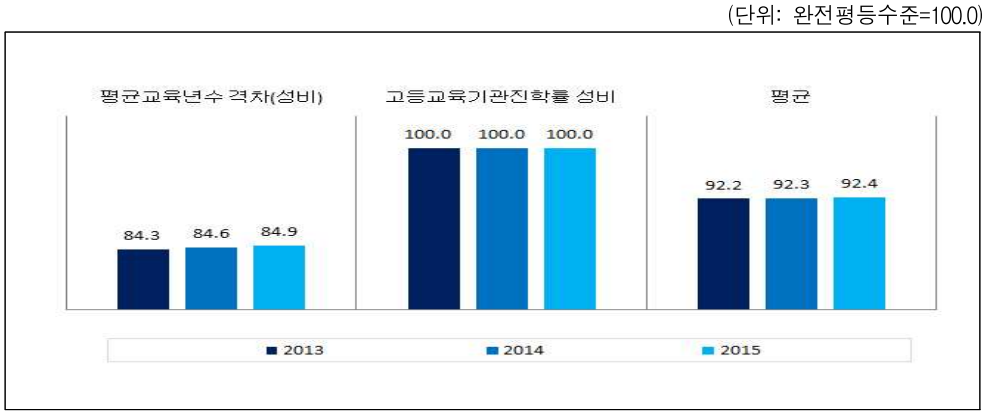
<표 Ⅲ-68> 강원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강원도	84.9	100.0	92.4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 추이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4.3, 2014년 84.6에서 2015년 84.9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강원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2.2에서 2014년 92.3, 2015년 92.4로 소폭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8] 강원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강원도의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는 89.6으로 전국평균(85.4) 보다 4.2p 높고 1위 지역 보다(90.7) 보다는 1.1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90.8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88.3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 보다 11.8p 성평등 수준이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 보다는 2.0p 낮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전국 평균과 해당지표 1위 지역 보다 각각 3.5p, 7.2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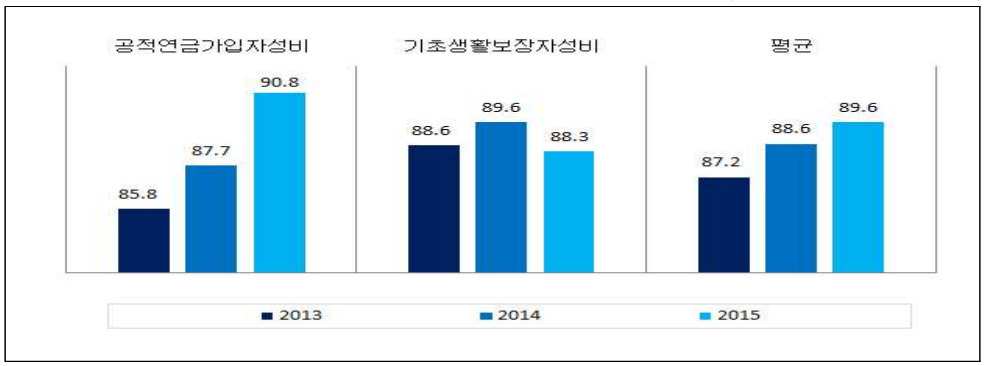
<표 Ⅲ-69> 강원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강원도	90.8	88.3	89.6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는 개선되는 추이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등락을 보이는 양상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5.8, 2014년 87.7, 2015년 90.8까지 상승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88.6에서 2014년 89.6으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88.3으로 다시 하락했다. 그 결과, 강원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7.2, 2014년 88.6, 2015년 89.6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79] 강원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96.8으로 전국평균 보다 0.8p 높고 보건 분야 1위 지역 보다는 2.1p 낮다. 세부지표별로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0.2p 낮고 해당 지표 1위 보다 0.7p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1.9p 높으나 해당 지표 1위 보다는 1.8p 낮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0.7p 높고 해당 지표 1위 보다는 4.3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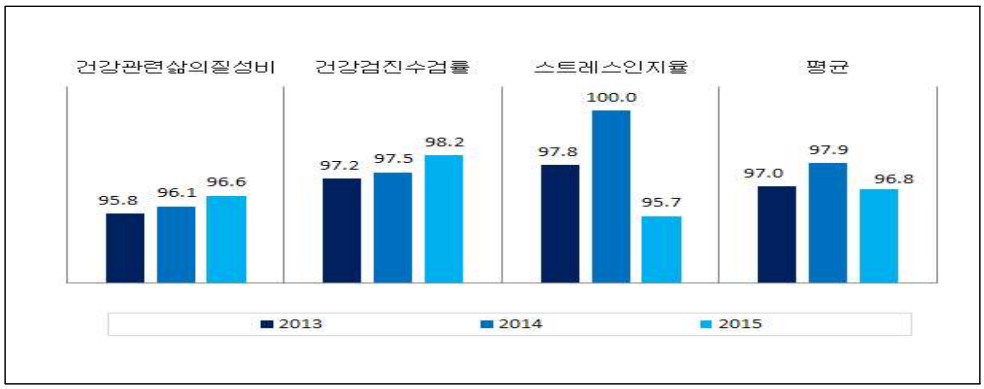
<표 Ⅲ-70> 강원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강원도	96.6	98.2	95.7	96.8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5.8, 2014년 96.1, 2015년 96.6로 2년 연속 상승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도 2013년 97.2, 2014년 97.5, 2015년 98.2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97.8에서 2014년 100.0에 도달하였으나 2015년 크게 하락하여 95.7이다.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7.0, 2014년 97.9, 2015년 96.8으로 변화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0] 강원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1.2으로 전국 평균보다 6.0p 높고 분야 1위 지역보다 7.2p 낮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3.9p 높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8.1p 높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13.3p 낮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4.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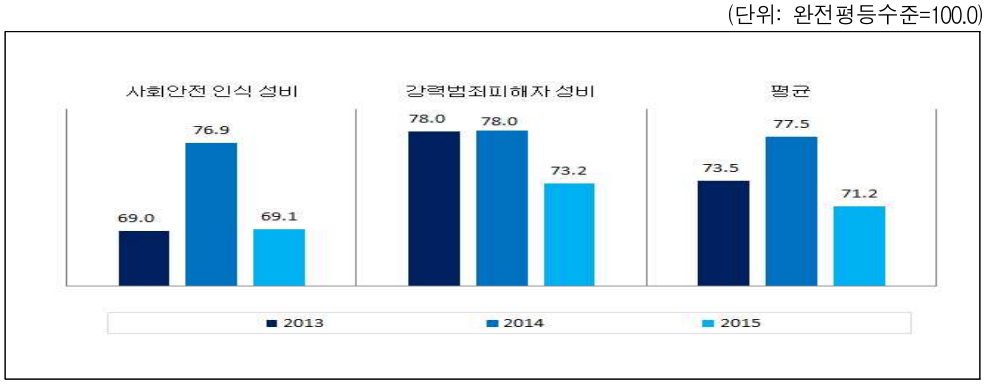
<표 Ⅲ-71> 강원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강원도	69.1	73.2	71.2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2013년 69.0에서 2014년 76.9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69.1로 2013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과 2014년은 78.0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 73.2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강원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3.5에서 2014년 77.5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71.2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1] 강원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7.0으로 전국 평균보다 8.3p 높고 가족 분야 성평등 1위 지역에 해당한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9.5로 전국 평균보다 3.2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2.3p 낮았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96.1로 전국 평균보다 1.6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3.9p 낮았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는 99.1로 전국 평균보다 4.4p 높고, 해당 지표 1위지역보다 0.9p 낮았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83.5로 전국 평균보다 24.4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7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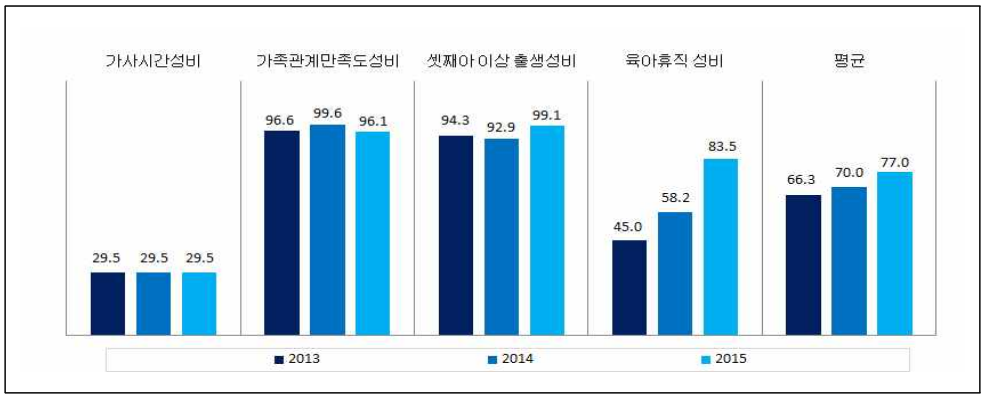
<표 Ⅲ-72> 강원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강원도	29.5	96.1	99.1	83.5	77.0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9.5를 유지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6.6에서 2014년 99.6으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96.1로 2013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94.3, 2014년 92.9에서 2015년 99.1까지 상승하였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45.0, 2014년 58.2, 2015년 83.5로 연속 전년 대비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강원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6.3, 2014년 70.0, 2015년 77.0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2] 강원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문화·정보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83.4로 전국 평균보다 4.3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 7.4p 낮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모든 세부지표 값이 낮은데 '여가시간 성비'는 2.3p, '여가 만족도 성비'는 6.9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3.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는 8.9p, '여가 만족도 성비'는 15.0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9p 낮은 수준이다.

<표 Ⅲ-73> 강원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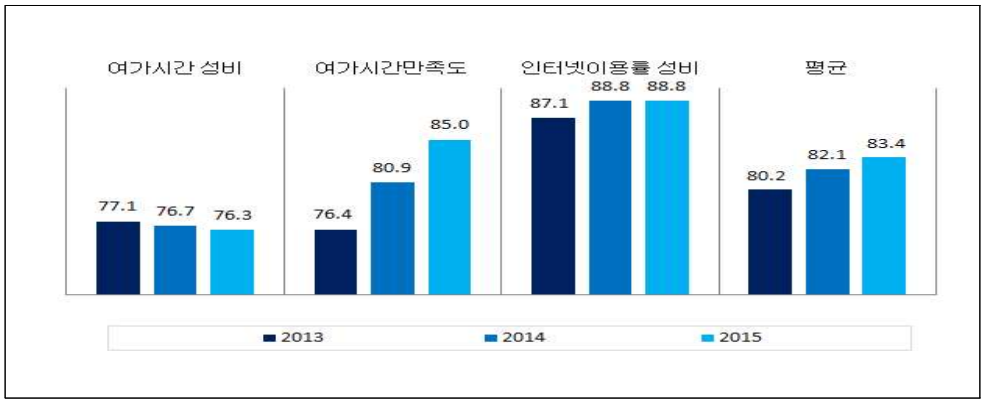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강원도	76.3	85.0	88.8	83.4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여가 만족도 성비'와 '인터넷이용률 성비' 지표는 개선 추세에 있지만 '여가시간 성비'는 하락하였다.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77.1, 2014년 76.7, 2015년 76.3으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76.4, 2014년 80.9, 2015년 85.0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3년 87.1, 2014년 88.8, 2015년 88.8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강원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0.2, 2014년 82.1, 2015년 83.4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3] 강원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10)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74.0으로 전국 평균보다 3.5p 높다. 세부지표 값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4.8p 높고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4.1p 높으며,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1.4p 높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4.6p,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3p,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6.7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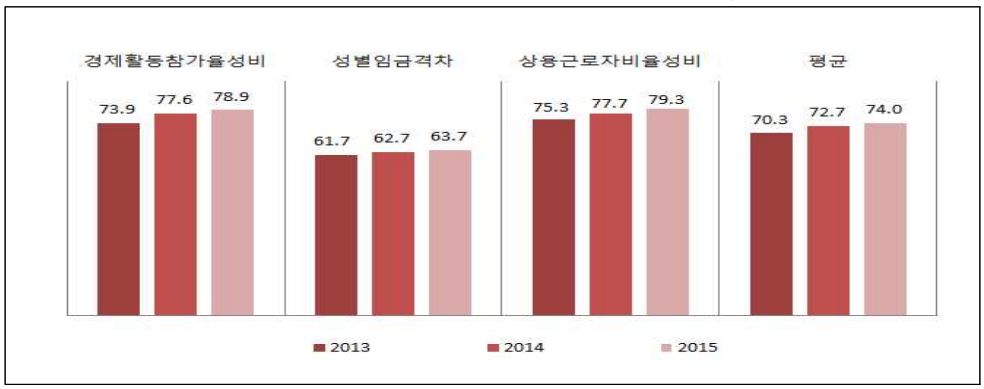
<표 Ⅲ-74> 충청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충청북도	78.9	63.7	79.3	74.0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각 지표별 추이를 보면 2013년에 비해 모든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3.9에서 2015년 78.9로,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013년 61.7에서 2015년 63.7로,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5.3에서 2015년 79.3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추이로 인해 충청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0.3에서 2015년 74.0으로 3.7p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4] 충청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7.2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3.8p 낮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4.9p 낮지만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6.3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1.8p 높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1.0p,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4.3p,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14.6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0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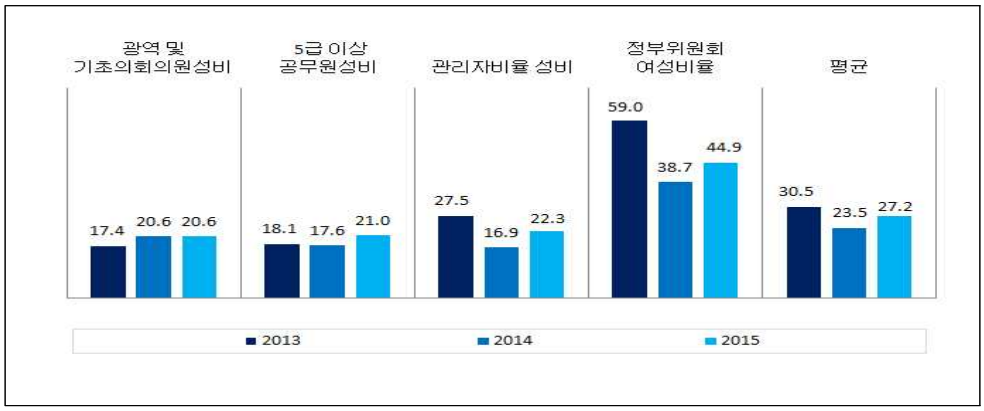
<표 Ⅲ-75> 충청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충청북도	20.6	21.0	22.3	44.9	27.2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7.4에서 2015년 20.6으로 개선되었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8.1에서 2014년 17.6으로 하락 후 2015년 21.0으로 개선되었고,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 또한 2013년 27.5에서 2014년 16.9로 하락 후 2015년 22.3으로 회복되었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59.0, 2014년 38.7로 하락 후 2015년 44.9로 회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13년 30.5에서 2014년 23.5로 하락하였다가 2015년 27.2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5] 충청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92.9로 전국평균보다 1.6p 낮지만 다른 분야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3.2p 낮고 해당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보다 6.4p 낮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100.0으로 전국평균과 동일한 완전평등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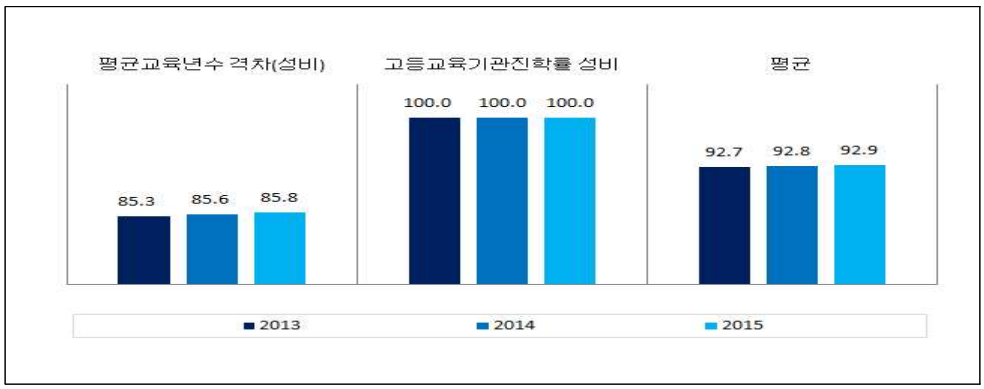
<표 Ⅲ-76> 충청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충청북도	85.8	100.0	92.9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5.3에서 2014년 85.6, 2015년 85.8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13년 92.7, 2014년 92.8, 2015년 92.9로 미미하지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6] 충청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85.5로 전국평균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비교하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80.6으로 전국평균보다 1.6p 높은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90.5로 1.3p 낮다. 해당 지표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12.2p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지표는 5.0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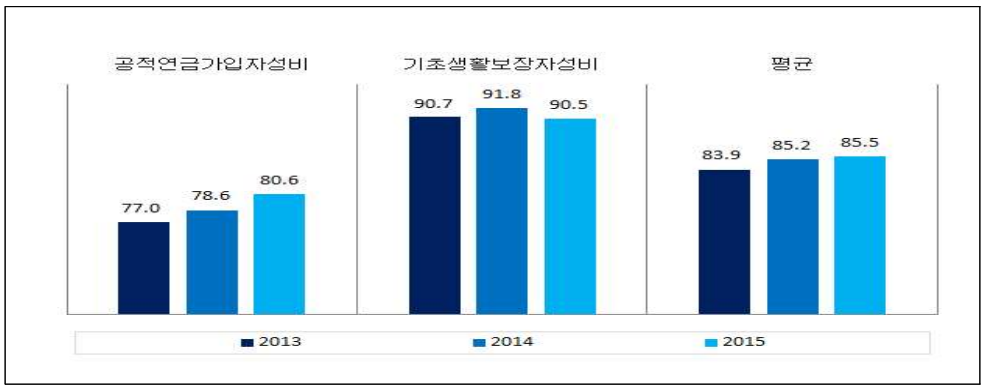
<표 Ⅲ-77> 충청북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충청북도	80.6	90.5	85.5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77.0, 2014년 78.6, 2015년 80.6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90.7, 2014년 91.8, 2015년 90.5로 상승 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세부지표를 종합한 충청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3.9에서 2014년 85.2, 2015년 85.5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7] 충청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97.6으로 전국평균보다 1.6p 높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0.2p 낮은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0.5p 높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4.4p 높았다. 해당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0.7p,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3.2p, '스트레스인지율' 0.6p 낮지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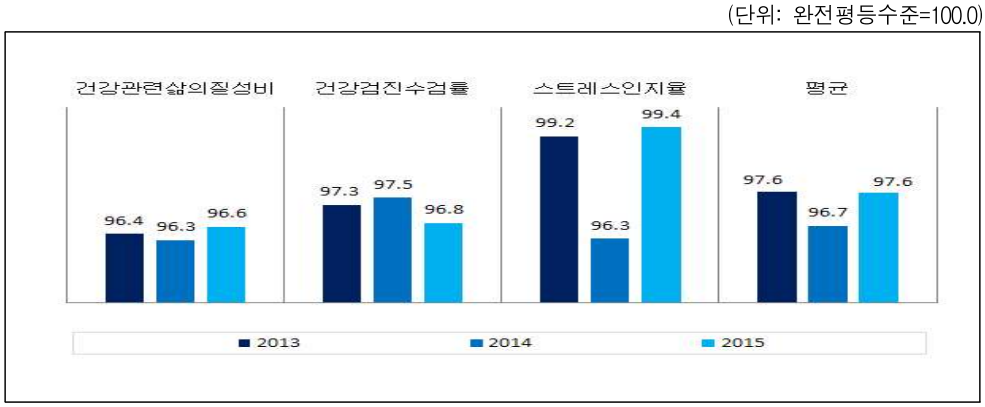
<표 Ⅲ-78> 충청북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충청북도	96.6	96.8	99.4	97.6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 96.4에서 2015년 96.6으로 0.2p 증가하였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97.3에서 2015년 96.8로 0.5p 감소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99.2에서 2014년 96.4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99.4로 회복하여 2년간 0.2p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의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7.6에서 2015년 97.6으로 유지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8] 충청북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67.1로 전국평균보다 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6.0p 낮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9.9p 높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3.2p,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3.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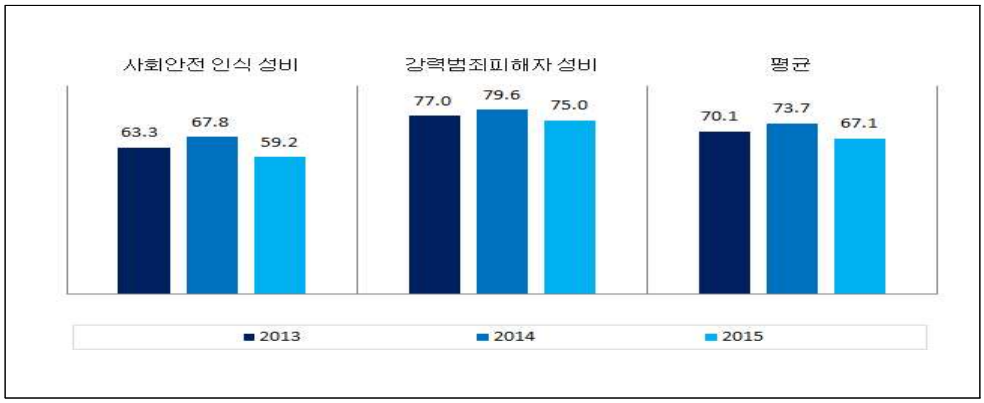
<표 Ⅲ-79> 충청북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충청북도	59.2	75.0	67.1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63.3에서 2014년 67.8으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59.2로 크게 하락하였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또한 2013년 77.0, 2013년 79.6, 2015년 75.0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이로 인해 충청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0.1에서 2015년 67.1로 3.0p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89] 충청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8.9으로 전국평균보다 0.2p 높았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0.5p,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1.1p,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6p 높은 반면 '육아휴직자 성비'는 3.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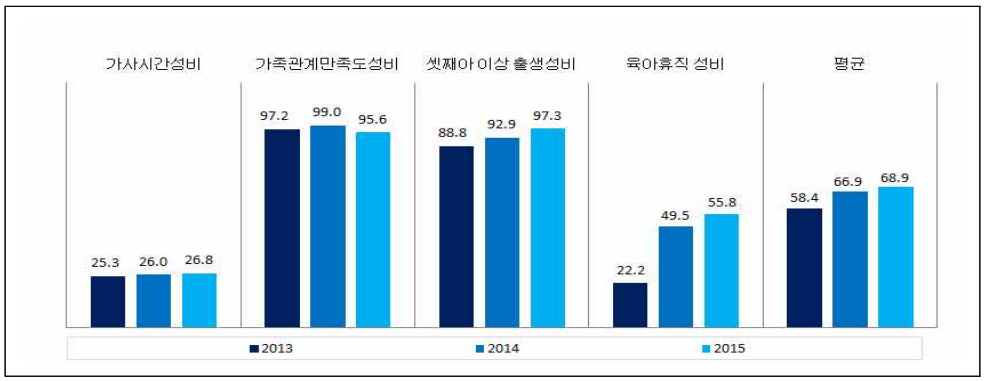
<표 Ⅲ-80> 충청북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충청북도	26.8	95.6	97.3	55.8	68.9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25.3에서 2015년 26.8으로 상승하였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88.8에서 2015년 97.3으로 개선, '육아휴직자 성비' 역시 2013년 22.2에서 2015년 55.8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유일하게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7.2에서 2015년 95.6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충청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58.4에서 2015년 68.9로 10.5p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0] 충청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 수준보다 2.2p 낮은 85.5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는 6.6p 높은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각각 9.9p, 3.4p 낮았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는 해당 지표 1위 지역에 해당하며,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18.0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5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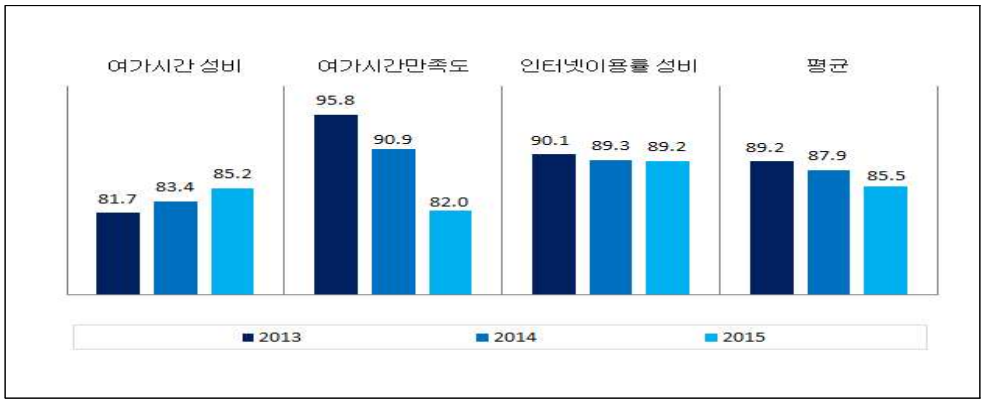
<표 Ⅲ-81> 충청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충청북도	85.2	82.0	89.2	85.5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세부 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여가시간 성비' 지표는 2013년 81.7에서 2014년 83.4, 2015년 85.2로 개선되었다.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2013년 95.8, 2014년 90.9, 2015년 82.0으로 하락 추세이며,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도 2013년 90.1에서 2014년 89.3, 2015년 89.2로 하락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9.2에서 2015년 85.5로 3.7p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1] 충청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2015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0.7으로 전국평균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세부지표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0.1p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0.5p 낮으며,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1.1p 높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9.5p, '성별 임금격차'는 6.9p,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7.0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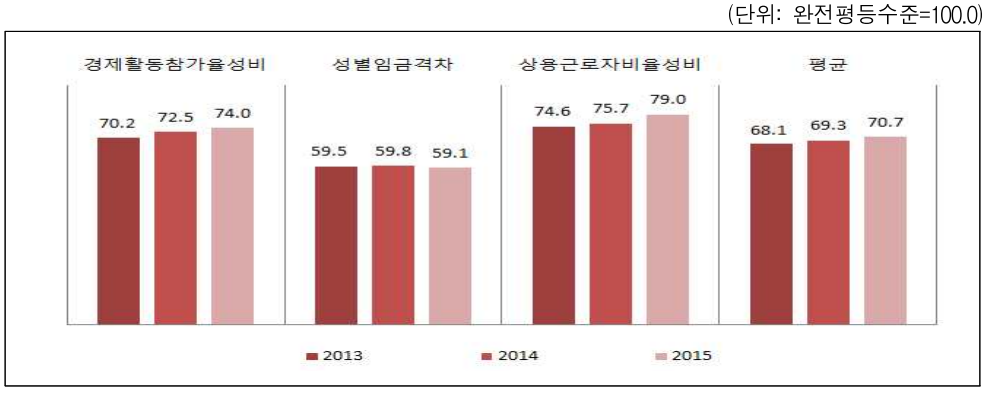
<표 Ⅲ-82> 충청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충청남도	74.0	59.1	79.0	70.7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70.2에서 2014년 72.5, 2015년 74.0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59.5, 2014년 59.8, 2015년 59.1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3년 74.6에서 2014년 75.7, 2015년 79.0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로 인해 충청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8.1, 2014년 69.3, 2015년 70.7으로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2] 충청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18.5로 전국평균에 비해 8.9p 낮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6.2p,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10.9p,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7.7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10.5p 낮아 모든 세부지표가 전국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지표별 1위 지역보다 23p~32p 내외로 낮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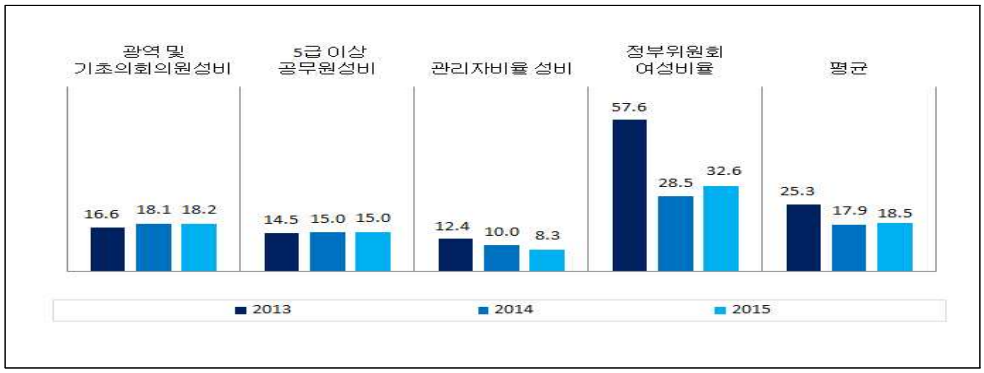
<표 Ⅲ-83>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충청남도	18.2	15.0	8.3	32.6	18.5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 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6.6에서 2015년 18.2로 상승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 또한 2013년 14.5에서 2015년 15.0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12.4에서 2015년 8.3으로 꾸준히 하락하였고,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 역시 2013년 57.6에서 2015년 32.6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5.3에서 2015년 18.5로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3] 충청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2.4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국평균보다 2.1p 낮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4.1p 낮고 해당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보다 7.3p 낮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과 동일한 완전평등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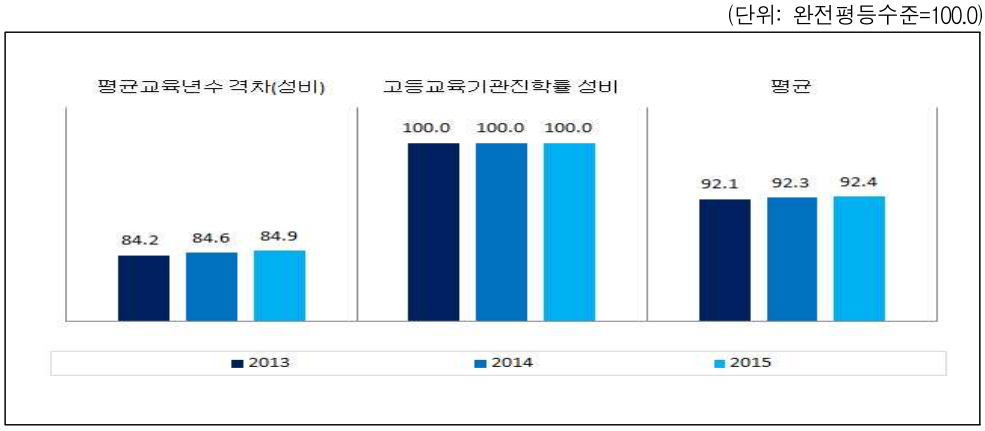
<표 Ⅲ-84> 충청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충청남도	84.9	100.0	92.4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4.2에서 2014년 84.6, 2015년 84.9으로 소폭 상승 추세이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완전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충청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2.1에서 2014년 92.3, 2015년 92.4로 다소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4] 충청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4.5p 낮은 80.9이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는 8.7p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0.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는 해당 지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보다 22.5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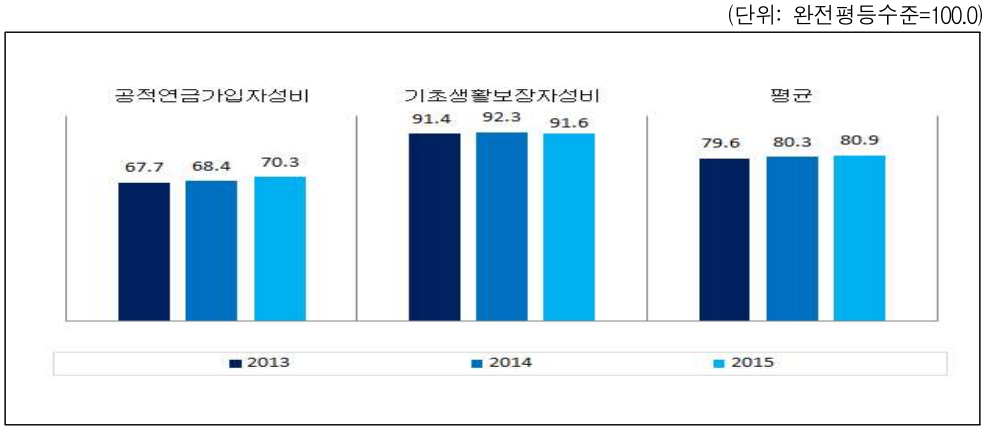
<표 Ⅲ-85> 충청남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충청남도	70.3	91.6	80.9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 지표별로 추이를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는 2013년 67.7, 2014년 68.4, 2015년 70.3으로 상승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91.4, 2014년 92.3, 2015년 91.6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이로 인해 2015년 충청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9.6에서 1.3p 상승하여 2015년 80.9로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5] 충청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6.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국 평균보다 0.7p 높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전국평균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1.1p,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1.9p 낮다. 반면,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100.0으로 전국평균보다 5.0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해당 지표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1.6p,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5.6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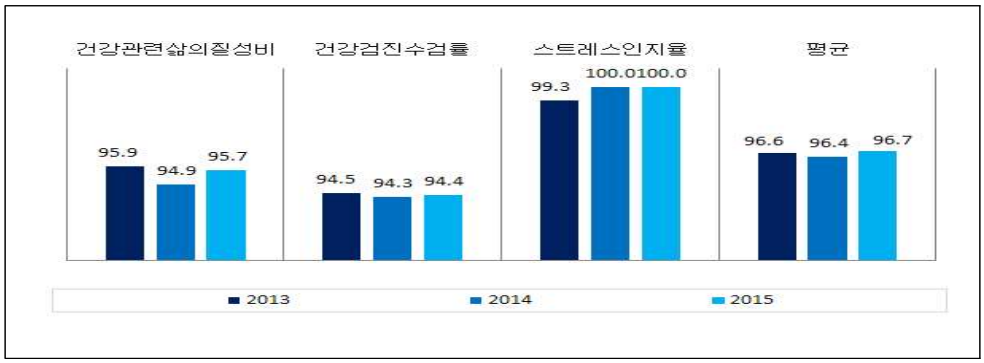
<표 Ⅲ-86> 충청남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충청남도	95.7	94.4	100.0	96.7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5.9에서 2014년 94.9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95.7로 회복되었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는 2013년 94.5, 2015년 94.3, 2015년 94.4로 0.2p 내외의 등락을 보였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99.3에서 2014년 완전성평등한 수준인 100.0에 도달 후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6.6에서 2014년 96.4, 2015년 96.7로 변화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6] 충청남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과 비교해 2.5p 낮은 62.7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8.7p 낮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3.7p 높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5.9p,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9.2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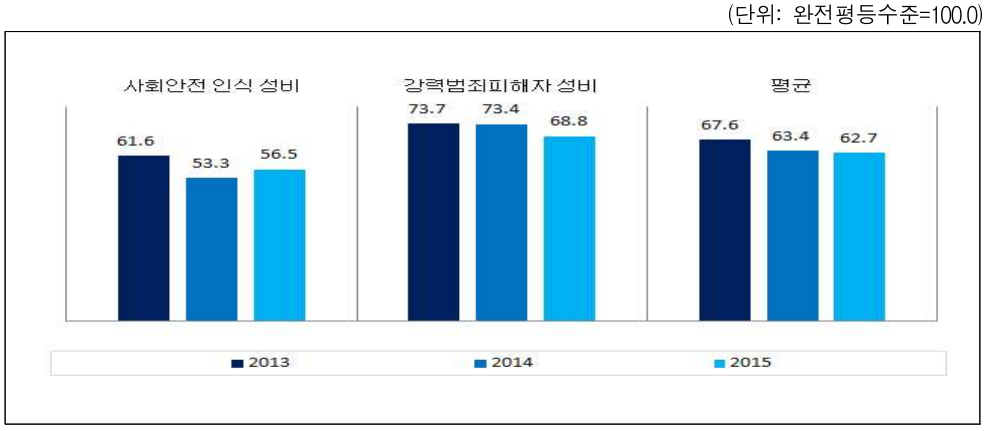
<표 Ⅲ-87> 충청남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충청남도	56.5	68.8	62.7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61.6에서 2014년 53.3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56.5로 소폭 상승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73.7, 2014년 73.4, 2015년 68.8로 꾸준히 하락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7.6에서 2014년 63.4, 2015년 62.7로 낮아져 성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7] 충청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충청남도의 2015년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는 71.7으로 전국평균과 비교해 3.0p 높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1p,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5.2p 낮은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3.6p, '육아휴직자 성비'는 16.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모든 세부지표 값이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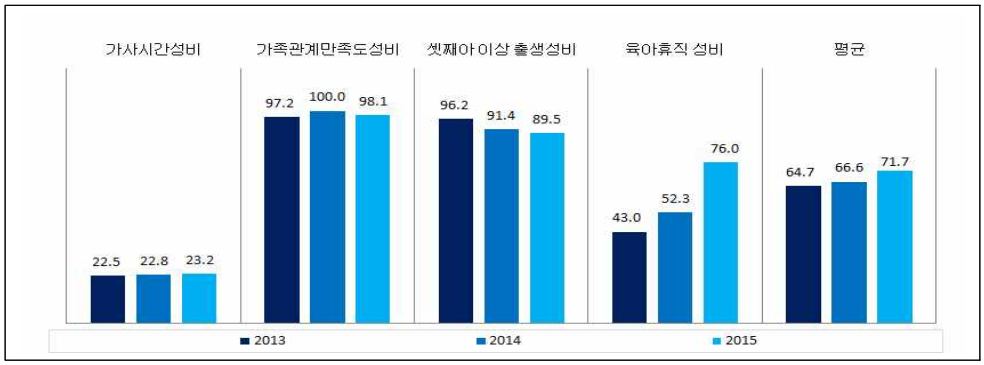
<표 Ⅲ-88> 충청남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충청남도	23.2	98.1	89.5	76.0	71.7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22.5에서 2015년 23.2로 소폭 증가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7.2에서 2014년 완전성평등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2015년 다시 하락하여 98.1이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96.2, 2014년 91.4, 2015년 89.5로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43.0에서 2014년 52.3, 2015년 76.0으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충청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4.7에서 2015년 71.7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8] 충청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문화·정보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83.2로 전국 평균보다 4.5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는 1.5p 높은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는 11.5p 낮고 '인터넷 이용률 성비' 또한 3.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19.6p로 낮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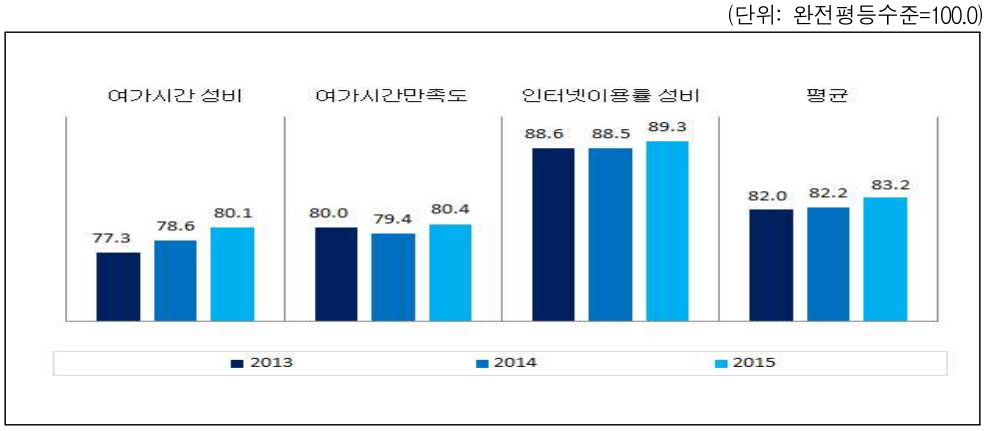
<표 Ⅲ-89> 충청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충청남도	80.1	80.4	89.3	83.2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7.3에서 2015년 80.1으로 많이 개선된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80.0, 2014년 79.4, 2015년 80.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3년 88.6, 2014년 88.5에서 2015년 89.3으로 소폭이지만 개선되었다. 이러한 추이로 인해 2015년 충청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83.2로 2013년 82.0에 비해 1.2p 상승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99] 충청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12)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72.5로 전국평균보다 2.0p 높은 수준이다. 세부지표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지표는 2.5p,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4.3p 높은 반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0.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해보면 모든 세부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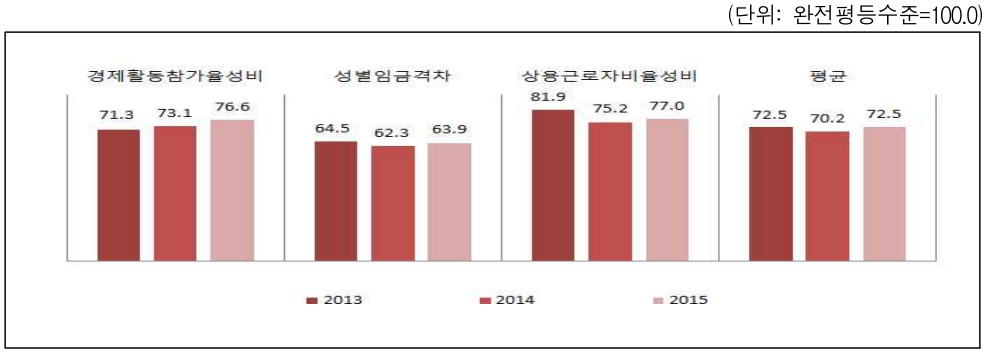
<표 Ⅲ-90> 전라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전라북도	76.6	63.9	77.0	72.5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71.3에서 2015년 76.6으로 상승 추이를 보인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64.5에서 2014년 62.3으로 하락 후 2015년 63.9로 회복되었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3년 81.9에서 2014년 75.2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5년 77.0으로 다소 회복되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2.5에서 2014년 70.2로 하락한 후 2015년 72.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0] 전라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4.4로 전국평균보다 3.0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지표는 6.1p,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지표는 7.1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11.1p 낮고,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12.4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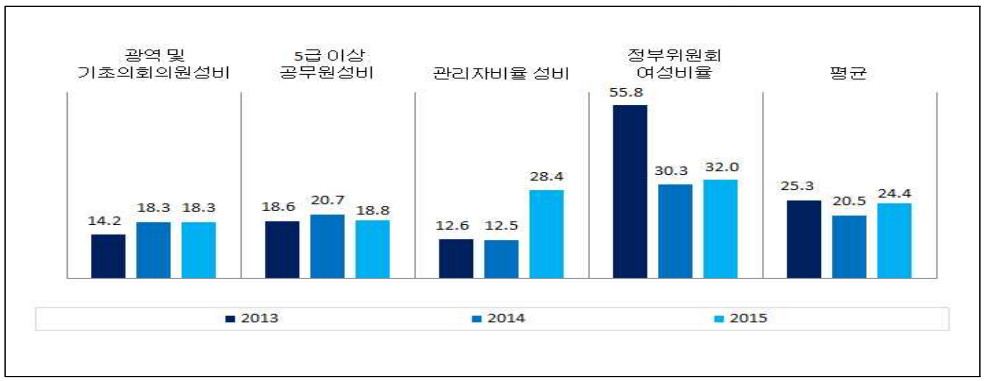
<표 Ⅲ-91> 전라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전라북도	18.3	18.8	28.4	32.0	24.4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14.2에서 2015년 18.3으로 개선되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3년 18.6, 2014년 20.7, 2015년 18.8로 등락하는 양상이다. '관리직 비율 성비'는 2013년 12.6, 2014년 12.5에서 2015년 28.4로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55.8에서 2015년 32.0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5.3, 2014년 20.5, 2015년 24.4로 변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1] 전라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1.6로 높지만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전국평균과 동일한 완전평등수준이지만,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5.8p 낮고 해당 지표의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보다 9.0p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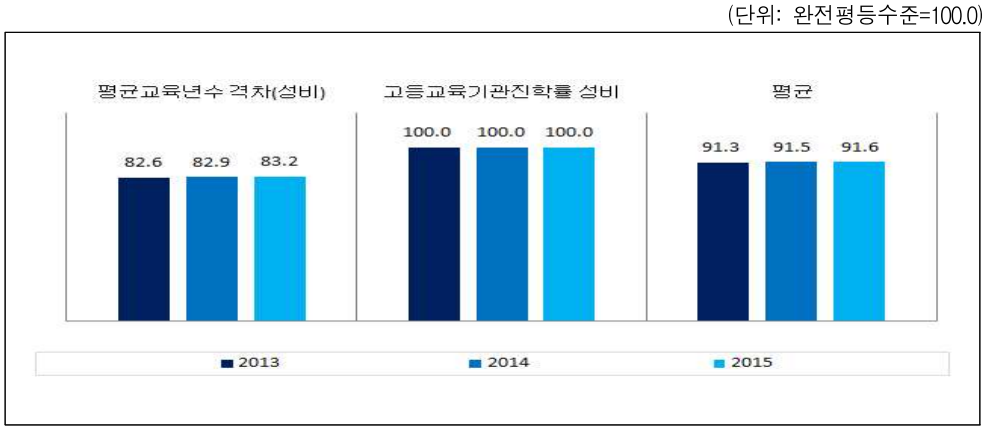
<표 Ⅲ-92> 전라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전라북도	83.2	100.0	91.6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2.6에서 2014년 82.9, 2015년 83.2로 상승하였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1.3에서 2015년 91.6으로 소폭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2] 전라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복지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0.5p 낮은 84.9이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10.9p 높은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11.9p 낮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9p,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15.6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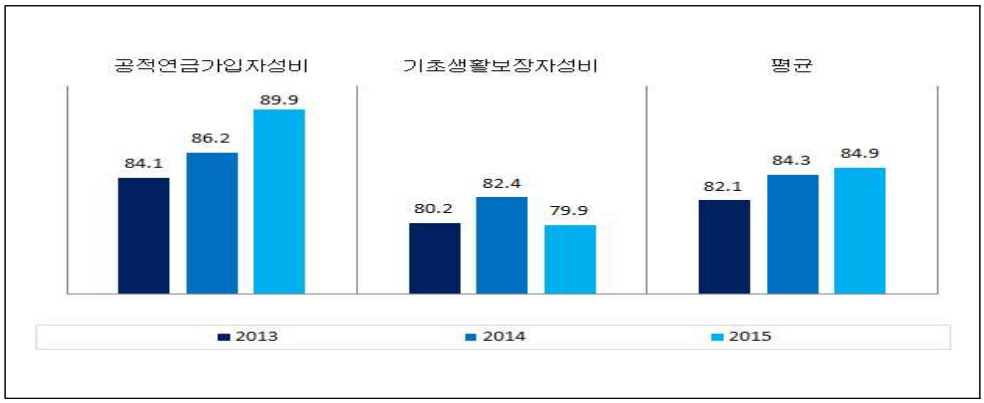
<표 Ⅲ-93> 전라북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전라북도	89.9	79.9	84.9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013년 84.1, 2014년 86.2, 2015년 89.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80.2에서 2014년 82.4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79.9로 하락하여 2013년 수준을 하회하였다. 세부지표의 종합 결과 전라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2.1에서 2014년 84.3, 2015년 84.9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3] 전라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8.5로 전국평균보다 2.5p 높으며 분야 1위 지역과의 격차도 0.4p로 크지 않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0.1p 낮은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2.4p 높았다. 특히 '스트레스인지율'은 완전 성평등한 수준인 100.0으로 지표 1위 지역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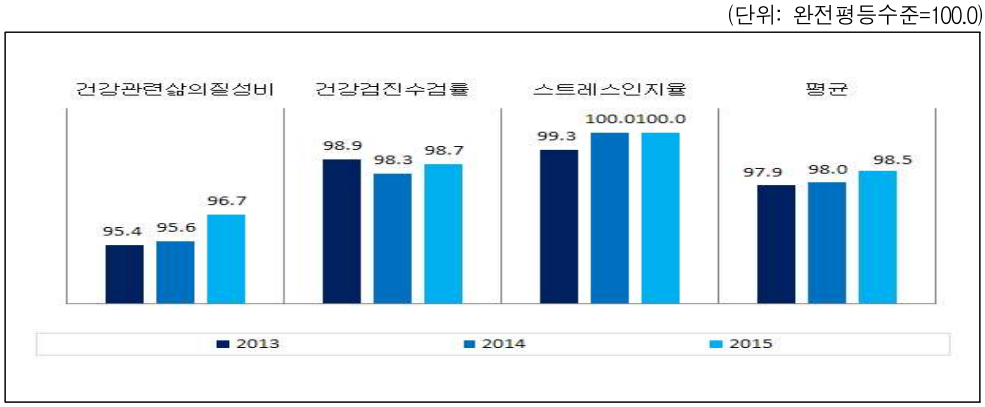
<표 Ⅲ-94> 전라북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전라북도	96.7	98.7	100.0	98.5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 95.4에서 2015년 96.7로 상승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98.9, 2014년 98.3, 2015년 98.7로 등락을 보인다. '스트레스인지율'은 2013년 99.3에서 2014년 100.0에 도달 후 2015년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7.9, 2014년 98.0, 2015년 98.5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4] 전라북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안전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12.6p 높은 77.8이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17.2p 높은 82.4로 해당 지표 1위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에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전국평균보다는 8.2p 높지만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4.7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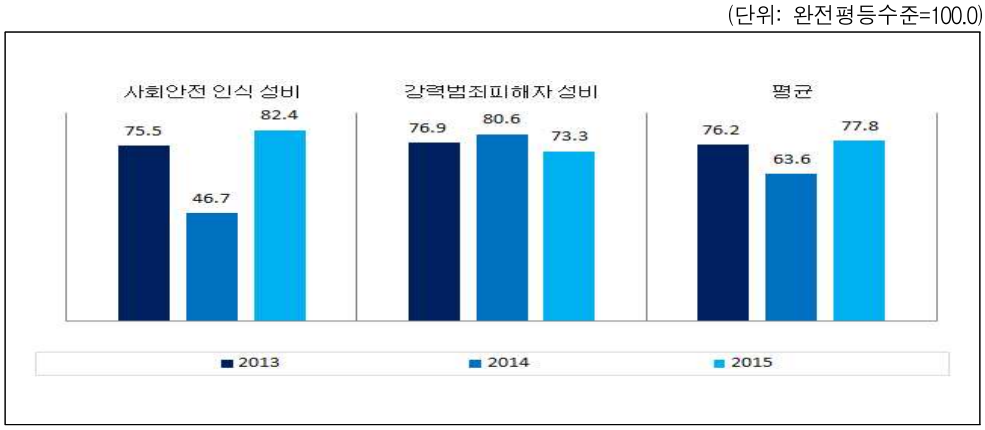
<표 Ⅲ-95> 전라북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전라북도	82.4	73.3	77.8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75.5에서 2014년 46.7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5년 82.4로 크게 개선되어 2013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2013년 76.9에서 2014년 80.6으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73.3으로 다시 감소하여 2013년 수준을 하회하였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6.2에서 2014년 63.6으로 하락 후 2015년 77.8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5] 전라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65.8로 전국평균보다 2.9p 낮은 수준이다.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p,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9p, '육아휴직자 성비'는 6.7p 낮지만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가 전국 평균과 동일한 94.5로 나타났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7.5p,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5.5p,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8.2p, '육아휴직자 성비'는 32.8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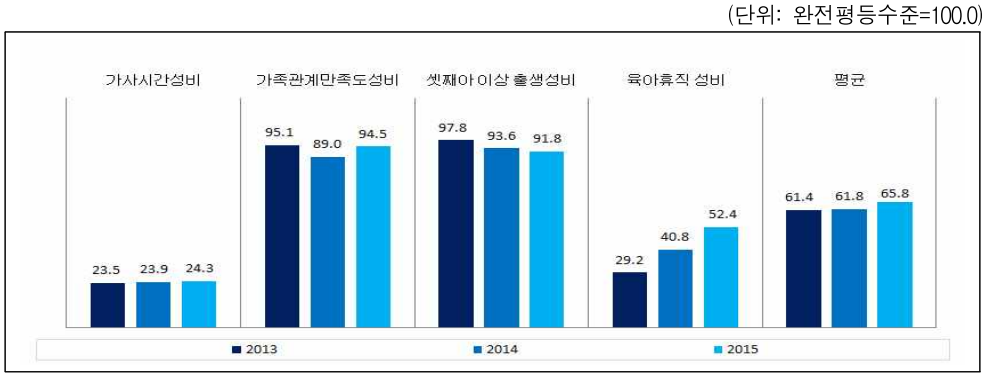
<표 Ⅲ-96> 전라북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전라북도	24.3	94.5	91.8	52.4	65.8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23.5에서 2015년 24.3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5.1에서 2015년 94.5로 소폭 하락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97.8, 2014년 93.6, 2015년 91.8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2012년 29.2에서 2014년 40.8, 2015년 52.4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전라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1.4, 2014년 61.8, 2015년 65.8로 개선추이를 보인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6] 전라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2.2p 낮은 85.5이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3.3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3.7p 낮지만, '여가 만족도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0.4p 높았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는 9.9p, '여가 만족도 성비'는 7.7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8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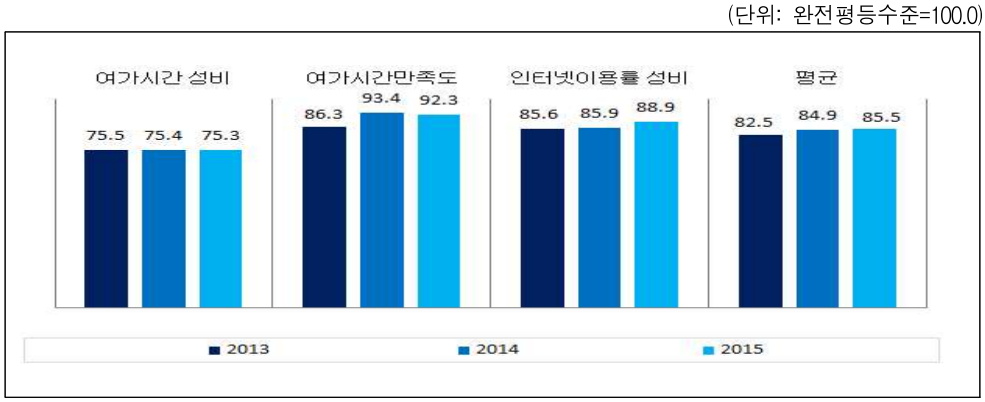
<표 Ⅲ-97> 전라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전라북도	75.3	92.3	88.9	85.5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세부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5.5에서 2015년 75.3으로 0.2p 하락하였고,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86.3에서 2015년 92.3으로 6.0p 상승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3년 85.6, 2015년 88.9로 3.3p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2.5, 2014년 84.9, 2015년 85.5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7] 전라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13)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66.2로 전국평균보다 4.3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6p 높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8.4p,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7.3p 낮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6.8p, '성별 임금격차'는 14.8p,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15.4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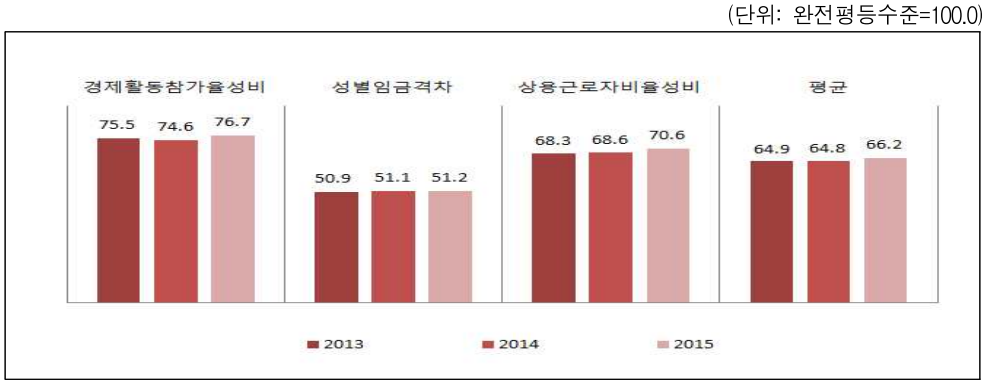
<표 Ⅲ-98> 전라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전라남도	76.7	51.2	70.6	66.2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75.5에서 2015년 76.7로 소폭 상승하였고, '성별 임금격차' 또한 2013년 50.9에서 2015년 51.2로 소폭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도 2013년 68.3, 2015년 70.6으로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전라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4.9, 2014년 64.8, 2015년 66.2로 소폭이지만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8] 전라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0로 전국평균보다 7.4p 낮으며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비교하여 23.3p 낮아 격차가 매우 크다. 세부지표를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9.2p,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8.5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14.0p 낮으나, '관리직 비율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2.2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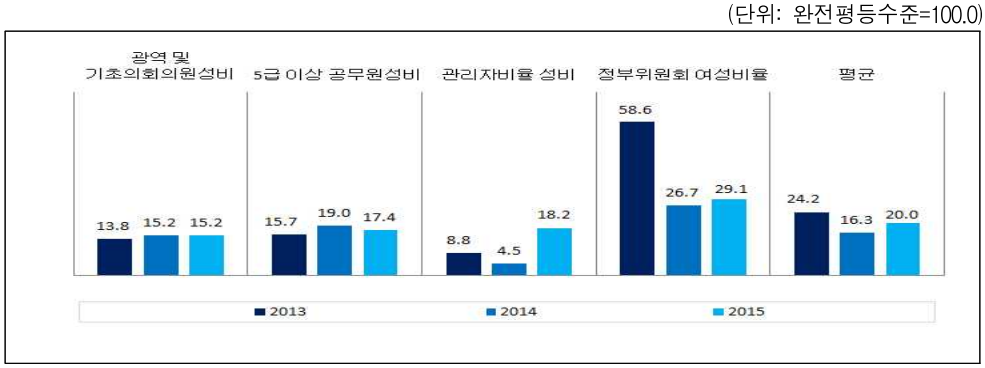
<표 Ⅲ-99> 전라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전라남도	15.2	17.4	18.2	29.1	20.0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13.8에서 2015년 15.2로 소폭 상승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도 2013년 15.7에서 2015년 17.4로 개선되었다. '관리직 비율 성비' 지표는 2013년 8.8에서 2015년 18.2로 큰 폭 개선되었다. 반면,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지표는 2013년 58.6에서 2015년 29.1로 29.5p나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전라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4.2에서 2015년 20.0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09] 전라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88.9로 전국평균보다 5.6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전국평균과 같은 완전 평등수준인데 반해,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전국평균에 비해 11.1p 낮고 해당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에 비해 14.3p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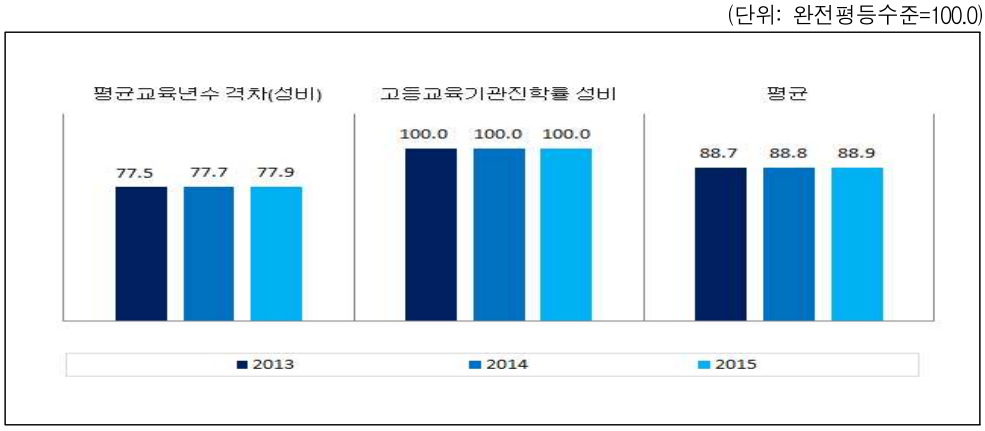
<표 Ⅲ-100> 전라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전라남도	77.9	100.0	88.9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 지표별로 추이를 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2013년 이후 완전평등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2013년 77.5에서 2015년 77.9로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전라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8.7에서 2014년 88.8, 2015년 88.9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0] 전라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에 비해 3.4p 낮은 82.0이며, 복지 분야 1위 지역보다 8.7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2.2p,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16.0p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전국평균보다 4.7p, 해당지표 1위 지역보다 8.4p 낮아 두 개 세부지표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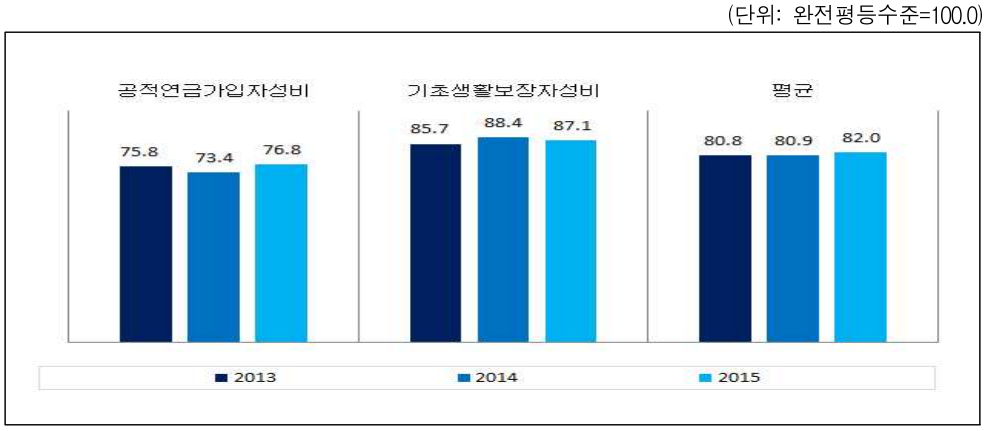
<표 Ⅲ-101> 전라남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전라남도	76.8	87.1	82.0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 지표별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013년 75.8에서 2014년 73.4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76.8로 회복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2013년 85.7에서 2014년 88.4로 상승하였지만 2015년 87.1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러한 지표 변화로 인해 전라남도 복지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0.8에서 2014년 80.9, 2015년 82.0으로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1] 전라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보건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1.2p 낮은 반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와 '스트레스인지율'은 각각 0.7p,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전라남도는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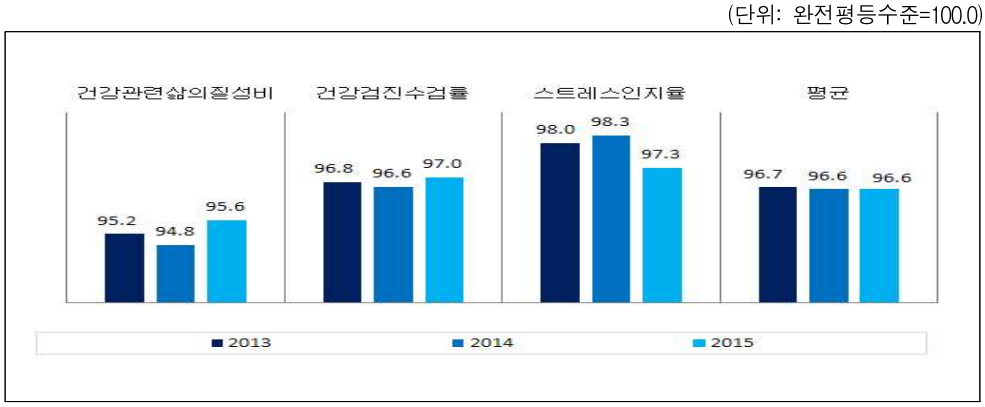
<표 Ⅲ-102> 전라남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전라남도	95.6	97.0	97.3	96.6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 95.2에서 2014년 94.8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5년 95.6으로 회복하였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96.8에서 2014년 96.6으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2015년 97.0으로 상승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 지표는 2013년 98.0에서 2015년 97.3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러한 지표변화로 인해 전라남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6.7, 2014년 96.6, 2015년 96.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2] 전라남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13.2p 높은 78.4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15.8p 높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10.7p 높아 두 개 지표 모두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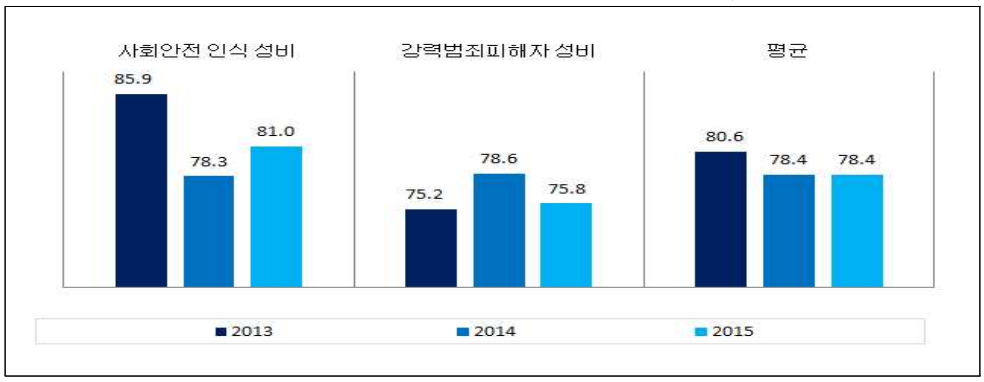
<표 Ⅲ-103> 전라남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전라남도	81.0	75.8	78.4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85.9에서 2014년 78.3으로 하락했다가 2015년 81.0으로 상승하였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75.2에서 2014년 78.6으로 상승했다가 2015년 75.8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 지표의 변화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0.6에서 2014년 78.4로 하락 후 2015년에도 78.4를 유지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3] 전라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3.6p 높은 72.3이다.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3.4p,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5.5p,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8p, '육아휴직자 성비'는 2.9p 격차로 모든 세부지표 값이 높았으며, 특히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완전 성평등한 수준으로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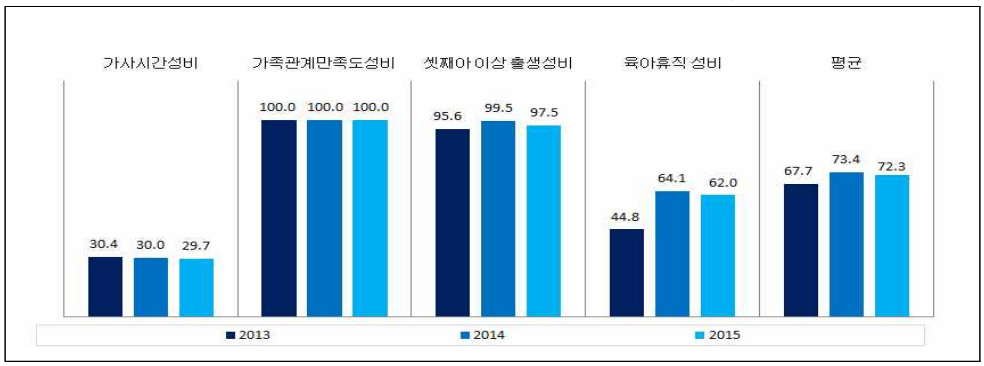
<표 Ⅲ-104> 전라남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전라남도	29.7	100.0	97.5	62.0	72.3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30.4에서 2015년 29.7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95.6에서 2014년 99.5로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015년 97.5이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44.8, 2014년 64.1, 2015년 62.0으로 2년간 17.2p 개선되었다. 이 같은 세부지표의 변화로 인해 전라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7.7에서 2014년 73.4, 2015년 72.3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4] 전라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81.1로 전국평균보다 6.6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 9.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여가시간 성비'는 6.1p, '여가 만족도 성비'는 6.7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7.1p 낮아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완전 성평등한 수준인 해당 지표 1위 지역과 14.8p의 큰 격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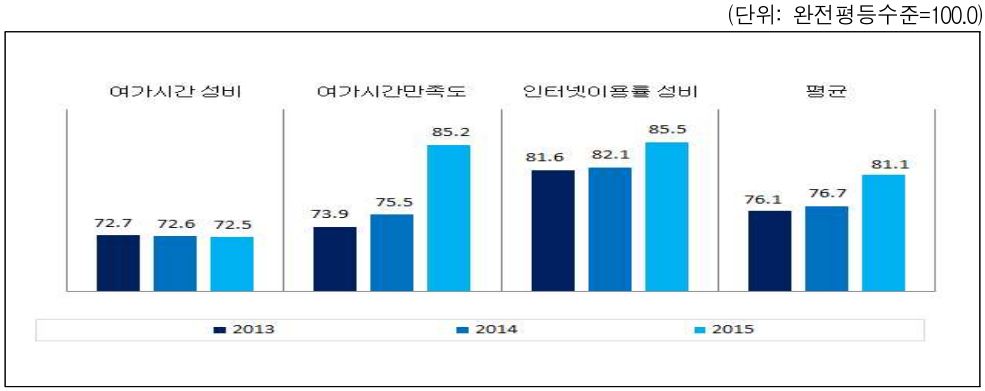
<표 Ⅲ-105> 전라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전라남도	72.5	85.2	85.5	81.1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세부 지표별로 변화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2.7, 2014년 72.6, 2015년 72.5로 정체되어 있다.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73.9, 2014년 75.5에서 2015년 85.2로 크게 개선되었고, '인터넷 이용률 성비'도 2013년 81.6, 2014년 82.1, 2015년 85.5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지표 변화로 인해 전라남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6.1, 2014년 76.7, 2015년 81.1로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5] 전라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14)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68.8로 전국평균보다 1.7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 6.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0.3p 높은데 반해 '성별 임금격차'는 3.4p,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지표는 2.1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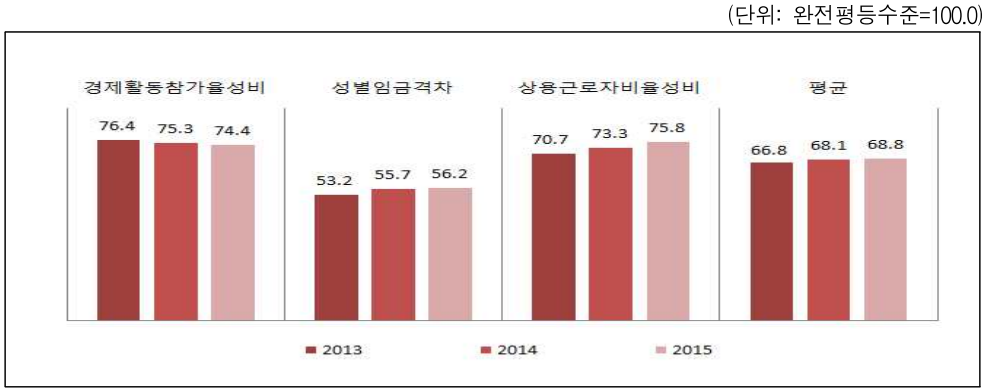
<표 Ⅲ-106> 경상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경상북도	74.4	56.2	75.8	68.8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세부 지표별 증감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76.4에서 2014년 75.3, 2015년 74.4로 하락추세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53.2에서 2014년 55.7, 2015년 56.2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역시 2013년 70.7에서 2014년 73.3, 2015년 75.8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5년 경상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에 비해 2.0p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6] 경상북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17.9로 전국평균보다 9.5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 25.4p 낮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부지표의 값이 전국평균보다 낮으며,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12.1p,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8.4p, '관리직 비율 성비'는 6.7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10.6p 차이로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여도 27p~32p 내외의 큰 격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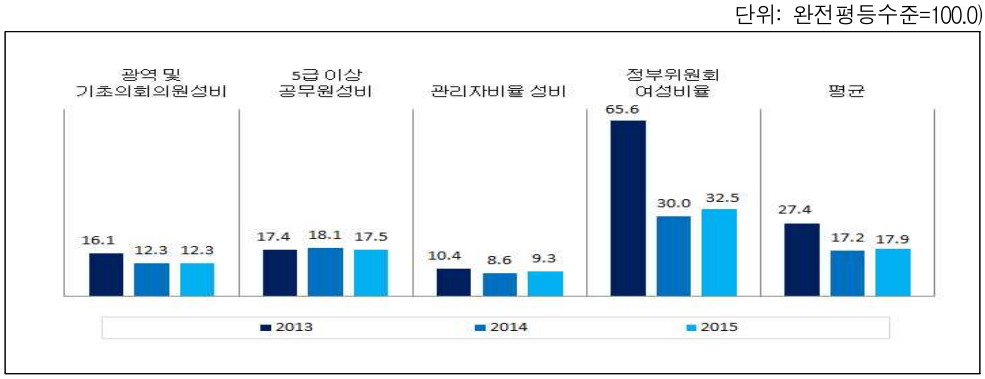
<표 Ⅲ-107> 경상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경상북도	12.3	17.5	9.3	32.5	17.9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16.1에서 2015년 12.3으로 하락하였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3년 17.4, 2015년 17.5로 소폭의 변화를 보인다. '관리직 비율 성비'는 2013년 10.4에서 2015년 9.3으로 하락하였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3년 65.6에서 2015년 32.5로 33.1p 크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7.4에서 2015년 17.9로 큰 폭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7] 경상북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91.0으로 비교적 높지만 전국평균보다도 낮고 해당 분야 1위 지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과 같은 완전평등 수준이지만,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전국평균에 비해 6.9p 낮고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는 10.1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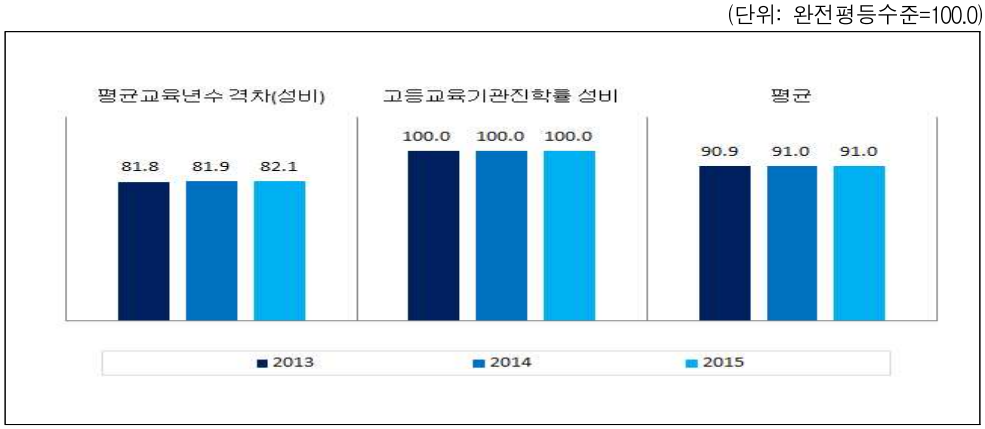
<표 Ⅲ-108> 경상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경상북도	82.1	100.0	91.0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 지표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완전 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2013년 81.8에서 2015년 82.1로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0.9에서 2015년 91.0으로 미미하지만 개선되는 추세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8] 경상북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복지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78.5로 전국평균보다 6.9p 낮고 복지 분야 1위 지역보다 12.2p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모든 세부지표가 낮았으며,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8.9p,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4.9p 격차를 보였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2.7p,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8.6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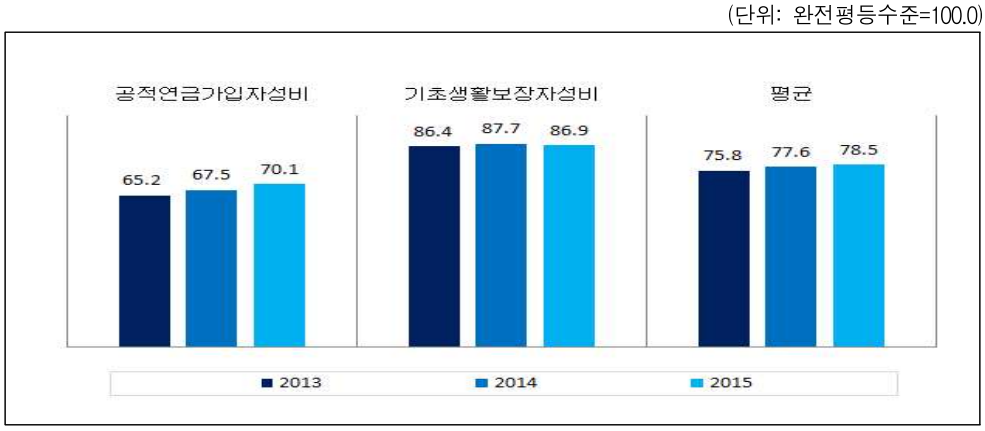
<표 Ⅲ-109> 경상북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경상북도	70.1	86.9	78.5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013년 65.2에서 2014년 67.5, 2015년 70.1로 꾸준히 상승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은 2013년 86.4에서 2014년 87.7로 상승 후 2015년 86.9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5.8, 2014년 77.6, 2015년 78.5로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19] 경상북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경상북도의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는 96.8으로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0.8p 높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0.6p 낮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1p 낮다. 반면, '스트레스인지율'은 100.0으로 완전 성평등한 수준이다. 지표별 1위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1.1p 차이로 비슷했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5.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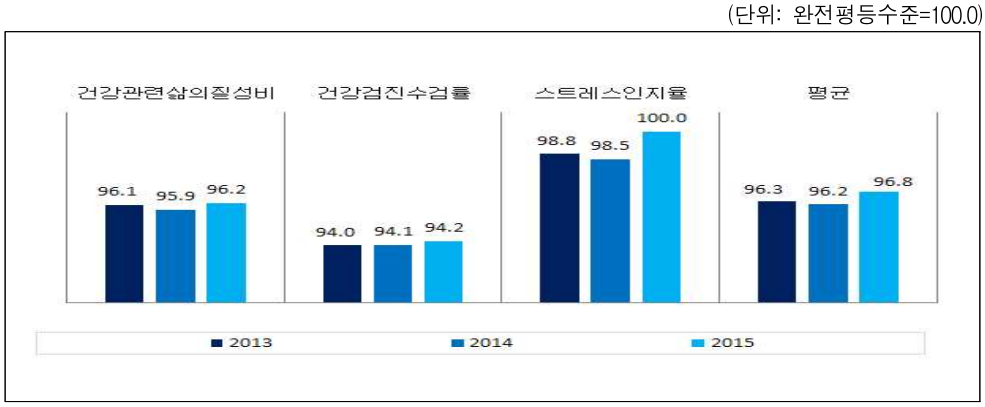
<표 Ⅲ-110> 경상북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경상북도	96.2	94.2	100.0	96.8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3년 96.1에서 2015년 96.2로 개선되었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또한 2013년 94.0에서 2015년 94.2로 상승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은 2013년 98.8에서 2015년 100.0으로 완전 평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세부지표 값의 변화로 경상북도 복지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6.3, 2015년 96.8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0] 경상북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7.1p 높지만 분야 1위 지역보다 6.1p 낮은 72.3이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국평균에 비해 1.4p 높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전국평균보다 12.9p 높아 해당 지표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의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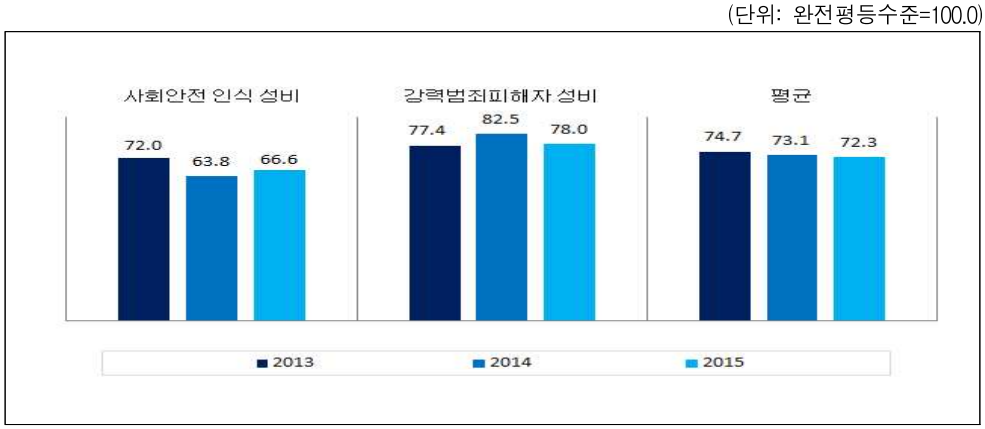
<표 Ⅲ-111> 경상북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경상북도	66.6	78.0	72.3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72.0에서 2015년 66.6으로 하락하였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77.4에서 2014년 82.5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78.0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상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4.7, 2014년 73.1, 2015년 72.3으로 감소하여 성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1] 경상북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3.7으로 전국평균보다 5.0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4p 낮은 반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2p,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3.7p, '육아휴직자 성비'는 16.8p 높았다. 지표별 1위 지역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며, 특히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7.9p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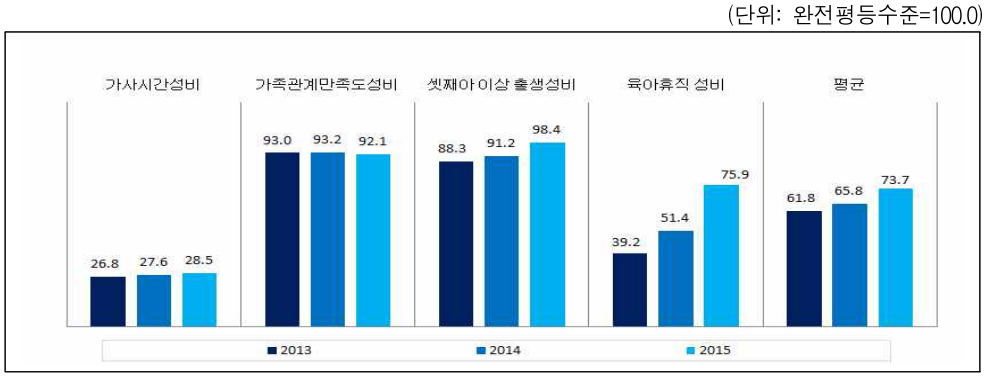
<표 Ⅲ-112> 경상북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경상북도	28.5	92.1	98.4	75.9	73.7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 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26.8에서 2015년 28.5,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88.3에서 2015년 98.4,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39.2에서 2015년 75.9로 세 지표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3.0에서 2015년 92.1로 하락하였다. 특히 '육아휴직자 성비'가 2년간 36.7p 상승하여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1.8에서 2014년 65.8, 2015년 73.7으로 성평등 정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2] 경상북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은 문화·정보 분야에서 경상북도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84.9로 전국평균보다 2.8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 5.9p 낮은 수준이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여가시간 성비'는 1.0p 높고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92.6으로 전국평균과 동일하지만, '여가 만족도 성비'는 9.4p 낮았다. 특히 해당 지표 1위 지역보다 1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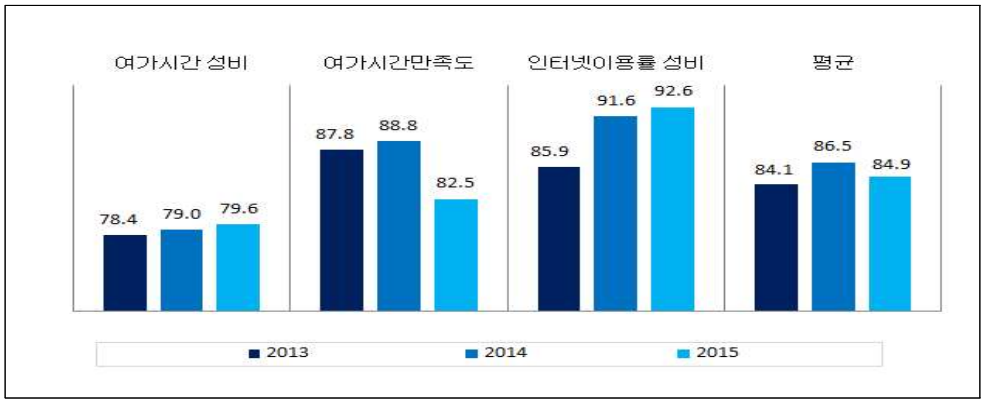
<표 Ⅲ-113> 경상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경상북도	79.6	82.5	92.6	84.9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여가 만족도 성비'를 제외한 세부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8.4에서 2015년 79.6으로,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3년 85.9에 비해 2015년 6.7p 상승한 92.6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87.8에서 2015년 82.5로 5.3p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경상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4.1에서 2014년 86.5로 상승 후 2015년 84.9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3] 경상북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15)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3.3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 8.4p 낮은 67.2로 나타났다. 모든 세부지표 값은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0.6p, '성별 임금격차'는 6.2p,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3.1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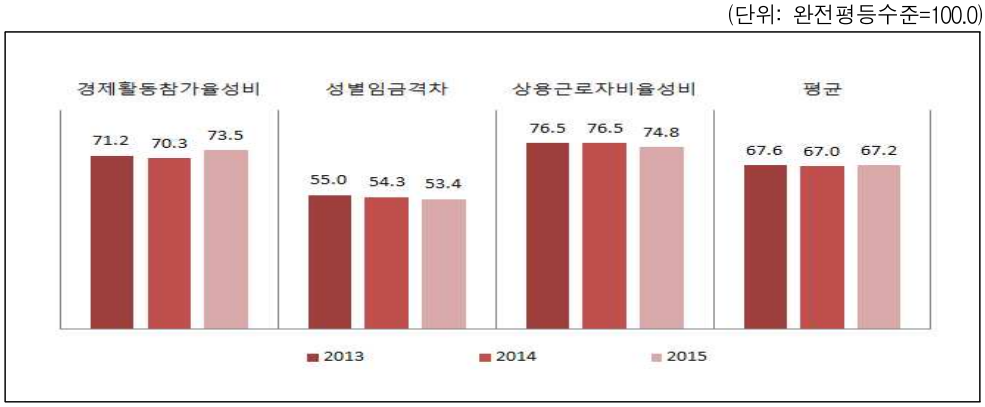
<표 Ⅲ-114> 경상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경상남도	73.5	53.4	74.8	67.2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개별 지표의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71.2에서 2014년 70.3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 73.5로 개선되었다. 반면에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55.0, 2014년 54.3, 2015년 53.4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3년 76.5에서 2015년 74.8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경상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7.6, 2014년 67.0, 2015년 67.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4] 경상남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1.2로 전국평균보다 6.2p, 분야 1위 지역보다 22.1p 낮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5p,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9.6p, '관리직 비율 성비'는 11.1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1.5p 낮아 모든 세부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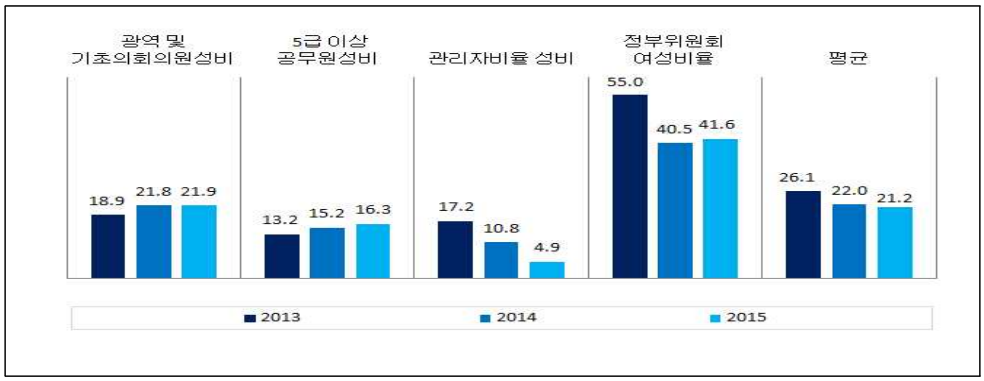
<표 Ⅲ-115> 경상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경상남도	21.9	16.3	4.9	41.6	21.2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지표별 변화를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18.9에서 2015년 21.9로 상승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또한 2013년에 13.2에서 2015년에 16.3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관리직 비율 성비'는 2013년 17.2에서 2015년 4.9로 크게 하락했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도 2013년 55.0에서 2015년 41.6으로 큰 폭 하락했다. 이러한 세부지표의 변화로 인해 경상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6.1, 2014년 22.0, 2015년 21.2로 하락 추세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5] 경상남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2.7으로 전국평균보다 1.8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비교하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에 비해 3.6p 낮고 해당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과 비교하면 6.8p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과 동일한 완전평등 수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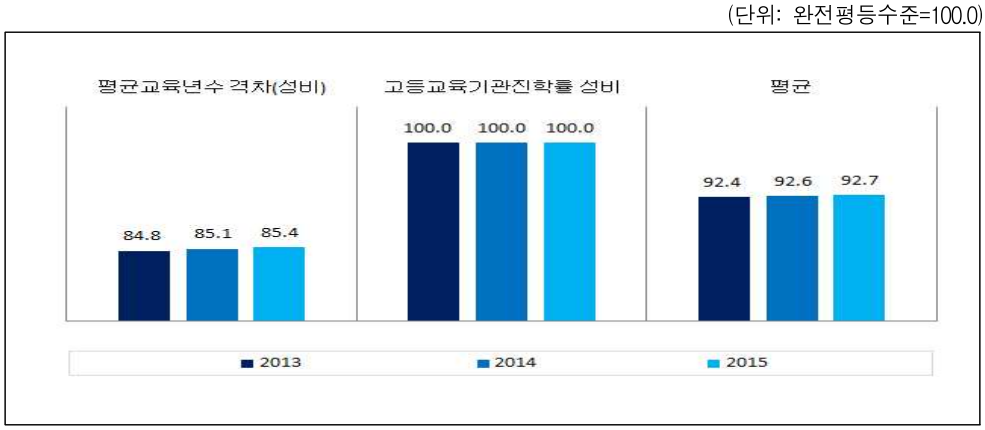
<표 Ⅲ-116> 경상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경상남도	85.4	100.0	92.7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 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는 2013년 84.8에서 2015년에 85.4로 상승하였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2013년 이후 완전 평등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 성비' 지표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2.4에서 2015년 92.7으로 미미하지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6] 경상남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81.1로 전국평균보다 4.3p 낮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9.0p 낮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는 전국평균보다 0.4p 높다. 지표별 1위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2.8p 낮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3.3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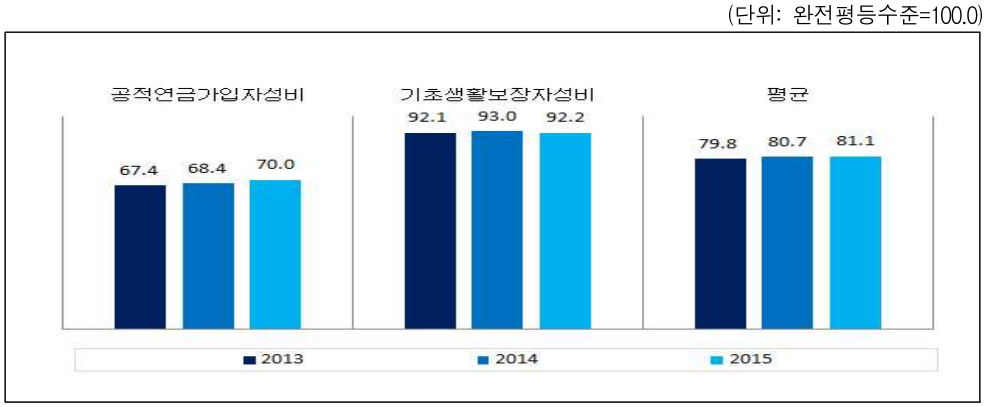
<표 Ⅲ-117> 경상남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경상남도	70.0	92.2	81.1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 지표별 변화추이를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013년 67.4에서 2015년 70.0으로 2.6p 상승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2013년 92.1에서 2015년 92.2로 0.1p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전국평균보다는 낮지만, 2013년 79.8에서 2015년 81.1로 계속 상승함으로써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7] 경상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보건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95.7로 전국평균보다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0.2p 낮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4.3p 낮은 반면, '스트레스인지율'은 3.4p 높다. 지표별 1위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특히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에서 8.0p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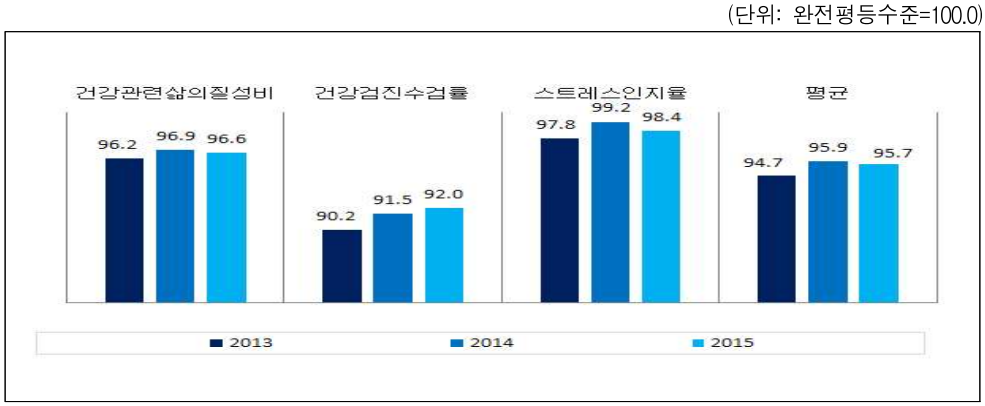
<표 Ⅲ-118> 경상남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경상남도	96.6	92.0	98.4	95.7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 96.2에서 2015년 96.6으로 0.4p 상승하였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또한 2013년 90.2에서 2015년 92.0으로 1.8p 상승하였다. '스트레스인지율'은 2013년 97.8, 2014년 99.2, 2015년 98.4로 상승 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세부 지표의 변화로 인해 경상남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94.7에서 2015년 95.9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95.7로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8] 경상남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전국평균보다 9.5p 높은 74.7이다. 세부 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6.6p,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12.4p 높다. 지표별로 가장 우수한 지역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10.6p 낮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0.5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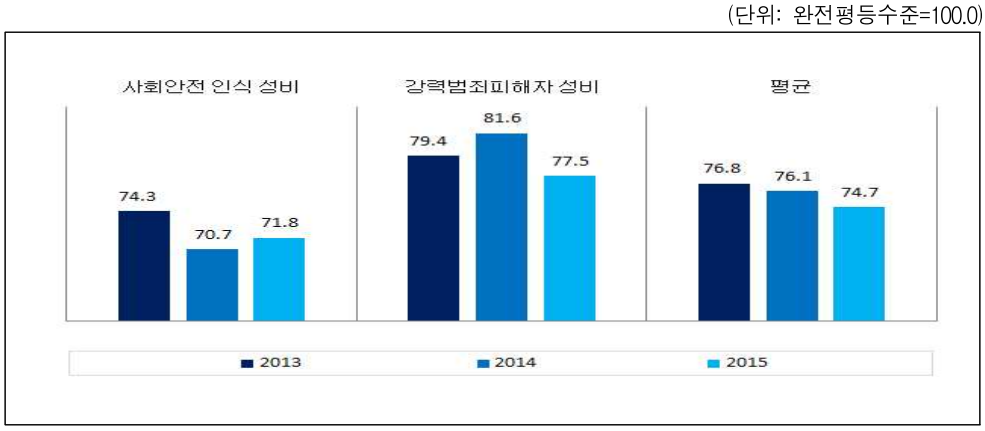
<표 Ⅲ-119> 경상남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경상남도	71.8	77.5	74.7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74.3에서 2015년 71.8로 성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79.4에서 2014년 81.6으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77.5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2015년 경상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은 74.7로 2013년 이래 감소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29] 경상남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가족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66.7으로 전국평균보다 2.0p 낮으며 분야 1위 지역과 10.3p 격차를 보인다. 세부지표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0.2p,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5.0p 높은 반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3.7p, '육아휴직자 성비'는 9.3p 낮다. 특히 '육아휴직자 성비'는 해당 지표 1위 지역과 35.4p의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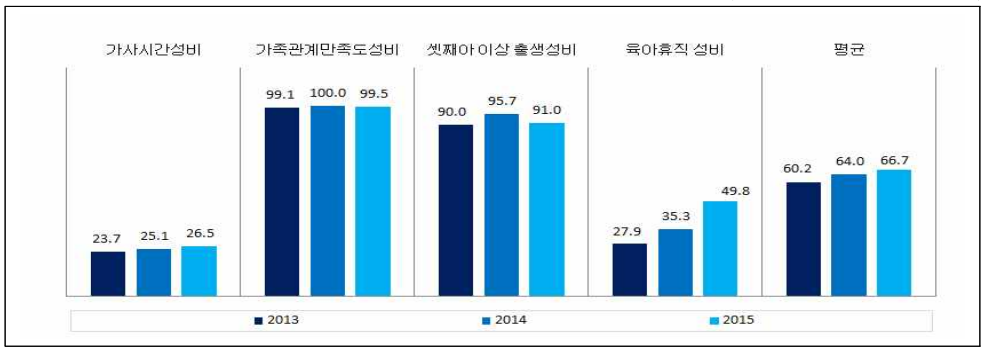
<표 Ⅲ-120> 경상남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경상남도	26.5	99.5	91.0	49.8	66.7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 지표별 변화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미세하지만 상승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9.1에서 크게 개선되어 2014년 완전평등한 수준이 되었으나 2015년 99.5로 하락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90.0에서 2014년 95.7으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91.0으로 하락하였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27.9에서 2014년 35.3, 2015년 49.8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0.2에서 2014년 64.0, 2015년 66.7으로 향상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0] 경상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경상남도의 2015년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수는 87.4로 전국평균보다 0.3p 낮고 문화·정보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보다 3.4p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3.0p,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0.5p 낮다. 반면, '여가 만족도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2.7p 높다. 특히 '여가시간 성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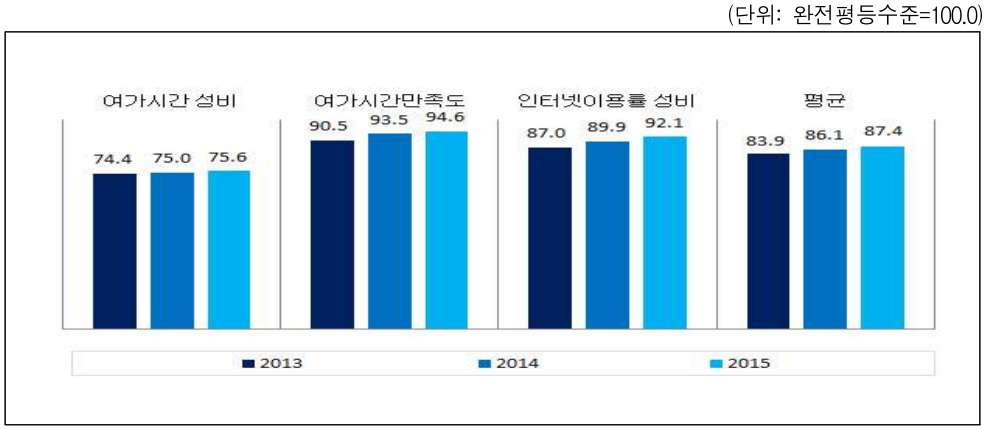
<표 Ⅲ-121> 경상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경상남도	75.6	94.6	92.1	87.4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문화·정보 분야의 모든 세부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가시간 성비'는 2013년 74.4에서 2015년에 75.6으로,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0.5에서 2015년에 94.6으로,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3년 87.0에서 2015년 92.1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로 인해 경상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3.9에서 2014년 86.1, 2015년 87.4로 꾸준히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1] 경상남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전국평균보다 5.1p 높은 75.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전국평균보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0.5p 낮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9.4p, '성별 임금격차'는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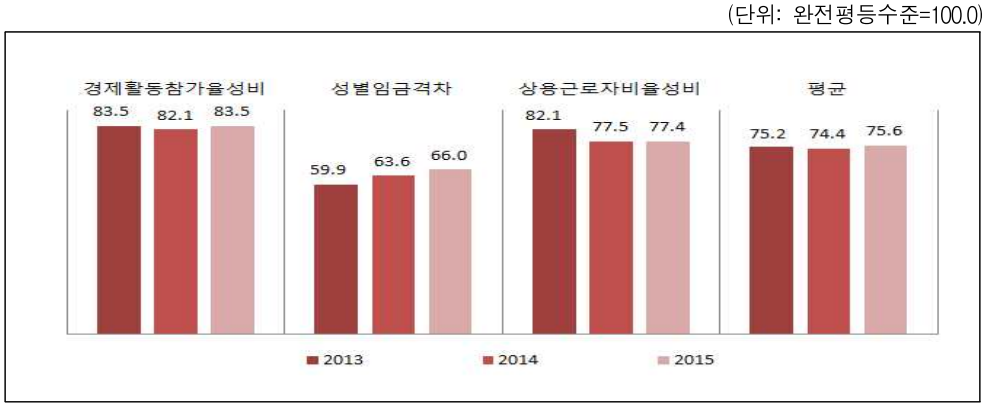
<표 Ⅲ-12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83.5	66.0	77.4	75.6
지표 1위 지역	83.5	66.0	86.0	75.6
전국평균	74.1	59.6	77.9	70.5

세부지표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83.5에서 2014년 82.1으로 하락하였다가 2015년 83.5로 회복되었고,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59.9에서 2015년 66.0으로 상승 추이를 보인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3년 82.1에서 2014년 77.5, 2015년 77.4로 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5.2에서 2014년 74.4로 하락하였다가 2015년 75.6으로 회복하는 모습이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32.5으로 전국평균보다 5.1p 높으나, 분야 1위 지역보다는 10.8p 낮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7.5p, '관리직 비율 성비'는 8.1p,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6.0p 높았으나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1.1p 낮았으며, 해당 지표 1위 지역과의 격차도 18.3p로 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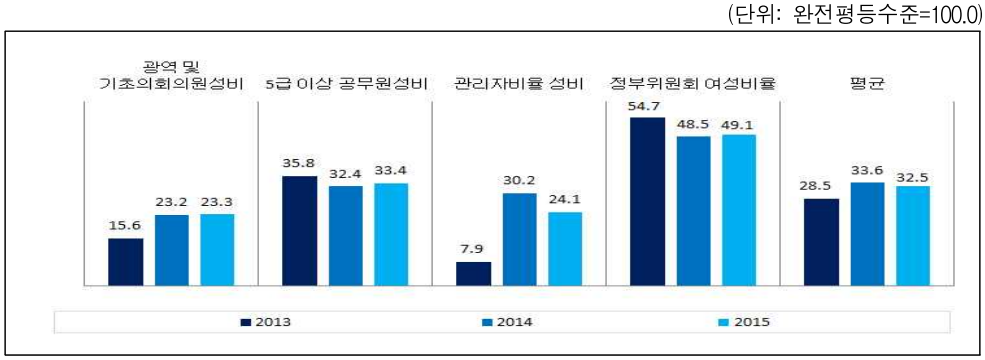
<표 Ⅲ-123> 제주특별자치도 의사결정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23.3	33.4	24.1	49.1	32.5
지표 1위 지역	41.6	45.3	36.9	64.9	43.3
전국평균	24.4	25.9	16.0	43.1	27.4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15.6에서 2015년 23.3으로 큰 개선을 보였으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3년 35.8에서 2014년 32.4로 하락하였다가 2015년 33.4로 상승하였다. '관리직 비율 성비'는 2013년 7.9에서 2014년 30.2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5년 24.1로 감소하였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3년 54.7에서 2015년 49.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28.5에서 2014년 33.6로 개선되었다가 2015년 32.5로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3] 제주특별자치도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92.4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평균보다 2.1p 낮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4.2p 낮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지표는 완전평등 수준이다. 해당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과 비교하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 값이 7.4p 낮아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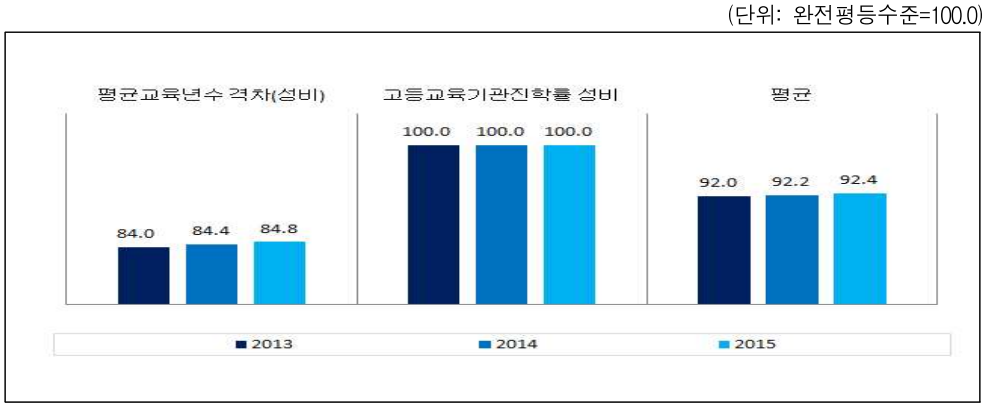
<표 Ⅲ-1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84.8	100.0	92.4
지표 1위 지역	92.2	100.0	96.1
전국평균	89.0	100.0	94.5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평균 교육년수 성비'는 2013년에 84.0에서 2015년에 84.8로 소폭 상승하였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2013년 이후 완전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에 92.0에서 2014년 92.2, 2015년에는 92.4로 소폭이지만 상승추세를 보이며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90.7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평균보다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13.8p 차이로 크게 높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3.1p 낮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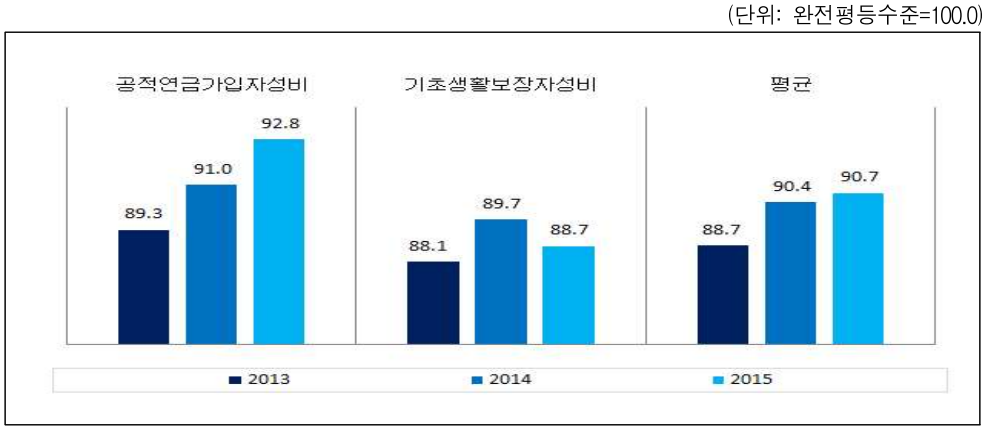
<표 Ⅲ-12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92.8	88.7	90.7
지표 1위 지역	92.8	95.5	90.7
전국평균	79.0	91.8	85.4

세부 지표별 변화를 보면 모든 지표에서 꾸준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인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2013년 89.3에서 2015년 92.8으로 3.5p 증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는 2013년 88.1에서 2014년 89.7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88.7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세부 지표 값의 증가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88.7에서 2014년 90.4, 2015년 90.7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보건 분야의 2015년 성평등 지수 값은 전국평균보다 2.9p 높은 98.9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0.2p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3.7p 높은 100.0으로 완전평등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인지율'은 전국평균보다 4.6p 높고 완전 성평등한 수준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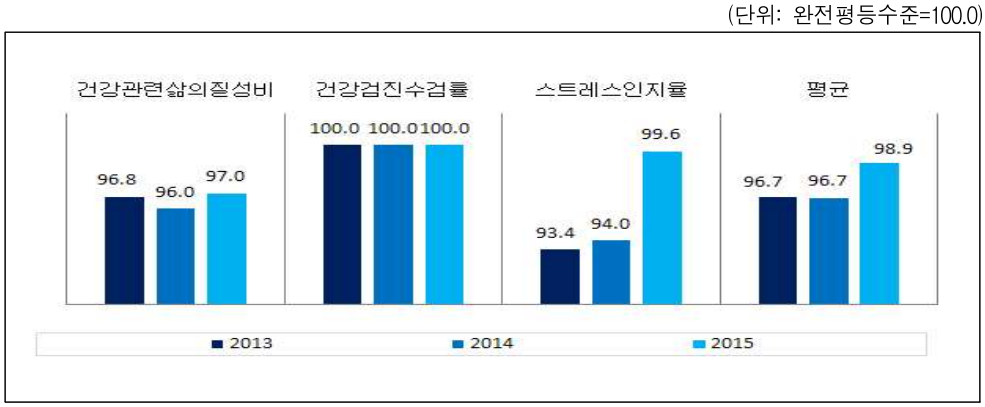
<표 Ⅲ-12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인지율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97.0	100.0	99.6	98.9
지표 1위 지역	97.3	100.0	100.0	98.9
전국평균	96.8	96.3	95.0	96.0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 96.8에서 2015년 97.0으로 상승하였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완전평등수준인 100.0을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스인지율'은 2013년 93.4에서 2015년 99.6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은 2013년 96.7에서 2015년 98.9로 개선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안전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58.1로 전국평균보다 7.1p, 분야 1위 지역보다 20.3p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4.9p,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9.3p 낮으며, 지표별 성평등 수준이 1위인 지역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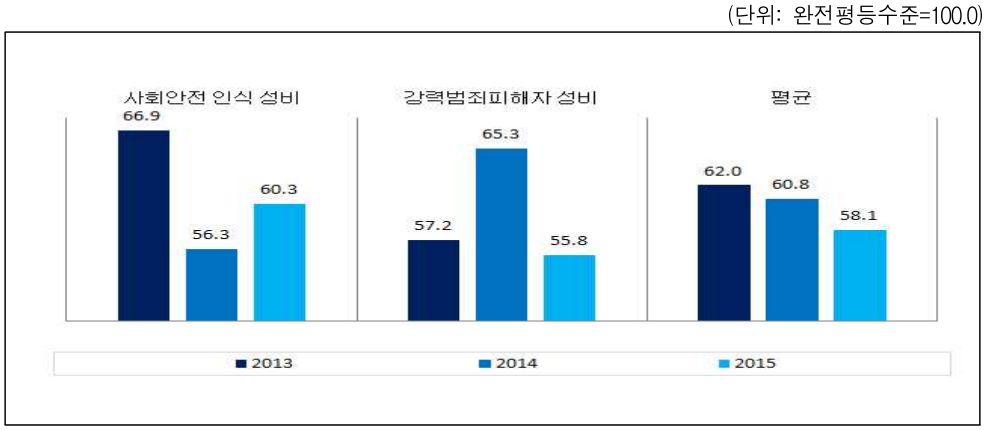
<표 Ⅲ-12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60.3	55.8	58.1
지표 1위 지역	82.4	78.0	78.4
전국평균	65.2	65.1	65.2

세부 지표별 증감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3년 66.9에서 2014년 56.3으로 크게 하락하여, 2015년 60.3으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2013년 수준을 하회한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3년 57.2에서 2014년 65.3으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55.8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세부 지표 값의 변화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2.0에서 2013년 60.8, 2014년 58.1로 하락하며 성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2015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75.0으로 전국평균보다 6.3p 높은 수준이다. 세부지표 값을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8.7p 낮은 반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5.5p,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3p 높고 특히 '육아휴직자 성비'는 전국평균 보다 26.1p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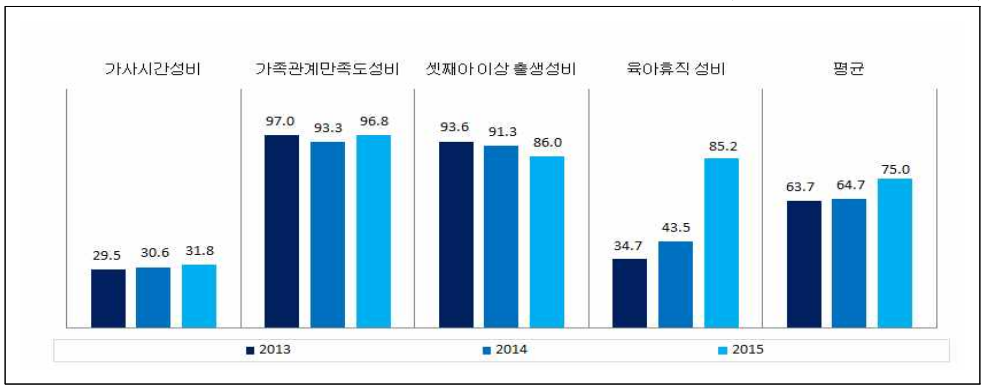
<표 Ⅲ-12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31.8	96.8	86.0	85.2	75.0
지표 1위 지역	31.8	100.0	100.0	85.2	77.0
전국평균	26.3	94.5	94.7	59.1	68.7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3년 29.5에서 2015년 31.8으로 개선되었으나,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3년 97.0에서 2015년 96.8로 소폭 하락하였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3년 93.6에서 2014년 91.3, 2015년 86.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34.7에서 2015년 85.2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세부 지표의 증감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3.7에서 2014년 64.7으로 상승하였고 2015년 75.0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문화·정보 분야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전국평균보다 3.0p 낮고 분야 1위 지역보다 6.1p 낮은 84.7이다. 전국평균 이하인 지표는 '여가시간 성비'와 '여가 만족도 성비'로 각각 1.5p, 8.2p 낮았다. 반면,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전국평균보다 0.5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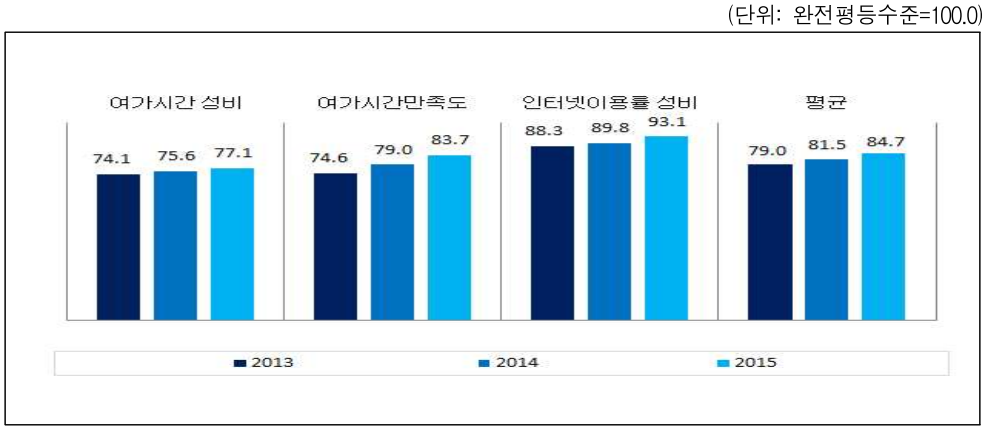
<표 Ⅲ-1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보 분야의 세부지표 비교(2015년 기준)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구분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평균점수
제주특별자치도	77.1	83.7	93.1	84.7
지표 1위 지역	85.2	100.0	98.7	90.8
전국평균	78.6	91.9	92.6	87.7

세부 지표별 변화를 보면 세 지표 모두 개선추이를 보인다. '여가시간 성비' 값은 2013년 74.1, 2014년 75.6, 2015년 77.1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74.6에서 2014년 79.0, 2015년 83.7까지 개선되었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 또한 2013년 88.3에서 2014년 89.8, 2015년 93.1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세부 지표의 추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79.0에서 2014년 81.5, 2015년 84.7로 꾸준히 개선되었다.

(단위: 완전평등수준=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13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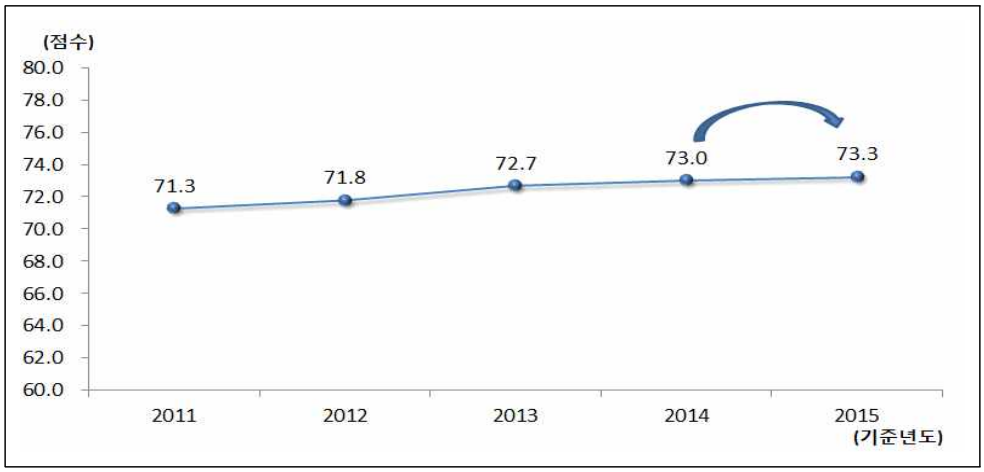
지역별 정책과제와 성평등지수의 관리방안

1. 지역별 성평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79
2. 지역성평등지수와 지역양성평등정책 연계 247
3.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 278

1. 지역별 성평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가.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특징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3개 영역 17개 지표로 개발되었지만, 2014년 이후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를 연계하여 산정하고 있다.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를 추가했고, 이들 지표는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도 반영되어 새로 산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지역 성평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작성 때와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종합점수(통계생산년도 기준)는 2011년 71.3점에서 2012년 71.8점, 2013년 72.7점, 2014년 73.0점, 2015년 73.3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상승 폭은 전년대비 2012년 0.5p, 2013년 0.9p로 비교적 높았으나, 2014년 0.3p, 2015년 0.3p로 상승폭이 소폭 하락한 후 정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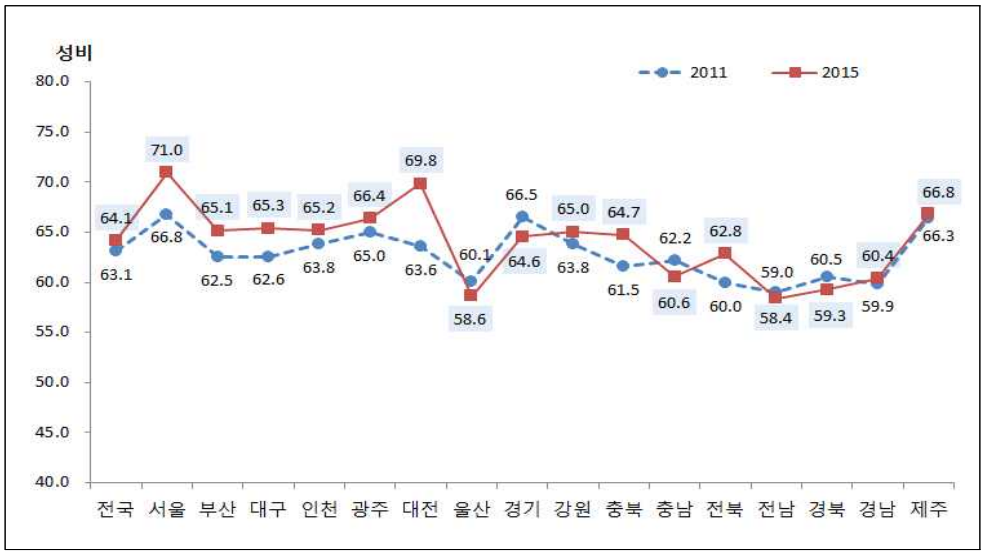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Ⅳ-1] 지역성평등지수 추이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71.0로 가장 높았고 대전광역시(69.8), 제주특별자치도(66.8), 광주광역시(6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전라남도(58.4), 울산광역시(58.6), 경상북도(59.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한편 2015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하여 개선 정도가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6.2p 상승했고 서울특별시(4.2p), 충청북도(3.2p), 전라북도(2.8p) 등에서 높은 개선정도를 보인 반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는 동기간 각각 0.6p, 1.2p, 1.5p, 1.6p, 1.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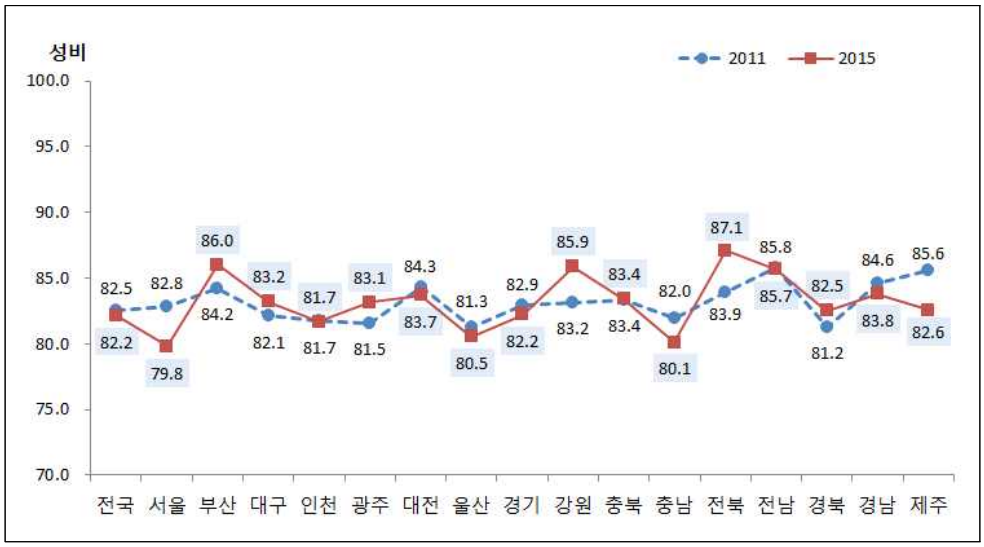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Ⅳ-2] 지역별 성평등한 사회참여 수준 변화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2015년 기준 이 영역의 평균 성평등 지수는 82.2이고 지역별로 전라북도가 87.1로 가장 높다. 이외 부산광역시(86.0), 강원도(85.9), 전라남도(85.7), 경상남도(83.8)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과 비교하여 이 영역의 성평등 개선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지역별로 동기간 전라북도가 3.2p의 상승을 보여 가장 높았고 강원도(2.7p), 부산광역시(1.8p), 광주광역시(1.6p)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 수준을 보였다. 반면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절반이 넘는 시·도 지역에서 동기간 성평등 수준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는 2011년 대비 3.0p 하락하였는데, 이는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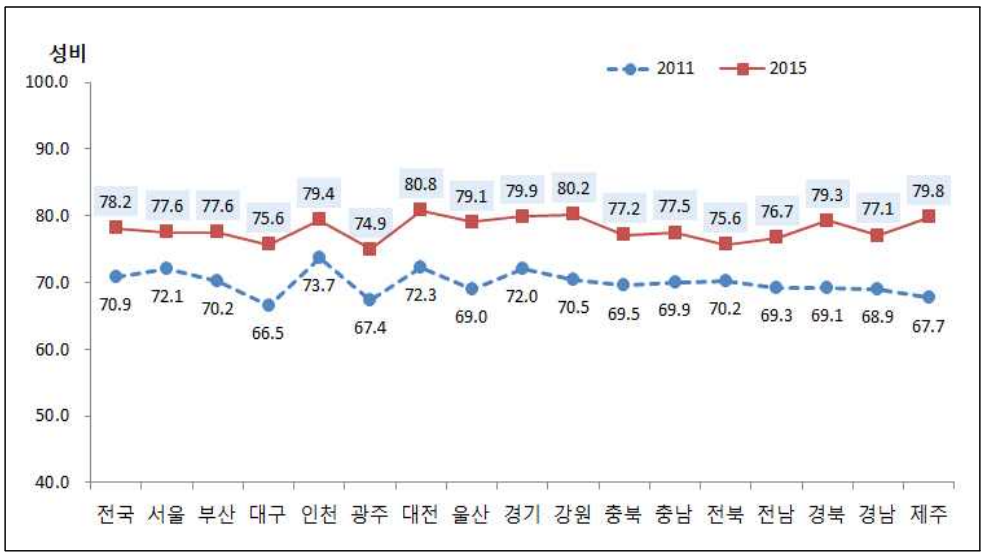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Ⅳ-3] 지역별 여성의 인권·복지 수준 변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영역과 달리 성평등 의식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여가 만족도로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에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의 2015년 성평등지수는 78.2이고 지역별로 대전광역시가 80.8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80.2), 경기도(79.9), 제주특별자치도(79.8), 인천광역시(79.4), 경상북도(79.3), 울산광역시(79.1)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점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광주광역시(74.9),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75.6), 전라남도(76.7), 경상남도(77.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2011년과 비교하여 2015년 성평등 개선 수준을 살펴보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개선 수준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개선을 보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2011년 대비 12.1p 상승하였고 경상북도(10.2p), 울산

광역시(10.1p), 강원도(9.7p), 대구광역시(9.1p) 등에서 9.0p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5.4p), 서울특별시(5.5p), 인천광역시(5.7p)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을 보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Ⅳ-4] 지역별 성평등 의식·문화 수준 변화

2015년 지역별 성평등수준을 8개의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비교해 보면, 먼저 경제활동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5.6으로 가장 높고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등 주로 중부이남 지역이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가 낮은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43.3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100.0을 완전평등상태로 볼 때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90.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로 96.1을 보였고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9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인다.

복지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90.7), 강원도(89.6), 대전광역시(88.8), 서울특별시(88.4)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은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 분야는 모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고 지역별 편차도 크지 않다. 이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등의 지역이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등이 중위권으로 분류되지만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는 거의 없다.

반면 안전 분야는 지역별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전라남도(78.4)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서울특별시(52.4)와의 차이는 26.0p로 매우 크다. 안전 분야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지역은 전라북도(77.8)이고 경상남도(74.7), 부산광역시(74.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Ⅳ-1> 2015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시·도 순위와 점수

(단위: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시도	점수	시도	점수	시도	점수	시도	점수	시도	점수	시도	점수	시도	점수	시도	점수
1	제주	75.65	서울	43.32	경기	96.12	제주	90.73	제주	98.86	전남	78.40	강원	77.03	인천	90.76
2	강원	75.56	대전	42.72	서울	95.96	강원	89.57	서울	98.60	전북	77.85	제주	74.96	대전	90.27
3	충북	73.97	광주	33.18	울산	95.60	대전	88.78	전북	98.46	경남	74.66	경북	73.71	부산	90.14
4	서울	73.59	제주	32.46	부산	95.20	서울	88.44	대전	98.19	부산	74.15	전남	72.27	경기	89.31
5	전북	72.5	인천	31.87	인천	94.84	부산	86.20	광주	98.18	경북	72.27	충남	71.71	경남	87.41
6	대전	71.96	대구	29.89	대구	94.84	광주	86.10	인천	97.81	강원	71.17	대전	71.31	울산	87.07
7	부산	71.81	부산	28.38	대전	94.74	충북	85.54	경기	97.78	대구	68.31	울산	71.05	서울	86.73
8	광주	71.34	경기	27.71	광주	94.66	경기	85.21	부산	97.67	울산	68.03	경기	70.54	대구	86.71
9	대구	71.31	충북	27.22	충북	92.92	전북	84.92	충북	97.62	충북	67.11	충북	68.86	광주	86.19
10	충남	70.71	강원	27.02	경남	92.68	인천	84.28	대구	97.36	광주	65.14	서울	68.42	전북	85.52
11	경기	69.84	전북	24.37	강원	92.44	대구	83.95	강원	96.82	대전	64.18	인천	68.00	충북	85.47
12	경북	68.81	울산	22.89	충남	92.44	전남	81.98	경북	96.82	경기	63.71	경남	66.72	경북	84.88
13	인천	68.80	경남	21.15	제주	92.40	경남	81.08	충남	96.70	인천	62.93	전북	65.75	제주	84.66
14	경남	67.25	전남	19.99	전북	91.60	충남	80.94	전남	96.6	충남	62.67	부산	64.97	강원	83.37
15	전남	66.19	충남	18.53	경북	91.03	울산	79.71	경남	95.66	제주	58.09	대구	64.57	충남	83.25
16	울산	57.41	경북	17.92	전남	88.94	경북	78.51	울산	93.85	서울	52.44	광주	63.64	전남	81.05

가족 분야 또한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다. 지역별로 강원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수는 77.0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가족 분야에서 상위권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서 차지하며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는 하위권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정보 분야의 경우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인천광역시가 90.8로 문화·정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89.0 이상의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 주었다.

나.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특성이 다르며, 이로 인해 성평등 수준도 영역 혹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절은 성평등 수준을 16개 시·도별로 나누어 수준과 순위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각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11년 이래 성평등 상위지역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2011년 이래로 2015년까지 1위를 차지한다.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5년 16개 시·도에서 최하위권으로 구분된다. 이 영역에서 서울특별시는 2011년 10위에서 2012년 9위, 2014년 8위로 상승하였지만, 2015년 16개 시·도에서 16위로 크게 후퇴해 하위권이 되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상위권으로 출발하여 2012년 5위로 하락하였다가 2013년 상위권으로 재진입하였지만, 2014년 5단계 하락해 8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종합해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5년 점수가 크게 하락하여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점수는 매년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순위는 약간 하락하여 중위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Ⅳ-2> 서울특별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6.8	1	82.8	10	72.1	3
2012	67.7	1	83.0	9	72.7	5
2013	69.1	1	82.9	9	74.8	3
2014	70.8	1	83.0	8	76.0	8
2015	71.0	1	79.8	16	77.6	8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2015년 현재 모두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3위에서 2013년 5위까지 하락하지만 2014년 세부 지표가 개선되면서 3위, 2015년 4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 중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가 2011년 2위에서 2015년 7위로 하락하였고 성별 임금격차는 2011년 1위에서 2012년 4위까지 떨어지지만 2014년 2위로 상승해 이를 유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1년 74.6에서 2015년 81.0로 6.4p의 개선되면서 순위가 7위에서 3위로 크게 향상되었다.

의사결정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수준으로 인해 2013년 이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관리직 비율 성비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7.9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의사결정 분야에 속한 지표들의 순위는 비교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관련 지표 2개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분야 1~2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2011년부터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질러 완전평등상태인 100.0을 보이고 있고 평균 교육년수 성비 또한 2011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취약한 이유는 안전

분야 때문으로, 안전 분야에서 서울특별시는 2011년 15위에서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했고 2015년 최하위 순위를 보인다. 점수 또한 2012년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 매년 하락하며, 2015년은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성비의 악화로 인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 안전 분야의 두 지표는 2012년 이래 성평등 점수의 지속적 하락을 보이고 순위 또한 중하위 혹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 분야에 비해 복지와 보건 분야는 상위권이다. 복지 분야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의 경우 중위권 순위를 보이지만 점수가 매우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의 경우 점수와 순위 모두에서 2011년 이래 2~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는 2011년 7위에 2015년 10위로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중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은 관련 지표의 성비가 육아휴직자성비를 제외하고 하락하거나 개선 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매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3년부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전년대비 0.5p 하락하면서 7위로 떨어졌다. 또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4년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 2015년 전년 대비 5단계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성비 점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9위로 전년 순위와 동일했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1~2012년 2위에서 2014년 7위로 하락한 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구성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5년 78.8로 중상위권에 위치했고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까지 2위를 지켜오다 2014년 8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해 중상위권으로 떨어졌고 2015년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4.0p 감소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1~2013년 5, 6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하다 2014년 3위로 순위가 크게 개선되어 상위권으로 진입했으나, 2015년은 성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8위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3> 서울특별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71.1	3	70.8	4	71.5	5	73.0	3	73.6	4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3.5	2	74.0	6	75.2	5	76.0	4	75.6	7
성별 임금격차	65.2	1	62.2	4	62.5	3	63.4	2	64.2	2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4.6	7	76.3	6	76.7	7	79.5	5	81.0	3
○의사결정	33.7	3	36.6	2	40.0	1	43.5	1	43.3	1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9.3	3	29.2	3	29.1	3	35.3	3	35.2	3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40.5	1	42.9	1	42.1	1	51.0	1	45.3	1
관리자 비율 성비	14.3	10	19.4	6	22.5	3	24.9	5	27.9	5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0.7	6	55.0	7	66.3	2	62.9	1	64.9	1
○교육·직업훈련	95.6	1	95.7	1	95.8	2	95.9	2	96.0	2
평균 교육년수 성비	91.2	1	91.4	1	91.5	2	91.7	2	91.9	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82.5	3	83.1	2	85.4	4	87.2	4	88.4	4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0.8	9	71.7	8	76.0	9	78.9	8	81.5	8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94.2	3	94.6	3	94.9	3	95.4	3	95.3	2
○보건	98.5	2	98.2	4	98.1	2	98.5	1	98.6	2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8	7	97.0	6	96.6	9	96.9	4	96.9	7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8.8	3	98.9	2	98.4	3	98.6	2	99.0	2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98.6	9	99.2	8	100.0	1	99.9	9
○안전	67.4	15	67.8	14	65.2	14	63.2	14	52.4	16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6.7	9	64.6	11	62.4	13	59.2	10	58.8	15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8.2	15	71.0	15	68.0	14	67.3	14	46.1	16
○가족	58.3	7	58.6	11	61.0	9	64.1	10	68.4	10
가사노동시간 성비	23.1	11	23.5	12	23.9	13	24.4	14	24.8	14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4.5	5	91.4	13	93.9	10	96.4	6	95.9	7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0.9	10	92.5	9	92.9	8	91.1	13	96.0	8
육아휴직자 성비	24.6	7	27.2	10	33.2	8	44.6	9	57.0	9
○문화·정보	85.9	2	86.7	2	88.6	4	87.8	7	86.7	7
여가시간 성비	76.3	8	76.9	8	77.5	7	78.1	8	78.8	8
여가 만족도 성비	93.9	2	95.3	2	96.5	2	92.6	8	88.6	7
인터넷 이용률 성비	87.5	5	88.0	5	91.7	6	92.7	3	92.8	8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요약해보면, 서울특별시는 종합점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는 성평등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화·정보 분야는 중상위권, 가족은 중하위권, 안전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안전 분야는 2012년 이후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격차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안전의식의 성비 또한 악화되면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순위로 하락한다. 가족 분야의 경우 성비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정도로 인해 순위 개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4> 서울특별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의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 유지 -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안정적이고 높은 편임. - 의사결정 분야의 수준 개선은 비교적 빠른 편이나, 2015년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낮아짐 - 단, 구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 특히 지표 중 관리직 비율 성비는 매년 높은 개선을 보이나 여전히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와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 악화로 하위권에 위치 -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흉악범)의 여성 피해자 증가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으로 인해 큰 폭으로 수준이 하락함.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현행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 단, 공적연금가입자 지표 개선이 정책되어 있음. -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행 정책의 꾸준한 집행과 점검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문화·정보는 중상위권이고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 가족분야는 최근 성평등 개선 정도가 높으나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개선되지 않아 2015년 중하위권에 위치. 가사노동시간과 가족관계만족도 개선 등 전반적 가족정책의 점검과 관련 정책의 홍보가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현행정책의 꾸준한 집행과 점검 유지. 단, 여가 만족도 성비가 2013년 이래 하락 추이를 보임. 여가만족도의 성비 하락 원인을 검토할 필요 있음.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경우 종합순위는 2011~2012년 성평등 중상위권을 유지하다 2013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상위권으로 진입한다. 2015년은 전년대비 성평등 개선이 있으나 순위는 한 계단 떨어져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로 보면 2015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이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 변화 추이를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2011~2013년 8~10위를 유지하며 중상위권과 중하위권을 넘나들었지만 2014년부터 점수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중상위권에 진입하고 2015년 7위에 상승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1년 중상위권에서 2012년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이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7위로 중상위권이었지만 이후 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2~2015년 순위는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Ⅳ-5> 부산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2.5	9	84.2	5	70.2	7
2012	63.2	8	85.0	2	70.7	10
2013	63.3	10	84.9	4	73.0	10
2014	64.3	8	86.4	2	75.8	9
2015	65.1	7	86.0	2	77.6	9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7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했으나, 2012년은 10위, 2013년은 11위로 2년 연속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4년은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지표가 개선되어 10위로 다시 상승, 2015년은 3순위 더 상승해 중상위권으로 재진입하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1년 이래 점차 떨어져 순위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나, 2014년 비교적

크게 상승하여 이후 중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고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2년 이후 중하위권으로 순위가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1~2014년 중하위권에 머물다가 2015년 비교적 큰 폭의 개선에 힘입어 중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

의사결정 분야는 전반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성평등 중하위권에서 2014년부터는 중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4년 선거에서 여성비율의 상승으로 7위로 진입했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전년과 동일한 7위를 유지했다. 관리직 비율 성비는 의사결정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에도 꾸준히 개선되는 경향을 가지지만 2015년 성비가 악화되면서 전년대비 2순위 하락한 11위가 되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지표 2개는 성비 개선이 낮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이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성비 개선은 복지 분야이다. 복지 분야는 2011년 79.4(8위)이었으나, 2015년 86.2(5위)로 점수와 순위의 상승이 높았다. 보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순위는 등락이 비교적 큰 편이었으나, 2013년 이래 점수와 순위가 점차 상승하여 2015년은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지표는 2014년 성비 하락으로 중상위권으로 내려오지만 이외 연도에서는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매우 높은 성비를 유지하지만 2015년 순위는 12위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난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1년 이래 중하위권 혹은 하위권으로 구분되었지만, 2015년은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 분야는 지표별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2011년 77.4(3위)에서 2014년 81.7(1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2015년도 상위권을 유지하나 성비 수준은 전년대비 다소 낮아졌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2011년 74.7점(12위)에서 2015년 67.5(10위)로 순위는 소폭 상승하나 성비 수준은 크게 하락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의 개선과 더불어 순위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2014년까지 점차 개선되지만 2011년 9위에서 2014년 11위로 하락한다. 2015년은 11위를 유지하나 성비는 전년대비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2015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영역이 낮은 원인은 분야별로 볼 때 가족 분야의 낮은 성평등 수준 때문이다. 가족 분야는 높은 육아휴직자 성 격차로 인해 2012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1년 16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했지만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015년 5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또한 2011년 이래 점차 개선되고 있고 2014년부터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육아휴직자 성비는 비교적 높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1년 이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표의 성비 개선에 힘입어 2014년부터 상위권으로 진입한다. 지표별로 보면, 세 개의 세부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가시간 성비의 경우 개선정도가 매우 낮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어 2011년 10위에서 2015년 4위로 상승했다.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보면, 전년대비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향상으로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되었다. 영역별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개선 정도가 낮지만 2014년 이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어 2011년 중상위권에서 2012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2012년 10위에서 2015년 9위로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Ⅳ-6> 부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8.0	7	67.4	10	67.6	11	69.6	10	71.8	7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1.1	9	70.9	9	73.2	9	72.4	11	76.5	6
성별 임금격차	60.6	5	58.6	9	56.6	12	60.4	8	61.3	6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2.2	8	72.7	10	73.0	11	76.1	9	77.6	9
○의사결정	24.7	13	27.2	10	27.2	12	28.1	7	28.4	7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0.2	8	20.1	8	20.1	8	25.2	7	25.2	7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4.1	8	25.2	7	23.2	7	25.3	7	26.9	7
관리자 비율 성비	4.5	16	15.2	10	15.3	9	16.3	9	11.9	11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0.0	9	48.4	15	50.1	14	45.8	4	49.5	3
○교육·직업훈련	94.8	4	94.9	4	95.0	4	95.1	4	95.2	4
평균 교육년수 성비	89.6	4	89.8	4	90.0	4	90.2	4	90.4	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9.4	8	80.0	7	83.6	7	85.4	5	86.2	5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2.6	6	72.9	6	79.2	7	81.5	6	84.5	6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6.2	9	87.0	10	88.0	11	89.2	11	87.9	11
○보건	97.3	12	97.5	7	96.5	13	96.6	11	97.7	8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0	4	97.3	4	97.1	2	96.6	8	97.2	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6.8	9	96.9	8	95.7	10	96.2	10	95.8	12
스트레스인지율	98.1	14	98.2	11	96.8	15	96.9	14	100.0	1
○안전	76.1	5	77.7	6	74.6	6	77.2	3	74.2	4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7.4	3	78.4	5	79.8	2	81.7	1	80.8	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4.7	12	76.9	9	69.4	13	72.6	13	67.5	10
○가족	55.7	13	55.7	16	58.3	16	62.4	14	65.0	14
가사노동시간 성비	20.7	16	22.9	14	25.1	11	27.4	9	29.6	5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4.5	5	91.4	13	93.9	10	96.4	6	95.9	7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8.9	13	89.7	13	92.5	10	94.0	5	97.2	7
육아휴직자 성비	18.6	10	18.9	14	21.7	15	31.8	15	37.2	16
○문화·정보	84.7	4	85.7	6	87.8	6	89.2	4	90.1	3
여가시간 성비	75.4	11	75.7	11	76.0	11	76.3	12	76.6	12
여가 만족도 성비	93.7	3	94.8	3	95.8	4	100.0	1	100.0	1
인터넷 이용률 성비	85.0	10	86.4	9	91.5	8	91.3	9	93.8	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이와 같은 부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통계 부산광역시의 영역별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Ⅳ-7> 부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분야는 점차 상승하여 2015년 중상위권에 진입 함.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비교적 높은 개선으로 점수와 순위 모두 상승함.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까지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 중상위권에 위치함. - 경제활동분야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정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성 격차 개선을 위해 기존 경제정책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점진적 개선으로 인해 2014년 이래 중상위권에 위치함. 하지만 관련 지표 중 세 지표의 성비가 30미만으로 낮으며,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1년 이래 정체 현상을 보임. 의사결정 분야는 정치, 행정, 민간 분야의 전반적 검토와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여성수준을 높여야 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상위권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기존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모니터링 실시
여성의 인권·복지	- 비교적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래 상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개선이 필요. 여성빈곤 제고 정책 추진과 확대 필요 - 보건 분야는 2015년 중상위권에 진입했고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으로 현재의 보건정책과 여성건강정책을 추진 및 점검. - 안전 분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상승으로 2014년 이래 상위권 위치. 하지만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비의 경우 전년 대비 순위는 상승했으나 성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 사회안전인식 성비 또한 점수 하락과 더불어 순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강력범죄피해자 중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의 증가 때문이며, 성폭력(강간+성추행) 피해 감소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는 중하위권 유지. - 가족 분야는 2012년 이래 수준은 향상되나 순위는 하위권 유지. 가족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하는 이유는 매우 낮은 육아휴직자 성비 때문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최하위수준으로 하락함.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가족과 일·가정양립 정책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함.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관련 지표의 수준과 순위 모두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이래 상위권에 진입. 하지만 여가시간 성비는 중하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문화 및 여가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함.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 종합순위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2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진입한 뒤 유지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9위에서 2014년 5위로 상승해, 2015년까지 유지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또한 2014년부터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는 2011년 하위권에서 2013년 중상위권에 진입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5년 다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표 Ⅳ-8> 대구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2.6	8	82.1	11	66.5	16
2012	62.7	9	82.4	12	69.7	14
2013	63.3	9	82.6	10	73.7	6
2014	64.9	5	83.3	7	75.5	10
2015	65.3	5	83.2	8	75.6	1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중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분야별로 경제활동 분야는 2012년을 제외한 연도에서는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순위는 2011년 4위에서 2012년 2위로 상승하나 2015년은 14위로 추락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1년 6위에서 성비 하락으로 2014년 11위까지 떨어지나, 2015년 성비 상승과 더불어 7위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1년 13위에서 2015년 4위로 크게 상승한다.

의사결정 분야에서 대구광역시는 2013년까지 하위권 혹은 중하위권을 유지하다가 2014년 관리자 비율 성비의 높은 개선으로 중상위권으로 분류되어 2015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조금씩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나, 2014년 이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해(각각 2.2p, 1.6p), 의사결정 분야의 순위는 동일하지만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1년 이래 중상위권 수준을 보이는 분야로, 관련 지표 2개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2011년 이래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에 비해 높아 완전평등상태인 100.0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안전 분야는 성평등 수준 악화로 2014년까지 중하위권으로 분류되다가 2015년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개선에 힘입어 중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구성 지표 중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2015년 전년대비 크게 악화되어 안전 영역 성평등 수준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4년 대비 9.1p 크게 상승해 9위에서 5위로 순위가 상승된다.

보건 분야는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2015년 순위는 전년대비 수준 감소로 인해 10위로 크게 추락한다. 지표별로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3년부터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높은 성비 수준을 보임에도 2015년 14위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복지 분야는 2011년 77.3에서 2015년 84.0으로 비교적 높은 성평등 개선을 보였으나, 순위는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점차 개선되어 2015년 83.6으로 16개 시·도 중 7위를 보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수준 개선에도 여성 빈곤의 규모와 상대적으로 큰 성 격차로 인해 2011년 이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복지 분야는 비교적 높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2011년 10위에서 2015년 11위로 순위의 변화는 크지 않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3년 높은 성평등 개선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한 적도 있으나 2015년 14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의 경우 2011년 52.3에서 2015년 64.6로 12.3p의 높은 수준 상승을 보이지만, 순위 상승은 16위에서 15위로 낮다. 가족 영역의 지표는 가사노동시간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에서 전년대비 개선되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전년대비 비교적 크게 하락함으로써, 성평등 순위를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성평등 수준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이는 육아휴직자 성비의 높은 상승에 기인한다.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4년 34.0에서 2015년 41.4로 7.4p 높아졌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2년 8위로 중상위권에 진입한 이후 이를 2015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2011년 이래 여가시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의 수준 개선으로 인해 2014년까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어 왔으나, 2015년 여가만족도 성비의 하락으로 인해 성평등 수준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순위는 모두 상승하여 2015년 기준 여기사간 성비는 9위, 여가만족도 성비는 8위,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위를 보이고 있다.

<표 Ⅳ-9> 대구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7.5	9	68.3	8	67.7	10	69.7	9	71.3	9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3.1	4	76.8	2	73.6	8	74.7	6	73.2	14
성별 임금격차	60.4	6	55.7	12	58.9	11	58.7	11	61.2	7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69.1	13	72.4	11	70.5	13	75.7	11	79.6	4
○의사결정	25.7	10	25.3	13	27.5	10	30.4	6	29.9	6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7.7	4	27.7	4	27.8	4	30.2	5	30.3	5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1.0	3	33.9	2	32.1	4	33.1	4	30.9	4
관리자 비율 성비	16.7	8	5.7	16	6.8	15	18.9	7	17.3	9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27.6	16	34.0	16	43.2	16	39.4	10	41.1	10
○교육·직업훈련	94.5	6	94.6	6	94.6	6	94.7	6	94.8	5
평균 교육년수 성비	88.9	6	89.1	6	89.3	6	89.5	6	89.7	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7.3	10	78.5	10	82.5	9	83.2	11	84.0	11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2.5	7	73.3	5	80.4	6	80.6	7	83.6	7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2.1	14	83.7	13	84.6	14	85.8	14	84.3	14
○보건	97.4	9	98.2	3	97.7	5	98.0	4	97.4	10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9	5	96.7	10	96.9	3	97.0	3	97.3	2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3	8	97.8	4	97.1	8	97.5	6	97.4	6
스트레스인지율	98.1	13	100.0	1	99.0	9	99.5	9	97.4	14
○안전	71.6	10	70.6	10	67.7	11	68.8	9	68.3	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3.4	15	65.6	10	63.6	10	60.6	9	69.7	5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9.8	5	75.5	12	71.8	12	77.1	7	67.0	11
○가족	52.3	16	56.1	15	60.4	10	63.4	12	64.6	15
가사노동시간 성비	21.7	14	23.7	11	25.7	8	27.8	7	30.0	3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89.8	16	88.4	16	90.4	16	92.5	15	92.7	14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79.7	16	93.1	7	99.2	1	99.5	2	94.2	10
육아휴직자 성비	18.0	11	19.0	13	26.4	12	34.0	14	41.4	14
○문화·정보	80.6	11	83.3	8	87.1	8	87.5	8	86.7	8
여가시간 성비	73.7	13	74.7	13	75.8	12	76.9	10	78.1	9
여가 만족도 성비	82.0	11	88.4	9	93.8	7	89.8	10	86.1	8
인터넷 이용률 성비	86.3	8	86.9	8	91.6	7	95.9	2	95.9	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2015년 대구광역시의 종합적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영역별로 보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의 상승을 보이나, 영역별 순위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진입하나,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높은 성평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10> 대구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4년이래 중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9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개선을 견인함.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낮아져 순위가 크게 낮아지며 성별 임금격차는 수준개선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경제활동 분야는 일가족양립 정책과 여성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정책 추진과 진단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은 낮지만 순위는 중상위권에 위치. 관련 지표 중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관리직 비율 성비는 변동이 심한 지표로 경기흐름과 여성 고용 변화에 대한 점검 필요. 또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관련 지표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부터 중하위권 위치 - 복지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매년 개선되지만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격차 개선을 위한 여성빈곤 개선 정책의 확대 추진 필요 -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수준 하락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 위치.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점검 체계 유지 -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소폭 수준 하락을 보였으나 순위는 중상위권으로 진입. 수준 하락 원인은 강력범죄(흉악범) 여성 피해자 증가 때문임.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의 주원인은 성폭력 범죄의 증가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 정책 제고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5년 하위권으로 하락 - 가족 분야는 성평등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서 하위권 하락 육아휴직자 성비의 경우 수준은 개선되나 순위는 하위권이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의 하락이 큼. 일·가족양립 정책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역차원의 정책지원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은 상승하나 중상위권 유지 여가만족도 성비가 2013년 이후 하락 추이를 보임. 성별 여가패턴 분석과 요구도 분석 필요. 문화 혹은 여가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관련 연구와 특성 분석 필요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점진적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는 2012년 이후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는 두 영역에서 중상위권, 한 영역에서 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영역별 변화 추이를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2011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분류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성평등 수준 개선으로 2014년 11위까지 상승했으나, 2015년 성평등 수준 하락과 더불어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최상위 순위를 보이지만 이후 성평등 수준 개선이 정체되면서 2015년은 5위로 하락한 상태이다.

<표 Ⅳ-11> 인천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3.8	6	81.7	13	73.7	1
2012	63.7	7	81.0	15	74.8	2
2013	64.2	8	81.9	14	74.5	4
2014	64.6	6	82.5	11	76.7	5
2015	65.2	6	81.7	13	79.4	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에 관련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인천광역시를 분야별로 보면, 2015년 기준 경제활동 분야는 하위권, 의사결정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가 2011년부터 수준이 점차 개선되어, 2014년 중상위권에 진입하였으나 2015년 성평등 수준의 소폭 감소로 인해 중하위권으로 다시 하락한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1년 이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중상위권에서 2014년 비교적 크게 하락하여 중하위권으로 떨어진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011년 28.1에서 2013년 25.6으로 하락 후 2015년 27.7로 다시 소폭 상승하지만 순위의 변동은 2011년 이래 중상위권을 유지

하고 있다.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1년 이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의사결정 영역의 성평등 개선의 주원인이 되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구성 지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순위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 악화로 2011년 하위권으로 밀려나서 2013년까지 벗어나지 못했다. 2014년 관련지표의 성비 상승으로 중하위권으로 진입하지만 2015년 성평등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안전 분야는 2014년 중하위권에 위치한 적도 있지만, 이외 연도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2011년 이후 격차의 완화되면서 순위도 11위까지 상승했으나, 2015년 큰 폭의 성비 하락으로 14위로 하락한다. 이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4년까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5년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비가 비교적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 분야는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12년 이래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2014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나 중상위권에 대부분 위치했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완전평등 상태로 1위를 보인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중하위권에 위치하나 수준은 매우 높다.

복지 분야는 2011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분야 지표 중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높은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상위권에서 2013년 이래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2013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2014년부터 가족 분야 하락으로 중상위권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가족 분야는 2011년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13년 성평등 수준의 하락한 이후 2014년 하위권이 되었다가 2015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했다. 2015년은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와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으로 인해 다시 중하위권으로 진입한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수준 개선이 정체되면서 중상위권에서 2013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며,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5년 전년대비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이래 성비 개선이 비교적 높으나 순위는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표 Ⅳ-12> 인천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6.0	13	66.0	13	66.9	13	68.5	12	68.8	13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0.1	11	72.1	8	72.3	10	73.6	8	73.3	12
성별 임금격차	61.3	3	59.6	8	59.6	8	60.0	9	60.4	10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66.6	14	66.3	15	68.9	14	71.8	14	72.7	14
○의사결정	30.6	5	30.3	7	31.0	5	30.6	5	31.9	5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6.9	7	26.9	7	26.8	7	21.9	9	21.8	10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8.1	6	27.5	6	25.6	6	28.1	6	27.7	6
관리자 비율 성비	18.2	6	17.6	7	20.9	4	27.8	4	32.0	2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49.3	10	49.3	14	50.6	13	44.6	5	45.9	7
○교육·직업훈련	94.7	5	94.8	5	94.8	5	94.8	5	94.8	5
평균 교육년수 성비	89.5	5	89.5	5	89.6	5	89.6	5	89.7	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8.3	9	78.9	9	81.9	11	83.8	10	84.3	10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65.9	12	66.6	10	71.8	11	75.2	10	78.1	10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90.7	4	91.3	4	92.0	5	92.5	5	90.4	7
○보건	97.3	10	97.5	8	97.2	7	96.7	8	97.8	6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6	8	97.0	7	96.7	8	95.9	12	97.1	5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5.5	13	95.5	12	95.0	11	95.4	12	96.3	10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99.9	5	100.0	1	98.8	11	100.0	1
○안전	69.5	14	66.7	15	66.5	13	66.9	10	62.9	13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6.7	9	60.2	15	59.6	16	59.2	11	64.9	10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2.3	14	73.3	13	73.3	11	74.6	11	61.0	14
○가족	59.6	4	61.8	5	60.3	11	63.1	13	68.0	11
가사노동시간 성비	25.6	6	25.6	7	25.5	9	25.5	11	25.4	12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0	13	95.0	6	95.3	8	95.5	8	96.9	4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2.3	8	93.6	5	94.7	5	92.5	9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28.4	5	33.0	6	25.9	13	38.7	12	49.7	13
○문화·정보	87.9	1	87.9	1	88.7	3	90.4	2	90.8	1
여가시간 성비	76.6	7	77.4	7	78.2	6	79.0	6	79.8	6
여가 만족도 성비	98.4	1	96.9	1	95.6	5	100.0	1	100.0	1
인터넷 이용률 성비	88.6	3	89.3	3	92.2	5	92.2	4	92.5	1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문화·정보 분야는 2011년부터 상위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가시간 성비는 수준 개선이 크지 않으며 2015년 현재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여가 만족도 성비는 2013년 성비 악화로 5위로 하락하지만 이외 연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2015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수준 개선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나, 순위는 2014년 상위권에서 2015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권이지만,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이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한다.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순위를 살펴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 복지,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 경제활동,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분된다. 지표별로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하여 관리직 비율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만족도 성비는 상위 순위를 보인 반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하위 순위를 보이고 있다.

<표 Ⅳ-13> 인천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16개 시·도 중 중상위권 - 경제활동은 하위권으로 수준개선이 적고 순위는 변화 또한 거의 없음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높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임금성비는 개선 속도가 낮아 순위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전년대비 성비 악화로 중하위권으로 하락함. 이에 경제활동 분야는 여성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추진 정책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수준 개선이 낮음.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는 2014년 선거 결과 성평등 수준이 하락했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또한 전년대비 성비가 하락함. 반면 관리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소폭 개선됨. 여성의 정치참여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과 위원회 위원 등에 여성참여 기획 확대 필요 - 교육·직업훈련은 성평등 수준이 높고 순위 또한 5위로 현재 정책의 추진과 점검이 지속될 필요 있음.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16개 시·도 중 하위권 위치 - 복지 분야의 경우 점진적 개선은 보이나 중하위권에 위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제고로 큰 폭의 개선이 있었으나 순위는 중하위권 유지하고 높은수준을 유지했던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또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향후 공적연금 여성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실시. 또한 기초생활보장자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규모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여성가구 정책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순위는 중상위이나,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임. 현행 정책 유지 -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 전년대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개선이 있었으나, 두 지표 모두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지속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 위치 -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3년 이래 높은 개선에도 하위권이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수준 개선이 정체되어 중하위권에 위치. 하지만 가족관계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성비는 수준개선과 더불어 상위권에 위치. 남성 육아휴직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이지만 구성 지표의 성비 개선은 정체 현상을 보임.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 필요.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5년 종합순위로 보면 중상위권으로 구분된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인 반면 여성의 인권·복지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과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부터 성평등 상위권으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성평등 개선의 정체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Ⅳ-14> 광주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5.0	4	81.5	14	67.4	15
2012	66.8	2	80.4	16	69.6	15
2013	67.0	2	81.8	15	71.7	15
2014	68.8	3	81.6	14	71.4	16
2015	66.4	4	83.1	9	74.9	1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에서 광주광역시는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순위 변동이 높은 분야로, 2011년 6위에서 성평등 개선으로 2013년 2위까지 상승하나 이후 2015년까지 수준이 악화되면서 8위로 하락한다. 지표별로 보면 근로 안전성을 측정하는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개선이 지속되었다가 2015년 악화현상을 보인다. 즉, 2011년 70.1(12위)에서 2014년 81.2(2위)로 상승하지만 2015년 77.7(8위)로 하락하고 이는 경제활동 분야의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5년 비교적 큰 폭 상승에 힘입어 중상위권에 진입하며,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나 순위는 변화없다.

의사결정 분야는 관리자 성비 악화로 성평등 수준은 하락하나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한다.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4년 선거 결과 성평등이 크게 개선되어 의사결정 분야의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로 나타난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2~5위 순위를 유지하지만 성비의 변화가 심한 편이며, 2015년은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의 수준 하락을 보인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2년 이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관리자 비율 성비[13]는 2015년 전년대비 하락이 크게 나타나서 중하위권으로 떨어진다.

교육·직업훈련 분야 순위는 중상위권에 있고 점수 변화도 거의 없다. 지표별로 보면,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성비는 여성의 진학률이 더 높아 2011년 이래 100을 보이며,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보이는 가운데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까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5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한다. 광주광역시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전 분야의 낮은 성평등 수준 때문이었으나, 2015년 성비 개선으로 인해 이 영역의 순위를 상승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안전 분야의 두 개 지표 중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는 다소 성비가 악화되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매년 하락하다 2015년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

13) 광주광역시에서 관리자 비율 성비의 변화가 큰 이유는 일부 표본조사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관리자 규모는 지역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제주도,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변동이 심하여, 산정 시 지역별 고용조사로 관리자 규모를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다.

<표 Ⅳ-15> 광주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8.2	6	70.3	5	72.7	2	71.4	5	71.3	8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3.3	3	70.0	11	75.9	3	71.7	12	74.8	8
성별 임금격차	61.2	4	64.8	2	62.8	2	61.4	5	61.5	5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0.1	12	76.1	8	79.6	5	81.2	2	77.7	8
○의사결정	32.6	4	35.6	3	33.7	4	40.5	3	33.2	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31.4	2	31.4	2	31.4	2	41.6	1	41.6	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1.0	2	30.1	5	27.4	5	34.1	3	28.0	5
관리자 비율 성비	18.7	5	27.2	1	16.3	7	43.8	1	16.8	10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49.2	11	53.7	8	59.9	5	42.4	7	46.4	6
○교육·직업훈련	94.3	8	94.4	8	94.5	8	94.6	8	94.7	8
평균 교육년수 성비	88.6	8	88.8	8	88.9	8	89.1	8	89.3	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80.2	6	80.6	6	83.9	5	85.2	6	86.1	6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8.0	2	77.6	3	83.6	5	85.2	5	88.2	4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2.4	12	83.5	14	84.2	15	85.2	15	84.0	15
○보건	98.3	4	98.4	1	98.2	1	98.3	2	98.2	5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0	3	97.6	3	96.8	5	97.1	2	96.4	1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9	6	97.5	5	97.8	4	97.9	4	98.2	5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안전	66.1	16	62.1	16	63.3	15	61.3	15	65.1	10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4.2	12	61.3	13	60.0	15	56.7	13	66.7	7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8.0	16	63.0	16	66.5	15	65.9	15	63.6	13
○가족	57.6	10	58.7	10	58.5	14	58.0	16	63.6	16
가사노동시간 성비	27.0	5	27.5	5	28.0	5	28.5	5	29.0	8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7.0	3	100.0	1	96.3	7	92.8	13	95.5	1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2.7	7	93.7	4	92.3	11	89.2	15	92.8	12
육아휴직자 성비	13.5	15	13.7	16	17.5	16	21.5	16	37.2	15
○문화·정보	77.2	14	80.5	13	84.9	9	84.8	12	86.2	9
여가시간 성비	77.1	5	77.9	3	78.8	3	79.7	3	80.8	3
여가 만족도 성비	67.6	15	76.5	14	83.5	12	83.1	12	83.2	13
인터넷 이용률 성비	86.8	7	87.2	7	92.6	3	91.6	7	94.6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성비에서 성평등 수준과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매년 수준 개선을 보임에 따라 2015년 상위권을 보인다.

보건 분야는 수준과 순위에서 중상위 수준에 위치해 있다. 보건 분야는 2011년 4위에서 2015년 5위로 하락하였지만 구성지표 중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남녀차이가 거의 없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남녀의 차이가 없는 완전평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분야는 전년대비 4개 지표 모두에서 성비 개선을 보였으나, 순위는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이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중상위권으로 분류되나, 수준은 30이하로 매우 낮고 육아휴직자 성비 또한 2015년 큰 폭의 성비 개선이 있었으나 순위는 16개 시·도 중 15위로 나타났다. 이외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는 2014년 92.8(13위)에서 2015년 95.5(10위)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동일년도 89.2(15위)에서 92.8(12위)로 성비와 순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1년부터 점수와 순위가 모두 개선되면서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상승한다. 지표별로 상승 원인을 보면 인터넷이용률 성비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인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최하위권이다. 분야별로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안전,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가족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향후 광주광역시는 가족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점검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16> 광주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2013년 상위권이었으나, 최근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악화로 중상위권으로 하락. 수준개선을 위한 전반적 고용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 등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 전반적으로 지표 성비가 양호함. 하지만 관리자 비율 성비 변화에 대한 점검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점검.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에서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 - 복지 분야의 경우 수준은 상승했으나 개선이 미미하여 순위는 정체. 기초생활 수급자 성비는 여성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악화. 빈곤규모를 파악하고 여성빈곤정책의 점검과 투입 필요 -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하락하나 성평등 수준 높은 편. 기존 정책의 추진과 점검 -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진입. 순위 상승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상승 때문임.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의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안전 정책에 대한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 - 가족 분야는 2013년 이래 하위권으로 추락. 육아휴직자 성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정책 점검과 사업체와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임. 지표 중 여가시간 성비는 높으나 여가 만족도 성비가 낮음. 문화와 여가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정책 점검 필요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2011년 이래 성평등 수준 개선이 높은 지역이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이다. 영역별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성평등 중상위권으로

구분되었지만, 성평등 수준의 개선을 통해 2013년부터 상위권에 위치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 수준향상과 더불어 상위권에 진입했으나 2015년 수준 하락과 함께 중상위권으로 하락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비교적 높은 성평등 개선으로 2012년 이래 1위를 지켜오고 있다.

<표 Ⅳ-17> 대전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3.6	7	84.3	4	72.3	2
2012	64.8	6	84.4	5	75.6	1
2013	66.9	3	84.8	5	78.4	1
2014	69.2	2	85.9	3	80.3	1
2015	69.8	2	83.7	6	80.8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 순위에 위치해 있다.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순위는 큰 변동이 없다. 지표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1년 이래 높은 개선 추이를 보인다. 단, 2014년은 전년대비 2.3p 하락하여 순위하락을 보이지만 2015년 다시 상승하여 상위권을 유지한다. 성별임금격차는 2015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5년 큰 폭의 상승에도 그동안의 미미한 개선으로 인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2년까지 중상위권에 위치했다가, 2013년 상위권에 진입하여 2015년까지 유지한다. 특히 2014년은 비교적 큰 폭의 수준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관리직 비율 성비가 선거 이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11년 이래 16개 시·도 중 7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Ⅳ-18>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7.9	8	68.5	7	71.0	6	70.7	6	72.0	6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8.9	14	69.2	12	69.1	15	69.7	15	73.2	13
성별 임금격차	58.7	9	57.9	10	60.5	5	61.4	6	61.0	9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6.1	2	78.5	3	83.3	1	81.0	3	81.6	2
○의사결정	28.6	7	31.5	5	35.3	2	42.3	2	42.7	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7.1	6	27.1	6	27.1	6	40.4	2	40.5	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8.9	5	31.0	4	33.1	3	34.2	2	33.5	2
관리자 비율 성비	9.7	15	11.8	14	15.8	8	42.0	2	36.9	1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48.7	12	56.0	5	65.0	4	52.6	2	60.0	2
○교육·직업훈련	94.3	7	94.4	7	94.5	7	94.6	7	94.7	7
평균 교육년수 성비	88.7	7	88.9	7	89.1	7	89.3	7	89.5	7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83.6	1	84.6	1	87.6	2	88.5	3	88.8	3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7.6	4	78.8	2	84.2	3	85.6	4	87.4	5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9.5	6	90.3	6	91.0	7	91.5	8	90.2	8
○보건	98.6	1	98.3	2	98.0	3	98.3	3	98.2	4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8.4	1	97.6	2	96.7	7	97.4	1	97.3	1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4	7	97.2	7	97.3	5	97.4	8	97.3	7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100.0	1	99.9	4	100.0	1	100.0	1
○안전	70.8	11	70.3	11	69.0	10	70.8	8	64.2	1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4.2	13	62.3	12	63.7	9	65.3	7	62.8	11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7.4	9	78.3	6	74.3	8	76.4	9	65.5	12
○가족	62.9	3	64.9	2	65.5	3	69.1	3	71.3	6
가사노동시간 성비	27.1	4	28.0	4	28.8	4	29.6	3	30.5	2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5.6	4	94.4	7	93.5	12	92.7	14	93.5	13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8.2	2	93.2	6	92.5	9	83.0	16	95.0	9
육아휴직자 성비	30.8	3	44.3	1	47.1	1	71.3	1	66.2	6
○문화·정보	81.7	9	86.3	3	91.4	1	91.5	1	90.3	2
여가시간 성비	79.7	1	80.6	1	81.6	2	82.6	2	83.8	2
여가 만족도 성비	77.8	13	89.8	5	98.7	1	100.0	1	93.3	5
인터넷 이용률 성비	87.6	4	88.6	4	93.9	1	91.9	6	93.8	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2011년 이래 구성 지표의 점진적 개선에 힘입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15년 98.2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2015년 두 개 지표의 성비는 97 이상이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100점으로 완전평등 상태이다.

안전 분야는 2014년 중상위권으로 처음 진입했지만 2015년 다시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구성 지표 중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2015년 성폭력 여성피해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또한 여성의 불안감 증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문화·정보 분야는 2012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 분야는 2014년까지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에서 성평등 수준 악화로 인해 하위권으로 추락하지만 2015년에 소폭 상승하여 순위 개선을 보인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5년 성비 악화로 인해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정보 분야는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성평등 개선이 있는 분야 중 하나로, 2012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 만족도 성비가 전년대비 하락하지만 여가시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가 소폭 개선되어 문화·정보 분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광역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의식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상승하지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하락한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가 상위권으로 구분되며,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구분된다. 단,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난다. 구성 지표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19> 대전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이래 상위권 유지 - 경제활동 분야는 중상위권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간의 수준 상승.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나 임금격차 성비는 소폭 하락. 2013년 이래 지표의 개선 수준이 낮고 등락을 반복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여성경력단절 방지 정책 등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지표 성비의 개선으로 상위권에 위치.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표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 향후에도 형편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개선 방안 추진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상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중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 분야 점수하락으로 중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 순위 유지.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인해 소폭 하락.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여성정책의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하며 수준 또한 높음. 현재 정책 유지 -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인해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가 크게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또한 하락함. 사회안전망 점검과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2년 이래 1위에 위치 - 가족 분야는 상위권에서 육아휴직자 성비 악화로 인해 중상위권으로 후퇴.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승추이에 있으나, 육아휴직자 성비 크게 하락. 또한 가사노동시간 성비와 육아휴직자 성비는 높은 순위를 보이지만 수준은 낮은편으로 일가족양립정책과 육아휴직 남성 활용 촉진 정책 마련 및 홍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으로, 수준과 순위 모두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제고 노력 실시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종합순위는 2012년 중하위권에 진입한 적도 있으나 성평등 수준의 하락과 정체로 인해 2013년 이래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이며,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연도별로 순위 변화를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2011년 60.1에서 2015년 58.6으로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2년 중상위권으로 진입하기도 하나 이외 연도

에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2년 상위권 이래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등락하고 있다.

<표 Ⅳ-20> 울산광역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0.1	13	81.3	15	69.0	12
2012	62.1	12	84.0	6	73.0	4
2013	60.0	15	82.1	13	73.6	7
2014	58.9	14	81.3	15	78.1	2
2015	58.6	15	80.5	14	79.1	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분야의 높은 성별격차로 인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전년대비 약간의 상승을 보이지만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아 2011년 이래 최하위권이다. 더욱이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구성지표 모두에서 2011년 이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여성 경제활동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2년 상위권에 위치했으나, 이후 성평등 수준의 하락과 더불어 2015년 중하위권까지 추락한다. 구성 지표 중 광역 및 기초의원 여성비율은 2014년 선거에서 크게 낮아짐에 따라 성비가 크게 하락하며,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3년 이래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유일하게 2014년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 하락함에 따라 의사결정분야의 전반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2년 중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하지만 이후 성평등 수준의 하락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영역의 하락원인은 안전 분야의 높은 성비 하락이다. 안전 분야는 2012년 3위로 상위권에 위치했으나, 전반적인 성폭력 증가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하락과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2014년 71.6, 7위로 크게 떨어져 2015년 68.0, 8위로 추락한다.

<표 Ⅳ-21> 울산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56.3	16	57.6	16	55.8	16	56.0	16	57.4	16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1.4	16	57.1	16	54.2	16	53.3	16	58.6	16
성별 임금격차	46.3	16	48.5	16	45.9	16	45.6	16	43.6	16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61.3	16	67.3	14	67.3	16	69.1	15	70.1	16
○의사결정	28.7	6	33.4	4	28.8	8	25.3	9	22.9	1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39.6	1	39.8	1	40.1	1	29.2	6	29.3	6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5.3	12	17.2	9	16.0	13	18.8	12	18.4	12
관리자 비율 성비	20.8	3	23.4	4	4.0	16	13.1	10	3.7	16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39.0	15	53.1	9	55.0	10	40.1	9	40.1	11
○교육·직업훈련	95.2	3	95.3	3	95.4	3	95.5	3	95.6	3
평균 교육년수 성비	90.4	3	90.6	3	90.8	3	91.0	3	91.2	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5.0	13	75.7	11	77.8	15	78.5	15	79.7	15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54.7	16	55.6	16	59.4	16	60.4	16	63.9	16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95.3	1	95.8	1	96.2	1	96.6	1	95.5	1
○보건	92.8	16	93.4	16	92.0	16	93.9	16	93.8	16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7.8	2	97.8	1	97.3	1	96.7	7	96.7	8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82.9	16	83.1	16	81.6	16	85.2	16	86.9	16
스트레스인지율	97.7	15	99.4	7	96.9	14	99.7	8	97.9	13
○안전	76.0	6	82.7	3	76.5	3	71.6	7	68.0	8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5.4	5	86.5	3	79.4	3	67.7	6	65.5	9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6.7	11	79.0	4	73.6	10	75.5	10	70.6	7
○가족	55.4	14	60.5	7	58.6	13	66.3	7	71.1	7
가사노동시간 성비	24.1	8	25.4	8	26.7	7	27.9	6	29.1	7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1.0	15	92.0	12	93.0	13	94.1	10	92.1	16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4.5	4	97.1	1	85.8	16	90.4	14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12.1	16	27.5	9	28.9	10	52.6	5	63.0	7
○문화·정보	82.6	5	85.5	7	88.5	5	90.0	3	87.1	6
여가시간 성비	75.9	9	76.4	9	76.9	10	77.4	9	77.9	10
여가 만족도 성비	82.8	9	89.5	7	95.0	6	96.7	4	84.6	11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2	2	90.5	2	93.7	2	95.9	1	98.7	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복지 분야의 경우 성평등 수준은 점차 개선되나 개선 수준이 낮아 15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여성 저소득자 수준이 낮고 성별격차가 낮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는 매우 낮아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인다.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성비를 보이나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에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 2011년 이래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개선되어 2014년 순위가 상위권으로 진입하나 2015년 다시 중상위권으로 밀려난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4년 3위까지 상승하지만 2015년 수준하락과 함께 6위로 밀려나며, 가족영역은 2014년부터 육아휴직자 성비의 높은 상승이 유지되면서 중상위권에 유지되고 있다. 구성 지표 중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작년대비 9.6p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가족관계만족도 성비는 2.0p 하락하여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울산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보면,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구분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전년대비 수준 개선 정도가 낮아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은 상위권으로 구분되지만, 경제활동과 보건 분야는 최하위 수준을 보인다.

<표 Ⅳ-22> 울산광역시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부터 하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이래 하위권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모두가 최하위 순위를 보임. 여성경제정책 전반의 검토와 일가족양립 정책 등 경력단절예방 및 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구성지표가 2013년 이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이후 개선이 미미함.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점검이 필요하며, 정치권의 여성할당제와 공천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순위는 상위권이고 성평등 수준도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중요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 - 복지와 보건 분야의 경우 성평등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나, 개선 정도가 미미하여 순위 개선이 되지 않음. 또한 안전 영역은 사회 안전의식 성비와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비가 동시에 하락함에 따라 이 영역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됨. -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 및 연금 가입 홍보 방안 마련 - 보건 분야는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개선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촉진시킬 정책 필요 - 안전 분야는 성폭력 예방정책과 교육 실시. 성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관련 기관과의 예방 정책 추진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은 2014년 상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함. 분야별로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분류. 지표 중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소폭 하락. 가족 내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점검 및 추진 - 문화·정보 분야는 관련 지표의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음. 기존 정책 추진에 지속적 점검과 관심 필요

8) 경기도

경기도의 종합순위는 2011년 상위권에서 2014년 중상위권, 2015년 중하위권으로 추락한다. 영역별 순위를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중하위권이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영역별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순위가 3단계 하락해 중상위권으로 내려오며, 2015년에는 소폭 수준 상승에도 다시 3단계 순위가 하락해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1년 중하위권에서 2012~2013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지만 2014년 부터는 수준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재진입한다. 반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점진적 성평등 수준 상승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Ⅳ-23> 경기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6.5	2	82.9	9	72.0	4
2012	66.6	3	83.4	7	73.1	3
2013	66.6	4	83.1	8	74.8	2
2014	64.4	7	82.9	9	78.1	3
2015	64.6	10	82.2	12	79.9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경제활동 분야는 중하위권,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한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2011년 이래 수준 개선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15년 소폭 하락하면서 중하위권으로 내려온다. 성평등 수준 하락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하락 때문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는 수준향상에도 순위는 정체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3년부터 나타난 관리직 비율 성비 하락으로 인해 2011년 상위권에서 2014년 중상위권으로 내려온다. 관리직 비율 성비는 2012년 20.6에서 2013년 17.3, 2014년 9.4, 2015년 8.0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된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준은 등락하며 정체해 있으며,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2014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16개 시·도 중 5위에 위치해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경우 복지 분야는 매년 수준 개선이 보이며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표별로 기초생활보장자 성비는 상위권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꾸준한 개선이 보이지만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수준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가 순위로 볼 때 중하위권으로 낮은 편이나 성평등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 낮지 않다.

안전 분야는 2012년 이래 성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분야로,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2015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2012년 이래 하락 폭이 비교적 높았으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성비는 2013년까지 하락추이를 보이다 2014년 반등하지만 2015년 여성 성폭력 피해자 증가로 성비가 대폭 감소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5년 상위권에 위치하며 분야별로 가족 분야는 8위, 문화·정보 분야는 4위로 각각 중상위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분야는 꾸준한 수준 상승으로 2014년 상위권에 위치하기도 했으나 2015년은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하락원인은 높은 성비를 보이던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단, 이들 지표의 하락에도 육아휴직자 성비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족분야 성평등 수준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문화·정보 분야는 꾸준한 성평등 개선에 힘입어 2015년 상위권에 위치한다. 구성지표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비를 보이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을 요약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성평등 수준의 정체로 인해 7~9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5년은 안전 분야 수준 하락으로 인해 12위로 내려왔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분야 순위는 2015년 전년대비 4단계 하락했으나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으로 수준은 소폭 상승했다.

<표 Ⅳ-24> 경기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6.5	11	66.8	11	68.8	8	69.9	8	69.8	1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6.4	15	67.1	14	69.1	14	70.5	13	72.0	15
성별 임금격차	58.4	12	57.2	11	59.0	10	58.4	12	58.6	12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4.7	6	76.1	9	78.2	6	80.8	4	78.9	7
○의사결정	37.6	1	37.5	1	35.2	3	27.5	8	27.7	8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7.4	5	27.3	5	27.3	5	31.7	4	31.7	4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4.2	7	24.9	8	22.1	8	24.7	8	23.7	8
관리자 비율 성비	20.6	4	20.6	5	17.3	5	9.4	14	8.0	14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78.2	1	77.3	1	74.2	1	44.0	6	47.4	5
○교육·직업훈련	95.4	2	95.6	2	95.8	1	96.0	1	96.1	1
평균 교육년수 성비	90.9	2	91.2	2	91.6	1	91.9	1	92.2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80.6	5	80.6	5	83.1	8	84.3	9	85.2	8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66.6	11	66.2	11	70.7	12	72.9	12	75.3	12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94.6	2	95.1	2	95.4	2	95.7	2	95.1	3
○보건	97.6	7	97.8	6	97.2	8	97.5	7	97.8	7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9	6	97.2	5	96.9	4	96.9	4	97.1	4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6.1	11	96.0	11	94.7	12	95.5	11	96.2	11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안전	70.6	12	71.7	9	69.1	9	66.9	11	63.7	1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4.0	14	66.7	9	62.8	12	56.7	12	59.5	1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7.1	10	76.8	10	75.5	6	77.0	8	68.0	9
○가족	59.2	5	60.0	8	62.3	6	67.9	4	70.5	8
가사노동시간 성비	23.6	10	24.0	10	24.4	12	24.8	13	25.2	13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7	9	90.8	15	92.8	15	95.1	9	93.8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1.8	9	90.8	12	91.3	12	97.0	3	93.5	11
육아휴직자 성비	27.5	6	34.6	5	40.7	5	54.6	4	69.6	5
○문화·정보	84.9	3	86.1	4	87.3	7	88.3	5	89.3	4
여가시간 성비	76.8	6	77.5	6	78.3	5	79.0	4	79.9	5
여가 만족도 성비	87.6	5	89.8	6	91.3	8	93.8	5	95.0	3
인터넷 이용률 성비	90.2	1	91.0	1	92.5	4	92.1	5	93.0	7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표 Ⅳ-25> 경기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성평등 개선의 정체와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하락 -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분류.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 정도가 낮은 편이며, 지속적 상승추이를 보이던 상용근로자 성비 또한 2015년 소폭 하락.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정책 점검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의 일·가족 양립 정책의 점검이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상위권 위치. 관리직 비율 성비의 하락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필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정체 상태로 개선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검토.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방안 추진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으로 기존 정책 유지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2년 이래 수준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이나 개선 수준이 낮은 분야.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 추진 - 보건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여성 노인인구 증가 때문으로 노인 건강 정책의 점검이 필요 -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이며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악화로 순위 하락. 특히 강력범죄피해자 성비 하락은 성폭력 여성 피해자 증가 때문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사회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노력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꾸준한 수준 상승으로 상위권 유지 -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이나 전년대비 4단계 순위 하락.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가족관계만족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악화됨. 가족 내 양성평등교육 실시와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정책의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성평등 개선으로 상위권에 진입. 기존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점검 실시

9) 강원도

강원도는 높은 성평등 개선으로 2013년 상위권에 진입한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 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이고 여성의 인권·복지와 성평등 의식·문화는 상위권으로 각각 3위, 2위로 나타난다. 영역별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중상위권에서 2014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나 2015년 중상위권으로 재진입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비교적 큰 폭의 수준 상승에 힘입어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2015년 전년대비 소폭 수준이 하락하지만 상위권을 유지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수준은 2013년 중하위권으로 순위가 추락하기도 하나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15년 상위권으로 진입한다.

<표 Ⅳ-26> 강원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3.8	5	83.2	8	70.5	5
2012	64.9	5	82.5	11	72.0	7
2013	64.7	6	85.9	2	73.3	9
2014	63.3	9	88.0	1	76.1	7
2015	65.0	8	85.9	3	80.2	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을 구성하는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이래 상위권인 반면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며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중하위권에 진입한 이래 이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는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와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의 꾸준한 개선으로 인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2013년 성비 악화로 중상위권으로 하락한 이래 성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점진적 수준 개선에도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5년 높은 성비 상승으로 상위권에 재 진입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다. 이 분야는 지역별 성평등 편차가 크지 않다. 강원도의 성평등 순위는 정체되어 있으나 수준은 상승 추이를 보인다.

<표 Ⅳ-27> 강원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72.8	2	73.6	2	72.1	4	75.2	1	75.6	2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2.5	5	74.0	5	74.0	6	77.7	2	79.6	2
성별 임금격차	62.3	2	63.6	3	59.6	7	60.7	7	61.1	8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83.6	1	83.1	1	82.8	2	87.0	1	86.0	1
○의사결정	26.7	9	29.1	8	29.9	7	22.5	11	27.0	10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9.5	9	19.5	9	19.5	9	17.7	14	17.7	14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6.9	9	17.1	10	16.8	12	19.4	10	21.1	9
관리자 비율 성비	17.0	7	27.0	2	33.8	1	19.0	6	31.8	3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3.5	4	52.6	10	49.6	15	34.0	12	37.5	12
○교육·직업훈련	91.9	11	92.0	11	92.2	11	92.3	11	92.4	11
평균 교육년수 성비	83.8	11	84.0	11	84.3	11	84.6	11	84.9	1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81.9	4	81.1	4	87.2	3	88.6	2	89.6	2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7.8	3	74.9	4	85.8	2	87.7	2	90.8	2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6.1	10	87.4	9	88.6	9	89.6	10	88.3	10
○보건	97.6	8	96.6	13	97.0	9	97.9	6	96.8	12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0	15	96.1	15	95.8	14	96.1	10	96.6	12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9	4	96.7	9	97.2	7	97.5	5	98.2	4
스트레스인지율	98.8	11	97.1	14	97.8	13	100.0	1	95.7	16
○안전	70.0	13	69.6	12	73.5	7	77.5	2	71.2	6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1.8	16	60.9	14	69.0	7	76.9	3	69.1	6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8.3	7	78.3	7	78.0	2	78.0	6	73.2	6
○가족	63.9	2	64.8	3	66.3	2	70.0	2	77.0	1
가사노동시간 성비	29.5	2	29.5	2	29.5	3	29.5	4	29.5	6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2	10	94.0	9	96.6	6	99.6	4	96.1	6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9.2	12	92.4	10	94.3	6	92.9	8	99.1	3
육아휴직자 성비	43.6	1	43.4	2	45.0	2	58.2	3	83.5	2
○문화·정보	77.1	15	79.2	14	80.2	14	82.1	14	83.4	14
여가시간 성비	77.9	3	77.5	5	77.1	9	76.7	11	76.3	13
여가 만족도 성비	68.9	14	73.8	15	76.4	14	80.9	13	85.0	10
인터넷 이용률 성비	84.6	12	86.3	10	87.1	12	88.8	13	88.8	1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을 구성하는 복지 분야는 2013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분야별로 보건 분야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2015년 전년대비 성비가 하락함에 따라 순위가 6단계 낮아져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관련 지표는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개선으로 2013년 중상위권 진입하고 2014년 상위권에 진입하지만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지표별로 보면, 복지 분야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개선 정도도 빨라서 2011년 이래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는 성비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수준이 낮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 분야는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지표가 높은 수준의 성평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안전 분야의 경우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의 악화되고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5년 높은 수준 개선으로 인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의 높은 상승으로 성평등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여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며,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2015년은 전년대비 소폭 성비하락이 나타난다. 반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와 육아휴직자 성비는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족 분야 성평등 개선의 이끈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정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유지하나 성평등 개선 속도가 낮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표별로 여가 시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하위권으로 나타나며, 여가만족도 성비는 전년대비 높은 성비 개선으로 중하위권에 진입한다.

요약해보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개선이 빠른 지역으로 현재 상위권에 위치한다. 하지만 여성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분지 분야는 2013년 이래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보건과 안전 분야의 하락으로 성평등 수준은 약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28> 강원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로 인해 상위권을 유지함. 성별 임금격차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개선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여성경력단절 예방과 정책의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선거 이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또한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점차 개선되나 중하위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관심 제고 방안과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상위권이며 성평등 개선으로 점차 순위 상승 추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는 개선이 지체되면서 낮은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함. 향후 빈곤 여성가구 지원 정책 점검과 개선노력 필요 - 보건 분야의 경우 순위는 낮으나 수준은 높은 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 성비 향상을 위해 여성 노인의 건강 정책 점검 - 안전 분야는 성평등 수준 악화로 중상위권으로 하락. 순위하락 이유가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향후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더불어 여성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책 개선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에서 2015년 상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상위권 유지. 단, 가사노동시간 성비의 개선이 미미함. 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책 홍보와 교육 추진 - 문화·정보 분야는 낮은 여가 만족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로 하위권에 위치.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순위 제고를 위해 문화와 정보 관련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분석 필요

10)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013년 중상위권에 진입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이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이다.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2014년 수준 하락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추이를 보이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전년대비 수준하락하면서 순위가 낮아진다. 특히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높은 수준 향상으로 2014년 상위권에 진입하나 2015년 중하위권으로 밀려난다.

<표 Ⅳ-29> 충청북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1.5	11	83.4	7	69.5	9
2012	62.5	11	81.7	13	72.0	6
2013	64.5	7	83.9	6	73.8	5
2014	63.0	10	85.2	5	77.4	4
2015	64.7	9	83.4	7	77.2	1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을 구성하는 경제활동 분야는 꾸준한 성비 상승으로 2014년 이래 상위권에 진입한다. 구성 지표는 2014년 대비 지표 모두에서 수준 개선이 보이며, 순위 또한 3~5위로 높게 나타난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대비 비교적 크게 성비 개선을 보였으나, 구성 지표 대부분이 낮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인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는 2014년 선거 후 성비 개선이 없었지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모두에서 성비 상승과 순위 개선이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지만 수준은 타 시·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와 보건 분야는 수준 개선이 정체되고 순위도 변화도 없다. 단, 안전 분야는 두 지표 모두에서 동시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이로 인해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은 크게 낮아졌고 순위 또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내려온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인해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크게 추락한다. 가족 분야는 2014년 큰 폭의 수준 개선으로 중상위권에 진입하나 2015년에는 순위가 4단계 하락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 분야 성평등 하락 원인은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의 하락이지만 가사노동 시간 성비의 낮은 개선에도 원인이 있다.

문화·정보 분야는 전년대비 수준하락으로 5단계 내려온 11위를 차지한다. 구성 지표별로 보면 이 분야의 하락 이유는 여가 만족도 성비의 큰 하락에 있다.

<표 Ⅳ-30> 충청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8.8	4	69.9	6	70.3	7	72.7	4	74.0	3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2.3	6	73.2	7	73.9	7	77.6	3	78.9	3
성별 임금격차	58.5	11	60.6	6	61.7	4	62.7	3	63.7	4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5.5	3	76.1	7	75.3	9	77.7	6	79.3	5
○의사결정	23.5	14	25.1	14	30.5	6	23.5	10	27.2	9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7.4	11	17.4	11	17.4	11	20.6	11	20.6	1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3.6	15	15.3	13	18.1	10	17.6	14	21.0	10
관리자 비율 성비	12.3	12	15.1	11	27.5	2	16.9	8	22.3	7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0.6	8	52.4	11	59.0	6	38.7	11	44.9	8
○교육·직업훈련	92.4	9	92.5	9	92.7	9	92.8	9	92.9	9
평균 교육년수 성비	84.8	9	85.0	9	85.3	9	85.6	9	85.8	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9.6	7	79.4	8	83.9	6	85.2	7	85.5	7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1.1	8	69.2	9	77.0	8	78.6	9	80.6	9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8.1	8	89.6	8	90.7	8	91.8	7	90.5	6
○보건	98.1	6	97.3	9	97.6	6	96.7	9	97.6	9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5	9	96.4	12	96.4	10	96.3	9	96.6	10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9	5	97.4	6	97.3	6	97.5	7	96.8	9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98.3	10	99.2	7	96.3	15	99.4	11
○안전	72.4	9	68.5	13	70.1	8	73.7	5	67.1	9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6.4	11	59.3	16	63.3	11	67.8	5	59.2	14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8.3	8	77.7	8	77.0	4	79.6	4	75.0	4
○가족	57.0	11	58.1	14	58.4	15	66.9	5	68.9	9
가사노동시간 성비	23.8	9	24.6	9	25.3	10	26.0	10	26.8	10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4.3	7	95.5	5	97.2	3	99.0	5	95.6	9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3.1	6	96.2	2	88.8	14	92.9	7	97.3	6
육아휴직자 성비	16.8	13	16.3	15	22.2	14	49.5	8	55.8	10
○문화·정보	82.0	7	86.0	5	89.2	2	87.9	6	85.5	11
여가시간 성비	78.6	2	80.1	2	81.7	1	83.4	1	85.2	1
여가 만족도 성비	80.5	12	90.0	4	95.8	3	90.9	9	82.0	15
인터넷 이용률 성비	87.0	6	87.9	6	90.1	9	89.3	12	89.2	1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요약해보면, 충청북도는 2015년 종합순위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한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성평등 개선으로 소폭 순위 상승이 있었고 여성의

인권·복지와 성평등 의식·문화는 성평등 수준과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분야와 의사결정 분야에서 순위 상승이 있었고 이외 분야는 순위변동이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는 육아휴직자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에서 크게 상승한 반면,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등 주관적 지표에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31> 충청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성비 개선으로 2014년 이래 상위권 유지. 모든 구성 지표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일가족양립 정책 사업 추진 확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정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3년 이래 중상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중상위권 유지. 기존 정책의 보다 적극적 시행과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음. 기존 정책의 적극적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관련 지표 악화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와 안정의식 하락으로 성비가 악화됨.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및 여성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중하위권으로 추락 - 가족 분야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하락으로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추락. 육아휴직자 성비는 크게 개선되나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사업체에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정책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와 지원 검토. - 문화·정보 분야는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 하락의 주된 이유는 여가만족도 성비의 하락으로 여가만족도 하락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점검할 필요 있음.

11)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2012년 하위권으로 추락한 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 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이고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복지, 보건, 안전,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이고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 가족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표 Ⅳ-32> 충청남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2.2	10	82.0	12	69.9	8
2012	62.7	10	81.2	14	70.8	9
2013	61.8	13	81.2	16	73.3	8
2014	59.8	13	80.0	16	74.4	13
2015	60.6	12	80.1	15	77.5	1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중하위권에서 2013년 하위권으로 하락하지만 2015년 성평등 개선과 더불어 중하위권으로 재진입한다. 이 영역을 구성하는 경제활동 분야는 2011년 이후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구성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상승하나, 성별임금격차는 소폭 하락한다.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낮고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구성 지표 중 관리직 비율 성비는 2011년 31.3에서 2015년 8.3으로 크게 하락하여 의사결정 분야 수준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4년 선거 이후 소폭 상승하나 순위는 더 하락하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개선 정도가 매우 낮아 순위는 최하위로 하락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여성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2014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성평등 수준은 시도간 차이가 거의 없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낮은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로 인해 2012년 이래 하위권이다.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성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나, 2013년 이래 개선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33> 충청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6.6	10	67.9	9	68.1	9	69.3	11	70.7	10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9.6	12	70.8	10	70.2	13	72.5	10	74.0	10
성별 임금격차	58.7	10	61.4	5	59.5	9	59.8	10	59.1	11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1.5	9	71.5	12	74.6	10	75.7	10	79.0	6
○의사결정	28.3	8	28.2	9	25.3	15	17.9	14	18.5	15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6.5	12	16.5	12	16.6	12	18.1	13	18.2	13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4.0	14	13.7	15	14.5	15	15.0	16	15.0	16
관리자 비율 성비	31.3	2	26.6	3	12.4	11	10.0	13	8.3	13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1.4	5	56.2	4	57.6	8	28.5	15	32.6	13
○교육·직업훈련	91.8	12	91.9	12	92.1	12	92.3	12	92.4	11
평균 교육년수 성비	83.5	12	83.9	12	84.2	12	84.6	12	84.9	1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5.3	12	74.7	14	79.6	14	80.3	14	80.9	14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62.0	14	59.1	14	67.7	13	68.4	13	70.3	13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8.7	7	90.2	7	91.4	6	92.3	6	91.6	5
○보건	97.3	11	96.9	11	96.6	12	96.4	13	96.7	13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4	11	96.2	14	95.9	13	94.9	15	95.7	15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5.6	12	95.2	13	94.5	13	94.3	13	94.4	13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99.4	6	99.3	5	100.0	1	100.0	1
○안전	73.2	8	71.9	8	67.6	12	63.4	13	62.7	14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7.9	8	67.3	8	61.6	14	53.3	15	56.5	16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8.4	6	76.4	11	73.7	9	73.4	12	68.8	8
○가족	59.0	6	60.7	6	64.7	4	66.6	6	71.7	5
가사노동시간 성비	21.7	13	22.1	16	22.5	16	22.8	16	23.2	16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1.1	14	93.8	10	97.2	4	100.0	1	98.1	3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3.4	5	89.5	14	96.2	3	91.4	10	89.5	15
육아휴직자 성비	30.0	4	37.5	4	43.0	4	52.3	6	76.0	3
○문화·정보	80.8	10	80.8	12	82.0	13	82.2	13	83.2	15
여가시간 성비	74.9	12	76.1	10	77.3	8	78.6	7	80.1	4
여가 만족도 성비	82.9	8	81.0	12	80.0	13	79.4	14	80.4	16
인터넷 이용률 성비	84.7	11	85.4	12	88.6	10	88.5	14	89.3	1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안전 분야는 구성 지표의 성비 하락으로 인해 2014년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나 2014년까지 하락 폭이 매우 크며,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성폭력 여성피해자의 증가로 매년 하락하는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낮은 성평등 개선으로 인해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한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는 2011년 59.0(6위)에서 2015년 71.7(5위)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 지표별로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등에서 성비 개선이 있는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전년 대비 하락한다. 지표 중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은 매우 높아 2011년 30.0에서 2015년 76.0으로 상승한다. 반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점진적 개선을 보이지만 개선 폭이 매우 낮고 성비 수준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정보 분야는 매우 더딘 개선으로 인해 2013년 이래 하위권으로 구분된다. 여가시간 성비는 높은 수준으로 상위권에 진입하지만 여가만족도 성비는 개선 없이 지체됨에 따라 하위권으로 추락한다.

요약해보면, 충청남도는 종합점수에서 2012년 이래 하위권으로 구분된다. 세 정책 영역에서 성평등 개선이 정체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표들의 성평등 개선 속도가 느리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가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이외 분야는 중하위권 혹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지표별로 보면 고등교육진학률 성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여가시간 성비 등에서 중상위 이상의 순위를 보이며, 이외 지표는 중하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표 Ⅳ-34> 충청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진입 - 경제활동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수준개선은 있으나 개선 속도가 낮음. 구성 지표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 여성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 방안 수립 - 의사결정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성 지표 모두 낮은 수준과 순위를 보임. 관리직 비율 성비 하락 원인 분석과 의사결정 분야 수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단기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하위권으로 분류.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개선 노력 필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연금미가입자 분석과 홍보 필요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관련 지표의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하위권 유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존 정책의 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중상위권 유지. 단,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성평등 교육 제고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임. 기존 정책의 점검과 성비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12)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2014년 중하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으로 재진입한다.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2년 이래 중하위권에 위치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이다. 특히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의식 성비의 개선으로 인해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직업훈련, 가족 분야가 하위권, 의사결정, 복지, 문화·정보 분야가 중하위권, 경제활동 분야가 중상위권, 보건, 안전 분야는 상위권으로 나타난다.

<표 Ⅳ-35> 전라북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0.0	14	83.9	6	70.2	6
2012	61.9	13	85.6	1	70.7	11
2013	63.0	11	85.4	3	72.0	13
2014	60.7	11	82.0	13	73.4	14
2015	62.8	11	87.1	1	75.6	15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수준은 성평등 수준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2013년 이래 순위의 변동이 없었다. 분야별로 보면 전년대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모두 상승한다. 경제활동 분야는 구성 지표 모두 2014년 대비 2015년 성비와 순위의 상승을 보이나, 개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의사결정 분야는 관리자 비율 성비의 개선으로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하지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하락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낮은 성평등 수준에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아 하위권을 보이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은 낮지 않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4년 안전 분야의 급격한 수준 하락으로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락했으나 2015년 안전의식 성비 개선과 더불어 다시 상위권

으로 진입하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가입자 성비의 빠른 개선으로 2014년 중상위권까지 상승했으나, 2015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악화로 인해 전년대비 1단계 내려간 9위를 보인다.

보건 분야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15년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노인건강 수준과 관련이 높은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는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에서도 완전성평등에 가까운 성비를 보인다.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높은 개선으로 인해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급 상승한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세월호 등의 사건이 있던 2014년 매우 낮아지나, 이후 크게 상승하여 2015년 82.4로 35.7p의 성비 개선을 보인다. 단,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성비는 성폭력 여성피해자의 증가로 비교적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더딘 성평등 개선으로 인해 2011년 중상위권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가족 분야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 수준과 점수는 소폭 상승한다. 상승의 주된 이유는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과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가족 분야 지표 중 전년대비 유일하게 성비가 악화되어 중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순위가 내려온 지표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하나, 지표별로 여가만족도 성비를 제외하면 여가시간 성비와 인터넷 이용률 성비 두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요약해보면, 전라북도는 종합순위에서 변동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2015년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는 상위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중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으로 구분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과 교육·직업 분야에서 하위권이었고, 보건과 안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표별로 보면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평균 교육년수 성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가시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등은 하위권으로 성비의 개선과 원인분석 등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36> 전라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8.2	5	70.9	3	72.5	3	70.2	7	72.5	5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9.4	13	68.2	13	71.3	11	73.1	9	76.6	5
성별 임금격차	59.9	8	64.8	1	64.5	1	62.3	4	63.9	3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5.3	4	79.6	2	81.9	4	75.2	12	77.0	11
○의사결정	20.7	16	23.7	15	25.3	14	20.5	13	24.4	11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4.2	15	14.2	15	14.2	15	18.3	12	18.3	1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6.4	10	17.0	12	18.6	9	20.7	9	18.8	11
관리자 비율 성비	12.5	11	12.5	12	12.6	10	12.5	11	28.4	4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39.5	14	51.0	12	55.8	9	30.3	13	32.0	15
○교육·직업훈련	91.0	14	91.2	14	91.3	14	91.5	14	91.6	14
평균 교육년수 성비	82.0	14	82.3	14	82.6	14	82.9	14	83.2	1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4.9	14	75.1	13	82.1	10	84.3	8	84.9	9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5.9	5	72.2	7	84.1	4	86.2	3	89.9	3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73.9	16	77.9	16	80.2	16	82.4	16	79.9	16
○보건	98.5	3	98.1	5	97.9	4	98.0	5	98.5	3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5	10	96.6	11	95.4	15	95.6	14	96.7	9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8.9	2	98.1	3	98.9	2	98.3	3	98.7	3
스트레스인지율	100.0	1	99.4	8	99.3	6	100.0	1	100.0	1
○안전	78.5	3	83.7	2	76.2	4	63.6	12	77.8	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4.3	6	88.9	2	75.5	4	46.7	16	82.4	1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82.6	2	78.6	5	76.9	5	80.6	3	73.3	5
○가족	58.0	9	59.2	9	61.4	8	61.8	15	65.8	13
가사노동시간 성비	22.8	12	23.2	13	23.5	15	23.9	15	24.3	15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8.6	1	100.0	1	95.1	9	89.0	16	94.5	1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4.6	3	87.3	15	97.8	2	93.6	6	91.8	13
육아휴직자 성비	15.9	14	26.4	11	29.2	9	40.8	11	52.4	11
○문화·정보	82.5	6	82.1	10	82.5	12	84.9	11	85.5	10
여가시간 성비	75.8	10	75.6	12	75.5	13	75.4	14	75.3	15
여가 만족도 성비	90.1	4	87.7	10	86.3	11	93.4	7	92.3	6
인터넷 이용률 성비	81.5	14	83.0	14	85.6	15	85.9	15	88.9	1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표 Ⅳ-37> 전라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이래 중하위권으로 분류 - 경제활동 분야는 2013년 상위권에서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 이 분야의 하락원인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하락과 성별 임금격차 악화에 기인.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원인 분석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진입. 구성 지표가 대부분 중하위 수준으로 성평등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단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개선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의식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으로 재진입. - 복지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지표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개선 필요. 빈곤가구 감소 정책과 빈곤의 성별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성평등 수준 또한 높음. 기존 정책의 지속적 점검과 유지 -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개선으로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급상승.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낮은 성평등 개선으로 인해 하위권으로 추락 - 가족 분야는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가 중하위권으로 분류. 전반적인 가족정책 점검과 가족관계 만족도 하락 원인 분석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구성지표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이 분야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개선방안 연구 필요

13)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종합순위에서 2011년 중하위권에서 2012년 이래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영역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상위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에 위치한다. 전라남도는 분야별 성평등 수준 차이가 큰 지역으로 안전(1위)과 가족(4위) 분야는 상위권에 분류되고 복지가 중하위권(12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외 분야는 모두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표 Ⅳ-38> 전라남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59.0	16	85.8	1	69.3	10
2012	59.7	16	84.8	3	68.6	16
2013	59.3	16	86.0	1	71.9	14
2014	56.7	16	85.3	4	75.1	11
2015	58.4	16	85.7	4	76.7	1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야별로 세 분야 모두 성평등 수준과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소폭 수준 상승이 보이나 2014년까지 하락추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4년까지 하락하던 성비가 개선되어 상위권으로 진입하나, 성별임금격차는 개선 정체로 인해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성평등 수준은 하위권으로 나타난다.

의사결정 분야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4.7p 하락하여 하위권에 위치한다. 광역 및 기초의원비율은 2014년 선거 후 소폭 성비 개선이 있었으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매우 낮은 수준과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로 인해 하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39> 전라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3.6	15	65.0	15	64.9	15	64.8	15	66.2	15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2.0	7	76.4	3	75.5	4	74.6	7	76.7	4
성별 임금격차	53.0	15	52.9	15	50.9	15	51.1	15	51.2	15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65.8	15	65.8	16	68.3	15	68.6	16	70.6	15
○의사결정	24.7	12	25.5	12	24.2	16	16.3	16	20.0	1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3.8	16	13.8	16	13.8	16	15.2	15	15.2	15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4.5	13	15.2	14	15.7	14	19.0	11	17.4	14
관리자 비율 성비	16.5	9	17.2	8	8.8	13	4.5	16	18.2	8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4.1	3	55.8	6	58.6	7	26.7	16	29.1	16
○교육·직업훈련	88.5	16	88.6	16	88.7	16	88.8	16	88.9	16
평균 교육년수 성비	77.1	16	77.3	16	77.5	16	77.7	16	77.9	16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2.5	15	71.9	15	80.8	12	80.9	12	82.0	12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66.9	10	61.3	12	75.8	10	73.4	11	76.8	11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78.2	15	82.5	15	85.7	13	88.4	12	87.1	12
○보건	97.2	13	96.8	12	96.7	11	96.6	12	96.6	14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5.5	16	95.8	16	95.2	16	94.8	16	95.6	16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6.6	10	96.6	10	96.8	9	96.6	9	97.0	8
스트레스인지율	99.4	10	97.9	12	98.0	11	98.3	13	97.3	15
○안전	87.7	1	85.8	1	80.6	1	78.4	1	78.4	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93.4	1	90.6	1	85.9	1	78.3	2	81.0	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82.0	3	81.0	3	75.2	7	78.6	5	75.8	3
○가족	65.4	1	62.6	4	67.7	1	73.4	1	72.3	4
가사노동시간 성비	31.1	1	30.8	1	30.4	1	30.0	2	29.7	4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8.6	2	97.4	4	100.0	1	100.0	1	100.0	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8.5	1	92.2	11	95.6	4	99.5	1	97.5	5
육아휴직자 성비	33.3	2	29.9	7	44.8	3	64.1	2	62.0	8
○문화·정보	73.2	16	74.7	16	76.1	16	76.7	16	81.1	16
여가시간 성비	72.9	15	72.8	15	72.7	16	72.6	16	72.5	16
여가 만족도 성비	67.3	16	71.2	16	73.9	16	75.5	16	85.2	9
인터넷 이용률 성비	79.3	16	80.1	16	81.6	16	82.1	16	85.5	1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경우 성평등 수준 개선은 꾸준히 나타나나 순위는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 분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단, 성폭력 여성 피해자의 증가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성비가 전년대비 하락하여 수준이 약간 악화되었다.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비와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로 인해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2013년 큰 폭으로 상승하지만 이후 상승폭이 낮아 순위가 1단계 떨어진다.

보건 분야는 수준의 개선이 정체되어 하위권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관련 지표 세 개 모두에서 성비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 중하위권에 진입하지만 2015년 다시 하위권으로 내려온다. 전라남도는 가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준도 높고 순위 또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 분야는 구성지표 4개가 모두 좋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인다. 단,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5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여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비교적 큰 폭의 성평등 개선이 있었으나 순위는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표 중 여가 만족도 성비는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문화·정보 분야의 수준 향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나머지 두 지표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성비 개선이 낮아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전라남도는 16개 시·도 중 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된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상위권이나,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과 가족 분야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세 분야 모두 낮은 순위를 보인다. 지표별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관리직 비율 성비 등에서 수준 개선이 시급하며,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 성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표 Ⅳ-40> 전라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하위권 유지 - 경제활동 분야는 하위권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개선이 시급함.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여성 경력단절 정책의 점검과 수립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하위권으로, 구성 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고 개선이 시급함. 정치, 경제, 행정 분야 담당자의 협력체계와 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의 낮은 수준으로 인해 하위권 유지. 교육 분야에 대한 장기적 개선 계획 수립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1년 이래 상위권 유지 - 복지 분야는 중하위권 유지. 두 지표의 성비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나, 빈곤가구 지원 정책과 공적연금가입확대를 위한 정책 제고 및 홍보 필요 등이 필요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적 점검 - 안전 분야는 상위권이나 성폭력 여성피해자 증가로 수준은 하락함.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 - 가족 분야는 2011년 이래 상위권이나,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이 주춤하고 있음. 일가족양립 정책을 비롯하여 사업체와 협력하여 남성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 유지. 여가만족도 성비가 크게 상승했으나, 구성 지표 모두에서 성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문화·정보 분야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제고 정책 개발 필요

14)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종합순위에서 2011년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역별 수준을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14위로 하위권이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으로 분류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1년 이래 성평등 수준 개선이 매우 낮거나 정체되어 있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평등 개선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등 3개 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활동,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 안전분야는 중

상위권, 가족 분야는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Ⅳ-41> 경상북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0.5	12	81.2	16	69.1	11
2012	60.9	14	82.9	10	70.0	13
2013	61.7	14	82.3	12	72.9	11
2014	58.8	15	82.3	12	76.2	6
2015	59.3	14	82.5	11	79.3	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영역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2년 이래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에서 소폭 하락하지만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개선으로 순위와 수준이 상승하여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한다.

의사결정 영역의 경우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4년 선거 후 개선변화가 없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낮은 수준에서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관리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는 전년대비 상승하나 여전히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순위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하위권에 위치하지만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이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구분된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하위권,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 안전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복지 분야는 구성 지표 둘 모두 낮은 순위를 보인다.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비교적 높은 성비 개선에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나며,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성비는 2013년 이래 수준 개선이 정체된 상태이다.

보건 분야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분야로, 2015년 중하위권에 진입한다. 순위와 관계없이 구성 지표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성비를 보인다.

<표 Ⅳ-42> 경상북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5.4	14	65.9	14	66.8	14	68.1	13	68.8	12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1.4	8	74.3	4	76.4	2	75.3	5	74.4	9
성별 임금격차	54.8	14	55.2	13	53.2	14	55.7	13	56.2	13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0.2	11	68.1	13	70.7	12	73.3	13	75.8	12
○의사결정	25.3	11	25.9	11	27.4	11	17.2	15	17.9	16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6.0	13	16.1	13	16.1	13	12.3	16	12.3	16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6.0	11	17.0	11	17.4	11	18.1	13	17.5	13
관리자 비율 성비	10.3	14	10.2	15	10.4	12	8.6	15	9.3	12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8.9	2	60.4	2	65.6	3	30.0	14	32.5	14
○교육·직업훈련	90.8	15	90.8	15	90.9	15	91.0	15	91.0	15
평균 교육년수 성비	81.5	15	81.7	15	81.8	15	81.9	15	82.1	15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0.9	16	70.4	16	75.8	16	77.6	16	78.5	16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59.6	15	56.1	15	65.2	15	67.5	15	70.1	14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2.3	13	84.6	12	86.4	12	87.7	13	86.9	13
○보건	95.7	14	96.4	14	96.3	14	96.2	14	96.8	1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3	13	96.9	8	96.1	12	95.9	13	96.2	14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4.6	14	94.4	14	94.0	14	94.1	14	94.2	14
스트레스인지율	96.3	16	97.8	13	98.8	10	98.5	12	100.0	1
○안전	77.0	4	81.9	4	74.7	5	73.1	6	72.3	5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2.8	7	81.4	4	72.0	6	63.8	8	66.6	8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81.3	4	82.4	1	77.4	3	82.5	1	78.0	1
○가족	58.1	8	58.3	13	61.8	7	65.8	8	73.7	3
가사노동시간 성비	25.2	7	26.0	6	26.8	6	27.6	8	28.5	9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1	12	92.8	11	93.0	14	93.2	12	92.1	15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0.5	11	86.6	16	88.3	15	91.2	12	98.4	4
육아휴직자 성비	24.5	8	27.7	8	39.2	6	51.4	7	75.9	4
○문화·정보	80.2	12	81.6	11	84.1	10	86.5	9	84.9	12
여가시간 성비	77.2	4	77.8	4	78.4	4	79.0	5	79.6	7
여가 만족도 성비	82.0	10	85.3	11	87.8	10	88.8	11	82.5	14
인터넷 이용률 성비	81.4	15	81.7	15	85.9	14	91.6	8	92.6	9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16개 시·도 중 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이는 분야이다. 구성 지표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년대비 개선되나,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소폭 하락한다.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성폭력 여성 피해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16개 시·도 중 중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분야는 성평등 개선이 비교적 높아, 2014년 중상위권에서 2015년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육아휴직자 성비는 전년대비 24.5p의 높은 상승으로 가족 분야의 수준 개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으로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3단계 순위 하락하였다. 구성 지표 중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1년 대비 2015년 수준이 비교적 크게 개선되어 6단계의 순위 상승이 있고 반면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5년 전년대비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하위권으로 순위가 이동되며 문화·정보 분야 수준 하락의 주원인이 된다.

요약해 보면, 경상북도는 성평등 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된다. 영역별로 보면 2011년과 비교하여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으로 개선되었으나,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 모두에서 낮은 성평등 수준과 순위를 보이고 있어, 기존 정책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복지 분야는 구성 지표의 성평등 개선에도 순위가 정체 상태로, 보다 적극적 개선이 요구된다. 보건 분야의 경우 순위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상위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 분야는 최근 개선 정도가 높아 순위 상승을 보이지만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표 Ⅳ-43> 경상북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반적 정책 점검 필요 -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했으나,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높은 성격차를 보이고 있음. 고용정책의 전반적 검토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조치 등의 적극적 추진 노력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구성 지표 모두에서 낮은 수준과 순위를 보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구분 - 복지 분야는 수준 개선이 낮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함. 국민연금여성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이 필요하며, 빈곤여성가구주 지원 정책 수립과 추진필요 - 보건 분야는 중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 안전 분야는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2012년 이래 하락 추이를 보이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하락원 파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안정망을 구축하고 관리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상위권으로 분류 -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으로 상위권에 진입. 구성 지표 중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를 제외하고 성평등 수준 상승.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과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개선을 위한 가족내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점검 - 문화·정보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하나, 여가만족도 성비의 하락으로 성평등 수준은 낮아짐. 여가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과 조치 필요

15)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종합순위에서 2013년 이래 중하위권 지역으로 분류된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등 4개 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교육·직업훈련, 가족 등 2개 분야는 중하위권, 문화·정보 분야는 중상위권, 안전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표 Ⅳ-44> 경상남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59.9	15	84.6	3	68.9	13
2012	60.8	15	83.1	8	70.7	12
2013	62.0	12	83.8	7	72.1	12
2014	60.5	12	84.2	6	75.1	12
2015	60.4	13	83.8	5	77.1	12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영역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3년 중하위권으로 진입했지만 이후 점차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면서 하위권에 위치하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가 하위권이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가 전년대비 개선되어 중하위권에 진입하게 되나, 성별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수준이 더 악화되어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분야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미진한 성비 개선과 매우 낮은 관리자 비율 성비로 인해 2013년 이래 성비가 악화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4년 선거 이후 소폭 개선되나 16개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또한 41.6으로 9위에 위치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상위권과 거의 차이가 없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2011년 상위권에서 성평등 수준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2015년 중상위권으로 하락한다. 복지 분야는 2011년 이래 성평등 수준 개선이 보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 개선이 낮고 보건 분야는 성평등 개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 보건 분야는 모든 시·도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으로 상위권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다.

안전 분야의 경우 16개 시·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지만 2011년 이래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하락 원인은 구성 지표인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성비와 사회안전인식 성비 모두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향후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하락 원인을 진단해야할 것이다.

<표 Ⅳ-45> 경상남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순위, 점수)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66.0	12	66.3	12	67.6	12	67.0	14	67.2	14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0.2	10	66.7	15	71.2	12	70.3	14	73.5	11
성별 임금격차	57.3	13	55.1	14	55.0	13	54.3	14	53.4	14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0.5	10	77.0	5	76.5	8	76.5	8	74.8	13
○의사결정	21.5	15	23.7	16	26.1	13	22.0	12	21.2	1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8.8	10	18.8	10	18.9	10	21.8	10	21.9	9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12.2	16	13.3	16	13.2	16	15.2	15	16.3	15
관리자 비율 성비	12.1	13	12.0	13	17.2	6	10.8	12	4.9	15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42.8	13	50.5	13	55.0	11	40.5	8	41.6	9
○교육·직업훈련	92.2	10	92.3	10	92.4	10	92.6	10	92.7	10
평균 교육년수 성비	84.3	10	84.6	10	84.8	10	85.1	10	85.4	10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76.1	11	75.3	12	79.8	13	80.7	13	81.1	13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62.1	13	59.7	13	67.4	14	68.4	14	70.0	15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90.0	5	90.9	5	92.1	4	93.0	4	92.2	4
○보건	95.5	15	94.6	15	94.7	15	95.9	15	95.7	15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4	12	96.3	13	96.2	11	96.9	6	96.6	11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0.7	15	90.8	15	90.2	15	91.5	15	92.0	15
스트레스인지율	99.5	9	96.8	15	97.8	12	99.2	10	98.4	12
○안전	82.1	2	79.3	5	76.8	2	76.1	4	74.7	3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80.1	2	76.8	6	74.3	5	70.7	4	71.8	4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84.1	1	81.8	2	79.4	1	81.6	2	77.5	2
○가족	56.1	12	58.6	12	60.2	12	64.0	11	66.7	12
가사노동시간 성비	21.1	15	22.4	15	23.7	14	25.1	12	26.5	11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8	8	94.2	8	99.1	2	100.0	1	99.5	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7.6	14	93.1	8	90.0	13	95.7	4	91.0	14
육아휴직자 성비	21.9	9	24.7	12	27.9	11	35.3	13	49.8	12
○문화·정보	81.8	8	82.7	9	83.9	11	86.1	10	87.4	5
여가시간 성비	73.2	14	73.8	14	74.4	14	75.0	15	75.6	14
여가 만족도 성비	86.7	6	89.3	8	90.5	9	93.5	6	94.6	4
인터넷 이용률 성비	85.4	9	85.2	13	87.0	13	89.9	10	92.1	1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시·도 중 12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의 높은 상승으로 중하위권으로 진입했으나,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의 하락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다.

문화·정보 분야는 구성 지표의 상승으로 중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여가시간 성비는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수준 개선에도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해보면, 경상남도는 종합점수에서 성평등 중하위권 지역으로 구분된다. 영역별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에 위치하나, 성평등한 의식·문화는 중하위권,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느리고 고용과 의사결정 관련 지표들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

<표 Ⅳ-46> 경상남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으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반적 정책 점검 필요 - 경제활동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하락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여성경력단절 현황 파악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관리직 비율 성비 악화와 낮은 수준의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로 인해 하위권에 위치.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부위원 여성위원과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확대 방안과 조치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상위권 유지하나 성평등 수준 개선은 없음 - 복지 분야는 하위권 지역으로 분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홍보와 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보건 분야는 하위권이나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의 활성 방안 연구 - 안전 분야는 성평등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유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의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여성성폭력실태와 예방 조치 마련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수준 상승에도 중하위권에 위치 - 가족 분야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 개선이 크지 않음. 성평등한 가족생활 교육과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중상위권으로 기존 정책의 적극적 집행과 점검 필요. 성별 여가패턴과 시간 배분 특성 분석 실시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대비 높은 개선으로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에 재진입한다. 영역별 수준을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에 위치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보건, 가족 등 5개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교육·직업훈련, 안전, 문화·정보 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표 Ⅳ-4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1	66.3	3	85.6	2	67.7	14
2012	65.8	4	84.5	4	71.9	8
2013	65.2	5	82.5	11	71.4	16
2014	66.7	4	82.6	10	73.1	15
2015	66.8	3	82.6	10	79.8	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영역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1년 이래 성평등 개선은 미미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나, 순위는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경제활동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어 2011년 이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과 개선으로 인해 2014년부터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13년 이래 성비가 하락하여 중하위권으로 떨어진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4년 관리자 성비 개선으로 상위권으로 진입한 후 2015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2014년 선거 이후 성비가 크게 개선되며,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도 소폭 상승된다. 단, 관리자 비율 성비는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의 성비 하락으로 중상위권으로 밀려난다.

<표 Ⅳ-48>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영역 및 세부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제활동	73.2	1	75.3	1	75.2	1	74.4	2	75.6	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4.4	1	87.6	1	83.5	1	82.1	1	83.5	1
성별 임금격차	60.0	7	59.8	7	59.9	6	63.6	1	66.0	1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5.1	5	78.4	4	82.1	3	77.5	7	77.4	10
○의사결정	34.3	2	30.4	6	28.5	9	33.6	4	32.5	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15.5	14	15.5	14	15.6	14	23.2	8	23.3	8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0.8	4	32.9	3	35.8	2	32.4	5	33.4	3
관리자 비율 성비	40.2	1	16.9	9	7.9	14	30.2	3	24.1	6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50.7	7	56.2	3	54.7	12	48.5	3	49.1	4
○교육·직업훈련	91.6	13	91.8	13	92.0	13	92.2	13	92.4	13
평균 교육년수 성비	83.2	13	83.6	13	84.0	13	84.4	13	84.8	1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복지	83.5	2	82.6	3	88.7	1	90.4	1	90.7	1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82.9	1	78.9	1	89.3	1	91.0	1	92.8	1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84.2	11	86.2	11	88.1	10	89.7	9	88.7	9
○보건	98.2	5	97.0	10	96.7	10	96.7	10	98.9	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3	14	96.8	9	96.8	6	96.0	11	97.0	6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98.3	12	94.2	16	93.4	16	94.0	16	99.6	10
○안전	75.1	7	74.0	7	62.0	16	60.8	16	58.1	15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77.3	4	76.4	7	66.9	8	56.3	14	60.3	12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72.9	13	71.6	14	57.2	16	65.3	16	55.8	15
○가족	55.4	15	65.1	1	63.7	5	64.7	9	75.0	2
가사노동시간 성비	27.3	3	28.4	3	29.5	2	30.6	1	31.8	1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6	11	100.0	1	97.0	5	93.3	11	96.8	5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4.4	15	93.9	3	93.6	7	91.3	11	86.0	16
육아휴직자 성비	17.2	12	38.3	3	34.7	7	43.5	10	85.2	1
○문화·정보	79.9	13	78.7	15	79.0	15	81.5	15	84.7	13
여가시간 성비	71.4	16	72.7	16	74.1	15	75.6	13	77.1	11
여가 만족도 성비	83.9	7	78.0	13	74.6	15	79.0	15	83.7	12
인터넷 이용률 성비	84.5	13	85.4	11	88.3	11	89.8	11	93.1	6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분야별로 복지 분야는 성평등 개선이 높아 2013년 이래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완전성평등에 가까운 98.9를 보이면서 1위로 진입한다. 반면, 안전 분야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 증가로 인해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성비가 악화되어 하위권에 위치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5년 높은 수준 개선에 힘입어 상위권으로 진입한다. 이 영역의 높은 순위 상승은 가족 분야의 성평등 개선에 의한 것으로, 육아휴직자 성비는 전년대비 41.7p로 크게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 분야는 16개 시·도 순위를 2위로 올라선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2년 이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나 개선 정도가 높지 않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 구성 지표 3개에서 전년대비 성비 개선으로 순위는 2~5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높은 성평등 개선으로 2015년 상위권에 재진입한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으로 분류되며,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세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은 가장 높으나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분야별로는 안전과 문화·정보 분야가 취약하며, 경제활동, 복지, 보건, 가족 등의 분야는 매우 우수한 성평등 수준을 보여 준다.

<표 Ⅳ-49>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역별 현황과 성평등 정책 개선 방향

영역	현황과 개선 방향
성평등한 사회참여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상위권에 위치 - 경제활동 분야는 상위권. 단,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가 2013년 이래 하락 추이.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하락 원인 분석과 정책 점검 필요 -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에 위치.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관리직 비율 성비의 높은 상승으로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개선.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와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하위권이지만 수준은 높은 편으로 기존 정책 활성화 필요
여성의 인권·복지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안전 분야의 성평등 하락으로 중하위권에 위치 - 복지 분야는 상위권 유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개선을 위한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과 여성빈곤가구주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보건 분야는 상위권으로 완전 평등 상태에 근접함.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안전 분야는 하위권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승 원인 분석과 성폭력 피해자 예방 교육 및 방지 정책 추진 필요
성평등 의식·문화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성평등 개선으로 상위권으로 진입 - 가족 분야는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으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 기존 일·가정양립 정책 점검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필요 - 문화·정보 분야는 전년대비 성비 개선이 높음에도 하위권 유지. 여가와 정보 정책의 효과 분석 필요. 기존 정책의 문제점 점검과 제고 방안 필요

2. 지역성평등지수와 지역양성평등정책 연계

가. 지역성평등지수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정부는 양성평등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의 여성정책 성과를 계승하면서 정책 환경 변화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을 수정·보완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은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별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7개 대과제,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등 21개 중과제,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등 66개 소과제로 구성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22).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 확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등 사회적 이슈가되는 분야의 중과제를 신설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등 남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24). 또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추진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여성가족부 2016, 3).

<표 Ⅳ-50>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정책과제와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와의 연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		지역성평등 지수영역
3.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경제활동
2.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가족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안전
6.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보건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복지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4-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	의사결정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1-1.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교육-직업훈련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문화-정보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해당없음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1-25

무엇보다도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지역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항). 이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는 각 지역의 성평등수준을 측정하는 동시에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의 여성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별 「2016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지역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성평등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소과제들을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영역의 지역성평등 지표는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일·가정 양립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를 꾀한다.

<표 Ⅳ-51> '가족'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가족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 성비(여성 10%기준)	2-1-1.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2-1-3.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2-2-1.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2-2-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2-3-2.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1

둘째, '안전' 영역의 지표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그리고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폭력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표 Ⅳ-52> '안전'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	5-1-1.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5-1-2.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5-1-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5-2-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5-2-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5-2-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5-2-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5-3-1.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5-3-2. 가정폭력 범죄 초기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5-3-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5-4-1.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5-4-3. 폭력방지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4

셋째, '복지' 영역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는 '기초생활자보장자 비율 격차' 및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표 Ⅳ-53> '복지'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복지	공적연금가입자성비 기초생활보장자성비	6-2-1.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 6-2-2.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5

넷째, '보건' 영역 지표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추진한다.

<표 Ⅳ-54> '보건'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6-1-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5

다섯째, '경제활동' 영역에 관한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그리고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표 Ⅳ-55> '경제활동'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임금격차(임금성비) 상용근로자 성비	3-1-1. 성별 직업분리 개선 3-1-2.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3-1-3. 농어촌 여성의 역량강화 3-2-1.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지원 3-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3-3-1.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 3-3-2. 여성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3-3-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3-3-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2

여섯째, '의사결정' 영역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직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를 추진한다.

<표 Ⅳ-56> '의사결정'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의사 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5급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	4-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4-1-3.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4-1-4. 교육 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4-1-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4-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4-2-2.「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국가행동계획 점검 4-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4-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참여 확대 4-3-2.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자료: 여성가족부(2016.07),「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3

일곱째, '교육-직업훈련' 영역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는 '평균 교육년수 성비'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이다. 이와 관련하여「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를 추진한다.

<표 Ⅳ-57> '교육-직업훈련'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격차(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1-1-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1-1-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1-1-3. 양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1-1-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2016.07),「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1

마지막으로 '문화-정보'에 관한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는 '여가시간 성비', '여가 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이다. 이와 관련하여「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표 Ⅳ-58> '문화-정보' 영역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과의 연계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소과제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여가시간만족도 인터넷이용률 성비	1-2-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1-2-2.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 조성 1-2-3.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1-3-3. 양성평등 실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21

나.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

1) 기본사업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2016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6년 사업 가운데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른 기본사업은 총 881개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가족 영역 사업이 20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안전 영역 179개, 경제활동 영역 151개로 나타났다.

<표 Ⅳ-59>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에 따른 지역별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가족	8	10	18	12	15	16	11	10	10	5	6	14	11	10	18	15	12	170
안전	7	12	15	16	14	11	10	2	6	13	9	10	10	6	12	19	7	179
복지	3	3	4	4	5	4	2	0	5	4	2	4	4	3	3	5	3	58
보건	2	2	1	4	2	1	2	15	1	1	1	3	3	1	4	1	1	45
경제활동	9	6	7	5	14	13	7	6	7	6	12	9	9	9	8	15	9	151
의사결정	4	2	4	3	3	3	2	3	3	3	3	4	4	4	3	4	3	55
교육-직업훈련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2
문화-정보	2	2	2	1	3	2	3	1	1	1	2	4	2	0	5	6	1	38
해당없음	6	10	12	10	12	13	11	2	5	5	13	11	2	8	6	15	11	152
전체	41	47	63	55	68	63	48	39	39	38	48	59	45	42	59	80	47	881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구체적으로「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한 2016년 시행계획의 내용을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족

'가족'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201개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사업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관련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60> 가족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1-1.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3	2	2	1	1	2	1	0	0	0	0	1	1	0	1	1	1	17
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0	0	3	0	1	1	0	0	1	0	1	1	1	0	4	3	0	16
2-1-3.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0	0	1	1	0	2	1	1	1	1	1	2	2	2	3	2	1	21
2-2-1.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0	0	1	1	2	0	1	0	0	0	1	1	1	0	1	0	1	10
2-2-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2	1	3	1	1	2	2	1	1	2	1	0	0	1	2	1	0	21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1	2	3	3	4	4	2	0	3	0	0	4	3	3	2	3	4	41
2-3-2.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1	2	2	2	3	2	2	2	3	1	2	2	2	2	2	2	4	36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1	3	3	3	3	3	2	6	1	1	0	3	1	2	3	3	1	39
전체	8	10	18	12	15	16	11	10	10	5	6	14	11	10	18	15	12	201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가족’ 영역의 사업을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과 같이 ‘가사노동시간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가족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내용
2-1-1.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운영
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심리적 부담감 최소화 및 업무공백 방지 - 대체인력뱅크 활용,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2-1-3.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 유연근무제 운영 -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과 유형별 적합업무 발굴 • 가정의 날 운영 및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추진 - 수요일 가정의 날 이행 및 금요일 확대 운영 • 월례휴가 및 분기(계절) 휴가실시 •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강화를 통한 정시퇴근 조직문화 정착
2-2-1.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 직장맘지원센터 시설 운영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2-2-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서울시 일·가족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연구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일·가족 양립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 • 유연근무제 활용유도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확충 우선순위 설정, 지역별 균형배치 - 신축과 기존시설 전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확충 - 국공립 미설치 15개동, 국공립 1개설치 122개동 우선 설치 추진 -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 - 시설수급률이 120% 이상인 지역은 기존 민간시설 전환 우선 추진

과제명	사업내용
	• 기존 확충방식 보완, 사업내실화 및 확충속도 가속 - 공동주택 단지내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인센티브 지원 - 민·관연대 전환시 지원금액·조건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세분화 - 학교 유휴교실 내 설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마련 -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비용절감 방안 추가 발굴 - 영아보육의 특화기능이 있는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 도시공원 내 유휴 부지 및 건물 활용 설치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2-3-2.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우수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로 대기가정 해소 및 안정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공동육아공동체 운영 지원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공부방 설치 중학교 40여 개교 - 지원내용 :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전담·학습교사 지도비, 식사비, 특별프로그램·문화체험비, 학급운영비(1교당 28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나) 안전

‘안전’ 영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사업은 총 179개이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2> 안전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5-1-1.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5-1-2.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1	1	1	1	2	2	1	1	0	3	1	3	0	1	1	3	1	23
5-1-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2-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0	1	2	2	2	1	1	1	1	2	1	2	1	1	2	2	1	23
5-2-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2	1	3	3	2	4	2	0	1	3	3	3	2	2	2	3	2	38
5-2-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2	4	2	3	2	1	2	0	1	2	2	1	2	1	2	2	1	30
5-2-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1	2	2	2	1	1	2	0	0	0	1	1	1	0	1	2	1	18
5-3-1.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3-2. 가정폭력 범죄 초기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0	0	1	0	0	0	0	0	1	0	0	0	1	0	1	1	0	5
5-3-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3
5-4-1.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0	0	0	1	1	0	1	0	0	0	0	0	1	0	1	2	0	7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1	1	2	2	1	1	0	1	1	1	0	2	1	1	1	1	18
5-4-3. 폭력방지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0	1	2	2	1	1	0	0	0	2	0	0	0	0	1	2	0	12
전체	7	12	15	16	14	11	10	2	6	13	9	10	10	6	12	19	7	179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안전’ 영역의 사업을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가정폭력 범죄 초기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폭력방지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과 같이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3>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안전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명
5-1-1.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 행복한 청춘 고시(성가치관 향상 교육) -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게 함
5-1-2.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해당 없음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지침 필수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예방관련 내용 포함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제조치 등 ● 교육 자료는 기관 실정에 맞는 교육·홍보자료 활용 ● 사이버 강의 수강 권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구여성회관)
5-1-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	●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 ●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 처분
5-2-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여성폭력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통해 관련시설, 기관연계 등 네트워크 중심기관 육성 및 서비스 확충 - 여성긴급전화1366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5-2-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보호시설 등 운영 - 피해이주여성 보호, 치료프로그램 제공, 상담·의료·출국·법률지원, 가정복귀·자립지원 등

과제명	사업명
5-2-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관련시설 연계 등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숙식 및 심리안정, 질병 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 법률지원,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등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선불금 등 법률문제, 성매매 관련 피해 질환 의료비, 상담치료 및 정서치료 등 치료회복, 진학지원 등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 집결지가 잔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 탈업소 저해 요인 제거, 직업훈련 등 자활기반 마련 지원
5-2-4.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운영 : 1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운영 : 3개소 • 여성폭력상담소종사자 수당 : 6개소 • 여성폭력관련교육사업 : 30명
5-3-1.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해당 없음
5-3-2. 가정폭력 범죄 초기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개별상담, 집단상담, 정신 및 심리치료, 부부 캠프 운영 등 •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 개별(집단)상담, 심리상담, 분노조절, 자아성찰 등
5-3-3.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처벌강화 -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실시 : 매년 1회 이상 실시, 민관경 합동단속 - 집결지 개별지원 사업 : 집결지내 여성들에게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5-4-1.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효과 제고	• 찾아가는 폭력예방 사업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 지역연대위원회 운영 : 도 1, 시군 31 -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 •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 제작 - 초등학교 주변(500m) 이내 위험 및 안전요소 표시 지도제작
5-4-3. 폭력방지 및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여성폭력시설(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12개소 - 여성폭력관련시설을 통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캠페인 실시 및 홍보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다) 복지

‘복지’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58개이다. 그 중에서도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 관련 사업은 53개,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 관련 사업은 5개로 나타났다.

‘복지’ 영역의 사업을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별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와 같이 노인층의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표 Ⅳ-64> 복지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2-1.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	0	0	0	0	0	0	0	0	1	0	0	1	2	0	0	1	0	5
6-2-2.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	3	3	4	4	5	4	2	0	4	4	2	3	2	3	3	4	3	53
전체	3	3	4	4	5	4	2	0	5	4	2	4	4	3	3	5	3	58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표 Ⅳ-6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복지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명
6-2-1. 사회보장제도의 양성평등성 제고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양성평등성 제고 -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세대의 생활안정 지원 • 기초연금의 양성평등성 제고(기초연금 지급) -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과제명	사업명
6-2-2.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심리상담실 운영 - 초기 상담 - 임상 개입(진단적 사정 및 평가, 심리검사) - 기초 정신건강교육 및 개인 및 자녀 개별 상담 •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개별문제·상황에 맞는 심리치료 - 집단 심리치료(마음챙김 캠프, 가족심성캠프, 미술치료) -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과의 신뢰감 형성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라) 보건

‘보건’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45개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관련 사업은 29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관련 사업 10개,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사업이 6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등에서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을 각각 추진하였다. 그리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사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에서 각각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6> 보건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1-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0	1	0	0	0	0	0	4	0	0	1	0	0	0	0	0	0	6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1	0	0	3	0	0	0	3	0	0	0	1	1	1	0	0	0	10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1	1	1	1	2	1	2	8	1	1	0	2	2	0	4	1	1	29
전체	2	2	1	4	2	1	2	15	1	1	1	3	3	1	4	1	1	45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보건’ 영역의 사업을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와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와 같이 ‘건강관련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표 Ⅳ-6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보건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명
6-1-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남녀 건강에 유해한 사회 환경 개선 - 의료기관의 과대광고 등 지도점검 - 의료행위에 대한 조치 확행 •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세 이상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무료경로식당 운영 - 60세 이상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제공 • 경로당 수질검사·전기검사 - 지하수 사용 경로당 선정 후 수질검사(일반세균 외 46개 항목) - 노후 경로당 대상으로 전기검사(신규)

과제명	사업명
	• 노인돌봄서비스(추가) -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 안전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 경로당활성화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기자재 지원, 경로당 운영실무(회장, 총무)교육, 경로당 소요물품(TV, 냉장고 등) 지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 행복도시건설청을 통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여가활용실, 교양교실, 시청각실, 사무실> 인수 후 적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서비스업 등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건강장애 예방지원 •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보급 - 임신부의 산전후 관리,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검진결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 • 임신부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부터 보건소 등록 관리중인 임신부에게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한 5개월 동안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신 초기 모체의 엽산 부족시 유·사산, 선천성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가구 - 생후 2~3일 이내(늦어도 1개월 이내) •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 개월별로 기본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구강검진 등 •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검진 강화 -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인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항체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으로 의무화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마) 경제활동

‘경제활동’ 영역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151개이다. 이 가운데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관련 사업 29개,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관련 사업 25개, “농어촌 여성의 역량강화” 관련 사업 21개,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 관련 사업 20개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성별 직업분리 개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지원”,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8> 경제활동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1-1. 성별 직업분리 개선	0	0	0	1	0	1	0	0	0	0	0	1	0	0	0	1	0	4
3-1-2.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2	1	0	0	4	4	2	1	3	0	1	0	3	1	1	3	3	29
3-1-3. 농어촌 여성의 역량강화	0	0	1	0	1	0	1	3	1	1	1	2	2	2	2	3	1	21
3-2-1.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지원	1	0	1	0	1	0	0	0	0	0	2	1	0	0	0	1	0	7
3-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3-1.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	1	1	2	0	2	1	0	0	1	2	1	0	1	1	1	4	2	20
3-3-2. 여성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1	1	1	0	2	2	1	0	0	0	2	1	0	1	0	0	0	12
3-3-3.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1	1	0	1	1	2	1	1	1	1	2	2	1	1	1	1	1	19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1	2	1	2	2	2	2	0	1	1	2	2	1	2	2	1	1	25
3-3-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1	0	1	1	1	1	0	1	0	1	1	0	1	1	1	1	1	13
전체	9	6	7	5	14	13	7	6	7	6	12	9	9	9	8	15	9	151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경제’ 영역의 사업을 지역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별로 살펴보면,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지원’, ‘성별 직업분리 개선’ 등과 같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표 Ⅳ-69>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경제활동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내용
3-1-1. 성별 직업분리 개선	●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제고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직업관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 40개과정, 8백여명 -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체 사후관리 : 100여개 업체
3-1-2.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우대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활동촉진 사업 지원 - 도민무료 창업 강좌

과제명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발굴,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3-1-3. 농어촌 여성의 역량강화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업인 리더십 및 전문경영능력 증진 교육 실시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채용지원) -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교육훈련(역량강화)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기반조성 -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개선,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홍보 지원 등
3-2-1.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지원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지원시책 구축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 및 교육사업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사업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 여성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우대 - 여성기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 여성친화적 유형의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창업 및 공동사업 지원 - 협동조합설립 희망여성 대상 설립상담,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3-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실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미래 희망직종 개발 - 지역전략산업분야 여성 직종 개발, 연구개발정책 토론회

과제명	사업내용
3-3-1.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	•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주요산업(제조업)기반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 굿잡 정보교류 협의체(유관기관 협의체, 중소기업 협의체,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청년-산업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 찾아가는 희망버스(무료 JOB CAFE, 청년취업도우미, 산업현장 알리미) • 청년 소통을 위한 주력산업 지역인재 장기육성 기반 조성 프로그램 - 청년 희망 JOB 아카데미
3-3-2. 여성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 농어촌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교육,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참가
3-3-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의 50~60대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지원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6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지원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
3-3-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바) 의사결정

‘의사결정’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55개이다. 이 가운데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와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관련 사업이 각각 26개와 25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사업은 ‘의사결정’ 영역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인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정부위원회 여성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Ⅳ-70> 의사결정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2	1	2	1	1	2	1	0	1	1	1	2	2	2	2	2	2	25
4-1-3.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0	1	2	2	2	1	1	3	2	2	2	2	2	1	1	1	1	26
4-1-4. 교육 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2-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점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3
4-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참여 확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3-2.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전체	4	2	4	3	3	3	2	3	3	3	3	4	4	4	3	4	3	55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표 Ⅳ-7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의사결정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내용
4-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해당 없음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인원비율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4-1-3.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40% 달성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으로 여성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신인(新仁)여성 발굴 프로젝트」 - 여성전문인력DB 활성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 여성인재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 활동체계 마련
4-1-4. 교육 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해당 없음
4-1-5.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해당 없음
4-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해당 없음
4-2-2.「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국가행동계획 점검	해당 없음
4-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 - 생활보조비 1인당 월 700천원, 사망조의금 1,000천원(시비)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평화비「소녀의 상」건립
4-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참여 확대	해당 없음
4-3-2.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 국제기구와의 공조 체계 유지 -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사) 교육-직업훈련

‘교육-직업훈련’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2개이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와 ‘양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이 각각 1개가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은 ‘교육-직업훈련’ 영역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인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와 관련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Ⅳ-72> 교육-직업훈련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1-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1-1-2.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3. 양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1-1-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2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표 Ⅳ-73>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교육-직업훈련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명
1-1-1.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 초·중·고 청소년 및 대학생, 군인, 일반인 대상 교육 실시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 폭력예방교육 지역기관 운영 지원
1-1-2.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해당 없음
1-1-3.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기반 구축	● 시·도 교육청별 양성평등 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양성평등 체험활동 활성화 - 양성평등교육 매뉴얼 및 자체진단 기준 학교 안내 -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학생글짓기 대회 실시 및 우수학생 표창 - 양성평등교육 학교 자체진단 결과 분석 및 환류 - 양성평등교육 우수학교 및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1-1-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해당 없음

아) 문화-정보

‘문화-정보’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38개이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와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사업이 각각 14개와 11개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문화-정보’ 영역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인 ‘여가시간성비’와 ‘여가시간만족도’와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74> 문화-정보 영역의 2016년 시행계획 사업개수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2-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1-2-2.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 조성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1-2-3.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	1	1	0	0	1	0	2	0	0	1	0	1	1	0	3	2	1	14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0	0	1	1	1	1	0	1	0	0	0	1	1	0	0	1	0	8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1	1	0	1	1	1	0	0	0	1	1	0	0	1	2	0	11
1-3-3. 양성평등 실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	0	3
전체	2	2	2	1	3	2	3	1	1	1	2	4	2	0	5	6	1	38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Ⅰ-Ⅱ」

<표 Ⅳ-7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문화-정보 관련 주요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명
1-2-1.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1-2-2.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 조성	•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 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1-2-3.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성 제고 및 성차별 해소	• 서울여성합창경연대회 개최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고 즐기는 합창페스티벌을 통해 합창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통반장에 대한 마을공동체 및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 -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역량있는 마을일꾼으로 역할 부여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확산 - 양성평등 문화 촉진, 성차별의식의 해소를 통하여 양성평등 및 차별이 없는 사회발전 -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일상생활(명절, 결혼 등)에서 양성평등 실천 확산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기업대상 선발과 연계하여 가족친화 우수기업인상을 선발·시상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도 홈페이지 배너 게시, 리플릿, 각종 행사 등 활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혼례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작은결혼식 확산 서명 운동 및 혼례레문화교육, 예비부부 교육
1-3-3. 양성평등 실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 성·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행사 - 성·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가정폭력예방의날(보라데이) 행사 개최 • 캠페인 개최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 -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여 순회 캠페인 추진 • 성폭력 추방주간 '성폭력 추방' 캠페인 실시 • 가정폭력 추방 '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 폭력추방 캠페인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2) 특화사업

2016년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에서 살펴본 기본사업 외에도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특화사업은 가족, 보건, 문화-정보, 의사결정,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는 총 21개의 지역성평등지수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수질검사·전기검사 등 보건 영역 관련사업 9개,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가족 영역 관련 특화사업 7개,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및 활용 강화 등 의사결정 영역 관련 특화사업 3개, 경제활동과 안전 영역 관련 특화사업 각 1개 등이다.

경상남도는 지역성평등지수의 가족 영역, 문화-정보 영역, 보건 영역, 경제활동 영역,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을 각각 1개씩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일·가정양립 지원본부 설치 운영 등과 같은 가족 영역 사업 3개와 경제 영역 사업 1개를 지역성평등지수 관련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카부츠 벼룩시장, 2016 UP 엑스포 개최 등과 같이 문화-정보, 경제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을 각각 1개씩 추진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 역시 문화-정보 영역의 특화사업 2개를 추진하였다.

제주도의 경우에도는 안전 영역과 문화-정보 영역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을 각각 1개씩 추진하였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가족 영역 관련 특화사업을 각각 1개씩 추진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는 문화-정보 영역 관련 특화사업 1개를 추진하였다.

<표 Ⅳ-76>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16년 시행계획 중 주요 특화사업내용

지역(사업수)	특화사업명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서울(0)	해당 없음	
부산(0)	해당 없음	
대구(2)	• 카부츠 벼룩시장	문화-정보
	• 2016 여성 UP 엑스포 개최	경제활동
인천(0)	해당 없음	
광주(7)	• 일·가정 양립 지원본부 설치·운영	가족
	•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족
	• 손자녀돌보미 사업 추진	가족
	•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경제활동
	• 민선6기 양성평등정책 3개년계획 수립	해당 없음
	• 광주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해당 없음
	• 성인지예산제도 모니터링	해당 없음
대전(0)	해당 없음	
울산(0)	해당 없음	
세종(22)	•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
	• 기업과 함께 하는 아빠랑~육아 서포터즈 운영	가족
	• 보육특수시책 지원 사업	가족
	• 보육인 대회 지원	가족
	• 새싹한마음 가족 축제	가족
	• 어린이집 교사 시책교육	가족
	• 보육교사 처우개선	가족
	•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경제활동
	•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의사결정
	•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의사결정
	•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찾아가는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의사결정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

지역(사업수)	특화사업명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 경로당 수질검사·전기검사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엄마랑, 아가랑' 한마음교실)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할인음식점 지정운영)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맘 편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신규))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보건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보건
	• 양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해당 없음
경기(1)	• 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아이러브맘 카페 확대	가족
강원(1)	•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토크 36.5℃ 개최	문화-정보
충북(2)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행복지원단 운영	문화-정보
	• 대학생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토론회	문화-정보
충남(0)	해당 없음	
전북(0)	해당 없음	
전남(1)	• 다문화가족 아버지학교 운영 및 맞벌이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
경북(0)	해당 없음	
경남(6)	•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설치·운영 확대 사업	가족
	• 작은결혼식 문화확산 지원	문화-정보
	•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보건
	• 결혼이민여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제활동
	•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복지
	•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단체 활동사업 지원	해당 없음
제주(3)	• 여성행복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안전
	• 제주형 작은 결혼식 지원	문화-정보
	•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해당 없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6~2017) 2016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I-II」

3.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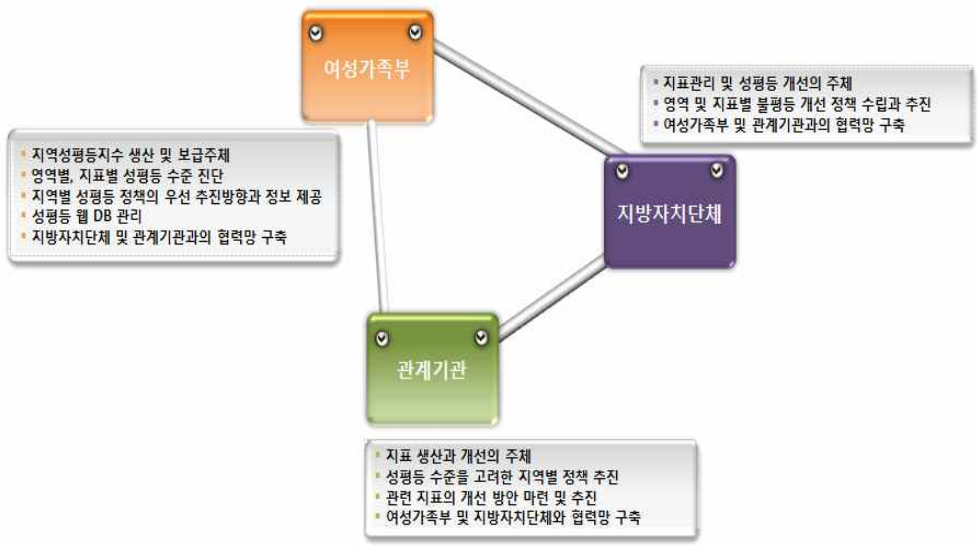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지역성평등지수는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향후 지역성평등지수의 안정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지역별로 불평등한 영역과 지표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수를 개선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생산 및 보급주체로서, 지역성평등 수준에 대해 종합지수를 산정하고 영역별, 분야별, 지표별 수준을 진단하여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다.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대상이자 지표관리와 개선의 주체로 역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표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검토하고, 불평등이 심한 영역과 분야, 지표에 대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 개선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지표별 불평등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전반적 지표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개별 지표의 생산과 개선의 주체는 관계기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역별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기관장에게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과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Ⅳ-5]는 세 주체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Ⅳ-77>은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표의 관리주체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야 추진 정책과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14) 본 절의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와 활용방안은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제시했던 관리와 활용방안을 인용,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출처: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p. 268. 수정·보완.

[그림 Ⅳ-5] 지역성평등지수의 기관별 역할

<표 Ⅳ-77>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계기관

분야	구성 지표	관계기관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고용노동부
	성별 임금격차	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고용노동부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각 정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행정자치부
	관리직 비율 성비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성비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교육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격차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

분야	구성 지표	관계기관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행정자치부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행정자치부
가족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성가족부
	가족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육아휴직자 성비	고용노동부
문화·정보	여가시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여가 만족도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이용률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p. 268. 수정·보완

둘째, 국민이 지역성평등지수의 비교와 지표의 변화들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웹에 결과를 게시하고 수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5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6.22.>)[15]”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제4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게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 비교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지역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지역 여성문제와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는 단순히 공표하는 방식에서 상시적 정보제공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은 성평등 지표를 웹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도를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여성가족부의 요청으로 지역성평등 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주요국제성평등지수를 하나로 묶어 통합 서비스 DB를 구축하였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여성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12.1.(http://www.law.go.kr/)

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국가성평등보고서와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를 기반으로 통계와 도표, 해설을 포함하였으며, 2016년 국문 서비스가 되고 있다. 2017년은 2016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지표와 지수 값을 수정할 예정이며, 국문 서비스와 더불어 영문서비스 DB를 구축하여 서비스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성평등지수가 웹 DB로 구축된다면 여성가족부는 지역성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역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12.5.), 성인지통계시스템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그림 Ⅳ-6] 성인지통계 정보시스템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축 화면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지방자체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목적이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분야,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되도록 촉진하는데 있다. 201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광역+기초)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는 10,294개[16]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안전,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사업분석에 대해 성평등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성주류화 도구 중 하나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선정에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있지 않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은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방안의 하나로 성별영향분석평가과 연계하여 불평등이 높은 영역 및 지표와 관련된 사업(혹은 계획)에 대해 선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성인지예산서와 연계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평등지수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을 보면, 단기적 노력과 정책추진으로 개선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적다. 대부분의 지표는 중장기적 개선 계획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 수준 개선은 다양한 정책투입과 점검을 요구한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는 중장기 목적을 두고 지역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성평등지표와 양성평등정책의 지역별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부록 3>).

16) 여성가족부(2016),「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p5.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12～2016),『공무원연금통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1～2015),『교육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2012～2016),『국민연금통계연보』.

경찰청(2011～2015),『범죄분석』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1),『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태홍·김영택·주재선·배호중(2014),『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2013),『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김태홍·이택면·주재선(2011),『성별 고용평등지표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2012～2016),『건강보험통계』.

보건복지부(2012～2016),『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사학연금관리공단(2012～2016),『사학연금통계』.

전기택·문유경·주재선(2009),『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김난주·박건표·동제연(2013),『주요 정책 부문별 성인지 통계 개선·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2015),『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2015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5),『한국의 성인지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질병관리공단(2012～2016),『지역사회건강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2～2016),『고용보험통계』.

한국인터넷진흥원(2012～2016),『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청(2012～2016),『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1～2016),『사회조사』.

통계청(2000,2005,2010,2015),『생활시간조사』.

통계청(2012~2016),『인구동향조사』.
UNDP(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통계DB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선거통계시스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성인지통계시스템 DB
통계청(2016), 국가통계포털(KOSIS)

부 록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 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287

<부록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290

<부록 3>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2016) 318

<부록 4>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2016) 319

<부록 1> 지역성평등지수 구성 지표의 정의, 자료원 및 생산주기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경제활동 분야 (3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만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년
	성별 임금격차(성비)	최근 3개월 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에 대한 성비 * 세금공제전 3개월 평균 임금 활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8월)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의사결정 분야 (4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해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성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성비	지역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성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1년
	관리직 비율 성비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비율 성비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고용조사」로 보정	1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	지역 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수시
교육·직업 훈련 분야 (3개)	평균교육년수 성비	평균교육년수의 성비	통계청, 「인구총조사」	5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복지분야 (2개)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성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별 비율 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보건분야 (3개)	건강관련 삶의 질 (EQ-5D)의 성별 격차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 / 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값에 대한 성비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성별 건강검진 수검자를 성별 건강검진대상자로 나눈 백분율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성비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1년
안전분야 (2개)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인식 성비	현 사회에서 범죄위험으로부터 느끼는 안전도의 남녀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경찰청, 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수시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가족분야 (4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를 한 사람의 1주일 평균 시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만15세 이상 인구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정도('매우만족+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육아휴직자의 성비	만8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의 성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분석	1년
문화정보 분야 (3개)	여가시간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여가만족도 성비	15세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만족도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인터넷 이용률 성비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비율이며,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경험자 성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부록 2>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표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시·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65.9	54.4	77.3	65.6	54.4	76.8
서울특별시	67.5	57.3	78.0	66.4	56.7	76.6
부산광역시	64.2	53.5	75.2	64.5	53.7	75.7
대구광역시	65.0	54.9	75.2	65.7	57.1	74.4
인천광역시	68.7	56.5	80.7	68.4	57.2	79.3
광주광역시	62.4	52.9	72.2	62.2	51.4	73.4
대전광역시	63.6	51.8	75.3	64.1	52.4	75.8
울산광역시	63.9	48.3	78.6	63.1	45.4	79.6
경기도	65.8	52.5	79.0	65.7	52.7	78.5
강원도	62.0	52.0	71.7	63.5	54.0	72.9
충청북도	63.2	52.9	73.1	63.1	53.1	72.6
충청남도	67.0	54.7	78.6	67.0	55.1	77.8
전라북도	63.4	51.9	74.7	62.9	50.9	74.6
전라남도	67.4	56.1	77.8	67.6	58.4	76.5
경상북도	65.9	54.7	76.6	67.2	57.2	76.9
경상남도	66.0	54.2	77.3	64.3	51.2	76.7
제주도	73.9	67.6	80.1	72.1	67.3	76.8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67.1	56.2	77.9	68.0	57.3	78.7	68.5	58.2	78.6
서울특별시	68.1	58.7	78.0	68.9	59.7	78.6	68.0	58.8	77.7
부산광역시	63.6	53.9	73.6	65.4	55.0	76.0	65.1	56.6	73.9
대구광역시	65.2	55.4	75.2	66.6	57.0	76.3	67.4	57.1	78.0
인천광역시	68.4	57.3	79.2	67.8	57.4	78.0	69.5	58.7	80.1
광주광역시	63.7	55.1	72.6	64.6	54.0	75.4	65.0	55.7	74.5
대전광역시	64.6	52.8	76.4	67.7	55.6	79.8	67.8	57.4	78.3
울산광역시	62.8	43.7	80.6	61.9	42.5	79.7	64.2	46.9	80.0
경기도	67.5	55.1	79.7	68.7	56.7	80.4	69.2	57.8	80.3
강원도	64.7	55.0	74.3	66.0	57.6	74.1	67.5	59.6	74.9
충청북도	68.3	57.9	78.3	70.6	61.6	79.3	71.3	62.7	79.4
충청남도	70.0	57.3	81.6	70.6	58.9	81.3	72.1	60.9	82.3
전라북도	65.5	54.5	76.5	66.7	56.3	77.0	66.5	57.7	75.3
전라남도	68.7	58.9	78.0	68.7	58.5	78.4	69.3	60.0	78.2
경상북도	69.7	60.2	78.9	70.6	60.5	80.3	70.6	60.0	80.6
경상남도	66.9	55.3	77.7	66.3	54.4	77.4	68.3	57.5	78.3
제주도	71.2	64.7	77.5	72.8	65.5	79.8	75.1	68.3	81.7

주: 1)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2) 2011~2012년은 4분기, 2013년 이후는 하반기 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표 1-2> 성별 임금격차

(단위: 천원,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전국	1,445	2,406	60.1	1,492	2,486	60.0	1,521	2,588	58.8
서울특별시	1,657	2,597	63.8	1,729	2,652	65.2	1,720	2,764	62.2
부산광역시	1,355	2,218	61.1	1,353	2,231	60.6	1,341	2,290	58.6
대구광역시	1,273	2,072	61.4	1,309	2,167	60.4	1,330	2,387	55.7
인천광역시	1,309	2,217	59.0	1,372	2,238	61.3	1,442	2,418	59.6
광주광역시	1,366	2,206	61.9	1,427	2,333	61.2	1,576	2,433	64.8
대전광역시	1,385	2,363	58.6	1,441	2,455	58.7	1,454	2,513	57.9
울산광역시	1,342	2,724	49.3	1,431	3,093	46.3	1,540	3,178	48.5
경기도	1,488	2,531	58.8	1,536	2,628	58.4	1,569	2,744	57.2
강원도	1,345	2,147	62.6	1,391	2,234	62.3	1,426	2,241	63.6
충청북도	1,391	2,325	59.8	1,413	2,416	58.5	1,418	2,340	60.6
충청남도	1,373	2,291	59.9	1,356	2,312	58.7	1,474	2,400	61.4
전라북도	1,326	2,199	60.3	1,387	2,314	59.9	1,509	2,329	64.8
전라남도	1,260	2,387	52.8	1,325	2,500	53.0	1,339	2,529	52.9
경상북도	1,223	2,271	53.9	1,290	2,356	54.8	1,353	2,453	55.2
경상남도	1,338	2,293	58.4	1,345	2,346	57.3	1,387	2,517	55.1
제주도	1,305	2,118	61.6	1,334	2,223	60.0	1,240	2,072	59.8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전국	1,579	2,675	59.0	1,603	2,701	59.3	1,650	2,768	59.6
서울특별시	1,806	2,889	62.5	1,807	2,848	63.4	1,870	2,914	64.2
부산광역시	1,408	2,486	56.6	1,494	2,473	60.4	1,538	2,509	61.3
대구광역시	1,395	2,367	58.9	1,433	2,443	58.7	1,557	2,546	61.1
인천광역시	1,461	2,452	59.6	1,492	2,485	60.0	1,571	2,599	60.4
광주광역시	1,607	2,560	62.8	1,607	2,617	61.4	1,640	2,668	61.5
대전광역시	1,590	2,626	60.5	1,562	2,546	61.4	1,679	2,751	61.0
울산광역시	1,583	3,450	45.9	1,630	3,573	45.6	1,732	3,974	43.6
경기도	1,634	2,770	59.0	1,650	2,823	58.4	1,656	2,824	58.6
강원도	1,409	2,364	59.6	1,435	2,363	60.7	1,491	2,439	61.1
충청북도	1,445	2,341	61.7	1,502	2,394	62.7	1,558	2,447	63.7
충청남도	1,513	2,541	59.5	1,571	2,627	59.8	1,644	2,784	59.1
전라북도	1,511	2,343	64.5	1,509	2,421	62.3	1,489	2,329	63.9
전라남도	1,313	2,581	50.9	1,314	2,572	51.1	1,332	2,600	51.2
경상북도	1,349	2,537	53.2	1,444	2,594	55.7	1,478	2,631	56.2
경상남도	1,479	2,687	55.0	1,511	2,783	54.3	1,556	2,913	53.4
제주도	1,262	2,106	59.9	1,353	2,128	63.6	1,480	2,242	66.0

주: 1) 취업자의 지난 3개월 평균임금.
2) 임금 격차=여성 임금/남성 임금*100 .
3) 2010~2012년은 4분기, 2013년 이후는 하반기 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3> 상용직 근로자

(단위: 천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0,086	3,421	6,666	33.9	10,661	3,739	6,922	35.1	11,097	3,985	7,112	35.9
서울특별시	2,096	768	1,328	36.6	2,268	861	1,407	38.0	2,366	922	1,444	39.0
부산광역시	637	220	417	34.5	649	229	420	35.3	678	245	433	36.1
대구광역시	458	163	294	35.6	488	174	315	35.7	506	193	314	38.1
인천광역시	546	168	378	30.8	592	193	399	32.6	640	214	425	33.4
광주광역시	286	99	188	34.6	296	108	188	36.5	317	120	198	37.9
대전광역시	332	113	219	34.0	348	124	224	35.6	364	133	230	36.5
울산광역시	281	71	210	25.3	280	74	205	26.4	303	80	223	26.4
경기도	2,788	924	1,865	33.1	2,909	999	1,910	34.3	2,924	1,019	1,905	34.8
강원도	246	92	155	37.4	266	101	165	38.0	284	111	173	39.1
충청북도	304	106	197	34.9	315	115	200	36.5	327	121	206	37.0
충청남도	397	134	263	33.8	424	140	284	33.0	468	155	313	33.1
전라북도	261	89	172	34.1	291	108	183	37.1	314	121	193	38.5
전라남도	257	81	176	31.5	264	87	176	33.0	265	89	176	33.6
경상북도	451	152	299	33.7	487	164	323	33.7	519	178	341	34.3
경상남도	659	208	451	31.6	694	226	468	32.6	729	245	485	33.6
제주도	87	33	54	37.9	92	37	55	40.2	95	40	55	42.1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1,713	4,264	7,449	36.4	12,156	4,525	7,630	37.2	12,588	4,731	7,857	37.6
서울특별시	2,524	987	1,537	39.1	2,525	1,012	1,513	40.1	2,544	1,041	1,503	40.9
부산광역시	696	251	445	36.1	739	273	466	36.9	759	290	470	38.2
대구광역시	505	191	314	37.8	537	210	327	39.1	583	237	346	40.7
인천광역시	672	231	441	34.4	688	245	442	35.6	743	268	475	36.1
광주광역시	346	135	210	39.0	367	146	221	39.8	371	138	233	37.2
대전광역시	369	142	226	38.5	381	143	238	37.5	400	156	244	39.0
울산광역시	317	78	239	24.6	329	79	250	24.0	344	88	257	25.6
경기도	3,080	1,104	1,976	35.8	3,256	1,210	2,045	37.2	3,367	1,239	2,128	36.8
강원도	299	119	180	39.8	306	126	180	41.2	316	133	183	42.1
충청북도	343	125	219	36.4	350	132	217	37.7	373	145	228	38.9
충청남도	528	175	353	33.1	557	191	366	34.3	580	207	373	35.7
전라북도	347	136	211	39.2	350	131	219	37.4	346	132	215	38.2
전라남도	296	103	193	34.8	298	103	194	34.6	313	112	201	35.8
경상북도	525	180	344	34.3	567	199	367	35.1	591	208	382	35.2
경상남도	766	263	504	34.3	802	281	522	35.0	840	291	549	34.6
제주도	101	43	57	42.6	106	43	63	40.6	118	48	70	4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4> 광역 의회의원

(단위: 명, %)

시·도	2002년				2006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682(73)	63(49)	619(24)	9.2	733(78)	89(57)	644(21)	12.1
서울특별시	102(10)	8(6)	94(4)	7.8	106(10)	13(6)	93(4)	12.3
부산광역시	44(4)	5(3)	39(1)	11.4	47(5)	6(4)	41(1)	12.8
대구광역시	27(3)	3(1)	24(2)	11.1	29(3)	5(2)	24(1)	17.2
인천광역시	29(3)	2(1)	27(2)	6.9	33(3)	3(2)	30(1)	9.1
광주광역시	19(3)	4(2)	15(1)	21.1	19(3)	3(2)	16(1)	15.8
대전광역시	19(3)	3(3)	16(0)	15.8	19(3)	3(3)	16(0)	15.8
울산광역시	19(3)	3(2)	16(1)	15.8	19(3)	5(2)	14(1)	26.3
경기도	104(10)	8(6)	96(4)	7.7	119(11)	17(7)	102(4)	14.3
강원도	43(4)	4(4)	39(0)	9.3	40(4)	4(4)	36(0)	10.0
충청북도	27(3)	3(3)	24(0)	11.1	31(3)	3(2)	28(1)	9.7
충청남도	36(4)	4(3)	32(1)	11.1	38(4)	4(3)	34(1)	10.5
전라북도	36(4)	3(2)	33(2)	8.3	38(4)	3(3)	35(1)	7.9
전라남도	51(5)	3(3)	48(2)	5.9	51(5)	4(4)	47(1)	7.8
경상북도	57(6)	4(4)	53(2)	7.0	55(5)	5(4)	50(1)	9.1
경상남도	50(5)	4(4)	46(1)	8.0	53(5)	6(4)	47(1)	11.3
제주도	19(3)	2(2)	17(1)	10.5	36(7)	5(5)	31(2)	13.9
시·도	2010년				2014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761(81)	113(58)	648(23)	14.8	789(84)	113(55)	676(29)	14.3
서울특별시	106(10)	19(6)	87(4)	17.9	106(10)	21(6)	85(4)	19.8
부산광역시	47(5)	5(3)	42(2)	10.6	47(5)	6(4)	41(1)	12.8
대구광역시	29(3)	7(2)	22(1)	24.1	30(3)	6(2)	24(1)	20.0
인천광역시	33(3)	5(3)	28(0)	15.2	35(4)	3(2)	32(2)	8.6
광주광역시	22(3)	4(2)	18(1)	18.2	22(3)	6(2)	16(1)	27.3
대전광역시	22(3)	4(3)	18(0)	18.2	22(3)	6(3)	16(0)	27.3
울산광역시	22(3)	7(3)	15(0)	31.8	22(3)	4(2)	18(1)	18.2
세종특별자치시	-	-	-	-	15(2)	3(2)	12(0)	20.0
경기도	124(12)	19(7)	105(5)	15.3	128(12)	20(7)	108(5)	15.6
강원도	42(4)	6(3)	36(1)	14.3	44(4)	3(2)	41(2)	6.8
충청북도	31(3)	3(2)	28(1)	9.7	31(3)	4(2)	27(1)	12.9
충청남도	40(4)	4(3)	36(1)	10.0	40(4)	2(2)	38(2)	5.0
전라북도	38(4)	4(3)	34(1)	10.5	38(4)	5(3)	33(1)	13.2
전라남도	57(6)	5(4)	52(2)	8.8	58(6)	5(4)	53(2)	8.6
경상북도	58(6)	8(4)	50(2)	13.8	60(6)	4(3)	56(3)	6.7
경상남도	54(5)	8(5)	46(0)	14.8	55(5)	8(4)	47(1)	14.5
제주도	36(7)	5(5)	31(2)	13.9	36(7)	7(5)	29(2)	19.4

주: 1)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 )는 광역의원비례대표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1-5> 기초 의회의원

(단위: 명, %)

시·도	2002년				2006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3,485	77	3,408	2.2	2,888(375)	437(327)	2,451(48)	15.1
서울특별시	513	29	484	5.7	419(53)	82(49)	337(4)	19.6
부산광역시	215	3	212	1.4	182(24)	34(23)	148(1)	18.7
대구광역시	140	2	138	1.4	116(14)	17(11)	99(3)	14.7
인천광역시	131	4	127	3.1	112(15)	17(13)	95(2)	15.2
광주광역시	84	5	79	6.0	68(9)	18(9)	50(0)	26.5
대전광역시	75	1	74	1.3	63(8)	10(6)	53(2)	15.9
울산광역시	59	1	58	1.7	50(7)	11(6)	39(1)	22.0
경기도	500	17	483	3.4	417(53)	65(47)	352(6)	15.6
강원도	190	1	189	0.5	169(23)	26(23)	143(0)	15.4
충청북도	150	2	148	1.3	131(17)	17(16)	114(1)	13.0
충청남도	209	1	208	0.5	178(26)	22(20)	156(6)	12.4
전라북도	237	2	235	0.8	197(24)	25(22)	172(2)	12.7
전라남도	291	3	288	1.0	243(32)	22(20)	221(12)	9.1
경상북도	339	4	335	1.2	284(37)	36(29)	248(8)	12.7
경상남도	314	2	312	0.6	259(33)	35(33)	224(0)	13.5
제주도	38	0	38	0.0	-	-	-	-
시·도	2010년				2014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2,888(376)	626(352)	2,262(24)	21.7	2,898(379)	732(363)	2,166(16)	25.3
서울특별시	419(53)	119(51)	300(2)	28.4	419(53)	139(52)	280(1)	33.2
부산광역시	182(24)	43(24)	139(0)	23.6	182(24)	51(24)	131(0)	28.0
대구광역시	116(14)	25(13)	91(1)	21.6	116(14)	33(12)	83(2)	28.4
인천광역시	112(15)	30(15)	82(0)	26.8	116(15)	30(15)	86(0)	25.9
광주광역시	68(9)	21(9)	47(0)	30.9	68(9)	23(9)	45(0)	33.8
대전광역시	63(8)	16(7)	47(1)	25.4	63(9)	20(9)	43(0)	31.7
울산광역시	50(7)	12(7)	38(0)	24.0	50(7)	13(7)	37(0)	26.0
경기도	417(54)	113(49)	304(5)	27.1	431(55)	135(52)	296(3)	31.3
강원도	169(23)	32(22)	137(1)	18.9	169(23)	38(23)	131(0)	22.5
충청북도	131(17)	26(16)	105(1)	19.8	131(17)	28(16)	103(1)	21.4
충청남도	178(26)	32(26)	146(0)	18.0	169(25)	40(25)	129(0)	23.7
전라북도	197(24)	30(20)	167(4)	15.2	197(24)	37(24)	160(0)	18.8
전라남도	243(32)	39(29)	204(3)	16.0	243(32)	44(32)	199(0)	18.1
경상북도	284(37)	42(32)	242(5)	14.8	284(37)	44(28)	240(9)	15.5
경상남도	259(33)	46(32)	213(1)	17.8	260(35)	57(35)	203(0)	21.9
제주도	-	-	-	-	-	-	-	-

주: 1)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 )는 기초의원비례대표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표 1-6>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0,078	1,730	18,348	8.6	20,390	1,869	18,521	9.2	20,934	2,064	18,870	9.9
서울특별시	3,103	459	2,644	14.8	3,096	490	2,606	15.8	3,180	549	2,631	17.3
부산광역시	1,276	115	1,161	9.0	1,316	137	1,179	10.4	1,343	152	1,191	11.3
대구광역시	814	84	730	10.3	858	88	770	10.3	884	102	782	11.5
인천광역시	1,117	123	994	11.0	1,143	127	1,016	11.1	1,163	132	1,031	11.3
광주광역시	621	68	553	11.0	641	76	565	11.9	673	82	591	12.2
대전광역시	630	67	563	10.6	635	69	566	10.9	639	76	563	11.9
울산광역시	481	35	446	7.3	501	33	468	6.6	511	38	473	7.4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156	17	139	10.9
경기도	3,018	287	2,731	9.5	3,089	323	2,766	10.5	3,190	343	2,847	10.8
강원도	1,078	62	1,016	5.8	1,086	60	1,026	5.5	1,121	64	1,057	5.7
충청북도	827	42	785	5.1	830	41	789	4.9	861	49	812	5.7
충청남도	1,150	59	1,091	5.1	1,196	61	1,135	5.1	1,154	60	1,094	5.2
전라북도	1,110	67	1,043	6.0	1,129	77	1,052	6.8	1,147	84	1,063	7.3
전라남도	1,321	65	1,256	4.9	1,319	73	1,246	5.5	1,327	79	1,248	6.0
경상북도	1,526	72	1,454	4.7	1,563	86	1,477	5.5	1,558	94	1,464	6.0
경상남도	1,474	75	1,399	5.1	1,465	76	1,389	5.2	1,498	87	1,411	5.8
제주도	532	50	482	9.4	523	52	471	9.9	529	56	473	10.6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20,737	2,040	18,697	9.8	21,805	2,527	19,278	11.6	21,787	2,535	19,252	11.6
서울특별시	3,021	521	2,500	17.2	3,329	707	2,622	21.2	3,192	647	2,545	20.3
부산광역시	1,328	144	1,184	10.8	1,386	174	1,212	12.6	1,396	195	1,201	14.0
대구광역시	904	103	801	11.4	963	119	844	12.4	970	119	851	12.3
인천광역시	1,171	128	1,043	10.9	1,261	157	1,104	12.5	1,258	156	1,102	12.4
광주광역시	678	79	599	11.7	710	106	604	14.9	721	95	626	13.2
대전광역시	615	81	534	13.2	670	94	576	14.0	664	94	570	14.2
울산광역시	511	35	476	6.8	542	47	495	8.7	537	49	488	9.1
세종특별자치시	177	18	159	10.2	206	26	180	12.6	228	29	199	12.7
경기도	3,148	317	2,831	10.1	3,323	386	2,937	11.6	3,352	395	2,957	11.8
강원도	1,141	65	1,076	5.7	1,172	81	1,091	6.9	1,174	94	1,080	8.0
충청북도	875	61	814	7.0	898	65	833	7.2	911	80	831	8.8
충청남도	1,150	64	1,086	5.6	1,192	71	1,121	6.0	1,197	75	1,122	6.3
전라북도	1,113	91	1,022	8.2	1,170	110	1,060	9.4	1,174	106	1,068	9.0
전라남도	1,324	84	1,240	6.3	1,361	108	1,253	7.9	1,374	107	1,267	7.7
경상북도	1,593	102	1,491	6.4	1,594	110	1,484	6.9	1,632	113	1,519	6.9
경상남도	1,459	85	1,374	5.8	1,485	103	1,382	6.9	1,469	113	1,356	7.7
제주도	529	62	467	11.7	543	63	480	11.6	538	68	470	12.6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부표 1-7> 관리직 근로자

(단위: 천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562	53	509	9.4	515	52	463	10.1	464	51	413	11.0
서울특별시	175	17	158	9.7	143	14	129	9.8	122	16	106	13.1
부산광역시	38	3	35	7.9	32	1	31	3.1	39	4	35	10.3
대구광역시	31	3	28	9.7	27	3	24	11.1	24	1	23	4.2
인천광역시	31	5	27	16.1	27	3	24	11.1	27	3	24	11.1
광주광역시	18	2	16	11.1	16	2	14	12.5	12	2	10	16.7
대전광역시	19	1	18	5.3	16	1	15	6.3	13	1	12	7.7
울산광역시	9	1	9	11.1	9	1	8	11.1	8	0	7	0.0
경기도	123	12	111	9.8	134	16	118	11.9	118	14	104	11.9
강원도	8	1	8	12.5	9	1	8	11.1	12	2	10	16.7
충청북도	13	0	13	0.0	11	1	11	9.1	9	1	9	11.1
충청남도	17	3	15	17.6	17	3	14	17.6	13	2	11	15.4
전라북도	13	2	12	15.4	12	1	11	8.3	11	1	11	9.1
전라남도	11	1	10	9.1	8	0	8	0.0	11	0	11	0.0
경상북도	16	2	14	12.5	14	1	13	7.1	14	1	13	7.1
경상남도	37	2	34	5.4	38	3	35	7.9	27	2	25	7.4
제주도	3	0	2	0.0	4	1	3	25.0	3	0	3	0.0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403	46	358	11.4	397	44	352	11.1	353	37	316	10.5
서울특별시	113	17	96	15.0	103	17	86	16.5	77	14	63	18.2
부산광역시	38	4	35	10.5	37	4	33	10.8	24	2	22	8.3
대구광역시	21	1	19	4.8	24	3	21	12.5	26	3	23	11.5
인천광역시	23	3	20	13.0	18	3	15	16.7	17	3	13	17.6
광주광역시	9	1	8	11.1	8	2	6	25.0	9	1	8	11.1
대전광역시	10	1	9	10.0	13	3	10	23.1	14	3	11	21.4
울산광역시	6	0	6	0.0	7	0	7	0.0	9	0	9	0.0
경기도	87	9	78	10.3	83	5	78	6.0	75	4	71	5.3
강원도	10	2	8	20.0	8	1	7	12.5	9	2	8	22.2
충청북도	6	1	5	16.7	8	1	8	12.5	7	1	6	14.3
충청남도	14	1	12	7.1	16	1	15	6.3	19	1	18	5.3
전라북도	12	1	11	8.3	12	1	11	8.3	10	0	10	0.0
전라남도	9	0	9	0.0	8	0	7	0.0	5	0	5	0.0
경상북도	14	1	13	7.1	18	1	16	5.6	16	1	15	6.3
경상남도	29	3	26	10.3	29	2	27	6.9	32	1	30	3.1
제주도	3	0	3	0.0	5	1	4	20.0	5	1	5	2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8>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시·도	1995년			2000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10.3	9.4	11.2	10.6	9.8	11.5
서울특별시	11.5	10.8	12.4	11.7	11.0	12.5
부산광역시	10.6	9.8	11.5	10.8	10.1	11.6
대구광역시	10.6	9.7	11.5	10.8	10.1	11.7
인천광역시	10.7	9.9	11.5	10.9	10.1	11.6
광주광역시	10.9	10.0	12.0	11.2	10.4	12.2
대전광역시	10.9	10.1	11.9	11.2	10.4	12.1
울산광역시	-	-	-	10.9	10.2	11.6
경기도	10.7	10.0	11.6	11.1	10.4	11.9
강원도	9.1	8.0	10.1	9.5	8.5	10.5
충청북도	9.1	8.1	10.1	9.5	8.6	10.6
충청남도	8.4	7.3	9.4	8.9	7.9	9.9
전라북도	8.9	7.8	10.1	9.3	8.3	10.5
전라남도	8.0	6.8	9.4	8.4	7.2	9.8
경상북도	8.6	7.6	9.8	9.1	8.1	10.2
경상남도	9.7	8.7	10.7	9.8	8.8	10.8
제주도	9.7	8.5	11.1	10.1	8.9	11.4
시·도	2005년			2010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11.2	10.5	12.1	11.6	10.9	12.4
서울특별시	12.3	11.7	13.0	12.7	12.1	13.3
부산광역시	11.3	10.7	12.1	11.6	11.0	12.3
대구광역시	11.4	10.7	12.2	11.7	11.0	12.4
인천광역시	11.3	10.7	12.0	11.6	11.0	12.3
광주광역시	11.8	11.1	12.7	12.1	11.4	12.9
대전광역시	11.9	11.1	12.7	12.2	11.5	13.0
울산광역시	11.4	10.8	12.1	11.7	11.1	12.3
경기도	11.8	11.1	12.5	12.1	11.5	12.7
강원도	10.1	9.1	11.1	10.5	9.6	11.5
충청북도	10.2	9.3	11.2	10.7	9.8	11.6
충청남도	9.7	8.7	10.7	10.3	9.4	11.3
전라북도	9.9	8.9	11.1	10.4	9.4	11.5
전라남도	8.9	7.8	10.3	9.4	8.3	10.8
경상북도	9.7	8.8	10.9	10.2	9.2	11.3
경상남도	10.5	9.5	11.5	10.9	10.0	11.9
제주도	10.7	9.6	11.9	11.1	10.1	12.2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1-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9.0	80.5	77.6	72.5	75.0	70.2	71.3	74.3	68.6
서울특별시	62.8	66.0	59.8	56.2	60.3	52.4	55.8	60.1	51.9
부산광역시	82.8	84.6	81.2	78.0	81.2	75.3	75.8	79.8	72.4
대구광역시	83.5	85.8	81.7	79.0	81.2	77.2	76.1	79.7	73.2
인천광역시	77.4	79.9	75.2	67.8	71.0	64.9	68.1	70.1	66.3
광주광역시	85.9	88.6	83.3	80.0	82.5	77.7	79.0	82.2	76.0
대전광역시	80.2	81.0	79.4	75.3	78.5	72.3	76.3	79.1	73.8
울산광역시	92.3	92.2	92.3	84.6	86.1	83.4	83.0	85.0	81.3
경기도	77.8	79.3	76.5	70.8	73.4	68.5	69.2	72.3	66.4
강원도	87.2	87.3	87.0	82.2	83.8	80.7	80.8	83.1	78.8
충청북도	85.7	85.9	85.6	77.9	79.7	76.3	75.4	76.1	74.7
충청남도	85.1	85.5	84.8	76.3	77.3	75.4	75.2	76.8	73.8
전라북도	83.7	84.8	82.7	77.9	80.0	76.0	76.7	79.8	73.9
전라남도	85.4	86.2	84.6	79.1	80.3	78.1	77.3	79.2	75.6
경상북도	87.3	87.2	87.3	80.9	81.8	80.1	79.1	81.9	76.9
경상남도	89.2	90.6	88.1	82.7	86.0	79.9	82.0	85.3	79.2
제주도	89.6	90.7	88.5	83.9	86.0	82.1	81.6	83.7	79.5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0.7	74.5	67.4	70.9	74.6	67.6	70.8	74.6	67.3
서울특별시	55.6	59.7	51.9	56.6	60.0	53.4	56.4	60.5	52.4
부산광역시	74.9	79.8	70.8	75.0	79.2	71.4	74.3	78.2	70.8
대구광역시	75.7	80.5	71.7	75.4	79.8	71.7	75.1	79.9	70.8
인천광역시	66.9	69.5	64.5	68.6	71.3	66.1	69.5	72.2	67.0
광주광역시	78.7	82.6	75.1	78.6	81.2	76.2	77.7	80.9	74.6
대전광역시	75.6	79.4	72.3	75.6	80.8	71.0	74.2	78.3	70.4
울산광역시	82.2	84.9	80.0	80.7	83.5	78.4	78.7	81.0	76.7
세종특별자치시	67.7	71.8	65.1	68.5	75.9	62.8	66.9	73.0	62.2
경기도	69.4	73.2	66.0	69.6	73.6	65.9	70.1	73.8	66.7
강원도	79.5	82.9	76.5	79.1	83.4	75.3	78.0	82.6	73.9
충청북도	74.2	75.9	72.7	73.4	75.2	71.7	74.1	75.7	72.6
충청남도	74.2	77.5	71.5	72.9	77.2	69.1	73.3	77.5	69.7
전라북도	76.9	81.3	72.9	75.6	80.0	71.5	75.9	80.7	71.5
전라남도	76.0	79.7	72.8	74.9	78.3	71.7	72.8	77.5	68.5
경상북도	77.1	81.2	73.7	76.9	81.3	73.3	77.6	81.8	73.9
경상남도	80.2	84.6	76.5	80.8	84.6	77.5	79.5	84.6	75.1
제주도	82.8	84.8	81.0	80.7	83.9	77.7	81.9	84.7	79.3

주: 진학자는 국내진학(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 학교) + 국외진학(전문대학, 대학)으로 구분됨.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부표 1-10>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458,198	831,400	626,798	57.0	1,379,865	784,910	594,955	56.9	1,300,499	738,384	562,115	56.8
서울특별시	201,204	114,868	86,336	57.1	194,119	110,461	83,658	56.9	188,017	106,575	81,442	56.7
부산광역시	138,317	77,923	60,394	56.3	134,837	76,087	58,750	56.4	128,650	72,699	55,951	56.5
대구광역시	102,710	59,098	43,612	57.5	98,791	56,943	41,848	57.6	93,208	53,730	39,478	57.6
인천광역시	69,939	40,118	29,821	57.4	67,929	38,899	29,030	57.3	66,713	38,103	28,610	57.1
광주광역시	62,714	35,977	26,737	57.4	59,470	34,169	25,301	57.5	57,528	33,022	24,506	57.4
대전광역시	45,227	25,716	19,511	56.9	43,539	24,717	18,822	56.8	41,819	23,688	18,131	56.6
울산광역시	17,802	9,876	7,926	55.5	16,194	9,033	7,161	55.8	14,819	8,253	6,566	55.7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2,813	1,539	1,274	54.7
경기도	196,412	112,274	84,138	57.2	186,896	106,574	80,322	57.0	178,155	101,426	76,729	56.9
강원도	62,850	35,257	27,593	56.1	58,949	32,822	26,127	55.7	54,936	30,624	24,312	55.7
충청북도	51,817	29,394	22,423	56.7	47,909	27,193	20,716	56.8	43,908	24,866	19,042	56.6
충청남도	67,657	38,367	29,290	56.7	61,713	34,950	26,763	56.6	53,594	30,299	23,295	56.5
전라북도	105,192	60,339	44,853	57.4	97,559	55,695	41,864	57.1	89,906	51,175	38,731	56.9
전라남도	100,085	57,396	42,689	57.3	90,643	51,517	39,126	56.8	81,249	45,910	35,339	56.5
경상북도	115,433	66,199	49,234	57.3	106,949	61,139	45,810	57.2	97,784	55,841	41,943	57.1
경상남도	98,419	55,795	42,624	56.7	92,674	52,324	40,350	56.5	87,559	49,301	38,258	56.3
제주도	22,420	12,803	9,617	57.1	21,694	12,387	9,307	57.1	19,841	11,333	8,508	57.1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258,582	711,258	547,324	56.5	1,237,386	693,995	543,391	56.1	1,554,484	854,262	700,222	55.0
서울특별시	190,480	107,184	83,296	56.3	194,808	108,480	86,328	55.7	246,580	134,289	112,291	54.5
부산광역시	124,218	69,991	54,227	56.3	120,989	67,730	53,259	56.0	146,599	80,814	65,785	55.1
대구광역시	90,766	52,191	38,575	57.5	87,833	50,269	37,564	57.2	107,264	59,954	47,310	55.9
인천광역시	66,568	37,714	28,854	56.7	67,594	37,980	29,614	56.2	92,872	51,222	41,650	55.2
광주광역시	56,861	32,562	24,299	57.3	56,432	32,106	24,326	56.9	68,575	38,012	30,563	55.4
대전광역시	40,786	23,030	17,756	56.5	40,133	22,555	17,578	56.2	50,744	27,962	22,782	55.1
울산광역시	14,339	7,933	6,406	55.3	14,396	7,873	6,523	54.7	20,343	10,966	9,377	53.9
세종특별자치시	2,695	1,468	1,227	54.5	2,677	1,477	1,200	55.2	3,618	1,982	1,636	54.8
경기도	175,069	99,386	75,683	56.8	175,449	98,883	76,566	56.4	243,282	133,535	109,747	54.9
강원도	52,402	29,104	23,298	55.5	50,943	28,129	22,814	55.2	59,442	32,429	27,013	54.6
충청북도	40,668	22,994	17,674	56.5	39,339	22,022	17,317	56.0	49,727	27,367	22,360	55.0
충청남도	50,284	28,270	22,014	56.2	48,695	27,167	21,528	55.8	59,366	32,495	26,871	54.7
전라북도	84,720	48,171	36,549	56.9	81,465	46,031	35,434	56.5	97,750	54,089	43,661	55.3
전라남도	74,196	41,627	32,569	56.1	69,446	38,499	30,947	55.4	82,490	44,998	37,492	54.5
경상북도	92,151	52,360	39,791	56.8	88,356	49,931	38,425	56.5	102,353	56,843	45,510	55.5
경상남도	83,312	46,486	36,826	55.8	80,872	44,753	36,119	55.3	100,991	54,911	46,080	54.4
제주도	19,067	10,787	8,280	56.6	17,959	10,110	7,849	56.3	22,488	12,394	10,094	55.1

주: 일반수급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부표 1-11>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5,951,043	9,497,937	38.5	6,497,813	9,819,398	39.8	6,970,843	10,028,925	41.0
서울특별시	1,927,759	2,831,229	40.5	2,082,555	2,916,827	41.7	2,167,024	2,882,484	42.9
부산광역시	366,737	540,143	40.4	398,122	552,628	41.9	423,531	555,115	43.3
대구광역시	247,323	366,133	40.3	266,794	373,854	41.6	288,968	378,767	43.3
인천광역시	263,819	445,965	37.2	288,984	459,201	38.6	312,205	467,131	40.1
광주광역시	148,830	204,675	42.1	162,592	208,741	43.8	175,275	215,265	44.9
대전광역시	175,676	246,688	41.6	193,135	254,038	43.2	208,600	258,861	44.6
울산광역시	106,007	217,963	32.7	116,800	229,345	33.7	127,360	238,954	34.8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4,324	29,305	32.8
경기도	1,183,828	1,988,318	37.3	1,323,429	2,082,476	38.9	1,474,303	2,220,358	39.9
강원도	148,143	221,571	40.1	162,592	228,128	41.6	175,253	232,830	42.9
충청북도	165,868	264,029	38.6	179,331	273,230	39.6	191,831	276,894	40.9
충청남도	203,646	386,320	34.5	225,847	405,292	35.8	233,731	400,144	36.9
전라북도	181,081	273,732	39.8	194,965	277,423	41.3	210,484	282,769	42.7
전라남도	178,002	307,165	36.7	181,135	307,789	37.0	194,996	310,874	38.5
경상북도	259,305	501,923	34.1	285,108	524,214	35.2	304,881	534,882	36.3
경상남도	333,007	617,732	35.0	368,204	638,459	36.6	393,884	652,283	37.7
제주도	62,012	84,351	42.4	68,220	87,753	43.7	74,193	92,009	44.6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7,282,238	10,236,670	41.6	7,574,426	10,341,563	42.3	7,938,292	10,494,002	43.1
서울특별시	2,234,336	2,910,223	43.4	2,289,397	2,877,065	44.3	2,368,614	2,880,490	45.1
부산광역시	442,069	563,640	44.0	459,129	567,241	44.7	479,957	572,340	45.6
대구광역시	302,021	385,302	43.9	313,928	395,534	44.2	329,270	401,376	45.1
인천광역시	326,272	475,495	40.7	341,460	475,728	41.8	359,967	481,972	42.8
광주광역시	182,025	219,819	45.3	191,836	225,449	46.0	201,432	229,209	46.8
대전광역시	216,206	263,381	45.1	226,489	270,243	45.6	236,388	276,698	46.1
울산광역시	134,141	246,690	35.2	143,166	254,467	36.0	150,435	254,664	37.1
세종특별자치시	16,947	33,282	33.7	23,380	40,715	36.5	30,465	45,324	40.2
경기도	1,550,736	2,297,455	40.3	1,622,528	2,332,301	41.0	1,714,325	2,384,803	41.8
강원도	185,429	238,258	43.8	192,057	239,037	44.6	203,083	244,429	45.4
충청북도	202,145	286,854	41.3	211,601	291,627	42.0	220,685	297,179	42.6
충청남도	248,761	414,082	37.5	258,690	421,031	38.1	273,414	434,010	38.6
전라북도	220,726	284,342	43.7	229,563	287,662	44.4	243,677	293,205	45.4
전라남도	206,934	311,631	39.9	222,048	344,213	39.2	234,525	347,791	40.3
경상북도	319,327	541,951	37.1	331,201	537,548	38.1	348,493	546,811	38.9
경상남도	414,127	667,857	38.3	432,542	681,631	38.8	452,176	698,055	39.3
제주도	80,036	96,408	45.4	85,411	100,071	46.0	91,386	105,646	46.4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내부자료.

<부표 1-12>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5,397,122	8,731,970	38.2	5,931,615	9,054,739	39.6	6,395,846	9,268,035	40.8
서울특별시	1,791,755	2,650,721	40.3	1,945,487	2,737,254	41.5	2,028,090	2,703,460	42.9
부산광역시	328,169	489,176	40.2	358,725	501,760	41.7	384,203	504,837	43.2
대구광역시	218,319	326,837	40.0	238,729	336,777	41.5	260,131	341,915	43.2
인천광역시	236,228	414,179	36.3	261,095	427,655	37.9	283,852	436,118	39.4
광주광역시	132,171	179,541	42.4	145,338	183,465	44.2	157,528	189,993	45.3
대전광역시	153,534	212,930	41.9	171,605	222,203	43.6	186,739	227,216	45.1
울산광역시	95,036	205,556	31.6	105,657	216,868	32.8	115,948	226,367	33.9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1,942	23,575	33.6
경기도	1,073,174	1,870,725	36.5	1,208,648	1,964,102	38.1	1,358,436	2,105,825	39.2
강원도	129,011	184,789	41.1	142,980	191,528	42.7	155,381	196,560	44.1
충청북도	149,261	237,288	38.6	162,227	246,348	39.7	174,559	250,200	41.1
충청남도	183,867	353,528	34.2	203,846	370,461	35.5	212,601	366,872	36.7
전라북도	157,845	232,593	40.4	171,504	240,304	41.6	187,036	246,279	43.2
전라남도	147,694	264,364	35.8	160,841	269,200	37.4	174,407	272,727	39.0
경상북도	235,395	461,110	33.8	258,558	477,328	35.1	278,078	488,459	36.3
경상남도	309,909	575,622	35.0	334,509	593,086	36.1	359,224	607,069	37.2
제주도	55,754	73,011	43.3	61,866	76,400	44.7	67,691	80,563	45.7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6,692,641	9,476,698	41.4	6,967,593	9,586,528	42.1	7,315,852	9,740,937	42.9
서울특별시	2,093,208	2,732,719	43.4	2,146,013	2,703,722	44.3	2,223,109	2,710,300	45.1
부산광역시	401,787	512,909	43.9	417,757	517,088	44.7	438,059	522,694	45.6
대구광역시	272,086	348,076	43.9	282,696	353,867	44.4	297,398	359,672	45.3
인천광역시	297,233	444,682	40.1	311,623	445,644	41.2	329,403	451,789	42.2
광주광역시	163,349	194,452	45.7	172,237	198,196	46.5	181,353	202,089	47.3
대전광역시	193,242	230,916	45.6	201,433	235,291	46.1	210,281	240,133	46.7
울산광역시	122,446	234,139	34.3	131,234	242,353	35.1	138,250	242,480	36.3
세종특별자치시	14,232	27,493	34.1	17,604	29,786	37.1	23,826	34,008	41.2
경기도	1,430,798	2,180,838	39.6	1,500,364	2,216,428	40.4	1,588,930	2,269,637	41.2
강원도	165,202	202,004	45.0	171,329	204,388	45.6	181,582	209,731	46.4
충청북도	184,314	260,320	41.5	193,414	265,940	42.1	201,938	271,463	42.7
충청남도	227,064	381,241	37.3	236,389	389,218	37.8	250,464	402,264	38.4
전라북도	197,050	248,700	44.2	205,699	253,267	44.8	218,935	258,171	45.9
전라남도	185,970	273,495	40.5	200,787	307,742	39.5	212,522	311,555	40.6
경상북도	292,099	496,199	37.1	303,168	494,394	38.0	319,704	503,847	38.8
경상남도	379,177	623,441	37.8	397,375	640,020	38.3	415,948	656,508	38.8
제주도	73,384	85,074	46.3	78,471	89,184	46.8	84,150	94,596	47.1

주: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부표 1-13> 공무원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428,179	624,228	40.7	435,467	622,491	41.2	445,641	618,831	41.9
서울특별시	86,664	133,808	39.3	86,706	132,801	39.5	88,456	130,623	40.4
부산광역시	28,446	40,775	41.1	28,916	40,718	41.5	29,343	40,338	42.1
대구광역시	22,289	32,181	40.9	20,972	29,934	41.2	21,542	29,716	42.0
인천광역시	23,452	27,809	45.8	23,536	27,573	46.1	24,017	27,346	46.8
광주광역시	13,135	19,533	40.2	13,512	19,690	40.7	13,877	19,733	41.3
대전광역시	17,492	27,943	38.5	16,545	25,923	39.0	17,087	25,856	39.8
울산광역시	9,612	10,203	48.5	9,745	10,207	48.8	9,952	10,279	49.2
세종특별자치시	-	-	-	-	-	-	2,382	5,730	29.4
경기도	91,681	98,910	48.1	94,600	99,561	48.7	95,377	95,728	49.9
강원도	15,847	32,469	32.8	16,232	32,291	33.5	16,618	32,032	34.2
충청북도	14,541	23,203	38.5	14,859	23,262	39.0	15,294	23,193	39.7
충청남도	16,467	27,184	37.7	18,531	29,247	38.8	18,113	27,787	39.5
전라북도	18,559	34,636	34.9	18,363	30,598	37.5	18,819	30,255	38.3
전라남도	28,164	38,964	42.0	18,115	34,769	34.3	18,450	34,539	34.8
경상북도	18,027	30,698	37.0	20,486	36,653	35.9	20,846	36,308	36.5
경상남도	18,012	35,420	33.7	28,478	38,731	42.4	29,434	38,727	43.2
제주도	5,791	10,492	35.6	5,871	10,533	35.8	6,034	10,641	36.2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454,954	617,656	42.4	468,031	613,116	43.3	480,124	612,914	43.9
서울특별시	89,323	128,841	40.9	90,675	124,727	42.1	91,999	122,257	42.9
부산광역시	29,920	40,788	42.3	30,778	40,394	43.2	31,192	40,109	43.7
대구광역시	22,291	30,109	42.5	23,403	34,659	40.3	23,818	34,845	40.6
인천광역시	24,280	26,862	47.5	24,577	25,992	48.6	25,011	26,010	49.0
광주광역시	14,556	19,945	42.2	15,315	21,852	41.2	15,675	21,838	41.8
대전광역시	17,981	26,725	40.2	19,906	29,174	40.6	20,980	30,825	40.5
울산광역시	10,094	10,205	49.7	10,273	9,738	51.3	10,465	9,811	51.6
세종특별자치시	2,715	5,789	31.9	5,776	10,929	34.6	6,639	11,316	37.0
경기도	98,308	97,675	50.2	99,520	96,800	50.7	101,681	96,202	51.4
강원도	16,853	31,985	34.5	17,193	30,361	36.2	17,824	30,477	36.9
충청북도	15,711	22,958	40.6	15,946	22,149	41.9	16,460	22,167	42.6
충청남도	18,475	27,357	40.3	18,945	26,231	41.9	19,486	26,221	42.6
전라북도	19,028	29,572	39.2	19,214	28,449	40.3	19,962	29,230	40.6
전라남도	18,726	34,622	35.1	18,973	33,069	36.5	19,638	32,801	37.4
경상북도	21,034	35,655	37.1	21,551	33,172	39.4	22,197	33,144	40.1
경상남도	29,503	38,014	43.7	29,565	35,329	45.6	30,396	35,407	46.2
제주도	6,156	10,554	36.8	6,421	10,091	38.9	6,701	10,254	39.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부표 1-14> 사학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25,742	141,739	47.0	130,731	142,168	47.9	129,356	142,059	47.7
서울특별시	49,340	46,700	51.4	50,362	46,772	51.8	50,478	48,401	51.1
부산광역시	10,122	10,192	49.8	10,481	10,150	50.8	9,985	9,940	50.1
대구광역시	6,715	7,115	48.6	7,093	7,143	49.8	7,295	7,136	50.6
인천광역시	4,139	3,977	51.0	4,353	3,973	52.3	4,336	3,667	54.2
광주광역시	3,524	5,601	38.6	3,742	5,586	40.1	3,870	5,539	41.1
대전광역시	4,650	5,815	44.4	4,985	5,912	45.7	4,774	5,789	45.2
울산광역시	1,359	2,204	38.1	1,398	2,270	38.1	1,460	2,308	38.8
경기도	18,973	18,683	50.4	20,181	18,813	51.8	20,490	18,805	52.1
강원도	3,285	4,313	43.2	3,380	4,309	44.0	3,254	4,238	43.4
충청북도	2,066	3,538	36.9	2,245	3,620	38.3	1,978	3,501	36.1
충청남도	3,312	5,608	37.1	3,470	5,584	38.3	3,017	5,485	35.5
전라북도	4,677	6,503	41.8	5,098	6,521	43.9	4,629	6,235	42.6
전라남도	2,144	3,837	35.8	2,179	3,820	36.3	2,139	3,608	37.2
경상북도	5,883	10,115	36.8	6,064	10,233	37.2	5,957	10,115	37.1
경상남도	5,086	6,690	43.2	5,217	6,642	44.0	5,226	6,487	44.6
제주도	467	848	35.5	483	820	37.1	468	805	36.8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34,643	142,316	48.6	138,802	141,919	49.4	142,316	140,151	50.3
서울특별시	51,805	48,663	51.5	52,709	48,616	52.0	53,506	47,933	52.7
부산광역시	10,362	9,943	51.0	10,594	9,759	52.0	10,706	9,537	52.8
대구광역시	7,644	7,117	51.7	7,829	7,008	52.7	8,054	6,859	54.0
인천광역시	4,759	3,951	54.6	5,260	4,092	56.2	5,553	4,173	57.0
광주광역시	4,120	5,422	43.1	4,284	5,401	44.2	4,404	5,282	45.4
대전광역시	4,983	5,740	46.4	5,150	5,778	47.1	5,127	5,740	47.1
울산광역시	1,601	2,346	40.5	1,659	2,376	41.1	1,720	2,373	42.0
경기도	21,630	18,942	53.3	22,644	19,073	54.2	23,714	18,964	55.5
강원도	3,374	4,269	44.1	3,535	4,288	45.1	3,677	4,221	46.5
충청북도	2,120	3,576	37.2	2,241	3,538	38.7	2,287	3,549	39.1
충청남도	3,222	5,484	37.0	3,356	5,582	37.5	3,464	5,525	38.5
전라북도	4,648	6,070	43.3	4,650	5,946	43.8	4,780	5,804	45.1
전라남도	2,238	3,514	38.9	2,288	3,402	40.2	2,365	3,435	40.7
경상북도	6,194	10,097	38.0	6,482	9,982	39.3	6,592	9,820	40.1
경상남도	5,447	6,402	45.9	5,602	6,282	47.1	5,832	6,140	48.7
제주도	496	780	38.8	519	796	39.4	535	796	40.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내부자료.

<부표 1-15>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0.948	0.931	0.966	0.947	0.932	0.962	0.948	0.934	0.963
서울특별시	0.959	0.948	0.971	0.943	0.928	0.959	0.951	0.937	0.966
부산광역시	0.958	0.946	0.971	0.947	0.933	0.962	0.957	0.944	0.97
대구광역시	0.956	0.945	0.969	0.954	0.939	0.969	0.949	0.934	0.966
인천광역시	0.957	0.945	0.969	0.946	0.93	0.963	0.95	0.936	0.965
광주광역시	0.964	0.952	0.976	0.954	0.939	0.968	0.957	0.946	0.969
대전광역시	0.969	0.960	0.978	0.964	0.956	0.972	0.966	0.955	0.978
울산광역시	0.964	0.953	0.975	0.964	0.953	0.974	0.962	0.951	0.972
경기도	0.958	0.945	0.971	0.95	0.935	0.965	0.957	0.944	0.971
강원도	0.939	0.920	0.958	0.943	0.924	0.963	0.946	0.927	0.965
충청북도	0.951	0.935	0.968	0.947	0.93	0.964	0.948	0.930	0.965
충청남도	0.947	0.931	0.963	0.932	0.915	0.949	0.939	0.921	0.957
전라북도	0.944	0.927	0.961	0.943	0.926	0.96	0.938	0.922	0.954
전라남도	0.939	0.920	0.958	0.936	0.915	0.958	0.935	0.916	0.956
경상북도	0.944	0.927	0.961	0.94	0.923	0.958	0.949	0.934	0.964
경상남도	0.949	0.934	0.965	0.945	0.927	0.962	0.949	0.931	0.967
제주특별자치도	0.947	0.930	0.965	0.943	0.925	0.961	0.943	0.927	0.958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0.945	0.929	0.962	0.948	0.934	0.963	0.947	0.932	0.963
서울특별시	0.944	0.928	0.961	0.942	0.927	0.957	0.948	0.933	0.963
부산광역시	0.95	0.937	0.965	0.945	0.929	0.962	0.951	0.938	0.965
대구광역시	0.95	0.935	0.965	0.944	0.930	0.959	0.953	0.940	0.966
인천광역시	0.942	0.926	0.958	0.935	0.915	0.954	0.946	0.932	0.960
광주광역시	0.953	0.938	0.969	0.946	0.932	0.960	0.953	0.936	0.971
대전광역시	0.955	0.939	0.971	0.958	0.945	0.970	0.954	0.941	0.967
울산광역시	0.961	0.948	0.974	0.951	0.935	0.967	0.958	0.942	0.974
세종특별자치시	-	-	-	0.924	0.913	0.935	0.940	0.928	0.952
경기도	0.948	0.933	0.963	0.942	0.927	0.957	0.951	0.937	0.965
강원도	0.939	0.919	0.959	0.937	0.918	0.955	0.940	0.924	0.957
충청북도	0.939	0.922	0.956	0.936	0.918	0.954	0.939	0.923	0.955
충청남도	0.933	0.913	0.952	0.926	0.902	0.950	0.933	0.912	0.953
전라북도	0.937	0.915	0.959	0.923	0.903	0.945	0.941	0.926	0.958
전라남도	0.93	0.907	0.953	0.922	0.898	0.947	0.933	0.912	0.954
경상북도	0.941	0.922	0.959	0.934	0.914	0.953	0.938	0.920	0.956
경상남도	0.947	0.929	0.966	0.940	0.925	0.955	0.948	0.932	0.965
제주특별자치도	0.941	0.926	0.957	0.936	0.917	0.955	0.945	0.931	0.960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8-201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1-16>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시·도	2010년			2011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68.2	66.5	69.6	72.6	71.0	73.9
서울특별시	63.8	63.3	64.2	68.8	68.4	69.2
부산광역시	71.0	69.5	72.2	74.6	73.3	75.7
대구광역시	68.7	67.6	69.6	73.1	72.0	74.0
인천광역시	67.3	65.1	69.0	73.4	71.5	74.9
광주광역시	70.8	69.5	71.9	75.6	74.7	76.3
대전광역시	71.8	70.3	73.0	75.6	74.5	76.5
울산광역시	74.2	65.9	80.0	77.9	69.2	83.5
경기도	67.6	65.8	69.0	72.3	70.6	73.5
강원도	68.5	67.2	69.6	72.4	71.6	73.1
충청북도	72.4	71.5	73.2	75.9	75.0	76.6
충청남도	68.6	67.0	69.9	73.0	71.2	74.5
전라북도	71.5	71.1	71.8	74.7	74.3	75.1
전라남도	70.0	68.6	71.2	73.3	72.0	74.5
경상북도	70.4	68.0	72.3	74.2	72.0	76.1
경상남도	69.9	66.3	72.6	73.4	69.4	76.5
제주도	64.5	65.3	63.8	66.5	67.3	65.9

시·도	2012년			2013			201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2.9	71.3	74.2	72.1	70.3	73.7	74.8	73.1	76.2
서울특별시	69.2	68.8	69.6	68.7	68.1	69.2	71.3	70.8	71.8
부산광역시	74.2	73.0	75.3	73.6	71.9	75.1	75.9	74.4	77.3
대구광역시	73.5	72.6	74.2	72.3	71.2	73.3	74.4	73.4	75.3
인천광역시	73.3	71.4	74.8	73.0	71.0	74.7	76.0	74.0	77.6
광주광역시	75.2	74.2	76.1	75.6	74.7	76.4	78.3	77.4	79.1
대전광역시	76.8	75.6	77.8	76.2	75.1	77.2	78.6	77.5	79.6
울산광역시	77.8	69.2	83.3	76.8	67.5	82.7	79.4	71.8	84.3
세종특별자치시	76.5	74.8	77.8	75.2	73.7	76.4	77.2	75.8	78.3
경기도	71.9	70.3	73.2	71.5	69.3	73.2	74.3	72.4	75.8
강원도	73.8	72.5	75.0	71.5	70.4	72.4	75.4	74.4	76.3
충청북도	76.6	75.5	77.5	75.6	74.5	76.6	77.9	76.8	78.8
충청남도	73.4	71.4	75.0	72.7	70.4	74.5	75.0	72.6	77.0
전라북도	74.8	74.0	75.4	74.1	73.7	74.5	77.5	76.8	78.1
전라남도	74.5	73.1	75.7	73.8	72.5	74.9	76.3	74.9	77.5
경상북도	74.9	72.5	76.8	73.3	70.9	75.4	75.3	72.8	77.4
경상남도	73.9	69.9	77.0	73.0	68.8	76.3	75.0	71.3	77.9
제주도	69.6	70.9	68.3	68.6	69.5	67.8	71.3	72.6	70.1

주: 1) 수검률=건강검진수검인원/건강검진대상인원*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은 1차 수검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통계」.

<부표 1-17>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p)

시·도	2008년				2010년			
	전체	여성	남성	남녀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차이
전국	8.3	7.2	9.3	2.1	11.3	9.2	13.4	4.2
서울특별시	9.3	8.5	10.1	1.6	14.4	11.7	17.0	5.3
부산광역시	10.5	8.6	12.3	3.7	9.8	8.4	11.2	2.8
대구광역시	6.9	5.0	8.7	3.7	6.3	4.6	7.9	3.3
인천광역시	7.2	6.7	7.7	1.0	11.7	9.9	13.5	3.6
광주광역시	8.4	7.6	9.2	1.6	9.5	7.7	11.3	3.6
대전광역시	5.5	4.1	6.9	2.8	12.2	9.7	14.6	4.9
울산광역시	9.0	7.0	11.0	4.0	14.1	11.1	17.0	5.9
경기도	8.7	7.4	9.9	2.5	10.0	7.5	12.4	4.9
강원도	6.0	5.4	6.6	1.2	11.7	9.0	14.4	5.4
충청북도	9.2	7.8	10.5	2.7	8.7	7.6	9.7	2.1
충청남도	7.0	6.6	7.4	0.8	9.5	7.7	11.2	3.5
전라북도	5.9	5.4	6.4	1.0	11.8	8.7	14.8	6.1
전라남도	7.8	6.6	9.0	2.4	16.1	15.9	16.3	0.4
경상북도	5.2	3.8	6.5	2.7	8.6	6.4	10.7	4.3
경상남도	9.9	9.7	10.0	0.3	12.3	11.2	13.4	2.2
제주도	6.7	4.4	8.9	4.5	14.3	12.6	16.0	3.4

시·도	2012년				2014년				2016년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국	13.8	11.4	16.2	4.8	9.5	7.4	11.7	4.3	13.2	10.6	15.9	5.3
서울특별시	14.6	11.5	17.8	6.3	9.9	7.4	12.5	5.1	14.2	10.6	18.1	7.5
부산광역시	14.9	13.1	16.7	3.6	10.5	9.4	11.5	2.1	19.6	17.5	21.8	4.3
대구광역시	12.7	10.1	15.4	5.3	8.3	6.3	10.4	4.1	12.3	10.7	14.0	3.3
인천광역시	10.2	7.7	12.8	5.1	11.7	8.7	14.7	6.0	11.3	9.4	13.2	3.8
광주광역시	12.5	9.5	15.5	6.0	4.7	3.4	6.0	2.6	8.3	7.0	9.6	2.6
대전광역시	14.2	10.9	17.5	6.6	12.1	9.6	14.7	5.1	13.9	10.5	17.3	6.8
울산광역시	14.4	13.4	15.5	2.1	7.8	6.3	9.3	3.0	10.5	8.1	12.7	4.6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17.9	15.3	20.4	5.1
경기도	13.5	10.8	16.2	5.4	8.2	5.9	10.4	4.5	12.5	9.5	15.5	6.0
강원도	10.2	7.8	12.8	5.0	11.5	10.0	13.0	3.0	12.8	9.9	15.8	5.9
충청북도	12.9	9.6	16.2	6.6	11.9	9.7	14.3	4.6	13.5	9.3	17.8	8.5
충청남도	12.5	10.1	15.0	4.9	8.1	5.6	10.5	4.9	13.0	9.6	16.4	6.8
전라북도	15.2	14.4	16.2	1.8	5.4	3.5	7.5	4.0	14.8	14.8	14.7	-0.1
전라남도	20.1	19.2	21.2	2.0	11.5	10.1	12.9	2.8	11.4	10.4	12.4	2.0
경상북도	14.6	13.1	16.1	3.0	15.1	11.8	18.5	6.7	12.3	10.1	14.4	4.3
경상남도	12.5	10.9	14.2	3.3	8.5	7.0	9.9	2.9	12.3	10.3	14.2	3.9
제주도	13.7	12.0	15.7	3.7	11.0	8.0	14.2	6.2	12.6	9.8	15.3	5.5

주: 1)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의 합임. 2) 2008~2010년 15세 이상, 2012년 이후는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18> 강력범죄 피해자

(단위: 건,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서울특별시	6,629	5,418	1,211	81.7	6,853	5,726	1,127	83.6	5,987	5,115	872	85.4
부산광역시	2,346	1,861	485	79.3	2,085	1,670	415	80.1	1,797	1,482	315	82.5
대구광역시	1,088	903	185	83.0	1,097	910	187	83.0	1,182	1,034	148	87.5
인천광역시	1,525	1,204	321	79.0	1,685	1,375	310	81.6	1,509	1,289	220	85.4
광주광역시	854	683	171	80.0	941	804	137	85.4	1,052	912	140	86.7
대전광역시	794	592	202	74.6	806	641	165	79.5	707	588	119	83.2
울산광역시	517	431	86	83.4	531	447	84	84.2	468	401	67	85.7
경기도	5,205	4,267	938	82.0	5,797	4,811	986	83.0	5,628	4,804	824	85.4
강원도	729	592	137	81.2	688	580	108	84.3	657	567	90	86.3
충청북도	724	594	130	82.0	731	603	128	82.5	682	590	92	86.5
충청남도	924	734	190	79.4	1,015	821	194	80.9	1,030	846	184	82.1
전라북도	755	622	133	82.4	755	610	145	80.8	800	691	109	86.4
전라남도	840	691	149	82.3	746	620	126	83.1	757	639	118	84.4
경상북도	1,106	918	188	83.0	1,092	905	187	82.9	1,037	857	180	82.6
경상남도	1,338	1,032	306	77.1	1,313	1,023	290	77.9	1,279	1,070	209	83.7
제주도	362	303	59	83.7	333	276	57	82.9	344	288	56	83.7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서울특별시	6,234	5,469	765	87.7	6,213	5,516	697	88.8	9,403	8,614	789	91.6
부산광역시	2,178	1,860	318	85.4	1,831	1,620	211	88.5	2,157	1,906	251	88.4
대구광역시	1,368	1,191	177	87.1	1,141	984	157	86.2	1,498	1,344	154	89.7
인천광역시	1,522	1,303	219	85.6	1,456	1,252	204	86.0	2,041	1,831	210	89.7
광주광역시	976	839	137	86.0	937	832	105	88.8	972	874	98	89.9
대전광역시	806	682	124	84.6	719	619	100	86.1	955	852	103	89.2
울산광역시	536	482	54	89.9	531	464	67	87.4	603	542	61	89.9
경기도	5,749	5,016	733	87.2	5,403	4,739	664	87.7	7,377	6,541	836	88.7
강원도	720	599	121	83.2	709	594	115	83.8	787	688	99	87.4
충청북도	705	610	95	86.5	698	575	123	82.4	807	681	126	84.4
충청남도	1,095	922	173	84.2	1,121	940	181	83.9	1,210	1,058	152	87.4
전라북도	836	732	104	87.6	810	665	145	82.1	952	838	114	88.0
전라남도	914	797	117	87.2	810	700	110	86.4	902	784	118	86.9
경상북도	1,206	1,040	166	86.2	958	819	139	85.5	1,114	987	127	88.6
경상남도	1,357	1,169	188	86.1	1,231	1,058	173	85.9	1,453	1,267	186	87.2
제주도	486	419	67	86.2	391	345	46	88.2	513	448	65	87.3

자료: 경찰청, 「범죄분석」 내부자료.

<부표 1-19> 취업여부별 가사시간

(단위: 시간:분)

시·도	2004년				2009년				2014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국	2:36	0:30	4:54	0:55	2:34	0:36	4:41	1:04	2:30	0:41	4:33	1:08
서울특별시	2:11	0:27	4:46	0:51	2:17	0:28	4:32	1:03	2:15	0:38	4:27	1:00
부산광역시	2:33	0:28	4:57	0:59	2:26	0:35	4:32	1:04	2:22	0:38	4:20	1:12
대구광역시	2:26	0:30	4:41	0:59	2:25	0:34	4:58	0:45	2:31	0:38	4:22	1:17
인천광역시	2:33	0:26	5:10	0:40	2:24	0:35	4:57	1:18	2:25	0:42	4:35	1:05
광주광역시	2:25	0:28	4:44	0:51	2:31	0:36	4:32	1:15	2:29	0:45	4:18	1:11
대전광역시	2:38	0:31	4:40	0:51	2:29	0:36	4:38	1:14	2:40	0:44	4:25	1:22
울산광역시	2:24	0:29	5:18	0:50	2:29	0:36	5:11	1:01	2:48	0:37	5:12	1:37
경기도	2:37	0:31	5:11	0:57	2:39	0:37	4:45	1:05	2:20	0:39	4:47	1:07
강원도	2:52	0:35	4:34	1:17	2:25	0:43	4:07	1:13	2:40	0:46	4:24	1:19
충청북도	2:50	0:32	4:33	0:51	2:43	0:42	4:29	0:54	2:40	0:45	4:15	1:03
충청남도	3:05	0:36	5:06	0:51	3:01	0:39	4:23	0:54	3:03	0:45	4:46	1:02
전라북도	2:58	0:38	4:56	1:17	2:54	0:47	4:48	0:55	2:36	0:45	4:31	0:57
전라남도	3:03	0:31	4:22	1:02	2:41	0:45	4:13	1:27	2:52	0:51	4:11	1:16
경상북도	2:40	0:34	4:36	0:48	2:42	0:37	4:51	1:09	2:44	0:45	4:23	1:13
경상남도	2:51	0:32	4:53	0:53	2:51	0:36	5:14	0:55	2:45	0:41	4:46	1:12
제주도	2:55	0:40	4:42	1:25	2:59	0:48	4:52	1:12	2:41	0:49	4:33	1:24

주: 가사시간=가정관리 시간 + 가족 보살피기 시간, 20세 이상.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20> 가족관계 만족도(1)

(단위: %)

시·도	성별	2006년			2008년			2010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47.8	42.2	10.0	54.6	40.8	4.6	53.1	42.3	4.6
	남성	53.1	39.1	7.7	57.7	38.8	3.6	56.6	39.6	3.8
서울특별시	여성	47.2	42.5	10.3	54.2	40.9	4.9	54.3	41.0	4.7
	남성	51.3	40.4	8.3	57.0	38.9	4.2	59.1	36.5	4.4
부산광역시	여성	40.8	48.0	11.2	51.1	43.2	5.8	51.7	43.7	4.5
	남성	48.1	42.6	9.3	55.9	39.8	4.3	52.9	43.0	4.1
대구광역시	여성	44.6	44.0	11.4	52.0	43.6	4.4	48.4	48.0	3.5
	남성	51.4	39.7	8.9	54.3	42.9	2.8	53.0	43.4	3.6
인천광역시	여성	49.4	40.6	10.0	51.6	43.1	5.3	44.4	48.7	6.9
	남성	51.6	40.4	7.9	55.0	41.3	3.8	50.0	46.2	3.8
광주광역시	여성	47.8	41.6	10.7	50.3	44.8	4.9	51.2	43.3	5.5
	남성	53.6	38.9	7.4	52.9	43.8	3.3	54.5	39.5	6.0
대전광역시	여성	49.5	40.9	9.6	62.0	34.8	3.2	56.4	39.7	3.9
	남성	53.2	38.7	8.1	63.0	33.4	3.5	58.3	38.5	3.2
울산광역시	여성	50.9	41.6	7.5	53.7	43.1	3.2	48.7	45.9	5.4
	남성	54.6	39.9	5.5	60.4	35.8	3.9	54.1	42.3	3.7
경기도	여성	50.7	39.6	9.7	54.4	40.8	4.8	53.4	41.8	4.9
	남성	57.1	35.6	7.3	57.0	39.9	3.1	55.1	41.2	3.7
강원도	여성	50.1	39.4	10.4	59.6	36.9	3.5	56.2	40.0	3.8
	남성	55.1	36.9	8.0	62.2	35.2	2.6	60.9	36.4	2.7
충청북도	여성	51.2	38.6	10.2	55.4	39.1	5.5	56.8	38.9	4.3
	남성	54.6	39.1	6.3	60.3	36.0	3.7	61.0	34.2	4.8
충청남도	여성	48.7	41.4	10.0	59.1	36.6	4.3	57.8	38.8	3.4
	남성	55.7	37.0	7.2	61.5	34.7	3.8	65.3	33.5	1.2
전라북도	여성	44.2	47.3	8.5	58.1	38.1	3.8	52.4	43.6	3.9
	남성	48.4	45.5	6.1	61.3	36.1	2.5	54.6	42.3	3.0
전라남도	여성	50.2	40.4	9.4	56.5	40.5	3.0	63.8	33.1	3.1
	남성	53.9	39.0	7.0	59.7	36.0	4.3	64.0	34.0	2.0
경상북도	여성	43.0	45.4	11.6	55.3	40.8	3.9	50.9	44.5	4.6
	남성	49.9	41.5	8.6	56.5	40.4	3.1	55.7	39.8	4.4
경상남도	여성	48.5	43.3	8.3	54.6	41.2	4.2	51.0	43.8	5.1
	남성	53.6	39.5	6.9	59.2	36.9	3.9	54.7	41.6	3.8
제주도	여성	47.8	42.0	10.1	54.0	41.7	4.4	54.3	41.1	4.6
	남성	56.1	36.6	7.3	62.1	34.2	3.7	63.9	34.6	1.4

주: 2010년 이전은 15세 이상, 2012년 이후는 13세 이상.

<부표 1-20> 가족관계 만족도(2)

(단위: %)

시·도	성별	2012년			2014년			2016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54.2	41.0	4.8	53.8	41.5	4.7	54.7	41.0	4.4
	남성	58.2	37.9	3.9	56.6	39.6	3.9	58.2	37.9	3.7
서울특별시	여성	52.0	43.2	4.8	55.0	40.5	4.5	52.2	42.4	5.4
	남성	56.7	39.4	4.0	60.2	35.9	3.9	57.3	38.3	4.4
부산광역시	여성	51.1	44.1	4.8	53.5	42.9	3.6	55.6	41.3	3.1
	남성	55.9	41.3	2.8	55.5	39.6	4.9	58.3	37.6	4.0
대구광역시	여성	46.3	49.1	4.6	48.1	45.6	6.4	52.1	43.9	4.0
	남성	52.4	43.8	3.8	52.0	44.2	3.9	56.1	40.3	3.6
인천광역시	여성	51.4	41.9	6.7	55.3	40.0	4.7	54.5	41.3	4.2
	남성	54.1	40.3	5.7	57.9	39.1	3.0	55.4	39.7	5.0
광주광역시	여성	53.6	41.4	5.0	53.9	41.6	4.5	61.4	34.7	3.9
	남성	53.5	43.2	3.4	58.1	38.8	3.1	62.6	35.1	2.3
대전광역시	여성	55.6	39.2	5.3	56.9	38.3	4.8	54.1	41.1	4.8
	남성	58.9	36.5	4.7	61.4	34.9	3.8	57.3	39.4	3.3
울산광역시	여성	50.6	44.0	5.4	48.2	47.7	4.2	51.9	43.7	4.5
	남성	55.0	41.6	3.4	51.2	46.0	2.8	57.5	39.4	3.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	-	-	-	-	-	66.4	31.0	2.6
	남성	-	-	-	-	-	-	68.0	27.9	4.1
경기도	여성	54.1	40.8	5.2	50.6	43.9	5.5	54.0	41.3	4.7
	남성	59.6	36.2	4.3	53.2	42.4	4.4	58.3	37.9	3.8
강원도	여성	64.3	31.5	4.2	56.9	39.6	3.5	58.2	38.0	3.7
	남성	68.4	28.9	2.7	57.1	38.6	4.2	62.7	33.7	3.7
충청북도	여성	54.9	39.7	5.5	57.6	38.0	4.5	58.6	37.1	4.2
	남성	57.5	36.5	6.0	58.2	37.0	4.9	63.4	33.3	3.3
충청남도	여성	57.7	37.4	4.9	60.7	35.0	4.3	60.1	36.3	3.6
	남성	61.5	34.6	3.9	60.3	36.6	3.2	62.8	34.0	3.1
전라북도	여성	60.4	35.8	3.8	50.9	44.3	4.8	59.8	37.3	3.0
	남성	59.8	37.1	3.2	57.2	39.4	3.3	59.9	37.9	2.2
전라남도	여성	60.9	36.1	3.1	63.2	33.7	3.0	57.7	38.9	3.3
	남성	62.5	35.9	1.5	61.4	36.3	2.3	57.4	40.3	2.3
경상북도	여성	56.9	39.4	3.7	51.8	44.1	4.1	52.2	43.2	4.5
	남성	61.3	35.8	2.9	55.6	40.7	3.7	57.3	38.5	4.3
경상남도	여성	55.6	40.0	4.3	57.0	38.5	4.5	53.5	42.8	3.7
	남성	59.0	37.8	3.2	54.6	41.7	3.7	56.4	40.1	3.5
제주도	여성	63.8	32.1	4.2	54.3	42.7	3.0	57.2	38.5	4.2
	남성	63.6	33.1	3.3	58.2	38.7	3.1	57.0	38.8	4.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21>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명 당)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전국	23,676	26,256	110.9	24,656	26,988	109.5	24,183	26,413	109.2
서울특별시	3,407	3,658	107.4	3,336	3,668	110.0	3,177	3,435	108.1
부산광역시	1,062	1,278	120.3	1,137	1,279	112.5	1,112	1,240	111.5
대구광역시	870	1,083	124.5	865	1,085	125.4	948	1,018	107.4
인천광역시	1,270	1,391	109.5	1,375	1,490	108.4	1,449	1,548	106.8
광주광역시	795	915	115.1	865	933	107.9	866	924	106.7
대전광역시	789	833	105.6	860	876	101.9	803	862	107.3
울산광역시	447	552	123.5	520	550	105.8	530	546	103.0
세종특별자치시	-	-	-	-	-	-	63	92	146.0
경기도	6,168	6,659	108.0	6,259	6,820	109.0	6,162	6,785	110.1
강원도	729	851	116.7	799	896	112.1	773	837	108.3
충청북도	951	1,039	109.3	964	1,035	107.4	975	1,014	104.0
충청남도	1,298	1,350	104.0	1,351	1,447	107.1	1,265	1,414	111.8
전라북도	1,217	1,303	107.1	1,281	1,354	105.7	1,100	1,260	114.5
전라남도	1,346	1,479	109.9	1,403	1,425	101.6	1,309	1,419	108.4
경상북도	1,206	1,403	116.3	1,289	1,424	110.5	1,276	1,473	115.4
경상남도	1,648	1,859	112.8	1,860	2,123	114.1	1,836	1,972	107.4
제주도	473	603	127.5	492	583	118.5	539	574	106.5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전국	21,747	23,487	108.0	21,151	22,561	106.7	20,654.0	21,802	105.6
서울특별시	2,862	3,082	107.7	2,629	2,887	109.8	2,518.0	2,624	104.2
부산광역시	1,033	1,117	108.1	1,005	1,069	106.4	1,026.0	1,056	102.9
대구광역시	833	840	100.8	905	910	100.6	854.0	907	106.2
인천광역시	1,310	1,384	105.6	1,303	1,408	108.1	1,270.0	1,267	99.8
광주광역시	745	807	108.3	705	790	112.1	694.0	748	107.8
대전광역시	728	787	108.1	658	793	120.5	706.0	743	105.2
울산광역시	476	555	116.6	507	561	110.7	517.0	493	95.4
세종특별자치시	77	80	103.9	83	97	116.9	123.0	148	120.3
경기도	5,500	6,025	109.5	5,476	5,647	103.1	5,153.0	5,512	107.0
강원도	696	738	106.0	651	701	107.7	661.0	667	100.9
충청북도	813	916	112.7	834	898	107.7	807.0	829	102.7
충청남도	1,205	1,253	104.0	1,129	1,235	109.4	1,070.0	1,195	111.7
전라북도	1,129	1,154	102.2	1,005	1,074	106.9	973.0	1,060	108.9
전라남도	1,192	1,247	104.6	1,060	1,065	100.5	1,109.0	1,138	102.6
경상북도	1,097	1,243	113.3	1,128	1,237	109.7	1,210.0	1,230	101.7
경상남도	1,595	1,772	111.1	1,609	1,681	104.5	1,515.0	1,664	109.8
제주도	456	487	106.8	464	508	109.5	448.0	521	116.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1-22> 육아휴직자

(단위: 명,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전국	41,729	40,910	819	2.0	58,134	56,732	1,402	2.4	64,061	62,271	1,790	2.8
서울특별시	19,846	19,467	379	1.9	27,361	26,703	658	2.4	30,212	29,412	800	2.6
부산광역시	2,057	2,034	23	1.1	2,679	2,630	49	1.8	3,128	3,070	58	1.9
대구광역시	1,222	1,195	27	2.2	1,584	1,556	28	1.8	1,712	1,680	32	1.9
인천광역시	1,219	1,193	26	2.1	1,595	1,551	44	2.8	1,782	1,725	57	3.2
광주광역시	891	881	10	1.1	1,124	1,109	15	1.3	1,255	1,238	17	1.4
대전광역시	1,451	1,431	20	1.4	2,145	2,081	64	3.0	2,312	2,214	98	4.2
울산광역시	538	522	16	3.0	752	743	9	1.2	860	837	23	2.7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12	111	1	0.9
경기도	7,001	6,849	152	2.2	11,012	10,717	295	2.7	12,124	11,719	405	3.3
강원도	527	514	13	2.5	885	848	37	4.2	985	944	41	4.2
충청북도	810	792	18	2.2	1,151	1,132	19	1.7	1,187	1,168	19	1.6
충청남도	1,355	1,325	30	2.2	1,511	1,467	44	2.9	1,494	1,440	54	3.6
전라북도	781	768	13	1.7	1,086	1,069	17	1.6	1,243	1,211	32	2.6
전라남도	697	679	18	2.6	870	842	28	3.2	931	904	27	2.9
경상북도	1,283	1,262	21	1.6	1,588	1,550	38	2.4	1,482	1,442	40	2.7
경상남도	1,600	1,560	40	2.5	2,198	2,151	47	2.1	2,618	2,555	63	2.4
제주도	451	438	13	2.9	592	582	10	1.7	624	601	23	3.7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전국	69,604	67,311	2,293	3.3	76,831	73,410	3,421	4.5	87,339	82,467	4,872	5.6
서울특별시	32,814	31,761	1,053	3.2	35,892	34,358	1,534	4.3	40,536	38,349	2,187	5.4
부산광역시	3,114	3,048	66	2.1	3,568	3458	110	3.1	3,985	3,842	143	3.6
대구광역시	1,829	1,782	47	2.6	2,099	2030	69	3.3	2,388	2,293	95	4.0
인천광역시	1,943	1,894	49	2.5	2,094	2016	78	3.7	2,473	2,356	117	4.7
광주광역시	1,340	1,317	23	1.7	1,470	1439	31	2.1	1,644	1,585	59	3.6
대전광역시	2,511	2,398	113	4.5	2,781	2596	185	6.7	3,236	3,035	201	6.2
울산광역시	1,033	1,004	29	2.8	1,240	1178	62	5.0	1,384	1,302	82	5.9
세종특별자치시	162	159	3	1.9	193	183	10	5.2	262	253	9	3.4
경기도	13,488	12,960	528	3.9	14,728	13965	763	5.2	16,703	15,616	1,087	6.5
강원도	1,114	1,066	48	4.3	1,182	1117	65	5.5	1,350	1,246	104	7.7
충청북도	1,292	1,264	28	2.2	1,356	1292	64	4.7	1,628	1,542	86	5.3
충청남도	1,478	1,417	61	4.1	1,631	1550	81	5.0	1,855	1,724	131	7.1
전라북도	1,270	1,234	36	2.8	1,403	1348	55	3.9	1,707	1,622	85	5.0
전라남도	1,096	1,049	47	4.3	1,245	1170	75	6.0	1,405	1,323	82	5.8
경상북도	1,778	1,711	67	3.8	1,985	1888	97	4.9	2,340	2,175	165	7.1
경상남도	2,656	2,584	72	2.7	3,077	2972	105	3.4	3,539	3,371	168	4.7
제주도	686	663	23	3.4	887	850	37	4.2	904	833	71	7.9

주: 계는 분류불능과 세종시가 포함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내부자료.

<부표 1-23> 여가시간

(단위: 시간:분)

시·도	2004년						2009년						2014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전국	4:18	3:50	4:38	7:02	6:19	8:46	3:52	3:23	4:11	6:44	6:03	8:23	3:36	3:15	3:51	6:13	5:38	7:33
서울특별시	4:16	3:57	4:30	7:13	6:29	8:53	3:37	3:16	3:50	6:45	6:02	8:32	3:28	3:09	3:43	6:05	5:29	7:20
부산광역시	4:07	3:35	4:31	6:56	6:13	8:26	3:41	3:11	4:04	6:41	5:57	8:08	3:52	3:25	4:11	6:15	5:37	7:39
대구광역시	4:17	3:52	4:35	7:12	6:27	8:44	3:57	3:27	4:20	7:01	6:04	8:56	3:45	3:19	4:02	6:16	5:41	7:40
인천광역시	4:08	3:44	4:23	7:09	6:21	9:10	3:35	3:01	3:56	6:20	5:48	7:49	3:35	3:18	3:48	6:38	6:03	8:02
광주광역시	4:16	3:41	4:41	7:12	6:20	8:59	4:21	3:54	4:41	7:08	6:22	8:53	3:43	3:17	4:04	6:00	5:30	6:57
대전광역시	4:33	4:09	4:48	6:58	6:23	8:25	4:10	3:41	4:31	6:34	5:57	7:50	3:34	3:12	3:50	5:38	5:17	6:26
울산광역시	4:22	3:53	4:38	6:37	6:00	8:47	3:52	3:20	4:10	6:17	5:45	7:56	3:33	3:03	3:49	5:32	5:10	6:48
경기도	4:14	3:50	4:30	6:51	6:11	8:45	3:50	3:28	4:04	6:45	6:05	8:35	3:26	3:13	3:36	6:09	5:35	7:32
강원도	4:37	4:06	5:03	7:40	6:55	9:08	4:17	3:30	4:52	6:56	6:28	7:48	3:55	3:31	4:13	6:28	5:46	7:53
충청북도	4:22	3:46	4:50	7:25	6:42	9:01	3:55	3:14	4:23	6:42	6:07	7:58	3:25	3:08	3:38	6:20	5:55	7:13
충청남도	4:12	3:34	4:40	6:30	5:44	8:46	4:07	3:38	4:27	6:54	6:08	8:57	3:36	3:00	4:03	6:14	5:46	7:06
전라북도	4:22	3:45	4:49	6:38	5:54	8:22	4:08	3:28	4:37	6:38	6:04	7:56	3:55	3:28	4:16	6:13	5:32	7:40
전라남도	4:30	3:50	5:04	7:17	6:36	8:44	4:12	3:25	4:54	7:25	6:38	8:51	3:48	3:19	4:10	6:23	5:36	8:07
경상북도	4:32	3:59	5:01	7:07	6:34	8:20	4:02	3:32	4:24	6:23	5:45	7:48	3:46	3:23	4:02	6:35	6:02	7:53
경상남도	4:15	3:39	4:42	6:59	6:09	9:13	3:52	3:17	4:15	6:36	5:53	8:29	3:48	3:30	4:00	6:32	5:50	8:27
제주도	4:50	4:06	5:28	6:44	6:05	8:09	3:57	3:17	4:33	6:53	5:55	8:49	3:42	3:15	4:07	6:32	5:47	7:50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24> 여가활용 만족도

(단위: %)

시·도	성별	2009			2011			2013			2015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20.4	46.3	33.3	18.0	47.9	34.1	25.8	47.8	26.4	24.9	49.0	26.2
	남성	23.3	45.9	30.8	20.7	49.4	29.9	28.4	47.9	23.8	27.1	48.9	24.0
서울특별시	여성	21.7	47.9	30.5	21.5	48.3	30.1	27.5	47.8	24.8	27.2	47.2	25.6
	남성	24.4	45.7	29.9	22.9	50.5	26.6	28.5	47.1	24.4	30.7	46.3	23.1
부산광역시	여성	18.5	45.1	36.4	19.3	46.9	33.8	24.8	46.4	28.8	23.3	51.3	25.3
	남성	20.8	47.5	31.7	20.6	48.8	30.6	25.9	48.6	25.6	21.8	52.8	25.4
대구광역시	여성	20.4	45.3	34.2	16.8	47.3	35.9	22.7	50.1	27.2	22.9	52.5	24.5
	남성	23.4	47.5	29.1	20.5	49.2	30.4	24.2	51.4	24.4	26.6	49.6	23.7
인천광역시	여성	19.5	49.8	30.7	18.3	43.7	38.0	26.0	44.2	29.7	24.5	47.1	28.4
	남성	22.3	47.5	30.1	18.6	48.0	33.4	27.2	46.5	26.4	21.8	50.5	27.7
광주광역시	여성	16.3	50.3	33.3	14.0	50.3	35.7	21.7	51.6	26.7	21.8	50.5	27.7
	남성	17.5	53.1	29.3	20.7	50.5	28.9	26.0	52.2	21.8	26.2	47.2	26.5
대전광역시	여성	21.5	43.4	35.1	17.5	47.6	34.9	29.9	44.4	25.7	24.9	46.9	28.2
	남성	22.6	45.5	31.9	22.5	47.4	30.1	30.3	44.1	25.6	26.7	49.7	23.5
울산광역시	여성	23.6	49.0	27.4	17.8	47.5	34.8	24.9	52.5	22.5	18.7	56.2	24.9
	남성	28.0	47.3	24.7	21.5	49.0	29.5	26.2	54.1	19.8	22.1	57.4	20.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	-	-	-	-	-	-	-	-	32.7	46.0	21.3
	남성	-	-	-	-	-	-	-	-	-	33.5	44.9	21.6
경기도	여성	22.1	42.9	35.0	18.4	45.9	35.7	27.2	47.6	25.2	26.6	48.6	24.8
	남성	24.1	44.1	31.8	21.0	48.6	30.4	29.8	47.5	22.6	28.0	48.3	23.7
강원도	여성	19.0	52.2	28.9	13.5	52.4	34.0	25.2	48.7	26.0	24.4	49.5	26.1
	남성	23.0	47.9	29.1	19.6	52.7	27.7	33.0	45.6	21.5	28.7	49.5	21.7
충청북도	여성	19.4	49.2	31.4	13.6	50.9	35.5	27.6	43.3	29.0	25.1	47.4	27.5
	남성	22.5	48.4	29.0	16.9	50.0	33.2	28.8	45.4	25.8	30.6	45.6	23.9
충청남도	여성	20.9	42.4	36.7	17.4	49.3	33.3	22.8	51.4	25.9	23.8	46.2	30.0
	남성	26.8	40.4	32.8	21.0	49.7	29.3	28.5	46.5	25.0	29.6	44.9	25.5
전라북도	여성	19.1	49.5	31.4	14.6	46.0	39.4	24.0	45.7	30.3	19.3	51.5	29.1
	남성	24.0	47.2	28.8	16.2	47.8	35.9	27.8	47.7	24.5	20.9	51.0	28.1
전라남도	여성	21.5	46.4	32.1	13.6	58.4	28.0	19.5	50.6	29.9	24.1	47.3	28.5
	남성	25.3	45.4	29.3	20.2	51.8	28.1	26.4	51.4	22.2	28.3	47.9	23.8
경상북도	여성	17.9	49.8	32.3	15.9	47.8	36.3	22.4	50.9	26.7	18.8	52.0	29.3
	남성	21.9	48.3	29.9	19.4	49.0	31.5	25.5	49.9	24.5	22.8	51.7	25.5
경상남도	여성	16.8	44.4	38.8	15.6	49.4	34.9	27.5	46.5	26.0	26.2	49.7	24.1
	남성	19.0	44.4	36.7	18.0	49.4	32.6	30.4	46.3	23.2	27.7	51.4	20.9
제주도	여성	19.9	45.5	34.6	18.3	46.5	35.3	26.5	48.8	24.6	26.2	51.3	22.5
	남성	24.3	47.0	28.8	21.8	48.0	30.2	35.5	48.4	16.1	31.3	47.5	21.2

주: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 이후는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25> 인터넷이용률

(단위: %)

시·도	2011년			2012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78.0	72.5	83.4	78.4	73.2	83.6
서울특별시	81.1	75.8	86.6	81.5	76.4	86.8
부산광역시	75.9	69.8	82.1	76.3	70.8	81.9
대구광역시	76.0	70.4	81.6	76.5	71.2	81.9
인천광역시	81.8	76.8	86.7	82.2	77.5	86.8
광주광역시	81.0	75.3	86.8	81.4	75.9	87.0
대전광역시	80.9	75.5	86.2	81.4	76.5	86.3
울산광역시	85.0	80.0	89.7	85.7	81.3	89.8
경기도	82.9	78.6	87.1	83.1	79.2	87.0
강원도	71.2	65.2	77.1	72.1	66.7	77.3
충청북도	72.1	67.1	77.1	72.7	68.0	77.4
충청남도	69.8	63.9	75.4	71.1	65.4	76.6
전라북도	72.7	65.3	80.1	73.7	66.9	80.6
전라남도	67.9	60.1	75.8	68.5	61.0	76.2
경상북도	68.5	61.4	75.4	69.0	62.1	76.0
경상남도	72.6	66.8	78.2	73.2	67.2	78.9
제주도	73.9	67.7	80.1	74.5	68.7	80.4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82.1	78.0	86.2	83.6	79.8	87.3	85.1	81.9	88.4
서울특별시	83.2	79.7	86.9	86.2	83.0	89.5	86.7	83.5	90.0
부산광역시	84.3	80.6	88.1	83.8	80.0	87.6	87.2	84.5	90.1
대구광역시	84.7	81.0	88.4	92.1	90.2	94.1	91.1	89.2	93.0
인천광역시	82.1	78.7	85.4	82.6	79.2	85.9	85.7	82.3	89.0
광주광역시	83.0	79.8	86.2	88.1	84.3	92.0	90.1	87.6	92.6
대전광역시	87.9	85.1	90.6	83.8	80.3	87.4	85.3	82.5	88.0
울산광역시	89.5	86.5	92.3	92.7	90.7	94.6	95.8	95.2	96.5
세종특별자치시	-	-	-	-	-	-	81.5	78.5	84.3
경기도	84.3	81.0	87.6	84.9	81.4	88.4	86.1	83.0	89.2
강원도	75.8	70.5	80.9	71.5	67.2	75.7	74.1	69.7	78.5
충청북도	80.7	76.5	84.9	75.4	71.1	79.6	77.8	73.3	82.2
충청남도	80.3	75.3	85.0	74.0	69.4	78.4	76.0	71.6	80.2
전라북도	73.5	67.9	79.3	75.5	69.8	81.3	78.3	73.8	83.0
전라남도	68.2	61.4	75.2	73.0	65.9	80.3	75.5	69.7	81.5
경상북도	76.6	70.8	82.4	87.5	83.7	91.4	86.6	83.3	90.0
경상남도	81.9	76.1	87.5	82.9	78.4	87.2	86.0	82.4	89.5
제주도	80.8	75.8	85.8	83.8	79.4	88.4	85.9	82.8	88.9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내부자료.

<부표 1-26>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비율

(단위: %)

시·도	2011년			2012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2,216	4,500	33.0	2,496	4,660	34.9
서울특별시	220	434	33.6	255	464	35.5
부산광역시	141	282	33.3	154	318	32.6
대구광역시	87	315	21.6	112	329	25.4
인천광역시	134	272	33.0	143	290	33.0
광주광역시	119	242	33.0	132	246	34.9
대전광역시	150	308	32.8	169	302	35.9
울산광역시	106	272	28.0	137	258	34.7
경기도	205	262	43.9	211	273	43.6
강원도	159	297	34.9	170	323	34.5
충청북도	126	249	33.6	141	269	34.4
충청남도	113	220	33.9	123	219	36.0
전라북도	115	291	28.3	152	298	33.8
전라남도	106	196	35.1	116	208	35.8
경상북도	159	270	37.1	174	288	37.7
경상남도	124	290	30.0	144	285	33.6
제주도	152	300	33.6	163	290	36.0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국	2,920	8,055	36.3	51,556	129,492	28.5	47,911	111,157	30.1
서울특별시	299	750	39.9	8,144	12,943	38.6	7,653	11,790	39.4
부산광역시	169	506	33.4	3,266	7,131	31.4	3,217	6,497	33.1
대구광역시	147	487	30.2	1,724	4,378	28.3	1,565	3,810	29.1
인천광역시	162	482	33.6	2,992	6,709	30.8	2,641	5,748	31.5
광주광역시	154	411	37.5	1,572	3,708	29.8	1,457	3,142	31.7
대전광역시	199	505	39.4	1,700	3,235	34.4	1,834	3,059	37.5
울산광역시	153	431	35.5	1,482	3,698	28.6	1,285	3,203	28.6
세종특별자치시	96	319	30.1	363	1,154	23.9	350	832	29.6
경기도	221	519	42.6	8,297	18,851	30.6	8,008	6,910	32.1
강원도	169	510	33.1	3,314	9,755	25.4	2,996	7,989	27.3
충청북도	157	423	37.1	2,480	6,412	27.9	2,345	5,219	31.0
충청남도	148	405	36.5	2,181	7,648	22.2	2,234	6,858	24.6
전라북도	169	472	35.8	2,439	8,046	23.3	2,192	6,851	24.2
전라남도	133	360	36.9	3,416	12,806	21.1	3,239	11,118	22.6
경상북도	204	515	39.6	3,574	11,904	23.1	2,665	8,197	24.5
경상남도	166	468	35.5	3,914	9,676	28.8	3,569	8,587	29.4
제주도	174	492	35.4	698	1,438	32.7	661	1,347	32.9

주: 2013년까지는 시・도중점관리위원회(30개씩), 2014년 이후는 전체 지자체 조사.
자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부표 1-27>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28.7	31.7	25.2	28.7	31.2	25.9	27.7	31.5	23.7
서울특별시	29.5	29.0	30.1	30.6	30.6	30.7	30.6	31.0	30.1
부산광역시	26.7	26.7	26.8	26.5	27.2	25.8	27.0	27.7	26.3
대구광역시	27.8	26.3	29.3	27.0	27.7	26.3	26.6	26.5	26.8
인천광역시	30.6	29.5	31.8	31.3	29.8	32.8	31.5	31.5	31.4
광주광역시	26.7	26.2	27.3	28.6	28.5	28.7	29.0	28.6	29.5
대전광역시	30.1	28.4	31.9	28.6	26.9	30.3	27.0	26.1	27.9
울산광역시	24.3	24.5	24.2	22.7	23.6	21.8	24.5	24.8	24.3
세종특별자치시	-	-	-	-	-	-	31.0	30.8	31.2
경기도	30.1	28.4	31.8	30.6	29.2	32.0	30.0	29.4	30.6
강원도	27.7	28.4	27.0	25.4	25.8	24.9	26.3	27.4	25.2
충청북도	26.7	25.5	27.9	29.1	29.0	29.2	29.1	29.7	28.4
충청남도	26.1	25.5	26.8	28.2	27.3	29.1	29.4	29.6	29.2
전라북도	26.6	25.6	27.6	28.1	27.8	28.5	28.3	28.5	28.1
전라남도	23.0	21.5	24.6	22.5	22.7	22.3	24.4	25.2	23.6
경상북도	24.1	25.2	23.0	25.2	26.6	23.8	24.6	25.4	23.7
경상남도	25.1	25.1	25.0	24.7	24.9	24.5	23.6	24.8	22.3
제주특별자치도	26.6	27.5	25.6	30.3	30.9	29.7	29.5	31.5	27.3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24.4	26.0	22.5	26.5	28.6	24.4	25.5	27.3	23.5
서울특별시	28.7	29.0	28.4	29.7	30.0	29.4	30.3	30.6	30.0
부산광역시	24.7	25.9	23.5	25.9	27.1	24.6	26.0	27.2	24.7
대구광역시	25.9	26.2	25.5	25.2	25.6	24.8	24.4	24.8	24.0
인천광역시	31.2	30.5	31.9	32.3	31.6	33.0	30.5	29.8	31.2
광주광역시	28.7	26.9	30.6	27.5	25.7	29.4	27.0	25.2	28.9
대전광역시	28.7	28.7	28.7	28.1	28.1	28.1	28.4	28.4	28.4
울산광역시	20.1	21.4	18.9	24.5	25.8	23.3	22.9	24.2	21.7
세종특별자치시	33.6	32.9	34.4	28.1	27.4	28.8	31.9	31.2	32.6
경기도	29.3	28.1	30.5	29.9	28.7	31.1	30.5	29.3	31.7
강원도	25.2	26.0	24.3	25.5	26.3	24.7	26.8	27.6	26.0
충청북도	28.9	29.2	28.6	28.2	28.5	27.9	28.5	28.8	28.2
충청남도	28.9	29.1	28.6	28.8	29.0	28.6	28.2	28.4	28.0
전라북도	25.8	26.1	25.5	26.3	26.6	26.0	24.1	24.4	23.8
전라남도	24.4	25.1	23.6	25.3	26.0	24.5	24.4	25.1	23.6
경상북도	23.3	23.8	22.9	25.2	25.7	24.7	24.0	24.5	23.5
경상남도	23.1	23.9	22.2	24.6	25.4	23.8	24.3	25.1	23.5
제주특별자치도	28.5	30.9	26.0	28.8	31.2	26.3	25.8	28.2	23.3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부록 3>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2016)

<부표 2-1>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정책과제	추진방향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제고 •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 일·가정 양립 확산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모성보호 강화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기업문화 개선 •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 고용 격차 해소	• 여성 창업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 고용안정 지원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지원
▢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및 여성인재풀 확충 • 통일·평화·안보 분야 여성참여 활성화 및 국제사회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주도적 참여
▢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 군대, 대학, 공직, 기업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강화 •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지역사회 안전 강화
▢ 건강과 복지 증진	•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역량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자료: 여성가족부(2016.0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pp.10-22.

<부록 4>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2016)

<부표 3-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 문화예술분야 양성평등성제고 및 성차별 해소	•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개최(25개 자치구 합창단 참여) - 25개 자치구 여성합창단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고 즐기는 합창페스티벌을 통해 합창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2.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 자치구 통반장 성인지 교육 - 통반장에 대한 마을공동체 및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역량있는 마을 일꾼으로 역할 부여, 통반장의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
일·가정 양립 확산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서비스 운영(다산콜 120-5번) - 전문가(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고충해결 서비스 지원 •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신설로 근거리 상담 지원 •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으로 직장맘 편의 제공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8개 → 25개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종합상담사례집 제작·배포
		2-2-2-②.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서울시 일·가족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연구 - 서울시 일·가족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 개발 연구 - 서울시 일·가족 양립 자가진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 가족의 변화와 함께 누리는 일·가족 양립 (시리즈 1, 2, 3) 연구 •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신규 기업 대상 맞춤 방문형 진단 및 컨설팅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 집단 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 서울시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일·가족 양립 사례 공유, 시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 네트워크 포럼 - 서울시 일·가족 양립 관련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논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 ● 일·가족 양립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 - 웹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일·가족 양립 현황 진단 홍보 - 서울시의 특화된 일·가족 양립 캠페인 추진 및 관련 홍보물 제작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자율참여 강화 - 의무적 1인 1유연근무제 지양하고 자발참여 실시 ● 유연근무제 이용유형 다변화 - 직원선호 유형인 근무시간선택제 및 스마트워크센터근무 활성화 ● 부서별 자율목표제의 최소 목표치 정립 - 부서별 최소현원의 5% 이상, 부서관리자(5급 이상)의 자율참여율 20% 이상 ● 서울시 '16년 기관별 성과지표에 '유연근무 참여율' 반영 - 조직문화개선 평가분야에'유연근무 참여율'지표 지속유지 ● 매월 본청·사업소별 유연근무제 현황 공표(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재) ● 유연근무제 체험수기 공모 및 웹툰 제작·홍보(분기별) ● 유연근무제 우수부서 시상 : 4개 부서(최우수 1, 우수 3) ● 유연근무 활용한 자기시간관리 교육 - 시간관리 방법과 그 효용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일·가정 균형의 중요성 등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확충 우선순위 설정, 지역별 균형배치 - 기존 확충방식 보완, 사업내실화 및 확충속도 가속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비용절감 방안 추가 발굴 - 설치비 지원 서울시 부담률 확대, 자치구의 재원 부담 경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내에 특별활동 관련 정보 공개(월 1회)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회계 전문가가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재무회계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특별활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 도시공원 내 유휴 부지 및 건물 활용 설치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교사의 교육 및 휴가, 병가 등 보장 및 보육공백 최소화
		2-3-2.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 우수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로 대기가정 해소 및 안정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공동육아공동체 운영 지원
		2-3-3.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확대 - 편의시설 설치비 및 기 지정 시설 개보수비 지원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순회 지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장애아 보육 도우미,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등 지원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협동조합 준비단 발굴 및 육성 : 20개 - 설립 후 컨설팅 : 10개 ＊여성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기준 수립 : 3월 ＊준비단 공모 및 심사, 선정 지원 : 3~10월 ＊자문 및 사후관리 컨설팅 : 11월 ●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 - 교육과정 상·하반기 각 20시간 실시 및 협동조합 운영자간 네트워킹 워크숍 추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 2~4월 ＊여성리더 육성과정 운영 : 4~10월 ＊워크숍 개최 : 9월 ● 강사생태계 조성 사업 - 진로상담강사 역량강화 및 협동조합 조직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3월 ＊여성강사 협동조합 접수 및 선정 : 4~5월 ＊여성협동조합 조직 및 지원 : 5~10월
		3-1-2.-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보육 분야 : 대체교사 파견 및 장애아보육도우미 지원 ● 다문화 가족 분야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여성안전 분야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2-1-②.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시설·경비 업무 공무직 전환 - 기관별 직접고용 시설·경비 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2-2.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강화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 운영 - 전문가(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고충해결 서비스 지원 ●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8개 → 25개) : 온·오프라인 직장부모커뮤니티 확산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종합상담사례집 제작·배포
		3-3-1. 청년의 취업지원 강화	● 청년창업지원 - 제7기 우수창업가 200팀(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16. 1~12월 - 졸업기업 지속성장 및 창업 재도전자 지원 : '16. 1~12월 - 민간 창업지원기관과의 교류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 '14년도 참여자 계속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2. 여성 근로자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 인력센터 DB 통합 및 신규 수요 발굴 ● 기업 및 대체근무 희망자에 대한 사전 홍보(주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등) ● 대체인력 구직여성 DB 구축, 전담인력 배치로 교육 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적시 공급 ● 대체인력에 대한 검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3-3-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운영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3-3-4.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기존에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못한 취업희망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 노동 시장 진입 지원 ● 다양한 직종의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구직 또는 취·창업 희망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직장 체험의 기회 제공
		3-3-5. 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새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이탈여성의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적극적 취업 연계 서비스 및 상담 ● 사후관리서비스 : 새일센터 이용자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구직활동 지원 ● 직업교육훈련 :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 관리직 진출에서 적극적 조치	● 기획·인사·감사·예산 등 주요부서에 우수한 여성인재 전략적 배치 ●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공무원 발탁 승진 ●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조건의 경우 여성 우대 선발 ● 5급에의 승진자 선발 시 여성 비율 지속 확대
		4-1-3.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연 1~2회 -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조직담당관 위원회 기준)의 위촉직 여성위원 ●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 지속 시행 ●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국별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DB등을 공유하여 여성위원 후보 추천시 적극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4-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4-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기념사업 확산	●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사업 지원 ● 일본군위안부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 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 수집 및 기록체계 구축 등
	4-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	4-3-2.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 확대	● 성평등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 2016년 아시아여성 안전 관련 세미나 개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 공직, 기업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확대 실시 및 실효성 강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성 강조 - 전문가 집합교육(본청) 및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소)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노력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연계, 필요시 조사의뢰 및 민간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추진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보조금 및 운영 지원 ● 성폭력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하여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운영 - 시범운영 후 성과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추가설치 검토
		5-2-2-②.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법률·의료 지원사업 확대 - (사)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법률지원단,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 연계 ● 상담매뉴얼 교육, 사례관리, 상담원 워크숍 등 상담원 역량 강화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의식주 등 기본 생활 서비스 제공,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제공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2-③.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여성 자립 지원 -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활 지원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 경찰서 아웃리치 및 검·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사업 운영 -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확대 ● 법률, 의료 전문 지원단 운영 - 무료 법률 상담 실시 및 관련 판례 분석 - 건강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이슈 분석 등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가출 등 위기 여자 청소년 조기발견 및 일시보호 기능 강화 - 위기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실시 - 거리배회 및 노숙 청소녀 대상 야간보호 실시(주 1회) - 성매매 피해 청소년 긴급 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면접 상담 실시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 위기 여자 청소년을 위한 건강지원 - 산부인과·치과·가정의학과 등 진료, 정신보건 상담 실시 - 자궁경부암·독감 등 예방접종 실시, 성·건강 교육, 기초생활품 지원 ● 성매매 위기 여자 청소년 자립지원 - 직업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취득, 음악·미술교육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 일시생활지원-학업-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자립꿈터 건립 - 서울시 여성 공예 사업 등과 연계, 수공예품 전시 및 판로 확대 ● 종로3가 현장상담 실시(격주) - 상담지원 사례 발굴, 탈성매매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임대주택등 지역 내 연계 자원 개발
		5-2-4. 폭력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4.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5-4-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 25개 자치구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등록 • 여성복지시설 연합 워크숍 실시
		5-4-3.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 운영	• 운영시간의 탄력적 적용 및 스카우트 귀가지원 강화 - 운영시간의 탄력적 적용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시간조정 - 여성 스카우트대원 안전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로 거점 일원화 - 스카우트 퇴근시 112 순찰차량으로 귀가지원(서울시 경찰청 협조완료) • 유흥업소 밀집지역, 골목길이 많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등 순찰 지원
		5-4-4.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5-4-5. 여성안심택배 사업	• 신규 여성안심택배사업 설치 및 운영 - 장소 선정 및 추가 설치·운영 : 30개소 • 기존 여성안심택배사업 운영 및 관리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사업 • 50대 정신 건강검진 상담 지원 사업
		6-1-3.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임산부 등록 및 산전·후 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6-2.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 여성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 이주여성자립정착금 및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지원기관 연계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활성화	● 성평등위원회 운영 - 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7-1-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환류 강화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 공무원 대상 양성 평등 교육 확대	● 성주류화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안) - 해당부서는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해당부서는 계획안(수립안) 마련 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 - 담당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지원 - 해당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대상사업 자체 검토 후 목록 작성 - 대상과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젠더거버넌스 등 검토 후 최종 선정
		7-3-2.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 201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및 2017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성인지예산 교육 - 교육대상 : 시·구 주민참여위원, 일반시민,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담당
		7-3-2. 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 성인지 통계지표 구축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31-142.

<부표 3-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②.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문예지 발간(6,000부) 지원, 여성문학상 시상(4명) 등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2-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확산	• 양성평등문화 공모사업 추진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운영 • 「양성평등주간」 운영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수당 제도 개정내용 등 홍보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2-1-1-②.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버지교육 실시) - 아빠 수첩 발간,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과정 운영, 자조모임 활성화 등 맞춤형 정보 제공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 15개 기업(기관) • 가족친화 직장방문교육 실시 : 15회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확충 : 18개소(303 → 321개소) - 국공립 3개소, 공공형 10개소, 직장 5개소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홍보 및 추진 -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 연구수당 지급 등 지원시책 추진으로 평가인증 품질 향상 • 보육장학제 확대 시행 : 보육장학지도사 6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인증 컨설팅 지원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수행기관 : 12개 기관(광역거점 1, 서비스제공기관 11)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가족품앗이 활동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 품앗이 활동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놀이공간 및 육아정보제공, 도서·장난감대여 • 부모자녀 참여교육, 지역리더양성교육, 육아리사이클링 및 나눔장터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 대상 : 333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정부지원시설 80%, 민간 어린이집 월123.6만원) •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 대상 : 36개소 - 지원내용 :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지원
		2-3-3-②.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내실화 •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3-3-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240명, 연중수시(주 2회) • 언어발달 지원 : 장애부모를 둔 만 10세 미만 아동 16명, 연중수시(주 2회)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270명, 연중수시(480시간)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창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진출 지원	• 중소기업 자금 여성기업 우대 - 육성자금 : 짝수 월(2, 4, 6, 8, 10월), 운전자금 : 홀수 월(1, 3, 5, 7, 9월) - 지원내용 : 육성(15억원, 3년거치 5년 분할), 운전(3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 확대	•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 - 젠더의식 강화훈련, 일대일커리어코칭, 직무능력훈련, 자율프로그램 등
		3-3-2-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 권역사업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업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사업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내실화	• 여성적합직종 및 우수훈련과정 운영 - 지역내 새일센터(10개소) 참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소개 및 상담 실시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 지원예산 : 810,000천원(국비) - 사업기간 : 2016. 3월~11월 - 훈련과정 : 36개 과정
		3-3-4-②.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참여기간 : 9~12개월(공익활동), 연중(취·창업활동, 민간분야) - 근무시간 : 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 기회 확대 -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14.6% - 적극적인 균형인사관리를 통한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 여성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 여성공무원의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참여 희망자 적극 발굴 및 지원 - 직장교육 등을 통한 여성공무원의 주도적 역할 및 리더십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인식제고
		4-1-3-②.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 37%(목표) • 위촉직 위원의 여성위원 위촉률에 따른 부서장 성과 평가 실시 - 평가 후 부서장 연봉 협상 시 반영 • 여성리더 1040과정 수료자 위원회 추천 활용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및 조정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공공 기관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화	• 성희롱 예방 교육 및 홍보 - 시직원 교육 : 3회 - 성희롱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 성희롱예방 안내서, 리플릿 등 3종 - 홍보 동영상 시 홈페이지, 바다TV등 게재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심의위원 운영 - 고충상담원 : 3명(감사, 인사, 업무부서), 사이버 상담(시홈페이지) - 심의위원 : 6명(여성가족정책관, 인사부서 1, 감사부서 1, 공무원노조 2, 외부전문가 2)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운영내실화 : 8개소(상담소 6, 보호시설 2) - 인건비 3% 및 운영비 2~3% 수준 인상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2개소(부산해바라기, 동부해바라기) -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One-Stop 서비스 지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5개소
		5-2-3-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운영내실화 - 인건비 3% 및 운영비 2~3% 수준 인상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운영 : 1개소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 1개소 - 유관기관(25개소)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 및 연계 홍보 강화
		5-2-3-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강화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임대주택 42호 -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관련기관 입주지원 홍보 등 이용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5개소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운영 : 1개소 ● 이주여성 쉼터 : 1개소
		5-2-3-①.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지원 - 지원시설(7), 상담소(2), 자활지원센터(1) ●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자활 기반 구축 -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구조지원 및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 2개소 - 운영비 지원 및 의료, 법률, 직업·진학교육, 치유 회복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 2개소 - 쉼터 등 지원, 긴급지원 전화 운영, 대사관 연계 숙식제공, 귀국 지원 서비스 제공 등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위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상담소, 그룹홈 및 보호시설 27개소 129명 - 지원기준 : 상담소(월 15만원 / 인), 보호시설(월 25~30만원 / 인)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 지원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1회 24명) - 예산내역 : 15백만원(국비 50%, 시비 50%)
		5-2-4-②.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 33개소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컨설팅 제공, 시설현지 방문 점검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3-3-①.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성매매 우려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TF팀 운영 ●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성매매 예방 문화행사 등
	5-4.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 지역연대 위원회 개최 - 연 3회(위원회 1, 실무협의회 2)
		5-4-3-①.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여성폭력 예방 CF 제작·방송 - 4편(TV 2, 라디오 2), 언론매체 연중 방송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1-③. 남녀 건강에 유해한 사회 환경 개선	● 의료기관 과대광고 등 지도점검 - 사업대상 : 성형외과 개설 의료기관 80개소 - 점검내용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확행 - 의료광고 등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1-3-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태아기형아 예방 -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 검사(태아기형아 20,400명, 풍진 5,000명) •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14,350건) -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임산부 30회 / 750명, 조부모교육 4회 / 120명)
	6-2.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 모자가족복지시설 등 11개 시설 운영 • 부자가족 자립 주거 지원사업 : 56세대,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지원 • 미혼모부자지원기관 운영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운영 -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확립 - 시, 구·군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부산여성가족개발원내, 4명) 운영으로 연계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확대 - 성인지예산 연계를 통한 정책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자문컨설턴트 구성 운영 : 14명(상시)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교육실시 - 시 : 3회(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 구·군 : 32회(상·하반기) - 교육인원 : 6,300여명(정원의 15%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이해 등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2-1-②. 고위·관리직공무원 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교육 실시 - 시기 : 시(하반기, 1회), 구·군(상·하반기 각 2회) - 교육인원 : 780여명(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등)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교육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②.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 시, 16개 구·군 • 성인지예산 연계체계 구축 • 자치단체(구·군)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지원
		7-3-1-⑤. 여성친화도시 확산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 지정확대 : 여성친화도시 1~2개구 지정 - 추진일정 : 여성친화도시조성신청(3월) → 신청접수(8~10월) → 지정결과(12월) -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 지정대비 사전 컨설팅(교육 등) 지원
		7-3-2-②.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제도 연계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위원 일정비율 유지(현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유지)
		7-3-3-①. 성인지 통계 생산·점검 체계 구축	• 자체 생산중인 통계결과표에서 성인지 항목 추가 - 추진대상 : 국가승인통계 중 인적사항이 있는 통계표 - 개선시기 : 2016년 통계작성시 - 개선방법 : 통계작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성인지 항목이 추가될 수 있는지 검토 후 가능토록 개선
		7-3-3-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2016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 - 10개 분야별 통계구축, 현황 및 특성 분석, 8대 도시 비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공동과제	◉ 지역성평등지수 개선	•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지역성평등지수 제고방안 계획수립 - 성평등 지표 중 세부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적극 추진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143-260.

<부표 3-3> 2016년도 대구광역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 부모교육 및 상담사업 : 5,000명 - 가족친화문화사업 : 2,000명 -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운영 : 1,500명 - 예비 부모교육 : 900명
		1-3-2-①.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참살이 무료예식장 운영 - 주례, 축가, 공연 등 무료지원 확대(재능기부 및 문화 봉사단)를 통한 참살이 예식장 이용률 제고 -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 및 회관 셔틀버스 안내 문구 부착 등을 통한 홍보 활동 강화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을 통한 육아참여 권장
		2-1-1-②.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 학부모 교육 홍보(교육청 주관) - 시기 : 교육청 협조 요청 시 - 대상 : 시 소속 각급기관, 구·군, 공사·공단 - 방법 : 공문 발송 • 학부모 교육 실시(대구시 주관) - 시기 : 2016. 3~12월 - 대상 : 시 소속 각급기관, 구·군, 공사·공단 근무 학부모 등 - 내용 : 학교폭력예방, 자녀인성 및 생활지도 등
		2-1-2-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법률 개정(고용노동부)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2-1-2-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 대체인력뱅크의 지속적인 구성 및 운영 활성화
		2-1-2-③.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강화	•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 - 출산휴가·휴직 등을 예상하여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 후 필요시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 구성·운영 -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의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유연근무제 실시 활성화 -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및 홍보 강화 - 유연근무제 적합직무 발굴 등 근무여건 조성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②.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일·가정양립추진협의회 운영 • 직장교육 실시 • 직장상담 연계지원
		2-2-2-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가족친화 지역네트워크 운영 • 대구기업 일·가정 양립 공동추진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 예비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이행 • 가족친화인증 지원 • 가족친화인증 확대 : 50개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공감대 조성 - 주당 40시간 근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보급 및 캠페인 실시 - 장시간근로 개선을 홍보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발굴 토론회 개최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 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신규 8개소(46 → 54) - 대상 : 저소득밀집지역, 신규500인 이상 공동주택 등 •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 신규 12개소(의무이행 15 → 27 / 설치 5, 위탁보육 7) - 대상 :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공공형어린이집 : 신규 10개소(104 → 114) - 대상 : 민간의 우수한 어린이집중 선정
		2-3-1-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평가인증 교육(연 6회~8회) -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 평가인증 영역별 지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 사업주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평가인증 재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387개소, 7억원) - 지원대상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 - 지원내용 : 노후시설 개선, 안전 등에 필요한 어린이집 개·보수비 - 지원금액 : 정원기준 차등지원(1,000천원~3,500천원) - 사업주체 : 8개 구·군 •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 기능보강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외연수 지원 등 국비(일부 항목)·시비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지원 - 유공자 표창 등 각종 시상 및 표창에 우선권 부여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어린이집 정보공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 및 상시 지도점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부모 모니터링단 지속 운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을 사유로 한 일시 돌봄서비스 지원 • 영아 종일제 돌봄 -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가족의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종일제 종일 돌봄서비스 연계 •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아이 돌보미 활동 상황 분석, 조정, 서비스 질 관리,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및 질 제고 •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 나눔터 현장 점검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관리)기관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 15개소('15년) → 30개소('16년), 1,230백만원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이용대상 : 가정양육 수급자 중 만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보육료 단가(이용자) : 기본형 2천원 / h, 맞벌이형 3천원 / h - 인건비 : (제공기관) 보육교사 4호봉 수준, (관리기관) 보육교사 5호봉 수준 - 운영비 : (제공기관) 월 32만원 / 개소, (관리기관) 월 50만원 / 개소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담당교사(정부지원시설) 80%, (민간) 월 1,236천원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및 이용아동 지원강화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192개소 10,102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 : 4,996명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초등 중심으로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다원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지원 추진 - 2015년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90명 신규 추진하였으며, - 2016년 달성군 방과후아카데미를 기본지원형에서 농산어촌형으로 변경 운영(2개소)하여 지원예산 추가 확보 - 총 12개소 운영(기본지원형 10개소, 농산어촌형 2개소)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기본역량 개발교육 : 여성농업인 45명 - 시기 : 1 / 4분기 ● 우수사업장 현지견학 : 여성농업인 45명 - 시기 : 2 / 4분기 ● 농촌여성 리더십배양 현지연찬 : 여성농업인 45명 - 시기 : 3 / 4분기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2-1-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비정규직 수행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및 정규직 전환 추진 ● 여성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 대상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 여성근로자 전환인력 : 12명(전환인력의 50%)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②.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자유학기제 연계 찾아가는 직업체험교실 프로그램(중학교 1학년) ● (WISET 공학계열 여학생회) 공학계열 여학생의 적응력을 높여주고 전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Software in Girls)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 여대생의 젠더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직무능력 훈련 등의 교육지원 - 진로역량강화 사업(여성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등) - 성인지적 진로개발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3-3-2-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 ICT융복합 기술교육 실시 • (여성 R&D 인력양성)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요산업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 • (채용 담당관제 연계) 기업 /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강화 및 직업전문교육 실시
		3-3-4-②.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3-5-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 공무원 임용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2015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 ＊우리시 목표율 : (2015년도)13.1% → (2016년도)13.9%
		4-1-2-②.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중견실무능력을 갖춘 차세대 여성리더 지속 양성을 위해 여성공무원의 장기교육 참여율 제고 - 지방행정연수원 여성리더양성과정 - 시 공무원교육원 중견실무리더과정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대구시 전체 위원회(130개) 여성참여율 평균 35% 이상 위촉 - 여성가족부 연간 관리계획에 의거(지자체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 연 1회, '16.10월 예정) 대구시 35% 미만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확대 독려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대구시 구·군 위원회(455개)의 여성참여율 제고 - 구·군의 확대계획 미달성 사유 심의 추진 후 심의결과 반영하여 여성참여 확대계획 수립 제출 요구, 관리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	● 여성인재 1,400명(누계) 확보 및 DB 등록 - 여성인재를 육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다양한 분야에 양성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목표 달성 차질 없이 추진('17년까지 40%)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여성폭력 추방사업 운영(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 집합교육 및 현 근무지 시청각 교육 - 전문강사 강의, 동영상, 연극 등 - 교육 참석자에 대한 상시학습 교육시간 인정
		5-1-4-①. 성폭력 범죄 공무원, 군인, 교원에 대한 제재 강화	● 성범죄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여성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지원(의료, 수사, 법률 등) ● 성폭력예방활동, 아동성폭력예방 홍보사업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성폭력피해자 의료, 심리치료, 치료동행서비스, 간병비 지원 등 ● 무료법률서비스 및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지원 ● 피해자 숙식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퇴소 후 직업·취업 훈련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숙식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보호시설(3개소)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신고접수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 ●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폭력피해여성 상담 후 맞춤형 기관 서비스 연계 등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숙식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보호시설(3개소)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신고접수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 •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폭력피해여성 상담 후 맞춤형 기관 서비스 연계 등 지원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 2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설치 운영 : 1개소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매매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 수요자 중심의 통합·체계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전인 인권보호 활동 추진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 집결지 정비대책 • 성매매 집결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 건축, 공중위생, 식품, 소방 등 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규제 강화 • 경찰, 여성복지부서 등 합동지도·단속 실시 • 성매매시민감시단 운영 • 청소년 진학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 연계 등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운영(1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운영(2개소) •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운영(6개소) •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단계별 교육운영(30명)
		5-2-4-②.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지역연대 네트워킹 강화, 기관별 사례발표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 모색 및 전문가 특강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 도모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3-2-③.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 가정,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지원 - 가정폭력 가해자의 개별, 부부, 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을 통한 가해자의 의식전환 프로그램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민·관협력으로 구성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한 지역안전프로그램 및 아동안전 지도 제작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5-4-3-①.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여성폭력추방사업운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한 아동여성폭력 관련시설이 협력하여 보라데이 행사 및 성폭력추방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5-4-3-②.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	• 여성폭력추방사업운영 - 여성폭력관련시설을 캠페인과 홍보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임산부 산전·후 프로그램 운영 •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 2개소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1개소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북한이탈 여성의 정서, 심리치유 상담 • 우리명절 함께하기 • 화합과 공감을 위한 이야기 마당(간담회) • 아름다운 가을산행 •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사례관리, 자녀학습정서지원, 역량강화서비스,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 등
		6-2-2-④. 미혼모부자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강화	•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교육비 및 미혼 한부모 출산·양육지원, 자조모임 운영, 인식개선 캠페인 등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여성친화도시 조성 희망 군·구 조사 : 2015. 1~2월 ● 여성친화도시 지정 컨설팅 지원 : 3~5월 ● 자체검토 후 지자체 추천 : 10월 ● 지정도시 심의·확정 및 협약식(여성가족부) : 12월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②.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5급 이상 성인지교육 실시 : 5월~10월 중 110명 실시 ● 분석평가책임관 교육, 고위정책교육과정 등 : 연중 10명 실시 ● 공무원 교육원 시행 장기교육 성인지 교육 권고 - 6급 리더과정(50명), 신규교육과정 등
		7-2-2-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 컨설턴트 모집(1월) 및 교육 - 분야별 외부 전문가 15명 이상 확보 ● 컨설턴트 위촉식 및 활동 결과 발표회 개최 ●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주제별 토론식 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기법 강화 - 현장 컨설팅 실습 및 체험 교육, 컨설턴트 네트워크 구성으로 교류 확대
		7-2-3-①.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여성행복위원회 전체회의(상·하반기 각 1회) - 기금 예산·결산 심의 및 연간 업무보고, 토론회 준비 ● 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 : 12회 ● 여성정책토론회 : 1회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작은결혼식외 12건(90백만원)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7-3-1-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위원회 위촉식 : 2015. 1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등 : 3월 - 당해연도 우수사례 선정 및 결과 보고 : 12월
		7-3-1-②.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양성평등 실현 및 거버넌스 구축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3-1-③.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7-3-2-2.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제도 연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100명)에 여성위원 40% 이상 참여 보장 - 단계별 확대 : ('15년) 30% → ('16년) 35% → ('17년) 40% • 예산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성인지 예산 교육 포함 - 예산교육 12시간 중 성인지 예산교육(1시간 이상) 실시
		7-3-3-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성인지 통계(성별 분리 통계)' 작성 안내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 안내 대상 : 시 본청 및 산하 원·본부·사업소 - 안내 내용 :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별 분리 통계(성별 파악) - (재)대구여성가족재단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관련자료 제공 • 성인지 통계 자료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웹서비스 제공 - (재) 대구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통해 웹서비스 제공
특화사업	◉ 카부츠 벼룩시장		• 카부츠벼룩시장 기본계획 수립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안전계획, 참가자 모집 및 홍보방법 등
	◉ 2016 여성 UP 엑스포 개최		• 공식행사 : 제2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포럼·특강·전시회, 부대행사, 공식행사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261-432.

<부표 3-4> 2016년도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조) 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 가족돌봄 나눔 -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 품앗이, 아버지 -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 가족상담 : 가족(집단)상담 ●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 동일한 자녀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 수당 수령(월봉급액, 상한액 150만원) ● 육아휴직 후 복귀시 최대한 희망전보 반영 추진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부서(기관)별 유연근무 참여목표제 시행 - 부서(기관) 현원의 10% 이상을 목표로 참여 활성화 도모 - 매분기 부서(기관)별 참여 현황 공개로 부서장 관심 도모 ● 유연근무 근무유형 확대 및 적합직무 발굴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②. 일·가정 양립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직장 고충상담 :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활용관련 고충상담 제공(노무사 상담 등) ● 워킹맘, 워킹대디 커뮤니티 지원 : 전업맘, 워킹맘, 워킹대디 간 네트워크 구축 ● 주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가족사랑데이 및 영화 관람등 추진 등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인증상비군 구성 및 운영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방안 연구 ●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직장 어린이집 설치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 안전 및 보육 환경 관리 강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점검결과 후속조치) 지적·위반사례 등 교육 실시 • 급식재료 공동구매 운영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어린이집 자체 점검 실시 : 234개소
		2-3-1-④.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도	• 맞춤형 보육 추진 일정 안 - 맞춤형 보육 대상 가구 구성원 정비 : 3.14~4.22 - 사전 자동 보육료 자격 부여 및 결과 통지 : 4.23~5.20 - 맞춤형보육 신청 : 5.20~6.30 - 맞춤형보육 시행 : 7.1~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확대 -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 2015. 1월 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운영 : 2015. 1월 • 아이돌보미 양성 및 교육 확대 : 2015. 2.~11. - 아이돌보미 양성 : 940명(신규 양성자 포함) 아이돌보미 교육 확대(2,400명)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확대 : 360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장소 확대 및 이용인원 증대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2016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 운영 • 2016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320개소
		2-3-3-②.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지역사회 발굴 및 자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계획 - 2016. 1~12월,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연중 운영 - 사업대상 : 시, 군·구 청소년수련관 등 9개소(남동구청소년수련관 추가) - 2016. 8월, 하반기 운영실태 점검 - 2016. 11월, 전국단위 중앙기관 평가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3-③.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아 돌봄 서비스 : 211가정, 가정당 연 480시간 돌보미 파견 •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상담,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 격차 해소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청년 소통을 위한 주력산업 지역인재 장기육성 기반 조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 희망 JOB아카데미 : 2016.5~11월 - 내일 나침반 프로그램 : 2016.3~9월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13개)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50~60대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9개)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6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지원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행기관 : 군·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기타 - 사업유형 : 공익활동, 취업형, 인력파견형 - 총사업비 : 44,576백만원(국비 21,562, 시비 10,781, 군·구비 12,231)
		3-3-5-②.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수혜자수)운영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달성 - 5급 이상 14.1%, 6급 이상 26.5%, 6급 32.8%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2016. 1~2월 : 국정평가 대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현행화 조사 • 2016. 1월 : 2016년 임기만료 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안내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2016. 연중 : 임기만료 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및 사전 위촉 협의 ＊2016년도 인천광역시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27% 달성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강화	• 「신인(新仁)여성 발굴 프로젝트」 추진 • 여성전문인력DB 활성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 여성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활동체계 마련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횟수 : 연중 1회 이상 - 교육시간 : 과정별 연 1시간 이상 - 내용 : 전문강사 활용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3급 이상 고위직 참여율 제고)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응급 지원체계 강화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의료비·간병비, 돌봄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서비스(＊ 가정폭력피해자 포함)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운영지원 : 1개소 412,328천원 • 여성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1366 인천센터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 지원 : 7개소 329,488천원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생계 지원 : 1개소 113,417천원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운영 : 2개소 18호 60,152천원 •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대상 정신·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 등 서비스 확대 : 52,643천원 (사업수행자 공모 및 선정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개소 •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아동의 일시 보호 상담, 심리치료, 긴급지원비 지원 등 이주여성 보호 지속 추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지원 및 현장기능강화사업 운영비 지원 - 분기별 운영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활 및 사회복귀 촉진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성매매 방지 및 피해 예방강화 - 성매매집결지에 아웃리치를 통한 성매매 피해 방지 및 예방사업 실시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립·자활에 필요한 학업(진학) 및 직업훈련 지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5-2-3-③.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보완사항 개정 요구 ● 성매매 피해자 지원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관리 - 종사자 양성·보수교육 체계화 및 자격관리 방안 마련 - 안식휴가,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비경제적 처우개선 방안 및 상해 보험 가입 등 신변안전 대책 등 마련
		5-2-4-②.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인천시 및 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기관별 사업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개선 지도 ●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호 정보 및 우수사례 교류 전파 ● 인천광역시 제작 <2016.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 표준 매뉴얼 배포 및 기관 교육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1-②. 폭력예방교육 품질지원강화 및 인프라 구축	● 찾아가는 폭력예방 사업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조례 개정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주도의 다양한 사업 추진 ●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운영 ● 등하교 도우미 “마미캅” 운영 ● 아동안전지도 제작
		5-4-2-②.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성문화체험관 및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
		5-4-3-①.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매월 8일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 지정, 캠페인 전개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주관으로 매월 8일 가정폭력예방 홍보 및 캠페인 - 하반기 1회 전국 릴레이캠페인 ‘보라데이-Look Again’ 캠페인 개최 ● 2016. 9월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캠페인 전개 ● 2016. 11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개최 및 캠페인 전개 ● 폭력 예방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5-4-3-②.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 홍보 강화를 통해 폭력 피해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연계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홍보 ● 인천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홍보, 홍보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2-①. 서비스업 등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건강장애 예방지원	● 시 주도하에 Green Project를 2년간('14년, '15년) 시범 운영하고 매뉴얼 제작하여 군·구 확산 운영
		6-1-2-②.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10개 군·구 운영) - 걷기동아리, 비만탈출교실, 노인건강교실, 운동교실 등 운영 ● 시민건강 강좌 개최 ● 걷기 활성화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1-2-③.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실시 •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및 치료지원체계 마련 • 정신건강 DB 구축 조사사업 • 실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 2,000명 이상 • 시, 군·구 연합 정신건강강연회 운영('16년 신규)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임신·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0,000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사업 5,000명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도면 검토 및 현장 실측조사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확인 : 2,000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획득 : 10개 • 시·청각, 언어장애 부모의 비 장애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 유사중복사업으로 일몰 폐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추진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및 여성어울림센터 운영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지원 - 동료상담사를 통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자 발굴, 상담지원 및 전문상담 연계(심리치료, 미술치료 등) - 집단상담(교육) 및 심신회복 캠프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 - 운영기관 : 9개소 - 사업내용 : 상담 및 교육, 지역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등 - 예산액 : 472,500천원(센터당 52,500천원 지원) ＊시비 50%, 군·구비 50%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내실화 - 운영기관 : 1개소 - 사업내용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등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2016. 2월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공포 • 2016. 2~3월 : 여성정책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6. 5월 : 여성정책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개최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2016년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 2016년도 지정신청 : 남구 •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사례연구 워크숍 개최 : 10개 군·구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실시	• 고위공직자 성인지 리더십 교육 • 중견간부 공무원 젠더커뮤니케이션 교육 • 사업분야별 담당공무원 심화교육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 2016. 1~2월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및 심사 - 2016. 3월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 2016. 4~11월 : 선정사업 시행 및 중간평가 - 2016. 12월 : 선정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위원회 구성안 방침 : 2016. 5월 • 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 2016. 6월
		7-3-1-③.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여성가족부 공모 : 2016. 2월 •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후 지자체 정책 개선권고가 내려올 경우 자체 개선 계획 수립 후 추진
		7-3-1-④.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효과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환류 점검 : 2016. 2월~연중 • 20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대상과제 선정(1차) : 2016. 5월 - 위원회 구성 및 대상과제 최종 선정 : 2016. 6월 - 대상과제 분석평가 실시 : 6월~12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3-2-①. 성인지 예산과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예산편성, 결산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통해 컨설팅 및 연계 추진
		7-3-2-②.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 주민참여예산 위원 성인지 예산교육 추진 - 예산교육 : '16. 6~7월 중
		7-3-3-②.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2016. 인천 성인지 통계」 작성 - 사업기간 : 2016. 7월~12월 - 추진방법 :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과제로 수행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 pp.433-592.

<부표 3-5> 2016년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①. 양성평등한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마련(광주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 여성영화제 개최 지원 - 사업기간 : 2016. 1~12. - 보조사업자 : 광주여성영화제(대표 김지연) - 주요내용 : 개·폐막식, 영화상영(30편 내외), 부대행사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27, 자부담 23)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3-2-①. 일상생활(명절, 결혼 등)에서 양성평등 실천 확산(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사업)	● 빛고을 착한 결혼식 추진 - 소박하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통해 기존의 고비용 결혼문화가 지닌 폐단을 개선하고 새로운 결혼문화 정착 유도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및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2-1-2-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 운영)	●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2016. 2~3월 - 대체인력 구인 설문조사 및 구직자 상담시 대체근무 희망자 파악 등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광주형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 설치시기 : 2016. 1. 1. - 설치방법 : 시 사업소(여성발전센터)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기능전환 ● '16년도 가족친화인증 지원 계획 수립 : '16. 4월중 - '17년도 가족친화인증 공공기관 의무화 관련 지원계획 포함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직장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3-1-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평가인증 목표 : 현 어린이집현황 대비 80%(1,011개소) • 추진 방법 : 시자체사업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평가인증 시설 우선지원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CCTV 설치 확인·점검 및 지속 유지관리 지도 점검 - 설치개소 : 1,203개소(동구44, 서구257, 남구139, 북구313, 광산구450) • 16년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15년도 : 5개반 44명(동구 2, 서구 6, 남구 8, 북구 14, 광산 14)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상황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 점검
		2-3-1-④.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	•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 - 영아전담 22, 장애전문(통합포함) 12, 24시간 11, 휴일보육 7, 시간연장 224, 방과후 13 - 운영방향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우선 지정토록 유도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16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분기) : '16. 1월~ • 서비스제공기관 5개 자치구 지정 운영 : '16. 3~12월 • 돌보미파견 및 관리(서비스제공기관) : '16. 1~12월 • 사업지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광역거점기관) : '16. 1~12월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일시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가족품앗이 진행 - 부모와 함께하는 수업, 부모자녀교육 및 지역리더양성교육 등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시간제 보육사업 운영)	•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지원 - 시간제보육시설(리모델링)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지역아동센터운영 ● 아동복지교사지원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운영 ● 지역아동센터평가단운영 ● 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별수당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자기개발, 급식·생활 지원 등 종합적 방과후 서비스 제공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기업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여성기업 생산품 판로확대)	●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 홍보물 제작 배포 - 공공기관 대상 여성기업 정보 공유
		3-1-2-①. 여성기업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여성 창업 지원)	● 여성창업지원사업
		3-1-2-①. 여성기업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여성 소자본 창업 컨설팅 지원)	● 여성소자본창업컨설팅지원 - 창업 준비부터 창업 사후관리까지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교육 등 운영 -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 농업인 대상, 5~11월, 8회, 200명 -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 : 농업인 대상, 3~6월, 7회, 175명 -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 : 생활개선회원, 3~12월, 14회, 550명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2-1-②.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②.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 공과대학 및 ICT대학 여학생 전공능력강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 대상 : 여대생 - 내용 : 젠더의식강화훈련, 개인별 커리어개발, 직무능력교육 등 - 사업량 : 12개 과목 1,600명, 취업 30명
		3-3-2-①.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여성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맞춤형 재직자 교육훈련 - 사업기관 :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일센터 - 대상 :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 사업량 : 2개 과정 50명
		3-3-2-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 경력이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용지원 - 여성과학기술이 교육·훈련·정보지원 사업 등 - 여성과학기술인 제도환경문화개선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내실화	● 직업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추진기간 : 2016. 2~12월 / 과목당 2~3개월 운영 - 추진기관 : 여성새일센터 - 훈련직종 : 도배기능사 양성 등 36개 과정 758명 - 사업비 : 756백만원(국비 100%)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20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3-5-②.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 지정·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 센터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추진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지원 ●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소외받지 않도록 여성배려 정책 추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계획('17년 15%)"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확대(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타 부서 위원회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여 여성위원 참여율 40% 달성 제고 노력 • 여성전문인력 지속 발굴과 D / B 구축으로 여성인력 풀 확대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여성인재 DB구축 운영)	• 신규 여성전문인력 발굴 - 여성전문인력 DB관리로 네트워크 기초자료 및 정책수립 시 각종 위원회 등에 추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회 제공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기관별 자체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계획 수립(2월)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정비(2월)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연중) •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예방교육 2회 실시 • 시 소속기관, 자치구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사항 점검(11월) • 성희롱·성폭력 홍보물 제작·배포
		5-1-3-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사업수행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 공모선정·관리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연극 및 인형극) 실시 및 운영관리 •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 교육생 확보 및 홍보계획 등 사전 수립 운영· • 교육 모니터링 및 교육 만족도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 사업실적 및 결과 보고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여성·아동 성폭력에 적극대처 및 여성·아동인권보호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 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피해자의 편의증진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28명) 및 실무협의회 운영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개선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행사, 캠페인 등 전개 • 성폭력 관련시설(상담소 4, 보호시설 2) 운영 지원 • 피해자 조기 심신회복을 위한 의료비, 각종 프로그램 등 지원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 강화)	• 긴급한 현장상담 발생시 출동하여 상담, 법률, 의료 등 전문기관 연계지원 • 1366 관련한 제반업무 추진 : 전화, 내방, 방문, 상담, 홍보 지원 등 • 긴급피난처 일시보호자 보호시설 연계 및 귀가 동행 지원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 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교부 : '16. 매 분기 초 • 폭력피해 주거지원사업 시행 : '16. 2~12월 • 지원시설별 사업비 정산 : '17. 1월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지원 - 상담소(1), 지원시설(3), 자활지원센터(1) •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자활 기반 구축 -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구조지원 및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업소, 구조, 자립, 자활지원 • 일자리 제공사업,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전업 및 사회통합지원 등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청소년 성매매피해 보호 운영 지원 • 가출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교육, 행사, 캠페인 등 지속 전개 등 •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실시 • 「제5회 전국 성매매근절 이미지포스터 공모전」 개최 •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 캠페인 개최(9월) • 성매매 근절을 내용으로 한 2017 달력 제작·배포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종사자 보수교육 사업비 교부 : '16. 3월 •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16. 3~12월 • 폭력피해 관련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16. 매 분기초 •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위한 현방 방문 : '16. 연중 • 지원시설별 사업비 정산 : '17. 1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3-3-①.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신·변종 성매매업소 점검 및 합동단속 강화)	• 성매매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성매매업소에 대해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기재한 게시물 부착 여부 수시 현장점검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및 실무협의회 운영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1-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관리 강화	• 공공기관 폭력예방 자체계획 수립 독려 및 교육 실적 관리 - 교육실시 횟수, 교육방법,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직 교육 참여율 • 지역 중심, 수요자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 모범사례 발굴 및 저변 확산을 통해 체감도 높은 교육실시 •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 교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인형극 학교 순회공연 실시
		5-4-2-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개최 : '16년, 3회 •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16. 3.~11월 • 아동안전지도 제작 : '16. 1.~12월
		5-4-2-②.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통한 성폭력예방 교육 강화)	• 청소년 신체발달에 따른 성적욕구 자제를 위한 성 프로그램 운영 • 올바른 성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청소년 성 범죄 예방 • 인터넷 매체로 인한 잘못된 성 지식 개선 및 건전 성 가치관 정립 • 성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효과 제고 및 성교육 인프라 구축 •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운영
		5-4-3-①.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여성·아동폭력의 심각성과 실태를 알리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진행 - 성폭력 추방주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홍보물 전시 및 배포, 퍼포먼스, 길거리 캠페인 진행등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이미지 공모전 개최 • 성매매 근절을 내용으로 한 달력 제작·배포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37명 • 난임부부지원사업 : 3,000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4,000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00명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 5,000명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	•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독려 -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으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사항 홍보 -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제작·배부 •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 활성화 - 각종 회의자료, 소식지 등을 통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 시책 홍보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 절차 안내 권고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관리 -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계도 강화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산전후 관리 지원 등)	• 장애인 임신부 산전검진비 지원 : 45명 - 임신20주 이상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여성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2,700명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 1개소 450명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및 산후 조리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 활동지원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가족역량강화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미혼모부자지원) - 미혼 모·부 가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을 위한 상담, 병원비(출산비, 예방접종비 등), 생필품비(분유, 기저귀 등) 및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성평등위원회 운영)	● 성평등위원회 운영 - 위원회 회의 개최 : 연 3회 이상
		7-1-2-①.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강화(광주지역 성평등지수 제고방안 연구)	● 광주시 성평등 수준,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 및 문제점 파악 ● 광주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요구 조사 분석 ● '성평등 수준' 평가지표별 광주시 현황, 개선방향 및 방법 제시 ● 안전 및 가족 분야에 대한 성평등 수준 향상 제고 방안 제시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추진)	● 여성친화도시 협력체계 구축 ● 여성친화도시조성 2016년 추진과제 발굴 및 이행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 시 공무원교육원 정규과정 확대 운영 ● 시 중견간부공무원(6급)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 교과과정 편성 ● 공직자 특별 집합교육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담당자 대상 특별 실무교육 실시
		7-2-1-②. 고위·관리직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 - 2016년 2회 100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6년 상반기 1회 100명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개최 : 8월경
		7-3-1-④.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효과 제고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계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 및 환류 강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성인지예산·성인지통계 간 연계 강화로 정책개선 효과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질적 수준 제고 및 책임성 강화
		7-3-2-②.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 '16. 상반기 -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운영시 성인지 예산 교육실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40명 이상(40%) 확보
		7-3-3-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성인지 통계 생산확대 및 체계적 관리)	• 성인지 통계 생산 및 관리(5종) - 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 성별 구분 집계(2월) - 사업체조사 : 종사자 수 및 대표자 성별 구분 조사(4월) - 광업·제조업조사 : 통계조사에 대표자의 성별 구분 조사(6월) - 광주사회조사 : 모든 분야에 남녀비율 구분하여 조사(9월) - 광주통계연보 : 각 항목에 대하여 자연인 대상 성별 분리 작성
특화사업	◉ 일·가정 양립 지원본부 설치·운영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 손자녀돌보미 사업 추진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급
	◉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 자금 지원		•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 민선6기 양성평등정책 3개년 계획 수립 조성기반 활성화		• 민선6기 양성평등정책 3개년 계획 수립
	◉ 광주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
	◉ 성인지예산제도 모니터링		• 우리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정책개선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593-766.

<부표 3-6> 2016년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 생애주기별 부모역할을 지원하여 원활한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간 관계형성 ●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지원, 부부갈등해결 등을 위한 부부교육 실시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1-3-2-3.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 강사양성 : 성평등 의식 변화에 관심이 있고 교육 및 강사뱅크 활동이 가능한 자 - 인원 : 30명 ● 교육대상자 : 초, 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 - 인원 : 2,000명(희망기관 모집)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1.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자 발생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적기 배치 -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 → 3년, 2008) 자녀연령 확대(만 6세 → 8세 이하, 2011), 남성육아휴직 연장(1년 → 3년, 2015) - 승진소요연수·경력평정기간·승급기간에 최초 1년간 산입 - 보수 미지급(1년간 50~100만원 차등 수당, 월봉급액 40% 범위) - 별도정원 인정, 신규채용시 휴직인원의 30% 추가 채용 반영
		2-1-1-2. 아버지학교,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 토요 돌봄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 2월~11월 - 사업내용 : '토요일에 뭐하니 아빠랑 놀자' - 추진기관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버지 역할 지원 교육 - 사업기간 : 2016. 2월~11월 - 사업내용 : 가정 내 남성으로서의 역할 인식 및 일·가정 양립 - 추진기관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빠요리 대회 개최 - 사업기간 : 2016. 5월 - 사업내용 : 간편요리 만들기, 시식 등 - 추진기관 : 대전광역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2-1-2-3.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강화	● 대체인력 적극 배치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여유인력 확보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결원 보충을 추진하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실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1-3-1.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대체인력 적극 배치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여유인력 확보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확대 • 행자부 연차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확대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실시
		2-1-3-2.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 모든 업무에 유연근무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함이 원칙 • 1주일 단위로 실시 가능 / 이용자 편의와 복무관리 용이 도모 • 원격근무 허용 가능 기간 1주일에 4일까지 허용 -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로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 • 추진일정 : 연중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2-1.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강화	• 일·가정양립 정책엑스포 개최 - 일·가정 양립 포럼, 기업의 실천협약, 기관별 정책 전시 등
		2-2-2-3.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및 교육 : 중소기업 50개 • 인증기업 지원 내용 확대 검토 • 기업 인사담당자, CEO 집합교육 : 하반기 1회 - 가족친화경영의 필요성 및 개념, 성과, 가족친화 제도별 사례 등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1.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유성구 도안11블럭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비지원 추가 신청 안내 및 접수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환경개선) 추진 •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2-3-1-2.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어린이집 정보공시(평가인증 유무 확인)제 홍보 강화로 어린이집 선택시, 인증 통과 어린이집 입소 유도 • 미인증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으로 참여확대 • 의무평가제 및 평가 등급제 도입,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건의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1-3.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지원 - 보육료 확대지원 : 만 0~2세 무상보육 및 3~5세 누리과정을 통한 全계층 무상보육·교육 확대 실시 - 가정양육수당 확대지원 : 만 5세까지 연령별 10만원~20만원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 확보 •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5개소(자치구별 1개소), 보육아동 부모 및 보육 전문가로 구성 -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 모니터링·컨설팅 • 어린이집 정보공시 7개 분야 18개 항목
		2-3-1-4.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 맞춤형 특수(취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최소화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2-3-2-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제고	• 부보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규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2-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부모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교구 등 양육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 품앗이 그룹운영·지원
		2-3-3-1.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 확대 방안 - (접근성이 용이)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 - (이용 홍보) 각종 홈페이지 및 아파트게시판 보건소 등 영유아의 부모가 이용하는 장소에 적극 홍보 - (영아 특성) 낯선 환경에 영아가 잘 적응하도록 보육초반 시에 보육교사와 부모가 적응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노력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3-2.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기본운영비 지원 : 145개소 - 지원기준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정 및 지원 : 68개소 ● 사업명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3-3-3.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지급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및 중위 소득 50% 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18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 → 장애수당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사업대상 : 만 18세 미만 1~3급 등 중증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1-1.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양성평등인식 개선 - 목적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 지원 - 주제 :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 예방 등 - 목적 : 사업장 대표, 중간 관리자,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등
		3-1-2-1.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우대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
		3-1-2-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홍보 및 컨설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지원확대 ● 보육 및 노인 돌봄서비스 관련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지원 ● 중·장년여성 일자리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연찬회 실시 *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교육 및 여성경영자를 위한 경영자 교육 실시
		3-1-2-4. 여성친화기업 확대	● 여성친화기업 협약 - 추진기간 : 2016. 9월~10월 중 15개 기업 심사·선정 - 선정대상 :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 20% 이상 및 20인 이상기업 - 선정방법 : 합산점수(체크리스트 항목점수 + 현장평가)고득점 업체순 선정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1-2-4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생활지도자양성교육 - 교육회수 및 계획인원 : 8회 400명 - 교육대상 : 생활개선회원 및 농촌여성 - 교육내용 : 품목전문교육, 생활개선실천교육, 선도농가 현장교육 등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1.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일자리 동향 및 지역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교통의 요지인 대전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최근 마이스산업이 대전에서 성장하고 있는 바, 마이스전문가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의 경우 업무능력보다 사회적 능력(리더십, 팀워크 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과정 개발 추진 - 조직적응적이고 현장중심적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 운영 및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인턴십 연계를 통한 현장 실무 능력 강화
		3-3-2-1. 여성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 구인·구직자 발굴 및 연계 - 취업 희망여성 및 구인 기업발굴 - 취업알선(동행면접)추진 -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운영 •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회의체 구축 - 지역내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 기업체 협력망 구축(구인 기업과 협력망 구축) - 세일센터 운영위원회, 지역별 새일센터 협의회 운영 등 • 새일센터 홍보 - 현수막, 홍보물, 산문·방송 광고, 물품제작 등 운영 등
		3-3-2-2.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활용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 미취업·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지원 교육 : 6개 과정 580명 목표 -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 지원 : 4개 사업 570명 목표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사업 운영 - 공대 여학생 전공능력강화 지원 : 9개 사업 1,405명 목표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지원 : 5개 사업 5,845명 목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3-1.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 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 - 여성근로자가 제도·환경적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에 대해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력 단절여성 취업률 제고
		3-3-3-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14개 과정(3개 새일센터) / 282명
		3-3-4-1.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지역여건 및 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지역 특화된 서비스산업에 발맞춤 교육훈련 실시 - 여성 적합 직종개발 및 전문화된 교육훈련으로 장기 취업전략화 - 지역의 산업특성과 구인수요, 훈련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정선정 -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효과적 취업 연계에 중점을 두어 과정선정 ● 특화된 여성 취·창업박람회 전문화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기회마련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박람회 개최 - 시민들에게 취업의지 고취 및 참가기업들에게 홍보 및 구인의 기회제공, 여성 고용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하에 기여 - 중부권 최대의 여성 취·창업박람회로 육성 - 공공기관 참여확대, 연령대를 고려한 구인업체 발굴 참여 등 - 우수한 여성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3-3-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 10,969명 ●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활성화 지원 : 1,049명 ● 꿈나무 지킴이 사업 : 초등학교 150개교 303명 ● 시니어클럽 운영 : 6,376명
		3-3-5-1.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여성인턴십 지원 : 240명(새일여성인턴 228, 결혼이민여성인턴 12)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6명(동구 2, 중구 2, 대덕구 2)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14개 과정 ● 여성친화 기업 협약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5개년(2012~2016) 계획 수립 : 6급 이상 22.1% - 5급 이상 : 중점관리대상 - 6급상당 이상 및 6급 : 자체관리대상(연구·지도직 제외) •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문분야 적극 발굴 배치 - 감사, 인사, 문화, 회계 등 여성의 섬세함을 살릴 수 있는 분야 • 실·국장 책임제로 여성의 주요부서 배치로 승진 선순환체계 구축 - 보직 → 평정 → 승진 등 우수한 여성공무원 보직관리로 인재육성
		4-1-2-2.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4-1-3-1.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정기 실태조사 : 연2회 -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1.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내실화 강화 - 간부직, 비정규직등 교육에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대상 교육독려 • 시 본청 직원의 교육참석률 높이기 위한 실과평가(BSC) 공동지표 선정 - 집합교육 1회에서 2회로 횟수 증가 및 간부직, 비정규직 참여 독려
		5-1-3-2.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강화	•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교육'기반 마련 - 자치구 주민센터 등과 연계한 폭력파수꾼 교육 등 다양한 대상교육 • 소규모 사업장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지역 경제인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속 추진 -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자존감'을 높여 폭력예방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성폭력피해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스템 확대 - 해바라기센터 전문치료 프로그램, 보호시설 치료회복프로그램 확대 지원 • 성폭력피해자의 단계별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보호 내실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전문적 치료(해바라기센터) → 전문적 상담(성폭력상담소) → 피해자보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지속관리 및 자립·자활 지원
		5-2-1-2.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국선변화사와 협력하여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 재판내용을 모니터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재판 동행 - 종합의견서 등 재판과정에 필요한 문서 및 증거자료 제출 도움 ●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 법률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조인 초청 전문교육 - 매주 종합 사례회의 개최로 상담 역량 강화 ● 남성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의료지원 강화 - 지속적인 체계적인 상담 및 의료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5-2-2-1.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피해자 긴급대응 및 보호 긴급피난처 운영강화 - 긴급피난처 인력보강으로 보호기능 강화 ● 피해자 의료 및 치료회복으로 피해자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의료지원의 확대 ● 피해자 자립·자활지원 강화 및 주거지원 시설 확대 - 직업훈련 지원 및 주거지원 10호 추가 설치
		5-2-2-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지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강화 - 의료 및 치료회복지원으로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자존감 회복지원 ●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이 주거지원 시설 확대 설치 -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추가설치 *'15년 12호 → '16년 22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 자녀 학업지원 등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연자원 발굴
		5-2-2-4.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다국적 언어를 이용한 이주여성에 대한 초기상담 내실화 - 다국적 언어를 사용한 상담지원으로 피해자 욕구파악 강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피해 이주여성 단순 보호에서 자립·자활지원 강화 - 직업훈련소를 이용한 직업훈련 및 창업센터 기능 강화
		5-2-3-1.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성매매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현장상담(아웃리치)활동 강화 ● 탈 성매매자 자립·자활도모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상품 전시 및 판매 ● 탈 성매매 청소녀들에게 진학 및 직업훈련 등 자활 기반마련 - 탈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자원연계로 자립 지원
		5-2-4-1.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폭력피해자 지원의 전문화에 따른 분야별 교육참여 추진 ●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 프로그램의 다양한 도입으로 참여 종사자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함 ● 폭력지원기관 종사자특별수당 지급으로 보수 보완적 제공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2-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광역) ● 지역안전프로그램(아동안전귀가지원 ‘호루라기지킴이’) ● 아동안전지도 제작
		5-4-3-1.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추방주간 맞이하여 합동캠페인 실시 - 가정폭력추방의 날(보라데이) 맞이하여 연 2회 이상 캠페인 실시 ＊폭력예방교육기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주최 - 성폭력·성매매추방주간 맞이하여 연 2회 이상 캠페인 실시 ＊해바라기센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주최 ● 대중매체를 이용한 폭력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추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3-2.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출산 친화적(모성건강지원) 환경 조성·체계적인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강화를 통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보호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1.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및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1~6급 장애 여성의 출산 시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도모 ● 장애여성 특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울림센터 운영 및 교육 서비스 제공
		6-2-2-2.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 생계 및 의료지원 상담 -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관련 예방교육 강화 - 생계·의료와 관련된 사항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원 ● 생계 및 의료지원 상담 -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관련 예방교육 강화
		6-2-2-3.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 등 지원(국·시비지원사업) - 지원계획 : 5,325명 2,625,000천원 / 연중지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 한부모가족지원 계획(시비보조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시비보조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국·시비지원사업) - 수행기관 :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예산 : 270,000천원 / 종사인력 - 6명 / 사업기간 - 연중
		6-2-2-4.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 위기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자 발굴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위원회 재위촉 : 17명(당연직 4, 위촉직 13) - 임기 : 2016. 12. 24~2018. 12. 23(2년) - 주요역할 : 양성평등정책의 심의·조정 ● 위원회 개최 : 정기회 2회(5월, 11월) - 심의내용 :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및 일·가정 양립, 여성폭력 분야 등
		7-1-1-②.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정책책임관 운영 : 기획조정실장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 - 기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운영 : 여성정책담당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 기타 양성평등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업무
		7-1-2-①.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강화	● 성평등지표에 대한 지역 내 홍보 강화 ● 지역성평등지수 활용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 추진 - 자치구(중구,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안전 분야 사업 강화
		7-1-2-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 지원 : 2억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중구, 유성구) ● 여성친화도시 지정 컨설팅(여성가족정책센터) : 중구, 대덕구 ● '대전신난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및 조성협의체 구성·운영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 제정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상반기 - 대상 : 4급 이상 및 6급 이하 전직원 - 내용 :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양성평등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실시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 강사 성인지 교육 : 연중(관련기관)
		7-2-1-②.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 고위직 및 과제담당공무원 , 시민, 학생, 공공기관 등 찾아가는 교육 * 인재개발원 1주이상 과정 성인지 교육 의무화 병행 실시
		7-2-2-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컨설턴트 위촉 및 교육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컨설팅 * 법령, 계획은 연중실시하고 사업은 6~8월 실시 예정임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양성평등실현 분야 사업 공모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양성평등실현 분야 사업선정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1.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기능 강화	● 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4개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심의 조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보고 등
		7-3-1-3.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효과 제고	● 실질적인 개선을 도출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지역성평등지수 결과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돌봄, 안전분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집중 실시 *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개선 효과 제고
		7-3-2-1. 성인지 예산과 관련제도의 연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시 성인지예산 연계 교육 등 실시 - 성인지예산 관련 부서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필수 참석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3-2-2.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 주민참여 예산학교(6월) -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성인지 예산 포함) 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 방향을 제공 • 주민참여 예산연구회(연중 2회)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방향, 성인지 예산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연구 • 2017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 설문 조사 실시(5월) -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성인지 예산 등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7-3-3-1.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확대 -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DB 구축 방안 모색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767-934.

<부표 3-7> 2016년도 울산광역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①. 양성평등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기반 마련	● 교육지원센터 운영 ● 국악예술강사 선발
		1-2-3-②.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2015년도 문화예술 각종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준수 - 정책자문을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5% 이상 준수 - 위원회 개최시 25% 여성 위원 위촉 및 회의참여 유도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2-①. 일상 생화(명절, 결혼 등)에서 양성평등 실천 확산	● 가족사랑 축제(5. 15) 행사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 발굴 ● 가족교육, 가족상담 실시 ● 다양한 양성평등주간행사 실시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토론회, 여성영화제, 전시회, 좌담회 등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대체인력 채용 - 대체인력뱅크 설치·운영 - 요구 시 유사경력자 우선채용으로 업무전문성 강화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속 추진 - 2016년 유연근무제 운영 계획 시달 : 2015. 12월 ●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 독려 및 자율적 참여 유도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②.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 일하는 부모 및 그 가족 ● 사업기간 : 2016년(연중) ● 사업내용 -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 워킹맘·워킹대디 소통커뮤니티 지원 - 임신·출산·자녀양육관련 상담 및 생활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자녀교육프로그램 -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마을 시범운영 - 사업규모 : 2개소(중구1, 북구1) - 지정기간 : '15. 7. 1～'18. 12. 31(3년 6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개소당 30,000천원) ● 가족문화사업 - 가족의 날 행복패밀리데이 : 10회 200명 - 가족 사랑의 날 행사 : 1회 5월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 시기 및 대상 : 매주 수·금요일(연중), 전 직원(본청 및 사업소) • 방법 : 정상근무 후 19:00 이전 전원 퇴근, 시간외 불인정 - 야간근무 없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계획 시달 : 2015. 12월 -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참여 홍보방송(매 2회) - 매주 수요일 19:00 이후 퇴근자 시간외 불인정 - 지역 영화관 할인 협약 체결 : 롯데시네마 성남점, 메가박스 성남점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평가인증 참여율 - 평가인증 미참여시설 예산 차등 지원
		2-3-1-④.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 기타필요경비 인상률 - 무상보육 시행과 더불어 학부모 부담 중 기타 필요경비 인상을 최소화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
		2-3-2-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사업기간 : 2016. 1~12월 • 아이돌보미 등록인원 : 905명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만 12세,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일 2시간 이상 일시돌봄 서비스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 5개소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 - 사업기간 : 2016. 1. 1~12. 31 - 사업대상 : 57개소 1,303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비 지원 : 57개소(국·시비), 개소당 월 4,142~5,770천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일반현황 - 사업기간 : 2016. 1. 1~12. 31 - 사업대상 : 6개소 240명(중등 1~2학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중구1, 남구1, 동구2, 북구1, 울주군1)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2-3-3-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언어발달지원 사업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업체당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억원 이내
		3-1-2-③.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및 사회적기업 지원확대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육성 ● 여성친화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마련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기술 교육 - 추진내용 : 우리쌀 가공 및 활용 교육실시 - 사업대상 : 울산관내 학교급식종사자 및 여성농업인 ●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 추진내용 : 생활지도자의 리더십, 창업전문기술 배양을 위한 현지연찬교육 - 사업대상 : 생활개선회원(여성농업인) ●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 추진내용 : 영농기술, 생활문화교육 등 전문기술 함양교육 실시 - 사업대상 : 생활개선회원(여성농업인) ● 여성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 추진내용 : 농업선진국 해외탐방을 통한 전문기술, 농촌관광자원, 지역농특산물 판매자료 수집 등을 통한 여성전문인력양성 - 사업대상 : 여성학습단체회원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2-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 여학생이공계 전공체험 지원사업 : 찾아가는 실험실, 미리가는 연구실, 진학진로 취업 멘토링 등 ● 공과대학여학생 전공능력강화사업 : 공학융합연구지원, 공학교육에서의 젠더혁신 교수법 및 연구환경 개선, 여학생 전공역량강화 등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440명(울산 220, 울산중부 220) • 직업교육훈련 : 8개과정 200명(센터별 4개 과정, 100명)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 16개 사업(울산 8, 울산중부 8)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실시 : 8개과정 200명 • 사회서비스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 3개분야 850명(울산 610, 울산중부 240) • 중장년층 재취업훈련사업 실시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목표 : 6,230개(공익활동 5,812, 취업창업형 243, 인력파견형 175) • 수행기관 : 24개기관(구·군, 복지관, 대한노인회, 일자리지원센터 등) • 사업내용 : 노노케어, 환경개선, 강사파견, 보육교사도우미, 인력파견 등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 2016. 1. - 사업추진 : 2016. 2.~12.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②.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 임용목표 : 5급 이상 8.9%, 6급 이상 29.5% •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여성참여 확대 -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실시로 개인 능력 발전 기여 - 중·장기교육과정에 희망 여성공무원 우선 선발
		4-1-3-①. 시도 관리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여성인력풀 활용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여성인력풀 활용을 통해 2017년까지 여성비율 40% 달성을 위하여 관리할 것임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지자체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직장 교육 실시 • 성희롱 고충 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운영 - 상담창구 : 여성가족청소년과 - 상담방법 :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접수 - 고충상담원 지정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성폭력 상담소 운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운영 ●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돌봄서비스, 간병인 제도 등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확대 운영(상담원 11명 → 12명)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3개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2개소) ● 여성긴급 보호체계 운영(2개소)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1개소) - 이용대상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그 동반가족 - 이용기간 : 6개월에서 최대 2년 - 주요지원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사회복귀지원, 수사기관조사, 증인 심문동행,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제공, 출국지원 등 실시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1개소)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1개소)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운영 ● 피해자 지원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및 응급체계 구축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 1개소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1개소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실시 ●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및 응급체계 구축 : 2개소 ● 성매매 피해예방 문화행사 지원 ● 성매매 피해 예방교육 실시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가정·성폭력 관련기관 실무자 보수교육 실시 ● 가정·성폭력 관련 상담원 중앙전문교육 실시 ● 가정·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5-2-4-②.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별 컨설팅 제공 - 대상 :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15개소) - 내용 : 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1-②. 폭력예방교육 품질 지원강화 및 인프라 구축	● 전문교육 추진기관 선정 : 3월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희망 기업체, 학교, 기관 파악 : 3월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 추진 : 4.~11월 ● 사업평가 및 환류 : 12월 중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참여기관 : 15개 기관 - 인원 : 17명 - 내용 • 폭력 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 사례 개입 •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안전지표 관리 ● 아동·여성안전 지킴이단 활동 강화 - 인원 : 403명 - 활동내용 •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중심으로 공·폐가 등 위험지역 순찰 • 아동·여성에게 악영향을 주는 각종 유해환경 정화활동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월평균 소득 150% 이하(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인자) - 신청자격 : 난임부부로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6회 회당 60~190만원, 인공수정 3회 회당 50만원 ● 임산부 건강진단 및 의료비 지원 - 임산부 건강진단 - 임산부 기형아 및 풍진검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1-3-②. 취약지역 및 특수직종 모성건강 보호 강화	● 산후 조리원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회 ● 산후 조리원 지도 관리 강화 - 점검주기 : 상·하반기 2회 - 점검업소 : 8개소 - 점검내용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 추진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 보수교육 등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대상 : 울산지역 여성장애인 - 기간 : 연중 - 주요사업 내용 :출산 준비, 산후조리, 자녀양육, 육아용품 대여, 일부 지원체계가 없는 독거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등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자녀 양육비 등 : 3,000명 - 고교생 교육비 : 900명 - 초·중·고등학생 교육교재비 : 3,000명 - 전세자금 : 25세대 - 가계지원비 : 2,467세대 - 여름·겨울 캠프 : 2회 100명 - 치료회복 사업 : 3회 200명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②.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속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운영 : 복지여성국장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수립 통보 : 4월, 여성가족부(시 → 구)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공모신청 : 7~8월, 구 → 시(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심사, 여성친화도시 선정 : 10월,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 : 12월, 여성가족부 ↔ 구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성인지 교육이수자 지속적 확대 -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 2,583명(본청 1,156, 사업소 등 1,427)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7-2-1-②.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성인지 교육이수자 지속적 확대 - 성인지 교육 대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 329명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 2월 • 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 : 3월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사업비 교부 : 4월 • 사업추진 및 점검, 정산 결과 보고 : 12월한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기능 강화	• 2015년 양성평등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 : '16. 2월 • 201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보고 : '16. 3월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 : '16. 4월 - 15명 이내,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인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관련 대상과제 보고 : '16. 4월 • 201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심의 : '16. 4월 • 2017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보고 : '16. 10월
		7-3-1-②. 시·도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역량 강화	•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 컨설팅 지원 -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에 대한 컨설팅 • 울산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 전문 컨설팅 지원 - 성인지예·결산 과제선정 및 작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울산광역시 성인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운영 • 지역 컨설턴트 발굴 및 교육·훈련과 민간·의회·여성단체 교육 지원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3-1-③.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활성화	• 여성가족부 주관 2015년도 지자체 조례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 '16. 2월, 12건 • 의견 수렴 결과 수용여부 제출 : '16. 3월

영역	과제명		사업내용
		7-3-2-①. 성인지 예산과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 성인지예산 본격추진에 따른 다각적인 제도 운영 상황 홍보 - '16년 성인지 예산 홍보(홈페이지 등 게재) - (재)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간담회시 운영 상황 의견교환 등 - '17년 성인지 작성 과제에 대한 협의 • 성인지예산 전문성 강화 - (재)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등 유관기관 유대 강화 및 협의체제 유지 - 전 실과소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 추진시 추진방향 등 업무 협조
		7-3-2-②.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제도 연계	•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운영 - 시 홈페이지 등 시민 홍보를 통해 의견 수렴 - 업무부서 검토의견(반영, 불가, 조치계획 등) - '17년 성인지예산 작성 과제에 대한 협의 : 해당 부서
		7-3-3-①.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2016년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 - 구축 : 가족분야(가구구성, 결혼과 이혼,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보육·교육(보육·교육시설, 교육수준, 보육·교육의 질 등), 경제분야(경제활동참여, 취·창업, 근로여건, 사회적기업 등), 안전분야(범죄, 안전인식 등) - 방법 : 통계청 등 생산데이터를 기본으로 분석, 전문가 컨설팅 등 - 활용 : 울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 pp.935-1054.

<부표 3-8>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①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	• 설명회 및 홍보활동, 상담사 회의 및 네트워크, 사전면접 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접수 및 미술놀이 치료
일·가정 양립 확산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3-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장난감 대여실 운영 : 영유아 1,250명, 250백만원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 380명, 62백만원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추진대상)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 ＊단, 시간제와 달리 종일제는 만 3개월~만 24개월 영아만을 대상 • (사업비) 588,571천원(국비 412,000천원, 시비 176,571천원) •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 50명(상·하반기 각 25명, 12,500천원)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은 이론(80시간), 현장실습(10시간)으로 구성되고, 1인당 교육비가 30만원으로 25만원은 시 지원, 5만원은 개인 부담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사업비 확보에 따른 업체와 협의('16.2월~)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보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결정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협력 지원금 외의 운영비등 예산 편성(4월~) • 공동나눔터 설치 공간 마련 및 운영('16.12월~)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창의사업_신안) 추진 마을에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확대 권고 - 사업 추진위원회 재편 시 기존 여성농업인 중책 권한* 부여 및 참여비율 제시 ＊추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감사 등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여성 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추진 - 손잡이 접이식 미니관리기 이용 농작업(로타리, 골타기)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강화)	• 농산물 가공·체험 인력 양성 교육 -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교육(기초 / 심화), 농촌체험 인력 양성교육, 우리 쌀 가공 전문교육
		3-1-3-②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여성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 공동창업지원 - 가급적 사업장 신축등 건축 공사성 하드웨어 사업 지양 - 자부담 범위내에서 가공 체험 상품화 시설 설치 가능 - 가공, 체험, 상품화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설비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사업 추진 위한 컨설팅 등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5-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2.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5-2-1 5-2-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 (추진계획) 전담 의료기관 확대 지정 및 경찰 연계 강화 • 긴급피난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 (추진체계 및 목적) 경찰, 성폭력상담소, 시청이 연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 (내용) 경찰 임시보호소에 입소한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식비, 소모품비 등 임시 피난 필수경비 지원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1-③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세 이상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수행기관 : 6개소 1일평균 351명 식사배달
		6-1-1-③ 무료경로식당 운영	• 무료경로식당 운영 : 60세 이상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제공 - 수행기관 : 8개소 1일평균 236명 무료급식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1-1-③ 노인돌봄서비스 (추가)	● (수행기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 설치일 : 2003.09.18 / 소재지 : 조치원읍 장안길 97-7 / 센터장 : 류권식 ● (사업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자택 내 센서를 부착 또는 돌보미를 활용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본부 등과 연계하여 구조·구급 등 실시 ● (종사자) 32명(서비스 관리자1 / 생활관리사 27명, 응급요원 4) ● (사업기간) 2016. 01월~12월 <1년간>
		6-1-2-③ 경로당활성화	●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 사업비 : 150백만원 / 규모 : 450개소 ●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비)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기자재 지원 - 사업비 : 12,000천원 / 규모 : 450개소(신청 경로당 중 선별) ● (노인지도자 양성) 경로당 운영실무(회장, 총무) 교육 - 사업비 : 7,000천원 / 규모 : 450개소 중 선별
		6-1-2-③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프로그램운영 등
		6-1-2-③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 (사업명) 1-3(종촌동)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복지시설 ● (시기) '16. 상반기 종촌동 주민센터 개청 후 계속 운영 ● (방법) 대한노인회 세종지회 위탁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1인 배치> ● (운영내용) 실별 특색에 맞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여가시설로 운영 - 경로당 : 노인문화센터 운영 - 기타공간 : 프로그램관리자와 협의 후 세부프로그램(안) 조정·협의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여성친화도시 여건 조성 : 3월~8월 ● 여성친화도시 조직 및 인력 확보 : 3월 - (전담팀 구성) 아동친화도시 TF팀과 통합 운영 / 전담인력 추가 1명 배치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 : 4월~7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양성평등교육 실시 : 6월~7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운영 : 7월 / 20명 이내 • 여성친화정책 시민 서포터즈 구성·운영 발대식 및 교육 : 7월~9월 •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 : 7월~8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 용역 : 8월~12월
특화사업	◉ 유연근무제 활성화	• 유연근무제 운영 방향 교육으로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유도
	◉ 기업과 함께 하는 아빠랑~육아 서포터즈 운영	• 2016년 1기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2기 육아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실시
	◉ 보육특수시책 지원 사업	• 아이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부담 줄이기 어린이집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 보육인 대회 지원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종사자(1,500명)
	◉ 새싹한마음 가족축제	• 관내 어린이집 보육종사자(1,000명)과 유아(2,000명)
	◉ 어린이집 교사 시책교육	•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 보육교사 처우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지원
	◉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 관내여성, 12개과정 486명
	◉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실·과·소대상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계획
	◉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여성지도자 연수교육)	• 여성들의 리더십 과정 교육
	◉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찾아가는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 총 2기 운영 / 1기수 당 4회 강의(1일 1강좌 당 3시간)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 각급 학교별로 총 28,000명(500회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경로당 수질검사·전기검사	•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 지하수 사용 경로당 선정 후 수질검사, 노후 경로당 대상으로 전기검사 실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지원)	• 20주 이내 등록, 둘째아 임신부 1명당 1회 기형아 검진 쿠폰발급(20,000원)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영양제 지급 및 산전관리 실시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엄마랑, 아가랑' 한마음 교실)	• 라마즈 호흡, 산전체조, 태교, 모유수유, 산욕기관리, 아기마사지 등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실시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할인음식점 지정 운영)	• 임신부 이용 시 음식 값의 10%할인(동반가족 10명까지)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급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맘 편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신규))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 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 임산부 등록, 고위험, 다문화 임산부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개인동의 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
	◉ 양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직급별 맞춤형 교육 실시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1055-1144.

<부표 3-9> 2016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1.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1-1-1-②.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 초·중·고 청소년 및 대학생, 군인, 일반인 대상 교육 실시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실시(초등학교 5학년, 6~15차시 교육) ●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경기남부, 경기북부)
	1-2.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1-1-①.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경기여성가족백서와 시군별 성인지 통계 연구 진행 ● 백서 및 통계집 배포 및 도정 홍보에 활용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2-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적극지원 - 지원 인력 적합성 및 지원 적시성을 위한 뱅크 갱신 - 인사혁신처 통합뱅크운영에 따른 대체인력 인력뱅크 구성
		2-1-3-②.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조성지원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근무문화 유도 - 다양한 유연근무형태 이용을 통한 탄력적인 근무문화 조성(집중근무타임) - 장시간 근무시간 분석을 통한 '적시힐링기회' 제공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지원 : 20개사 -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등 ●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 30개사 - 가족친화제도 모범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로 인증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20개소 확충('14년~'18년 100개소 확충 목표) - ('15년) 595개소 → ('16년) 615개소 ● 직장어린이집 매년 10개소 확충 : ('15년) 170개소 → ('16년)180개소 -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16. 4월 ● 공공형 어린이집 - 신규 선정 75개소 추진, 지정기간 만료어린이집 205개소 재선정 추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평가인증률 제고)	●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설명회 : 연 4회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조력사업 지원(경기도 25개소) - 평가인증 조력자 교육 및 지원 - 평가인증 지표 및 심화교육 등 실시 ●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센티브 제공 -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3~5만원) - 교재교구비 지원(연 50만원) - 평가인증 우수등급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2-3-1-④.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지역아동센터 744개소 - 사업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보조금 지원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제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31개 시·군 8,951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전체 어린이집의 70%)
		2-3-2-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시간제돌봄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안전 신변처리 등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3-3-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아동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아가정과 돌보미를 연계하여 양육보조 및 이동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등 중증장애아들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양육가정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사업규모 : 돌봄서비스 지원 465명, 휴식지원 200가구 ● 추진기간 : 2016년 연중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여성기업 판로개척 지원 ● 우수여성기업인 선정(경기도 여성기업 大賞) 및 홍보 ● 온라인 제품 판매전 운영 ●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 솔로몬 지원사업 ● 경기북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 해외마케팅 지원(국제통상과 추진)
		3-1-2-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1급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15만원 / 월 - 정부지원어린이집 2,3급 보육교사, 조리원 : 10만원 / 월 - 민간어린이집 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20만원 / 월 - 누리과정 담당교사 : 11만원 / 월 - 상기 보육교사(원장 제외, 월급형 대체교사 추가) : 3만원 / 월 추가 지원
		3-1-2-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 신체수발, 신병활동, 가사, 일상생활 지원 등
		3-1-3-①. 농어촌여성 경제활동 지원(농업종사 여성 역량강화	● (후계농업인 육성) 여성 우선 선발(15%까지) - 후계농업인 선정 시, 여성농업인에게 가점 부여 등 홍보 강화 ● (여성농업인 교육) -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교육(1년 과정) 3명 이상 추천(35% 선정)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 등 11개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수 목표 2,500명, 취업목표 35명 - 젠더의식 강화 훈련, 개인커리어개발, 직무능력 훈련, 여고생 멘토링 등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운영
		3-3-3-②.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23개소) 및 광역새일지원본부(2개소) 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7개소) 운영 지원 ● 여성근로자복지센터(5개소) 운영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참여자 모집 : '16. 1월 - 공익활동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등 1월 중순부터 사업 참여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발굴 및 육성 : '16. 2월 - 문서파쇄·시니어 반려동물 돌보미사업 등 참여자 모집 180여개 일자리 창출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③.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추진 • 여성 관리직 공무원 육성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소관 위원회 연도별·확대계획 수립(단체별) - 위원회별로 '17년까지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 확대계획 수립 • 위촉위원 임기도래 위원회 관리 철저 • 여성위원 위촉률 40% 이하 위원회 대상 관리 실시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경기전문 여성 DB)	• 지역여성인재 신규 발굴 /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및 미추천 현황(실제 위원회 선임현황) 분석 • 등재자료의 취합·관리 및 DB 홈페이지 개편·관리 • 등재자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추진 등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1-①.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 교육 강화 (경기 행복학습 희망병영만들기 교육사업)	• 도내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성가치관향상교육 실시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5-2-2-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2개소, 경기, 경기북부)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해바라기센터 운영) : 5개소 - 위기지원형 : 2개소(경기서부, 경기북동부) - 통합형 : 2개소(경기남부, 경기북서부) - 아동형 : 1개소(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지원 : 33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23개소, 피해자 보호시설 10개소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23개소 - 성폭력상담소 18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주거 제공 ● 통번역,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 제공 ● 자활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출국 및 자립 지원 ● 동반아동 취학지원
		5-2-3-①. 5-2-3-②.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4개소 -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등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7개소 -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지원, 평택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8개소 -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지원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 3개소 -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지원 ● 성매매 지원시설 기능보강 : 1개소 - 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 지원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3-2-③. 가정폭력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 - 개별상담, 집단상담, 정신 및 심리치료, 부부 캠프 운영 등 ●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 - 개별(집단)상담, 심리상담, 분노조절, 자아성찰 등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2-①. 지역사회 여성폭력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초등학교 3~5학년, 20명 이상(6명씩 5조 구성) - 초등학교 주변(500m) 이내 위험 및 안전요소 표시 지도제작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1-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양성평등성 제고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의 70%(경기도 노인의 59%) - 지급인원 : 732,147명(본청 498,239명, 북부청 233,908명) ●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기타소득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 장애인 산모 및 육아도우미 운영(추진주체 :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장애인 산모 및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등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27,000원 1일(8시간) 54,000원 - 추진절차 : 신청 → 검토 → 지원(연중)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사업량 : 389명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 신청 → 검토 → 지원(연중)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 : 1개소 - (1~3월) 사업 수행기관 공모 - (4~12월) 교육사업 위탁 추진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 2개소(안산시 1, 동두천시 1) - 안산시 수행기관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 동두천시 수행기관 :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6-2-2-②.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운영 - 사업기간 / 교육과정(인원) : '16. 4월~12월 / 4개 과정 / 북한이탈주민 70명 ＊조리사(15명), 경리사무실무(15명), 돌봄서비스(30명), 바리스타(10명) ●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기간·내용 : '16. 9월 / 현장채용 및 취업정보 제공, 탈북민 등 700여 명 참여 ●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 사업기간 : '16. 1월~12월 / 2개소 운영 / 년간 2,000건 이상 상담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48,242명 23,375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도비) : 81,191명, 13,075백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437명, 523백만원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성인지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고위·관리직 대상 성인지 교육 지속으로 주요정책 결정권자 인식 개선 • 양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기초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지원 : 워크숍 및 교육 실시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③.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활성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회의('16. 3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16. 3월~7월)
		7-3-1-④.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효과 제고	• 주요 정책 및 제·개정 법률(조례, 규칙)의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성별격차 및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현장모니터링, 심층컨설팅 등을 통해 분석평가 개선과제 발굴 및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행점검 실시
		7-3-2-①.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 '16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도의회 제출('16년 예산확정 시) • '17년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담당자 성인지 예산 교육 진행 • '17년 성인지 예산(안) 발간 및 의회 제출
특화사업	◉ 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아이러브맘 카페 확대		• 아이러브맘 카페 신규 개소 : 1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1145-1252.

<부표 3-10> 2016년도 강원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1-2-3-②.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제42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 : 5.27(금), 강릉일원 ● 사임당 모현회 연수 : '16. 10월, 30여명 ● 임윤지당 추모제례 및 기념행사 ● 윤희순의사 추모제례 및 기념사업 ● 강원여성 역사문화 유산탐방 : '16. 6~10월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3-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2016년도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채용 : 10명 ●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희망자 조사 : 연중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추진 : 수시 ● 시간선택제공무원 직무가능 분야 지속 발굴 등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2-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지속 추진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 독려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홍보강화 - 인증 관련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 등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1,500가구 ● 서비스 품질 제고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추진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3개소
		2-3-3-②.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15년도 당초 11개소 → '16년도 당초 16개소 확대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②.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공계 여성인재 확보 및 육성기반 개선 • 공학교육과정 개선 및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강화 • 사업효율화 • 대외 성과확산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센터 1개소 지원 : 강릉원주대학교 - 상지대학교 미지원 ＊교육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 30～40과정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246명), 결혼이민여성 인턴십(18명) 운영
		3-3-4-②.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24,000자리추진(공익형 20,600, 취업·인턴형 2,400, 특화·영농형 1,000) - 국비보조사업 17,400자리, 사업비 357억(국 178, 도 34, 시군145) - 도 자체사업 6,600자리, 사업비 82억(도 45, 시군 37) • 참여자 신청접수 : '16.1～2 / 사업추진 : '16. 2～12 (일부사업 1월부터 착수) • 사업 점검 및 평가 : '16.11～12 ＊평가대회 : '16. 12월
		3-3-5-②.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취업여성 및 취업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 7개소 • 새일센터 점검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	• 2016년도 강원도 인사운영계획 수립·시행 : 1월중 • 여성공무원 관리직(담당급 이상) 승진임용 지속 확대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강원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추진 : 30%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 강화	• 건설·교통 등 여성 인재풀 부족 분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원 추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고위직 교육 확대(인식 전환 필요) •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새로운 교육기회 발굴
		5-1-3-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성희롱·성폭력 통합교육 실시 • 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 통합실시
		5-1-3-③.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 내실화 • 사업소 및 출장소의 예방교육에 적극적인 활동 - 출장교육 등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성폭력상담소 1개소 확충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속 운영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비장애인 / 강간, 성추행, 성폭행 등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강원해바라기센터(2개소 :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치료동행 서비스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속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속 지원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지속 운영 : 1개소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 유흥주점 성매매게시물 부착 점검 • 성매매집결지 주변 관심과 점검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성매매피해자 자활·자립 지원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 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8개 시군, 도)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1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례관리실무협의회 2회 개최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안전프로그램 개최 • 아동안전지도 제작 70개 목표
		5-4-3-①.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5-4-3-②.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	• 1년 365일 24시간 긴급출동 및 위기상담활동에 따른 현장활동비 지원 • 보라데이캠페인 진행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임산부,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 -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 - 산부인과 미개설 의료취약지역에 임신부 산전관리 및 부인과 진료를 위한 찾아가는 진료체계 구축·운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 3개 사업 1,518명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및 가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54명, 가사도우미 지원 14명 내외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4개소 맞춤형 상담·역량강화 교육 등 790명 지원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 취업희망 디딤돌 자격증 취득지원 : 50명, 5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 요리, 이·미용, 컴퓨터, 제과·제빵, 요양보호사 등 -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지원 • 권역별 순회교육 : 1회, 2백만원(도비) - 취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정 지원('16년 신규) : 100명, 30백만원(도비 9, 시군비 21) - 사투리 교정 및 표준어 교육 등 언어교정 지원함으로써 조기정착 지원 • 운전면허 취득지원 : 60명, 24백만원(도비 7, 시군비 12, 자부담 5) - 운전면허(1,2종)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취업기반 조성
		6-2-2-③. 한부모가족자녀의 자립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4,500가구 • 취약·위기가족 지원 : 수행기관 3개소 운영 지원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강화	•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위원회 안건 다양화 및 회의 정례적 운영 •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성평등정책 조정기구로서 위상 정립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심의·조정의 전문성 제고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 '15년(4개소) → '16년(5개소) → '17년(6개소) → '18년(7개소)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공모 우수 시·군 추천(도) : 9월 중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②. 강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 컨설턴트 양성(20명) 및 워크숍(4회)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 컨설팅 요청 전체 과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발전 포럼 : 1회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 '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사례 발굴·홍보 • 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용 및 분석평가·성인지예산 교육 지원, 담당공무원 교육 등: 요청시
		7-3-3-②.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6. 1~12월 • 제공인원 : 19,700명('15) ⇒ 19,900명('16) • 제공대상 : 중앙·지방행정 공공기관, 사회·단체·연구기관, 일반 독자 등 • 사업량 : 24회(강원성인지통계 12회, 웹진「여성ⓔ행복한 강원」12회) - 강원성인지통계 :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일·가정 양립, 건강 등에 관한 통계 제공 - 웹진「여성ⓔ행복한 강원」: 기획특집, 전문가 칼럼, 정책브리프, 정책동향 등
특화사업	◉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토크 36.5℃ 개최		• 젠더 토크콘서트 개최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1253-1344.

<부표 3-11> 2016년도 충청북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2-①. 양성평등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 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2-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확산	• 양성평등 카툰 제작 - 성주류화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작, 제작물 다각적 홍보(도행정사이트, 도정소식지, 블로그, 시설활용)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2-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 모성보호 대상 공무원 등의 희망보직 반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신속한 인력대체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공공기관 유연근로제 활성화 - 업무대행체제 확립을 통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유연근무를 '권리'로 인정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②.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워킹맘 워킹대디센터 운영 - 워킹맘, 워킹대디센터 활용하여 일·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일하는 엄마 아빠의 고충을 해소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확대 -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활성화,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확산지원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기관 운영 • 광역거점기관 운영 - 아동양육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웃간 품앗이를 통한 자녀돌봄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기업 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확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충북여성CEO포럼 지원
		3-1-3-②.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 영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발굴 및 교육 추진, 농번기 등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연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2-1-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실태조사, 직무분석, 정규직 전환검토, 무기계약직 자연 결원 시 여성비정규직 전환 및 여성근로자 우선채용 검토 권고
		3-2-1-②.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분기별 기간제 근로자 근로현황 조사 - 근로계약 준수 여부 점검, 고충 및 차별적 처우 발생여부 확인 및 개선조치, 여성 기간제근로자 결원시 여성 기간제근로자 우선채용 권고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 - 청년여성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까지 커리어개발 서비스를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 충북형 청년여성희망일터 사업 추진 - 2030 청년여성 대상 인프라 구축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용절벽 해소
		3-3-2-①.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 새일센터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 -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및 고용유지를 위해 취업자 사후관리 및 채용기업 사업을 운영
		3-3-2-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 미리가는 연구실 -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이공계 전공실험이나 견학, 참관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 부여
		3-3-3-①.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활성화	• 새일여성인턴 운영 - 새일여성인턴 발굴, 수요기업에 알선, 채용장려금 지원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운영 내실화	• 직업교육 훈련 - 지역 내 전략산업 구인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발굴 및 교육 추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 지역 내 구직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취업형(인력파견형)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사업 해당 수요처 파견 위한 부대경비 지원
		3-3-5-②.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업무능력 우수 여성공무원 5급 이상 관리직 임용 확대 노력, 개인의 직무능력, 전문성 등을 적극 고려 여성공무원 업무영역 확대, 여성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활성화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시도소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및 확대계획 이행점검, 각 실·국 위원회 현황 수시 파악, 여성전문가 부족 분야 계속 발굴 및 국가인재 DB시스템 활용 여성위원 추천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강화	● 충북여성인재 DB 추가 구축 - 충북의 각 분야 전문 여성들의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잠재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공직자 대상 여성폭력예방교육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5-2.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여성긴급전화 운영사업(1366) -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24시간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으로피해자 인권 보호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운영관리비 및 자립도우미 인건비 지원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이주여성 쉼터 운영 지원 - 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호시설 이용자의 법률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등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를 통한 '위기개입 - 보호- 자활' 등 단계별 지원 강화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구조지원 사업 - 피해자 특성별 요구되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 경력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범죄예방 사전교육 • 지역안전프로그램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 안전진단, 취약지역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과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초음파진단기 등이 장착된 이동검진차량으로 산전 검진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추가양육비 및 생계비(시설 입소가구) 지급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청소년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아동연령 제한 없음), 검정고시 학습비 및 고교생 교육비 지원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기 지정 여성친화도시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실시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도, 시·군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통한 성인지 관점 형성 및 제도 이해 제고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강화
		7-2-1-②. 고위·관리직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관리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 관점 형성 및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책무성 제고
		7-2-2-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단 구성·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전 과정의 상담 및 자문 ● 컨설턴트 전문교육·워크숍 실시 - 컨설팅 내용 분석 및 공유를 통한 컨설팅 통일성·다양성 도모, 성 주류화 정책의 동향 및 관련 이슈에 관한 전문가 교육, 성인지 정책과 제도 실행의 행정 과정, 예산편성·수립·집행 등의 연계교육
		7-2-3-①.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 여성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여성 사회적 역할증대로 여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언기구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 양성평등 실현,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7-3-1-②.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기능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전 과정의 상담 및 자문 ● 성주류화 제도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 지역 양성평등 기반 구축 및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7-3-1-③.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활성화	● 특정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집중과제 발굴·제안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서 발간
		7-3-1-④.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효과 제고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사례집 - 도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개선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 발간
		7-3-3-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 충청북도 성인지 통계 발간 - 충청북도 도 단위 중심의 성인지 통계 작성, 분야별 성별(혹은 여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지표체계, 통계 전문용어 해설 및 산식제시, 통계표 분석 등
특화사업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행복지원단 운영		- 민·관 합동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대학생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토론회		-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특강, UCC 상영, 주제발표 및 토론, 상황극 등 개최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1345-1459.

<부표 3-12> 2016년도 충청남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②.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유관순상 운영 -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단체)을 전국에서 발굴·시상하여 우리道 출신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현재에 계승·발전 도모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②.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1-3-2-①.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 실천 확산	● 가족친화우수중소기업 시상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기업대상 선발과 연계하여 가족친화우수기업인상을 선발·시상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1-3-3-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성·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행사 - 성·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통한 인력수급 현황 파악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남성의 육아휴직시 신속한 인력 대체로 업무공백 최소화
		2-1-2-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통한 인력수급 현황 파악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배치 - 상하반기 홍보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제고와 동참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2-1-3-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시간선택제 운영 관련 전직원 홍보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널리 알려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홍보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유연근무제 운영 - 유연근무 활성화 계획 시달, 자율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 유연근무 운영시간을 1시간 단위에서 30분 단위로 확대 운영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②. 일·가정 양립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 일·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직장맘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육아 등 일하는 엄마·아빠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확충 • 직장 어린이집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3-1-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평가인증어린이집 예산지원 연계를 통한 보육품질 향상 -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로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부모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집 정보공시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3-1-④.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 시간제, 전일제 등 보육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에 적극 동참 • 입소우선순위 결정 및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요청 -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내 개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 아이와 부모의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통한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저소득층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부가지원으로 저소득층 이용 아동에 대한 건전 육성 도모
		2-3-3-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 휴식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1-①.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에 필요한 강의를 지원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관리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3-1-3-②.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 -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통한 전문 여성농업경영인 육성, 여성농업인에 적합한 소형, 승용형 농기계 조작, 점검 교육 추진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2-1-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시·지속적 업무 여성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실시 (5명) ● 출산, 육아 등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2-①. 여성근로자 경력개발 지원(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 분야별 여성인재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지역의 숨은 여성인재의 교육을 통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등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3-②. 직무적응 및 직장체험 제공을 위한 인턴십 지원	-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
		3-3-3-③.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훈련 확대	-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반과정,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창업형, 취약계층 과정 운영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50~60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 도내 1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의 구인·구직 연계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사회활동지원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우대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관리직 임용률 개선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희망보직제 적극 반영,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부서장에게 요청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연 2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기조사 실시 - 위촉직 위원별 임기 만료일 「캘린더」 化 집중관리로 임기만료 전 여성위원 적극 추천으로 위촉률 확대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강화	● 여성인재 사전 추천제 활성화 - 여성단체에 여성인재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력을 정책결정과정에 활용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1-3-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관리 •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체험형 성범죄 예방교육 및 위험환경 개선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도민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5-1-3-③.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내실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3년주기) 실시 •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 특별관리 •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5-2.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및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호지원체계 확충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보호시설·의료·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원활한 사회복귀 실현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위기상황 및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 지원체계 구축 및 현장상담원 추가증원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숙식,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등)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자립지원, 수사·법적지원, 가해자 상담·치료, 동반아동지원, 출국지원 등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 운영 - 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을 시설에 보호하여 심리안정, 인성변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 도모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하여 경력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과 건강권 보장	6-1-2-②.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암검진 수검률 향상 - 검진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수검 독려 및 홍보활동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보건소 임산부 등록관리 및 상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1-3-①. 취약지역 모성건강 보호 강화	•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부인과 설치 운영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1-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양성평등성 제고	• 기초연금 지급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실시 -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인생활안정사업(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환경 안정화 도모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진단·치료 및 관리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 출산·양육 시 위기지원(가구당 연 70만원 이내), 온오프라인 상담 및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 양성평등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7-1-1-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도정 시책추진에 전반적인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양성평등 정책추진 동력확보 기대
		7-1-2.-①.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강화	● 지역별 성평등 지수 관리 -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시행,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지역의 여성인력 발굴·육성, 성평등 지수 관리 세부지표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7-1-3. 지자체 양성평등청책 활성화 지원	● 양성평등정책 추진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워크숍 개최, 성주류화 관련 포럼 개최,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道 공무원교육원 및 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 담당공무원 등 교육추진 - 성별영향분석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수혜 제고
		7-2-1-②. 고위·관리직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양성 - 道 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분석 및 성인지 예산 이해, 실습 등을 통한 컨설턴트 양성 추진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권익증진·양성평등 촉진 실현에 기여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④.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효과 제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 분석평가에 대한 실국별 개선실적 점검 및 관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표
		7-3-2-①. 성인지 예산과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 여성과 남성의 예산의 수혜도 및 만족도가 다른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7-3-2-②. 도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마인드 제고를 통해 성평등형 재정운영 실현
		7-3-3-①. 성인지 통계 생산·점검 체계 구축	• 성별분리 조사·통계 발간 - 시군별 인구, 가족, 보육, 경제활동, 보건 등 분야별 자료작성,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가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항의 개선방안 모색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1461-1596.

<부표 3-13> 2016년도 전라북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②. 대중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해소 및 인권보호	• 2016년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 전통시장, 읍면동, 기업체 등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 공연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이용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개인 성향별 문화향유 기회제공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 건강가정지원사업 -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②. 아버지의 학교운영 참여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 건강가정지원사업 -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통한 아빠 대상 육아교육
		2-1-2-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시 적기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홍보 공문시달
		2-1-3-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근무문화 유도 -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 유연근무자 발굴 및 목표 설정, 장시간 근무시간 분석을 통한 '적시 힐링기회' 제공
		2-1-3-② /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조성지원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근무문화 유도 - 장시간 근무문화 개선을 위한 수요일 가족의 날 완전 정착(정시퇴근) 추진, 매월 말일 마지막 목요일 정시출근 정시퇴근제 시행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②.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 건강가정지원사업 - 워킹맘워킹대디 사업 추진, 맞벌이 가정의 직장생활 지원(직장 고충상담, 워킹맘워킹대디 소통 커뮤니티 지원), 맞벌이 가정의 가정생활 지원(자녀 양육 및 가족문제 관련 상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및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 • 직장어린이집 설치 - 학부모가 선호하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 보육 기반 확대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어린이집 정보공시 -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그리고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리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3-1-④.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 맞춤형 보육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입소대기시스템 운영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함으로써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봄지원 사업 - 가정내 개별돌봄 서비스 활성화로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확보,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강화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 보육 지원 • 시간연장반 인건비 지원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기업 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여성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여성기업인 정책건의 전용 창구 운영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통한 판로확대 • 여성창업 보육센터 및 창업자금 등 지원 •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3-1-2-③. 여성친화적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홍보 • 전북 협동조합 주간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협동조합 컨설팅 사업 • 협동조합 아카데미 지원 • 협동조합 스쿨
		3-1-2-③. 여성친화적기업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양성 평등 강화 - 수도권 도시민에게 전북 농업·농촌 정보 및 체험 기회 제공 등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제고 및 귀농귀촌 활성화 기여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운영 -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전문화를 통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창업 및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리더십 함양을 통한 지위 향상 도모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청년여성경력개발 지원사업 - 커리어개발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직업과 경력개발 교과목 설치 운영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직업교육훈련 지원 • 새일인턴 지원 •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 봉사활동, 근로 등 노인의 다양한 활동욕구를 반영한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에 기여
		3-3-5-②.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5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계획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확대(9.6%)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확대(26%)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 도정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여성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등 참여 확대, 출산·육아휴직 복직에 따른 희망부서 배치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소관 위원회 연도별·확대계획 수립 • 위촉위원 임기도래 위원회 관리 철저 • 여성위원 위촉률 40% 이하 위원회 대상 관리 실시
		4-1-3-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확충 및 활용강화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활용방안 - 지역여성인재 신규발굴,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및 미추천 현황 분석, 등재자료의 취합, 관리 및 홈페이지 개편, 관리 등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통합지원센터 운영 -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위기형), 해바라기아동지원센터 운영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 및 자존감회복 등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및 다누리 콜센터 운영 -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불화를 겪거나 심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긴급대응체계 구축 필요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 및 자립지원, 취업교육을 등을 통한 가정·사회복귀 도모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 성매매 집결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건축, 공중위생, 식품, 소방 등 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규제 강화, 경찰, 여성복지부서 등 합동지도·단속 실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관련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시비 추가 지원하여 피해여성 지원에 내실기여 및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3-2-③.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 가정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1-①.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관리 강화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교육 - 공공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성가치관 및 성인지력 함양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와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 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활성화사업 - 도내 여성·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해 관련서비스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 공동대응 방안 모색
		5-4-2-②.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및 학부모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유아성교육, 성의식개선 캠페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취업제한 종사자 교육, 성 인권 캠프,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 성폭력 가해자 인간존중 프로그램 등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과 건강권 보장	6-1-2-②.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	• 암 검진 홍보 -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건강한 출산 지원 및 모자건강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1-①. 기초연금 등의 양성평등성 제고	• 기초연금 지원 -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세대의 생활안정 지원
		6-2-1-①.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운영 •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생활고충 등 해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성인지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성인지력향상교육 - 정책을 형성·집행·관리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및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으로 성 인지적 정책추진의 실효성 확보 및 도정의 성 주류화 실현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④.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강화	• 주요 정책 및 제·개정 법률(조례, 규칙)의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성별격차 및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현장모니터링, 심층컨설팅 등을 통해 분석평가 개선과제 발굴 및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행점검 실시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pp.1599-1712.

<부표 3-14> 2016년도 전라남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1.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1-1-3-②. 시·도 교육청별 양성평등 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양성평등 체험활동 활성화	● 가. 양성평등교육 매뉴얼 및 자체진단 기준 학교 안내 ● 나.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 다.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학생글짓기 대회 실시 및 우수학생 표창 ● 라. 양성평등교육 학교 자체진단 결과 분석 및 환류 ● 마. 양성평등교육 우수학교 및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3-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시책일자리 사업 등 4대 유형 8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기관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실시 -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자율적 운영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인증 획득 - 미인증 7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무안, 영광, 완도, 신안) 인증 획득, 전남개발공사 인증 획득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 직장 어린이집 설치 -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 등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함
		2-3-1-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미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 유도 ●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 평가인증 컨설팅 지원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도·시군 정기점검(연2회) 및 테마별 수시 점검실시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부모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 차단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봄 지원사업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및 부모·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3-3-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 드림스타트 읍면동 확대실시 - 0~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구에게 보건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③.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 - 여성 대표기업, 이주여성 및 고령여성 중심의 일자리창출사업 분야의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을 통한 여성인력 신규 고용창출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농업인 정보화교육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 여성농업기계교육 • 귀농귀촌인 교육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
		3-1-3-③.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여성농업인(도내 농업인의 53.1%)의 농번기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 여대생 경력개발을 통한 청년여성의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성차별적인 취업현실과 경력단절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3-3-2-②.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사업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사업 -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호남제주권역사업단 지원, 전남지역사업단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직업교육훈련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으로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여성 취업·창업교실 운영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시군별 지역수요에 맞춘 자격증반 운영, 경력단절여성 자신감 및 직업의식 함양 교육 1개 과정 이상 운영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지속가능한 성과위주 근로활동이 보장된 취업·창업형 일자리 확대
		3-3-5-②.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새일센터운영지원, 새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인턴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 대체인력 지원 • 여성공무원 교육 추진
		4-1-2-③.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 4급 이상 상위직 국·과장급 관리직 임용확대 • 업무능력 우수 여성공무원 5급 관리직 임용 확대 • 개인의 직무능력, 전문성 등을 적극 고려 여성공무원 업무영역 확대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도 소관 관리대상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율 제고
	4-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4-2-3-②.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강화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평화비「소녀의 상」건립 - 해남평화비 관리 및 홍보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교육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 지원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피해자 심신회복 및 의료 지원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입소자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성매매피해 및 탈성매매 희망여성 구조지원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역할 모색,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과 건강권 보장	6-1-2-③.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직종개발 및 홍보 • 전남지역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실태조사 - 사회진출을 모색하는 장애여성들에게 자신감 부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6-2-2-④. 미혼모·부자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권역별 미혼모부자기관 지원 - 출산 및 양육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7-1-3.-①.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 양성평등 정책 추진 우수기관 포상 - 도와 시·군 별도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 서면 평가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15년 신규 지정 여성친화도시(강진군)에 대한 '16년 추진계획 수립 및 컨설팅 지원 • '16년 신규지정 희망 지자체(장성군)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원 연계 지정 컨설팅 실시 • 17년 재지정 대상 지자체(장흥군)에 대한 이행실적 관리 및 지도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도 소속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으로 정책의 성평등 실현과 지역별 성평등 의식 향상을 통한 국제 성평등 지수 제고
		7-2-2-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워크숍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 컨설팅 지원 - 역량 있는 전문컨설턴트들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체계적 지원 및 질적 강화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2-①. 성인지 예산과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 여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성인지 예산 작성 • '17년도 성인지예산 작성 사전 컨설팅 실시로 보완사항 도출 • 성인지 예산 교육 실시
		7-3-3-①. 성인지 통계 생산·점검 체계 구축	• 전라남도 성인지 통계 시스템 운영 및 활용을 위한 홍보 강조 - 전라남도의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 및 가족 등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성별분리 통계 구축
특화사업	◉ 다문화가족 아버지학교 운영 및 맞벌이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 맞벌이가족 지원 워킹맘 워킹파파 프로그램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pp.1713-1828.

<부표 3-15> 2016년도 경상북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①. 양성평등한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마련	• 경북여성예술인포럼 운영 - 예술분야의 대학교수, 전문가 등 여성예술인의 자문을 통한 경북 예술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경북예술발전 기반 마련
		1-2-3-②.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경북여성인물 선양사업 - 경북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 여성인물 탐방 프로그램 추진, 경북여성 구술생애사 채록사업, 경북여성 1호 두 번째이야기 발간 등
		1-2-3-③. 대중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해소 및 인권보호	• 문화콘텐츠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 및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2-①.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 실천 확산	• 경북여성상 후보자 발굴 및 시상 - 양성평등사회 구현, 여성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공헌 유공자 발굴 표창
		1-3-3-①.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가정폭력예방의날(보라데이) 행사 개최 • 캠페인 개최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 -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여 순회 캠페인 추진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반기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홍보 추진
		2-1-2-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임신직원 배려방안 시행으로 특별휴가(근로시간 단축제도) 홍보 • 임신초기 여성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 특별휴가 사용권장 및 홍보
		2-1-2-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조직문화 정착 • 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제출자에 대한 인력 우선 충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1-2-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 별도정원 인정으로 결원보충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 기간제근로자 경력관리 시스템으로 대체인력 확보
		2-1-2-④.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복귀 지원	•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부서 배치 - 희망부서 신청 창구(인사도우미) 운영, 성과관리 지표로 채택 및 운영 •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처우 방지
		2-1-3-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근무시간선택제 유연근무 활용 권장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관심 제고(간부회의, 지침·게시판등 활용),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간부공무원·부서장의 솔선수범·권유)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유연근무제 우수운영 활용사례(기관 및 개인) 발굴 및 전파, 연 2회(상·하반기)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파악
		2-1-3-③. 스마트워크 활성화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수요 파악 - 장기적으로 스마트워크 근무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직원 수요 파악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②. 일·가정 양립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운영 - 일·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육아 등 가정에서의부모 역할 강화 및 역할갈등 해소
		2-2-2-②. 가족친화인증 확대	•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참석 • 시군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및 독려
		2-2-2-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사랑의 날』 운영 활성화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주지시켜 부서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간부공무원 솔선 및 '가족사랑의 날' 각종 보고서 요구 자제, 근무시간 내 회의 개최 및 퇴근 후 회식 지양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평가인증 운영체계 안내,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 -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지표(규모, 유형별 3종)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심의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운영 -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등 전반적인 보육 환경 모니터링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서비스기관 점검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가족품앗이, 육아정보나눔 모임, 자조그룹, 장난감 대여 등, 부모교육 및 영유아자녀 놀이프로그램 지원, 지역리더양성프로그램 교육 및 나눔활동 진행 등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3-3-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강화 -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시간연장형,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기업 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지원 • 여성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 대구·경북 여성경제인대회 개최지원 - 도내 여성기업인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 여성농업인 기본역량개발 및 리더십배양 •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 아동요리지도사, 한식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전문자격증 취득
		3-1-3-②.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 •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조성 • 농가맛집 육성 - 농촌여성들의 손맛솜씨를 이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 젠더의식 강화훈련 프로그램, 개인별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직무 능력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전문교육훈련 실시, 취업특강, 보육돌봄서비스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 오피스경리실무, 영유아영양관리사, 뷰티아티스트 양성과정, 한식조리사 양성과정 등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익활동, 취·창업형, 인력파견형, 재능나눔
		3-3-5-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 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서비스, 새일여성인턴제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 시행 • 주요(부서)보직 부여, 평정우대, 발탁승진, 교육훈련 강화 등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확대 배치 및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 희망보직제 실시 및 희망보직 신청 창구 활성화 • 자기개발형 보직순환제 도입 추진 • 장기 교육 등 여성공무원 교육 참가 비율 확대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관리대상 위원회 위촉위원 여성참여율 확대(40%)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설정 추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직장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지정 교육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초청 특강 실시 등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아동·청소년전용쉼터) 지원 확대 ● 친족성폭력피해자전용자립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지원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 법률 상담 제공을 위한 상담소 지원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여성긴급전화1366 활성화 - 가정폭력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심기관으로 육성, 관련시설(상담소, 보호시설)·기관(112, 119)와 연계서비스 활성화 , 현장상담동행서비스 및 긴급피난처 간 협업체계 구축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 보호시설 내 직업/취업 프로그램 교육 강화, 일반보호시설의 가족보호시설로의 전환 추진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지원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지원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활성화
		5-2-4-②.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사전면접, 개별상담, 부부상담·가족상담, 집단상담, 부부집단상담, 부부캠프, 정신과 치료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1-②. 폭력예방교육 품질지원강화 및 인프라 구축	• 권역별 교육 목표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민간기업 등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비의무)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신청 안내 등 교육 홍보 • 대상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저변 확산 • 교육 모니터링 및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개최 •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취약지역 개선
		5-4-3-①.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가정폭력예방의날(보라데이) 행사 개최 • 캠페인 개최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 -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여 순회 캠페인 추진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과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6-1-3-②. 취약지역 및 특수직종 모성건강 보호 강화	• 분만취약지지원사업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 해소
		6-1-3-②. 취약지역 및 특수직종 모성건강 보호 강화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임신육아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임신전 건강검진 등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지원 - 지역문화탐방, 지역주민교류사업, 문화체험, 명절행사, 멘토링 활동, 사례관리,맞춤형 학습지도, 역사탐구활동 등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지속 추진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 미혼모부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미지정 시·군 확대 조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컨설팅 협조 등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도청 신도시 지역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②. 고위·관리직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직원교육 실시 - 사업, 계획, 법령 담당자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 실시 ,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하되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참석 확대, 23개 시군 순회교육 실시
		7-2-2-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표, 성별영향분석평가 효율적 운영 방안 특강,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방침 전달, 시군 담당자와 컨설턴트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7-3-1-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역량 강화	● 성별영향분석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위촉,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우수기관 시상 및 전시회, 경상북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시범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워크숍 등
		7-3-2-①. 성인지 예산과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 성인지예산 편성 및 결산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지방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함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3-2-②.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공모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 ● 예산학교 운영시 성인지 예산관련 교육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pp.1829-1968.

<부표 3-16> 2016년도 경상남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①. 양성평등한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마련	• 도, 문화예술진흥원 및 도내 여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방안 마련
		1-2-3-③. 대중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해소 및 인권보호	• 도, 문화예술진흥원 및 도내 여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방안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1-3-1-①. 2-2-1-②.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 일·가정 양립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한 도내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가족문제 예방 • 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1-3-2-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확산	• 각종 행사 연계하여 작은 결혼식장 적극 홍보 •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 협력체제 유지 • 공공시설의 도민 개방을 통해 공공시설 활용도 제고
		1-3-2-② . 2-2-2-②. 일상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인증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공공기관 등 정부·공공기관 대상 인증 참여 활성화 •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속 발굴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증제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재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 • 경남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세미나' 운영을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공유
		1-3-3-①.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성폭력 추방주간 '성폭력 추방' 캠페인 실시 • 가정폭력 추방 '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 폭력추방 캠페인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남성 육아휴직 신청 유도 - 남성 육아휴직의 장점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유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1-2-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 일·가정 양립 선도를 위해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유도, 육아휴직수당 확대
		2-1-2-③.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2-1-2-④.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복귀 지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및 교육 지원 • 복직자의 승급제한기간 산입 및 경력 인정(휴직 최초 1년만) • 복귀자의 불리한 처우 방지
		2-1-3-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일자리 나눔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 - 7급 이하 공개채용시험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 수립과 전 실과 이용 독려 공문 발송을 통해 보다 많은 직원이 본인에게 맞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2-①. 2-2-2-③.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조성	• 경남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세미나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가족친화 경영이 확산토록 선도, 우수사례 발표 등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 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확대
		2-3-1-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평가인증 조력을 통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 정보공시 추진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미만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3-3-①.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중 홍보, 체계적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3-3-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홀로사는어르신 안전확인사업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홀로어르신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1-①.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체 사후관리 - 직업관련 교육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시로 근무환경 개선
		3-1-2-①. 여성기업 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활동촉진 사업 지원 - 여성 소자본 창업교육,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CEO MBA • 도민 무료 창업 강좌 - 창업적성검사 및 창업자금 안내, 기관별 창업교육안내, 상권 및 입지분석, 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방법 등 창업관련 전반적인 무료 컨설팅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1-2-③. 여성친화적기업 확대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하여 100개 기업 750명 인건비 지원 목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여성비율 확대 유도
		3-1-2.-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업인 리더십 및 전문경영능력 증진 교육 - 여성농업인 워크숍, 여성농민 지도자 교육, 해외농업 연수 등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마을 사무 및 시설관리 ●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훈련사업 - 농촌관광자원화 및 경영마인드, 홍보·마케팅, 위생·안전 및 세무·회계관리 등
		3-1-3-②. 농어촌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	●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 농업인 창업활동 기술지원 -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생산제품 개발 지원
		3-1-3-③.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해소 및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2-1-①. /3-2-1-②.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건전노사문화 지원 -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추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추진, 여성 비정규직 노동상담가 양성교육, 여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지원시책 홍보를 위한 캠페인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①. 양성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교육	• 취업멘토링 콘서트 - 취업성공 멘토 특강, 질의·응답 및 문화공연, 직업관 정립, 취업시장, 트렌드와 전략, 취업 스트레스 정서 힐링
		3-3-1-②. 3-3-2-②.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 지원	• '知工知己(지공지기)' - 경남지역 공과대학 학과 전공소개 및 멘토링 • "경남 전략산업 맞춤 여학생 전공역량 강화" - 경남지역 나노융합 관련 학과 여학생의 부족한 전공능력 강화 교육 및 기업체·연구소 탐방 등을 통한 현장능력 강화의 6차시 이상의 단계별 프로그램 •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융합 팀프로젝트 - 정부중점육성산업인 ICT 분야 관련 학과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팀을 구성,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과정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4~7차시, 20시간 이상)을 수립하여 실행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청년여성경력개발 지원 - 젠더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등을 통해 청년 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여성의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3-3-3-①.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 사후 관리 - 기업의 리턴십 확산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활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3-3-4-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
		3-3-5-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교육 강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공사례 발굴·홍보 강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 성차별 없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인사균형원칙 준수 - 승진, 전보 및 보직부여, 근무평정, 교육훈련 등 공정한 기회 부여,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확대 및 부서의 성별비율 균형 안배 • 관리직 임용확대 대한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주요부서 및 실국 주무부서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부서 및 주무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 여성리더십 과정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훈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도 공무원 적극 참여유도 및 지원확대(교육비 일체)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당연직 위원(실·국장)의 상당수가 남성인 점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 노력 경주 - 매월 위원회 임기만료가 도래되는 위원회 현황 파악 공문 발송 및 필요시 회의개최, 보다 많은 여성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기준 검토 등
	4-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4-2-3-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행사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성희롱 예방교육계획 수립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 및 토론회 개최,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5-1-3-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경상남도 본청 소속 전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전문강사 강의 및 맞춤형 동영상 강의 실시
		5-1-3-③.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2016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계획 수립 • 고충상담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파견 조치 • 고충상담 접수 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경남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 경남해바라기센터(아동) 운영 -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대상 의료·심리치료 등 서비스 지속추진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5-2-2-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실효성 제고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운영 • 1366 부설 긴급피난처 운영 • 긴급대응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지원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 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
		5-2-3-②. 성매매 피해자 특성별 지원 확대	• 성매매피해자 대안학교 지원체계 구축·운영 - 성매매피해 청소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수당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 지원, 국비 미지원대상 상담소에 운영비 지원
		5-2-4-②.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운영 및 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 상·하반기 시설 안전점검 실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3-2-③.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행 교정 및 인식개선을 통한 폭력재발 방지
		5-3-3-①. 성매매 알선에 대한 단속·처벌강화	•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실시 - 매년 1회 이상 실시, 민관경 합동단속 • 집결지 개별지원사업 - 집결지내 여성들에게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1-①.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관리 강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추진 •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 점검
		5-4-1-②. 폭력예방교육 품질지원강화 및 인프라 구축	• 폭력예방교육사업지원 - 일반시민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무료 실시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5-4-3-①.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 실시 • 성폭력추방주간의 날 행사 실시 • 가정폭력 추방주간의 날 행사 실시
		5-4-3-②.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팸플릿 등을 통한 기관 홍보 실시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과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철분제·엽산제 제공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난임부부 지원사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출산친화 및 가정복지 상담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1-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양성평등성 제고	• 기초연금 지급 - 후손의 양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출산률 제고
		6-2-2-②.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위문, 역사문화탐방, 자녀멘토링 사업, 필수가전제품지원 등 •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난방연료비, 교육비 등
		6-2-2-④.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강화 -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지원,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7-1-1-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양성평등관련 주요정책 논의 시 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7-1-3-②. 여성친화도시 확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의 및 방법 등 교육 참가 • 여성친화도시 만료된 도시 재지정 추진 : 양산, 김해, 창원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7-2-1-②. 양성평등 교육 실시 및 고위·관리직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 도 및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교육 실시, 5급 이상 관리직 교육 실적 향상,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합동교육 실시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2-2-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지원 - 도 및 지자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요에 맞춘 신규 컨설턴트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7-3-1-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기능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운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제출 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개최
		7-3-1-②.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기능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지원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개최
		7-3-1-③.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7-3-2-①. 성인지 예산과 관련 제도의 연계 강화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함
		7-3-2-②.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도민예산학교 활성화,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도민공청회 개최 등
특화사업	◉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설치·운영 확대 사업		• 우리아이함께키움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지역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가족품앗이 운영
	◉ 작은결혼식 문화확산 지원		- 지역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으로 건전한 결혼식 문화 조성
	◉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 임산부 산전진찰 • 가임기 여성 임신 전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결혼이민여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		• 결혼이민자 임기제 공무원 채용·연장 • 결혼이민자 임기제 공무원 운용
	◉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가족교육, 가족상담, 인식개선, 법률상담 등
	◉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단체 활동 사업 지원		•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 •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I」pp.1969-2164

<부표 3-17>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양성평등 문화 확산	1-2.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2-3-②.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제주여성사 교육의 장, 여성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이용가능 강화, 제주여성사 정립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1-1-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활성화	• 휴직자에 대한 지원 -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100%인정(최초 1년, 셋째자녀부터는 전부), 육아휴직기간(1년간) 중 육아휴직수당 지급
		2-1-3-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 다양한 유연근무제 홍보 및 활용률 제고 • 유연근무제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수시 수렴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대처 •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기여로 도민만족도 제고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2-1-①.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원·운영	• 가족친화지원센터운영 -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제주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3-1-①.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확충 : 26개소 → 30개소(4개소 증) • 공공형 확충 : 99개소 → 105개소(6개소 증) • 직장 확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이행 실태 지도·점검
		2-3-1-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충 - 평가인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3-1-③.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을 통한 운영 활성화
		2-3-1-④.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 시간제 보육 실시 등 어린이집 확충 • 시간연장형, 휴일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 확충 •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2-3-2-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 제고	•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 연 1회 55명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연중 200여명 • 서비스 모니터링 : 연 3,000건
		2-3-2-②.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 놀이활동공간 및 육아정보제공, 도서 대여 등
		2-3-2-③.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활동, 부모-자녀 프로그램(동화구연, 체험활동 등), 육아나눔 정보제공 등
		2-3-2-④. 사회적돌봄공동체 발굴 육성	• 나눔터 조성·운영 -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운영
		2-3-3-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1-2-①. 여성기업 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여성기업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지하회의실 방수공사 지원
		3-1-2-③.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창업 및 공동사업지원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 협동조합 설립희망 여성대상 컨설팅 : 희망자 수시 • 협동조합 여성전문가 양성을 통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제공 • 회계 등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원
		3-1-2-③. 여성친화적기업 확대	•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순회설명회 등 홍보활동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3-1-3-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농촌여성정보지 구독 지원 • 여성농업인의 전문 농어업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여성농어업인 주도의 소규모 창업 활동지원으로 경제 활동역량 향상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3-1-②.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WISET제주지역센터 운영 - 진로개발, 과학친화, 전공 체험 등
		3-3-1-③.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 - 젠더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등을 통해 청년 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여성의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3-3-3-②.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 -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3-3-4-①.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 • 우수기업 리쿠르트 투어
		3-3-5-②.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내실화	• 여성인턴십 지원 • 찾아가는 취업지원 상담실 운영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여성친화 기업 협약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1-2-①. 여성의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를 통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1-2-②. 여성공무원 보직 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추진 • 여성 관련 독립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훈련 강화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4-1-3-①.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 여성위원 위촉 목표 : 39% •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정기 실태조사 : 연 2회(상·하반기) • 여성인재 발굴 및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DB) 관리 운영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1-3-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 성인권 등 폭력관련 예방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무원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운영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2-1-②.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 서비스 확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성폭력 상담소 운영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2-2-②.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5-2-2-③.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이주여성 상담 통역사 지원
		5-2-3-①.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지원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성매매 상담소 운영 •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5-2-4-①.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수체계 개편 지원 •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4-2-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안전망 강화	•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협의회 운영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여성아동 안전마을 만들기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위해 민-관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과 건강권 보장	6-1-3-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모유수유실 설치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추진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상담·교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등 출산 후 건강관리 지원 강화
	6-2.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6-2-2-①.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상담·사례관리사업 •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사업 •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문화여가지원사업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시설보호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조기 자립기반 조성
		6-2-2-③.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 확대)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 -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중도 학습포기 및 자녀 양육 포기 사전 예방등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및 환경조성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2.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2-1-①. 양성평등 관련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실시	• 도 및 행정시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간부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컨설팅 교육 -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의 제도 정착 마련
		7-2-1-②. 고위·관리직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정착을 위한 워크숍 -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연계한 교육 강화로 공무원 역량 강화
		7-2-2-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컨설팅 우수사례 지역 방문 및 외부교육 수강 지원 • 역량강화 교육 자체 교육 4회 실시
		7-2-3-②.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양성평등기금 지원 - 여성인권보호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가족역량 강화사업 지원으로 양성평등을 실현

영역	과제명		시행계획
	7-3.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7-3-1-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 센터 인력 관리 통한 과제 컨설팅 및 컨설턴트 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 양성평등 전문가 DB 구축, 성인지예산·결산 DB구축, 포럼 개최 등 추진
		7-3-1-④.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효과 제고	• 실질적인 개선을 도출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지역성평등지수 결과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돌봄, 안전분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집중 실시
		7-3-2-②.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 성인지 예산서 제도 정비 -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공통과제	◉ 지역성평등지수 개선		•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지역성평등지수 제고방안 계획수립 - 성평등 지표 중 세부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적극 추진
특화과제	◉ 여성행복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설치운영 -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사업 공모 및 확정, 다각적 홍보를 통해 이용 확대 및 도민체감도 제고, 시스템 이용 문제점 및 불편사항 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 제주형 작은 결혼식 지원		• 다양한 제주가치 중심의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 설계·시행 - 숲속웨딩(제주자연의 생명과 평화) / 바당웨딩(제주바다의 이국적 풍경) / 오름웨딩(화산섬 오름과 신화) / 올레웨딩(소박한 제주 고유문화)
	◉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실무추진단 구성 • 담당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컨설팅 • 여성건축인 세미나 개최 - 여성친화적 도시 기반시설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 여성가족부. 2016. “시·도별 시행계획”「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 II」pp.2165-2272.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Regional Gender Equality in 2016

Jae-Seon Joo
Tae-Hong Kim
Ki-Taek Jeon
Jin-Young Han

The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RGEI) is developed to analyz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of the region with four dimensions with 17 indexes of in 2011 and announced publicly in 2013. However, the composition of the Index in 2014 connects the construction of the Index with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hich takes its effect from July 2015 and newly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features. The newly constructed index system is constructed with three dimensions with eight sectors and designed to measure the total twenty three indicators in group of two to four indicators by each field.

The calculation of index is done by standardizing of all indicators with sex ratio and calculating each dimension's score. The total index is calculated by using the each dimension's weight. If the indicator score is at complete inequality it becomes '0', but if it's at complete equality it becomes '1'. As

such, when the proportion of women is at 50% or more, it is regarded as the score has reached the complete equality status.

The result of the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in 2016 shows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by city and province is between the maximum of 76.6 to minimum of 70.0 The differentiation of the highest region with the lowest region is by 6.7p.

As results from 2015, Gangwon province, Daejeon city, Seoul Metropolitan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anked as high level regions(Level-1) of gender equality. Among these regions, Gangwon province stayed in middle high level from 2011 to 2012 but entered high level in 2013 and stayed its place in 2015 as well. In cases of Daejeon city and Seoul Metropolitan city, they have been stayed high level since 2011.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was classified in middle high from 2013 to 2014 but entered high level in 2015.

Gwangju city, Busan city, Jeollabuk province and Chungcheongbuk province ranked fifth to eighth in middle high level regions(Level-2). Busan city stayed high level region in 2014 but went down to middle high level region in 2015. Jeollabuk province was in middle low rank in 2014 but placed in middle high region in 2015. Chungcheongbuk province ranked middle low level from 2011 to 2012 but entered middle high level in 2013.

Middle low level regions(Level-3) are regions ranked ninth to twelfth including Gyeonggi province, Gyeongsangnam province, Daegu city and Incheon city. Gyeonggi province was in high level region from 2011 to 2013 but went down to middle high region in 2014 and placed in middle low region in 2015. Daegu city has stayed in middle low level since 2012 and Incheon city was in middle high region in 2014 but entered middle low since 2015.

Low level regions(Level-4) of gender equality are regions ranked thirteenth to sixteenth including Gyeongsangbuk province, Ulsan city, Jeollanam province and Chungcheongnam province. Gyeongsangbuk province has ranked

in low level since 2011 and Ulsan city has also stayed in low level region except for 2012. Jeollanam province and Chungcheongnam province has alse stayed in low level region except for 2011.

Lastly this research proposes improvement direction of gender equality to the region with gender inequality along with comparison of regional level of gender equality, and suggests management and utilization method of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in the future.

연구보고 2016-93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6년 12월 21일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 **강 은 희**
발행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305-10